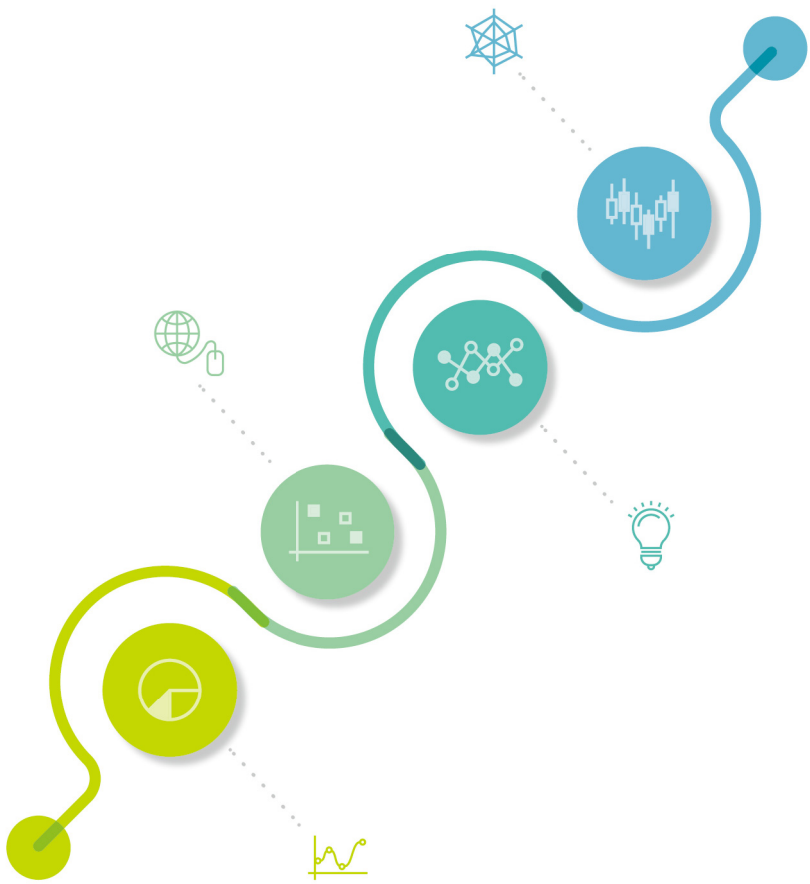
정책연구 2017-31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 구 진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백승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조창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의 주요 내용

- ❍ 청년세대 실업의 증대는 충북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며 향후 소비기반의 붕괴 초래
- ❍ 청년실업은 향후 소득 증대를 위한 원천이 소실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타 연령층의 실업과 비교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배가
- ❍ 충북의 위상정립과 충북경제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역할로 인해 청년실업의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높음
- ❍ 장래 취업 정책의 정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질적인 충북의 청년 인구 동향 파악 필요
- ❍ 또한,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충북의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
-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정책 파악을 통한 충북 맞춤형 사업 개발
- ❍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해 성과가 유발된 정책의 도출 및 벤치마킹 필요
- ❍ 향후 충북 도입 가능한 정책 우선 선별
- ❍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방향의 도출과 이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의 일자리 정책 유무 조사
- ❍ 이를 위해 충북 청년실업률 현황를 충북의 현황과 타 지자체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국내외 취업관련 시책을 전반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
- ❍ 더불어, 취업관련 시책의 사업 효과 및 성과 분석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자리관련 정책 조사 후 실질적인 일자리 성과의 매치 정도를 제시

❍ 일자리 확대 방안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향후 필요한 정책과 충북 정책과의 차별성을 통한 충북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더불어, 충북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일자리 방향 파악 및 비교를 연구의 목적으로 함

2. 정책건의

❍ 지역 산업분야별로 첨단업종과 낙후업종 간에 괴리 발생하여 이러한 차이는 구직부문에는 실업을 발생시키고, 구인부문에는 인력부족의 문제에 기인
- 반면, 노동시장의 고용창출과 고용구조 개선 정도가 약화되어 타지역에 비해 낮은 자체 고용 및 파급이 이루어짐
-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학교 및 직업관련 프로그램의 개편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 사업체 수요 대비 실질적인 노동 공급 매치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방안의 구축 및 실행이 필요
- 청년계층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직종선호 또는 취업관행에 대한 인식변화반영으로 청년계층은 대기업 직원 또는 공공기관을 조건 없이 목표로 하기보다는 적공에 맞는 분야의 계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관 직종을 선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요에 맞춘 충북에 특화된 일자리 공급 개발이 필요

❍ 창업교육을 통한 사전적 일자리 구득 정보 제공
- 창업교육을 통한 자생적 일자리 확보 노력으로 대학 내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이 없는 것에 근거함으로써 창업교육을 통한 예비 교육이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자리 제공 방안 도출
-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에 맞춰 해외 취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확보 노력 필요
- 해외취업의 활성화는 청년계층 실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제공

- 도내 우수 인력의 해외진출은 향후 그들이 배운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충북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충북형 해외취업 종합지원체제를 구축
- 통합전산망의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부문 해외취업·인턴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 청년 취업애로층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 추진
- 청년계층 실업 축소 방안을 연령별, 전공별 등으로 구분하여 취업애로 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 확보 필요
- 더불어, 맞춤형 일자리 확보 후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한 문제해결형 접근방법 필요

❍ 청년계층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실업문제 해소 대책의 세분화 필요
- 청년계층을 위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실업대책을 근간으로 설정
- 더불어 연수,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으로의 일원화된 연계 및 사후관리로 단계별 일자리 방안 투입

❍ 비자발적 실업에 있는 고학력 비경제활동 청년층에 대한 심화교육과정 개편 필요
- 현행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의 현실적인 부분 반영으로 현재 충북 산업부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향후 노동자 확보를 수요공급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교육, 정보축적, 성과의 공유 등에 대한 보조장치 마련

❍ 효율적인 고용인프라 구축
- 청년 고용의 증대 및 실질적인 효과 견인을 위해서는 고용인프라 확충에 기반한 일자리정책 운영 필요
-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서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충북 청년패널조사에 근거하여 교육생과 졸업생의 패널을 확보함으로써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

❍ 경제활동 참여연령을 낮추기 위한 제도 도입
- 고학력 청년계층의 실업률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여 연령대의 하향 조정을 통해 젊은 세대의 참가율 촉진
- 산학협력 취업연계 제도 도입,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등 직업교육학교 졸업자의 실질적 취업연계 도모

❍ 차별화된 충북형 대학교육제도의 시행
- 충북의 일자리 특성에 맞춘 교육과 취업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천적인 교육제도 운영
- 일부 연구중심 대학 외 취업을 대비한 특성화 교육 부분이 강화된 대학교 및 제도 운영
- 이를 위해, 대학 간 통합, 학과 개편, 전문대학을 직업훈련 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0일 동안의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춘 국정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의 공감대 확산 기반 구축
- 기발표된 정책들이 충북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평가를 강화
- 질 좋은 일자리가 공공·민간부문에서 창출되어 고용증가를 통해 충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일자리 창출

❍ 2017년 8월 8일 발표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의 이행상황에 맞는 주기적인 점검 필요
-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 특히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의 일자리 성과 반영될 수 있는 조기 대응 노력 필요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 새정부 출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관계되는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일자리 확보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적용

❍ 벤처 및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연계한 일자리 제공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함으로써 주력산업의 발전, 신규투자 유치, 신산업 발전 등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고려

❍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

❍ 충청북도의 산업 특성은 1차 산업의 높은 발전가능성, 2차 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 3차 산업 중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 산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조업으로 인한 높은 특화도와 고용순변화 창출 가능성, 산업간 연계효과의 창출 가능성은 충청북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차 산업은 전국적인 우위는 있는 반면, 충청북도에서의 내적 성장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청북도의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간 연계는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조업은 충청북도 산업 연계에 있어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충청북도의 건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농림수산품은 전국 대비 우세하나 타지자체로의 연계를 고려할 경우에는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동력 확보가 필요함

❍ 청년 고용촉진정책의 방향 설정
- 청년 일자리확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
- 청년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교육기간과 수요공급 논리 개발 및 운영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직업고등학교, 충북내 대학, 직업훈련학교 및 기관, 사업체간 네트워킹

○ 21세기 선도 충북 청년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종합 정책 수립
- 충북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충북 청년고용촉진 중장기 종합 대책」 수립

○ 충북지역에 투자·기업유치의 활성화와 청년고용 연계 강화
- 외부 투자 유치 확대
- 지역내 우수 기업 육성 및 지원
-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과의 고용 계획 수립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확보 전략 구축
- 충북지역의 전략산업별 고용계획 수립
-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고려되는 교육, 의료, CT, IT, BT에 관한 전략 수립

○ 청년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과 직업 훈련 등 일자리 개발을 위한 기반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민관 협력 시스템 운영

○ 청년고용·인적자원개발의 총괄 조정 기구의 운영
- 청년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는 총괄 기구(가칭 충북 청년일자리 통합관리 센터)의 운영을 통해 교육, 지원, 연계를 일괄 처리
-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중앙정부 청년고용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청년 인턴제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해외 취업, 청년 스타트 정책 등 중앙정부에서 운여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 사업 지원 및 추가적인 도차원의 예산 마련

○ 취약계층 고용 지원책 마련 및 강화
- 차상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회의 균등 제공

❍ 충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강화

- 충북내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및 복지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부적 및 인적자원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여 우수 노동력의 유입 촉진
- 직업훈련 기관간 연계, 우수 환경 유지 중소기업 선발 및 확대 지원,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방안 구축 등과 함께 중앙부처 사업의 활용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시스템 도입



차 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5
3. 연구분석 틀 및 체계 ····· 6

제2장 지역 및 일자리 현황 ····· 9

제1절 충청북도 현황 ····· 11

1. 충청북도 현황 ····· 11
2. 부문별 현황 ····· 17
3. 상위관련계획 검토 ····· 56

제2절 일자리 여건 및 잠재력 분석 ····· 90

1. 충북 일자리 여건 현황 ····· 90
2. 충북 일자리 관련 시사점 및 SWOT 분석 ·· 99

제3장 일자리정책 사례분석 ····· 105

제1절 국내 일자리 정책 ····· 107

1. 중앙행정기관 ····· 107
2. 지방자치단체 ····· 161

제2절 국외 일자리 정책 ····· 207
1. 영국 ····· 207
2. 호주 ····· 220
3. 독일 ····· 223
4. 스웨덴 ····· 229
5. 핀란드 ····· 233
6. 미국 ····· 237
7. 일본(헬로우 워크) ····· 241
8. 프랑스, 세대간 계약 ····· 244

제4장 사업체 및 참여자 설문조사 ····· 247

제1절 사업체 설문조사 ····· 249
1. 사업체 설문조사 설문개요 ····· 249
2.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 ····· 251
제2절 참여자 설문조사 ····· 288
1. 참여자 설문조사 설문개요 ····· 288
2. 참여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 290

제5장 일자리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 313

제1절 충북 고용승수 산출 ····· 315
1. 충북 고용승수 산출 개요 ····· 315
2. 모형별 고용파급효과 개요 ····· 316
3. 모형별 고용파급효과 ····· 318



제2절 충북 일자리 대응방안 ····· 322
1. 청년실업대책 기본방향 ····· 322
2. 일자리 100일 플랜의 조기 대응 ····· 326
3. 충북 주력 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확보 ··· 327
4. 충북 차원의 일자리 정책 개발 ····· 328

【참고문헌】 ····· 333

【부록】 ····· 334

표 차 례



<표 2-1> 시군별 현황 ····· 12
<표 2-2> 인구변화 추이 ····· 14
<표 2-3> 연령대별 추이와 노령화지수 ····· 15
<표 2-4>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16
<표 2-5> 시군별 인구 점유율 변화 ····· 17
<표 2-6> 산업별 사업체수 ····· 18
<표 2-7> 산업별 종사자수 ····· 18
<표 2-8> 충북 경제산업 현황 ····· 19
<표 2-9>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 ····· 20
<표 2-10> 산업단지 현황 ····· 21
<표 2-11> 경제활동 현황 ····· 22
<표 2-12>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 개요 ····· 23
<표 2-13>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개발 내용 ····· 23
<표 2-14>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개발 내용 ····· 24
<표 2-15>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개발 내용 ····· 24
<표 2-16> 8개 클러스터 ····· 26
<표 2-17> 연도별 관광객 현황 ····· 27
<표 2-18> 연도별 유·무료 관광객 현황 ····· 27
<표 2-19> 2015년 월별 관광객 현황 ····· 28
<표 2-20> 문화재 현황(2015) ····· 29
<표 2-21> 문화공간 현황(2015) ····· 30
<표 2-22> 체육시설 현황(2015) ····· 31
<표 2-23> 도로시설 현황 ····· 32
<표 2-24> 자동차 등록대수(2015) ····· 32
<표 2-25> 시군별 주차시설 현황(2015) ····· 33
<표 2-26> 연도별 교통사고 추이 ····· 34

<표 2-27> 연도별 화재발생 추이 ····· 35
<표 2-28> 연도별 농가 현황 ····· 36
<표 2-29> 시군별 농가 현황 ····· 37
<표 2-30> 연령별 농가인구 현황 ····· 38
<표 2-31> 연도별 경지면적 ····· 39
<표 2-32> 시군별 경지면적 현황(2015) ····· 40
<표 2-33>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 41
<표 2-34>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변화추이(2015) ····· 41
<표 2-35> 연도별 과실 재배 면적/생산량 변화 추이(2015) ·· 43
<표 2-36> 친환경 농산물 변화 추이 ····· 44
<표 2-37> 시군별 친환경 농산물 현황(2015) ····· 45
<표 2-38> 연도별 교육시설 ····· 46
<표 2-39> 교육시설 현황(2016) ····· 46
<표 2-40> 평생교육 관련 시설 수(2015) ····· 47
<표 2-41>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2015) ····· 48
<표 2-42> 노인복지시설 현황(2015) ····· 49
<표 2-43> 가족·여성·장애인 복지시설(2015) ····· 49
<표 2-44> 자원봉사자 수(2015) ····· 50
<표 2-45> 의료기관 수(2015) ····· 51
<표 2-46> 의료인력 현황(2015) ····· 51
<표 2-47> 시군별 의료인력 현황(2015) ····· 52
<표 2-48> 연도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현황 ····· 53
<표 2-49> 시군별 상수도 현황(2015)-1 ····· 55
<표 2-50> 시군별 상수도 현황(2015)-2 ····· 56
<표 2-51> 고용률 70% 로드맵 단계별 중점과제 ····· 61

<표 2-52> 계획의 성과목표 ····· 63
<표 2-53> 부문별 대표 사업 ····· 64
<표 2-54> 부문별 대표 사업 ····· 67
<표 2-55>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 73
<표 2-56> 경제협력권산업 현황 ····· 75
<표 2-57> 경자구역 지정 현황 ····· 76
<표 2-58>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 과제 ····· 77
<표 2-59>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 78
<표 2-60> 경제자유구역별 핵심 프로젝트 ····· 78
<표 2-61> 소요예산 ····· 80
<표 2-62>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 80
<표 2-63> 연도별 투자계획 ····· 83
<표 2-64> 충북 입지계수 ····· 92
<표 2-65> 충북 변이할당 분석 결과 ····· 95
<표 2-66> 충북 투입산출효과 ····· 99
<표 3-1> 중앙행정기관 정책 현황 ····· 153
<표 3-2> 일자리 정책 예산 현황 ····· 158
<표 3-3> 지방자치단체 정책 현황 ····· 203
<표 3-4> 뉴딜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작 연도 ····· 208
<표 3-5> 유연뉴딜 단계별 서비스 내용 ····· 213
<표 3-6> Work Programme 참여그룹 ····· 216
<표 3-7> A4E의 Minimum Service Delivery ····· 217
<표 3-8> 실업급여Ⅰ 및 실업급여Ⅱ의 비교 ····· 225
<표 3-9> LAFOS 협력기관과 서비스의 범위 ····· 235
<표 3-10> 2010년 기준 LAFOS 서비스 위탁 현황 ·· 236
<표 3-11> LAFOS 서비스 과정 ····· 237



<표 3-12> '복지에서부터 취업' 지원사업의 실적 ····· 244
<표 3-13> 세대간 계약 현황(2014) ····· 246
<표 5-1> 충청북도 단일모형 분석 결과 ····· 318
<표 5-2> 지역간모형 고용승수 결과 ····· 319
<표 5-3> 다지역모형 지역내 고용승수 결과 ····· 320
<표 5-4> 다지역모형 지역간 고용승수 결과 ····· 321
<표 5-5> 충북 산업 경쟁력 종합 ····· 328
<표 5-6> 직접일자리 유형 및 수행 ····· 329

그 림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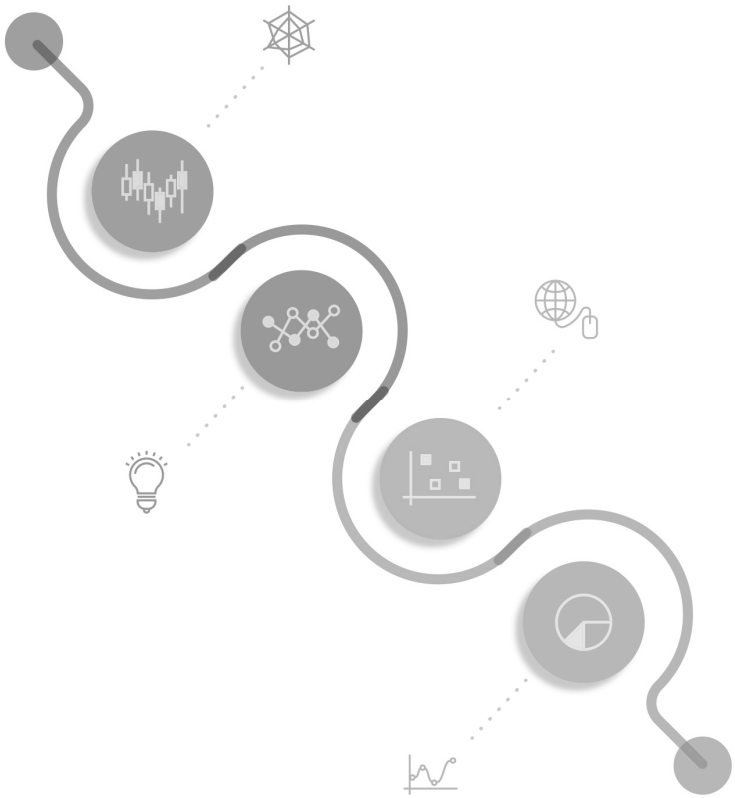
<그림 1-1> 과제 체계 ····· 7
<그림 2-1> 충청북도 위치 ····· 12
<그림 2-2> 충청북도 인구변화 추이(1995~2016) ····· 13
<그림 2-3>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이 ····· 15
<그림 2-4> 충북 경제자유구역 현황 ····· 22
<그림 2-5> 충청북도의 첨단산업단지 ····· 25
<그림 2-6> 2015년 충청북도 월별 관광객 ····· 28
<그림 2-7>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 36
<그림 2-8> 연도별, 연령대별 농가인구 현황 ····· 39
<그림 2-9>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 ····· 58
<그림 2-10> 고용률 70% 로드맵 기본방향 ····· 59
<그림 2-1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체계 ····· 62
<그림 2-12>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체계 ····· 65
<그림 2-13> 수정계획의 기본 틀 ····· 68
<그림 2-14>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71
<그림 2-15>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 82
<그림 2-16>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 85
<그림 2-17> 발전축 설정 ····· 86
<그림 2-18> 일자리관련계획 시사점 ····· 100
<그림 2-19> 개발 및 산업관련계획 시사점 ····· 101
<그림 2-20> 현황 및 여건 분석에 따른 SWOT 분석 ·· 103
<그림 3-1> 2017년 청년고용정책 추진 방향 ····· 157
<그림 3-2> 유연뉴딜 모형 ····· 213
<그림 3-3> 워크프로그램의 권역과 주요계약기관 ···· 219
<그림 3-4> Job Service Australia, 2009~2012 서비스 개요 ····· 222

<그림 3-5> 독일연방고용공단 구조 ····· 226
<그림 3-6> 헬로우 워크의 기능 ····· 242
<그림 3-7> 헬로우 워크의 사회 안전망 ····· 243
<그림 5-1> 분석모형별 차이 ····· 31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충북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층 취업 활성화 방안 모색

- ❍ 청년세대 실업의 증대는 충북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며 향후 소비기반의 붕괴 초래
- ❍ 청년실업은 향후 소득 증대를 위한 원천이 소실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타 연령층의 실업과 비교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배가
- ❍ 충북의 위상정립과 충북경제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역할로 인해 청년실업의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높음

□ 충북 취업 관련 청년 인구 특성 파악

- ❍ 장래 취업 정책의 정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질적인 충북의 청년 인구 동향 파악 필요
- ❍ 또한,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충북의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
- ❍ 향후 충북의 일자리 사업 변동에 대한 수요공급 모형 개발 필요

□ 충북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개발

-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정책 파악을 통한 충북 맞춤형 사업 개발
- ❍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해 성과가 유발된 정책의 도출 및 벤치마킹 필요
- ❍ 향후 충북 도입 가능한 정책 우선 선별

❍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방향의 도출과 이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의 일자리 정책 유무 조사

2. 연구목적

□ 충북 청년실업률 현황 조사

❍ 충북의 현황 제시

❍ 타 지자체와의 비교

□ 국내외 취업관련 시책 조사

❍ 국내외 청년실업률 대책

❍ 전반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

※ 국내외 및 부처 정책과 충북 정책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설정 방향 제시

□ 취업관련 시책의 사업 효과 및 성과 분석

❍ 일자리관련 정책 조사 후 실질적인 일자리 성과의 매치

※ 반면, 다수 정책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의 선별을 통한 정책 고려 필요

□ 향후 10년간의 미래 일자리 분석

❍ 일자리 수요 및 공급 변동 방향

※ 수요공급 vs 예측신뢰성 선택 필요

□ 일자리 확대 방안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방안

❍ 향후 필요한 정책과 충북 정책과의 차별성을 통한 충북 정책의 방향 설정

※ 더불어, 충북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일자리 방향 파악 및 비교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협의의 범위 : 충북

❍ 광의의 범위 : 17개 시도에 대한 일자리 분석
※ 일자리 변동에 대한 자료는 충북내 시군으로 한정

□ 시간적 범위

❍ 2016년 기준

❍ 지역별 자료 : 2010년(2015년) 기준가격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4가지 트랙으로 구분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실증분석

❍ 사업개발

□ 문헌연구

❍ 기존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1차 검토

❍ 문헌연구는 실태 분석 및 모형 분석에 대한 이론 연구, 관련 주제에 대한 사전 연구보고서로 구성

□ 사례조사

❍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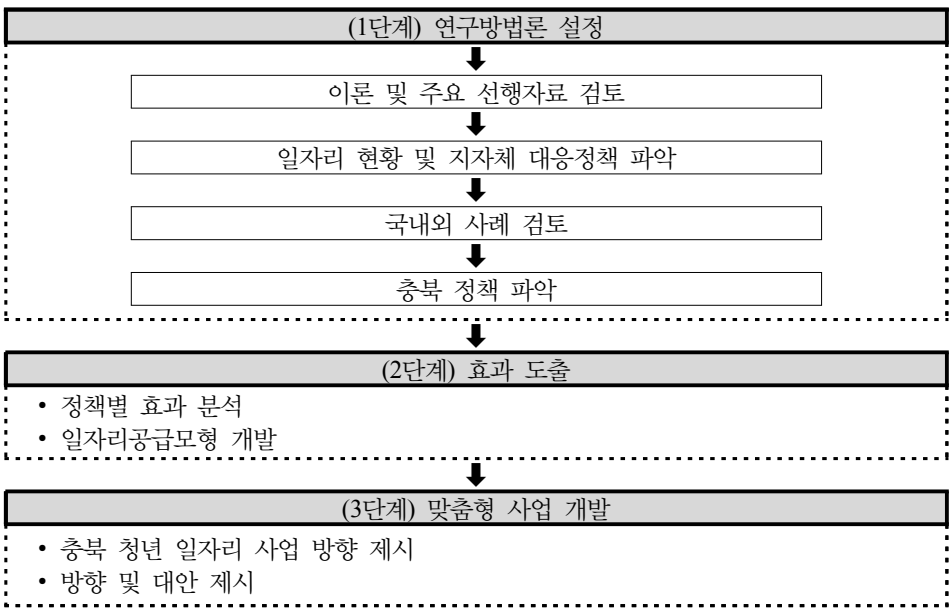
□ 실증분석

❍ 충북 고용률 유발 요인에 대한 예측모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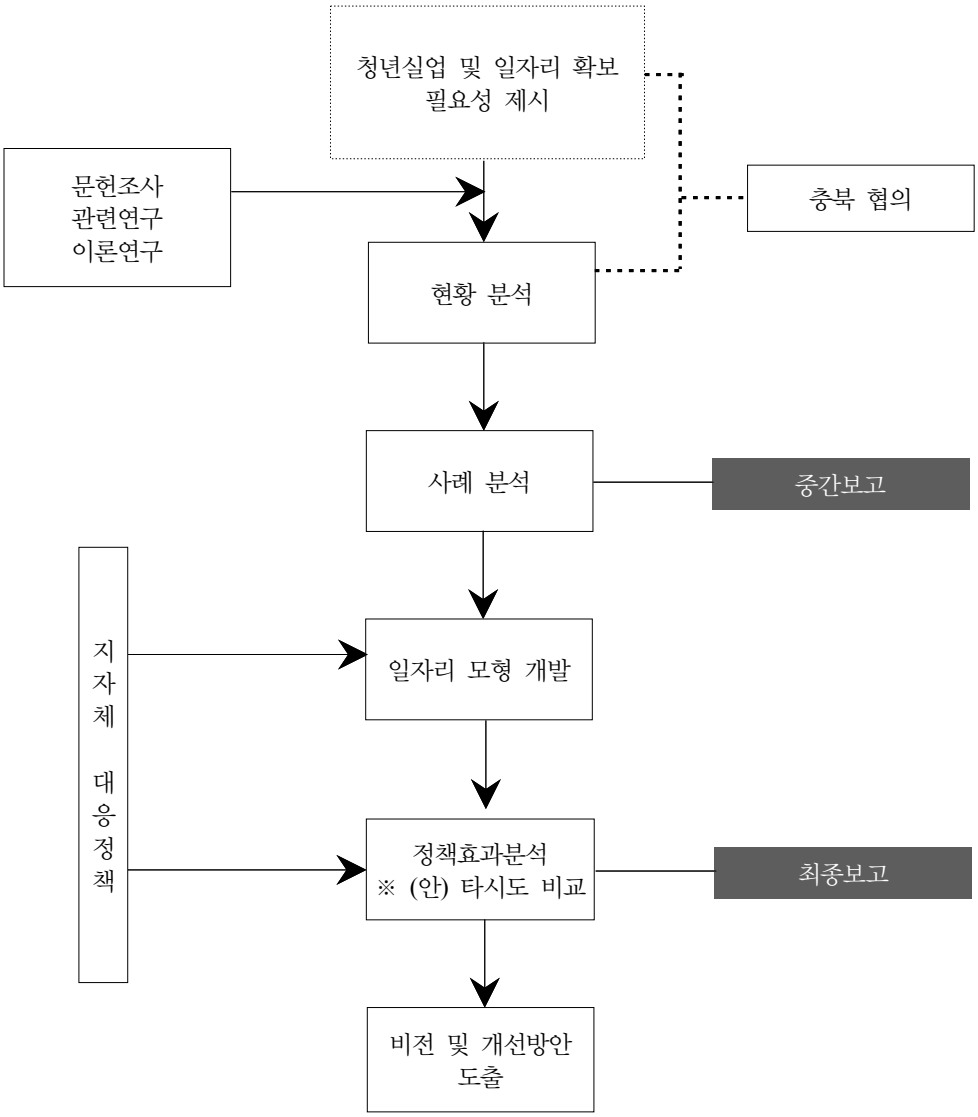
□ 사업개발

❍ 충북에 필요한 일자리 사업은 ① 관련 당사자의 needs파악, ② 상위계획 및 도방향 반영, ③ 사례비교를 통해 도출

3. 연구분석 틀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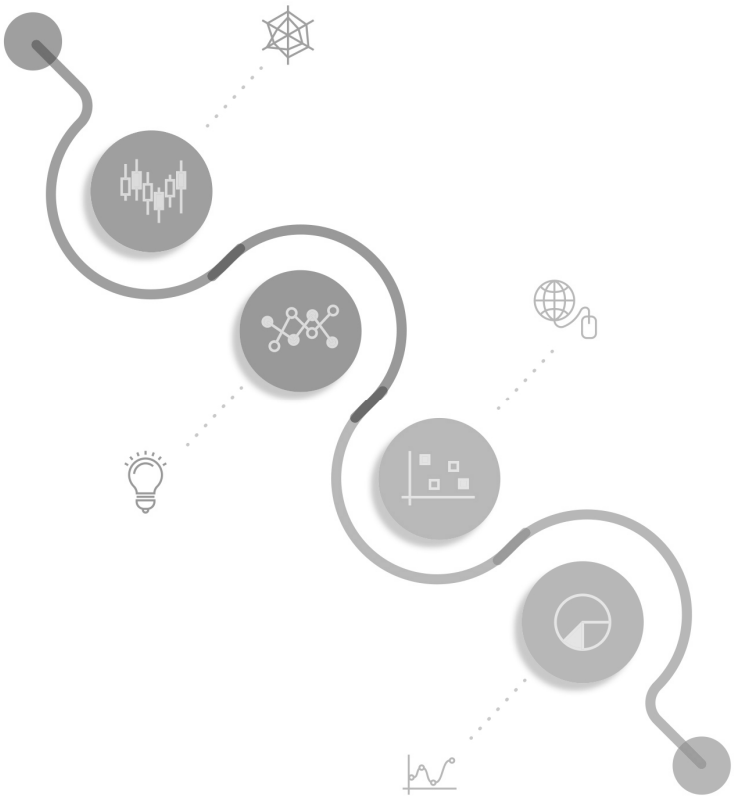
<그림 1-1> 과제 체계


청년실업 및 일자리 확보
필요성 제시
문헌조사
관련연구
이론연구
충북 협의
현황 분석
사례 분석
중간보고
지자체 대응정책
일자리 모형 개발
정책효과분석
※ (안) 타시도 비교
최종보고
비전 및 개선방안
도출

제2장
지역 및 일자리 현황

제1절 충청북도 현황

제2절 일자리 여건 및 잠재력 분석



제2장 지역 및 일자리 현황

제1절 충청북도 현황

1. 충청북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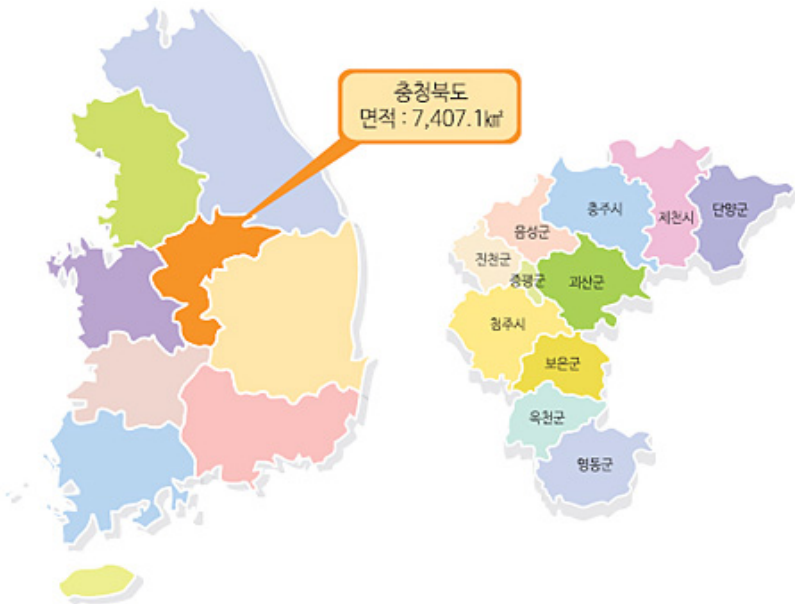
1) 입지여건

❍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유일의 내륙도로 북동쪽에 태백산맥, 동쪽에 소백산맥, 북서쪽에 차령산맥이 있으며, 구릉지와 평야로 이루어진 남고북저 형태의 분지 지형

❍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북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전라북도와 접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 및 철도, 물류 중심지역

❍ 서울특별시, 영·호남지방 중간에 입지하여 경부, 중부 고속도로, 경부선, 중앙선 철도와의 접근성이 확보되었으며 교통상의 요지

<그림 2-1> 충청북도 위치



<표 2-1> 시군별 현황

(2017. 3. 31. 기준)

시군별(행정동)	면적(㎢)	인구(명)	인구밀도(명/㎢)
충청북도(153)	7,407.1	1,591,697	214.9
청주시(43)	940.3	836,287	889.4
충주시(25)	983.7	208,116	211.6
제천시(17)	883.4	136,013	154.0
보은군(11)	584.2	34,249	58.6
옥천군(9)	537.1	52,056	96.9
영동군(11)	845.6	50,082	59.2
증평군(2)	81.8	37,452	457.7
진천군(7)	407.2	70,678	173.6
괴산군(11)	842.4	38,481	45.7
음성군(9)	520.3	97,861	188.1
단양군(8)	781.1	30,422	38.9

자료: 충청북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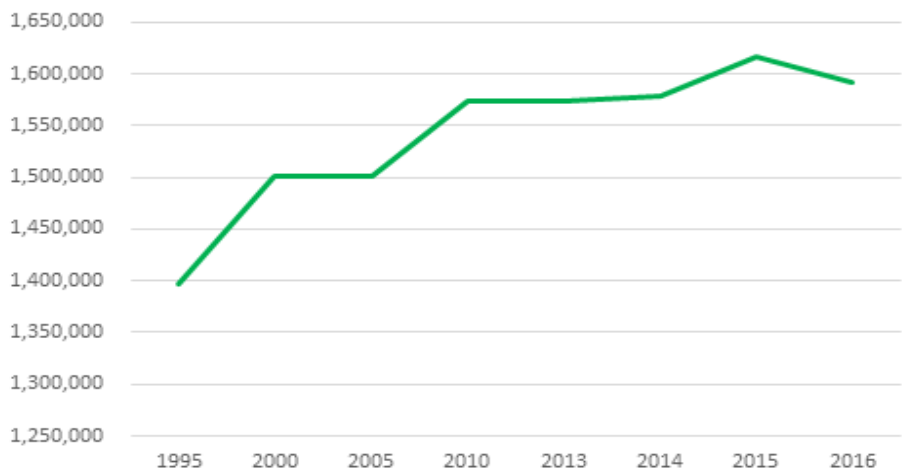
2) 인구·사회

□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세

❍ 충청북도의 인구는 199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2016년 기준으로 1,591,625명이며, 이는 1995년에 비해 194,897명이 증가한 것으로 약 14%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전국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그림 2-2> 충청북도 인구변화 추이(1995~2016)



<표 2-2> 인구변화 추이

(단위: 명)

연도	전국			충청북도		
	인구	남	여	인구	남	여
1970	30,882,386	15,216,002	15,666,384	1,454,824	726,994	727,830
1975	34,706,620	17,461,244	17,245,376	1,523,058	778,403	744,655
1980	37,436,315	18,767,201	18,669,114	1,424,785	725,079	699,706
1950	40,448,486	20,243,765	20,204,721	1,391,682	706,998	684,684
1990	43,410,899	21,782,154	21,628,745	1,390,150	697,308	692,842
1995	45,858,029	23,041,367	22,816,662	1,396,728	700,118	696,610
2000	47,732,558	23,962,088	23,770,470	1,501,459	755,028	746,431
2005	48,782,274	24,456,234	24,326,040	1,501,674	757,848	743,826
2010	50,515,666	25,310,385	25,205,281	1,573,981	796,002	777,979
2013	51,141,463	25,588,336	25,553,127	1,572,732	792,862	779,870
2014	51,327,916	25,669,296	25,658,620	1,578,933	796,141	782,792
2015	51,529,338	25,758,186	25,771,152	1,616,589	819,031	797,558
2016	51,696,216	25,827,594	25,868,622	1,591,625	803,240	788,385

자료: 국가통계포털

□ 중장년층과 노년인구의 증가

❍ 14세 이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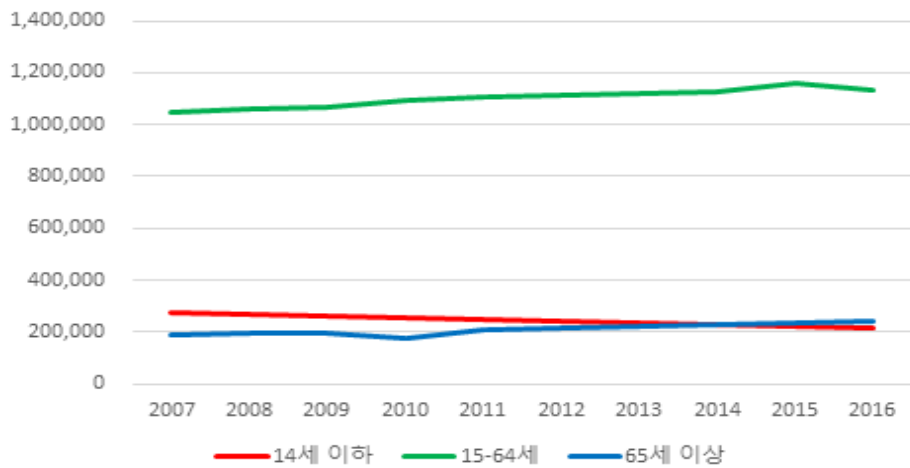
- 2013년까지는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많았으나, 2014년 이후로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
- 중장년층 인구는 2007년 1,047,466명에서 2016년 1,13641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고령화율(15.1%)은 전국 평균(13.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부터 항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노령화지수 역시 충청북도는 2016년 기준 1.12로 전국 평균 0.9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

❍ 노령화지수의 증가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생아수 감소 및 고령인구가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추정

- 2007년 14세 이하 인구는 272,919명에서 2016년 214,519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186,223명에서 240,690명으로 크게 증가

<그림 2-3> 연령대별 인구변화 추이



<표 2-3>연령대별 추이와 노령화지수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인구	1,506,608	1,519,587	1,527,478	1,522,794	1,562,903	1,565,628	1,572,732	1,578,933	1,616,589	1,591,625
14세 이하	272,919	266,295	258,691	252,415	246,647	239,803	233,084	226,373	219,080	214,519
15-64세	1,047,466	1,060,750	1,070,672	1,092,651	1,106,783	1,110,580	1,117,460	1,123,660	1,162,696	1,136,416
65세 이상	186,223	192,542	198,115	177,728	209,473	215,245	222,188	228,900	234,813	240,690
노령화지수	0.68	0.72	0.77	0.70	0.85	0.90	0.95	1.01	1.07	1.12

자료: 국가통계포털

3) 토지이용

❍ 충청북도의 전체 면적(7,407㎢)의 66.9%가 임야(4,955㎢)에 해당하며, 하천·도로 등을 제외한 가용토지면적은 2,015㎢(27.2%)에 해당함

❍ 충청북도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가장 많으며, 전 8.8%(649㎢), 답 8.5%(631㎢) 순으로 차지

<표 2-4>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구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기타
충청북도	면적	7,407	649	631	4,955	165	229	208	570
	구성비	100	8.8	8.5	66.9	2.2	3.1	2.8	7.7

자료: 충청북도

4) 공간구조

□ 청주시 중심의 공간구조

❍ 2006년에 비해 청주시의 인구 집중성이 더욱 강화되어 청주시 중심의 공간구조를 형성

-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인구와 충북 내 인구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증평군과 진천군의 소폭 증가가 보임
- 2016년 기준 청주시의 인구가 835,197명으로 충북 내 5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대비 2016년 208,518명(10.54%) 증가
-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감소했으며, 진천군과 증평군이 약 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

<표 2-5> 시군별 인구 점유율 변화

(단위: 명)

시군	2006년		2016년		점유율변화	인구증감
	인구	%	인구	%	('06-'16년)	('06-'16년)
청주시	626,679	41.93%	835,197	52.47%	10.54%	208,518
충주시	204,610	13.69%	208,350	13.09%	-0.60%	3,740
제천시	136,398	9.13%	136,517	8.58%	-0.55%	119
청원군	136,538	9.14%	-	-	-	-
보은군	36,293	2.43%	34,221	2.15%	-0.28%	-2,072
옥천군	54,923	3.67%	52,267	3.28%	-0.39%	-2,656
영동군	50,819	3.40%	50,552	3.18%	-0.22%	-267
증평군	30,483	2.04%	37,308	2.34%	0.30%	6,825
진천군	60,111	4.02%	69,950	4.39%	0.37%	9,839
괴산군	37,570	2.51%	38,973	2.45%	-0.07%	1,403
음성군	86,789	5.81%	97,787	6.14%	0.34%	10,998
단양군	33,346	2.23%	30,503	1.92%	-0.31%	-2,843

주: 청주시와 청원군 2014년 7월 통합
자료: 국가통계포털

2. 부문별 현황

1) 산업·경제

□ 충청북도의 산업 위상 소폭 증가

❍ 전국에서 충청북도의 경제 비중이 전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기준이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농립어업과 제조업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농림어업의 경우 2004년 전국 내 충청북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에서 2014년 5.5%로 1.7%p 증가

❍ 충청북도의 사업체는 2004년 96,771개에서 2014년 119,499개로 22,728개 사업체가 증가하였으며, 23%의 증가율을 보임

- 이는 전국 사업체 증가율 19%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사업체가 90.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9.7%, 농림어업과 광업은 0.1%로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산업별 사업체수

(단위: 개소)

사업체수 기준	전국		충북				전국 내 충북	
	2004	2014	2004	%	2014	%	2004	2014
전산업	3,189,890	3,812,820	96,771	100.0	119,499	100.0	3.0%	3.1%
농림어업	2,325	3,184	89	0.1	174	0.1	3.8%	5.5%
광업	1,845	2,013	73	0.1	98	0.1	4.0%	4.9%
제조업	328,338	397,171	8,401	8.7	11,564	9.7	2.6%	2.9%
서비스업	2,857,382	3,410,452	88,208	91.2	107,663	90.1	3.1%	3.2%

자료: 국가통계포털

❍ 충청북도의 종사자수는 2004년 439,934명에서 2014년 620,557명으로 180,623명이 증가하였으며, 41%의 증가율을 보임

- 이는 전국 종사자수 증가율 34%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내 산업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7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28.8%, 농림어업 0.3%, 광업 0.1%로 나타남

<표 2-7> 산업별 종사자수

(단위: 명)

종사자수 기준	전국		충북				전국 내 충북	
	2004	2014	2004	%	2014	%	2004	2014
전산업	14,818,754	19,899,786	439,934	100.0	620,557	100.0	3.0%	3.1%
농림어업	31,325	36,474	1,187	0.3	2,145	0.3	3.8%	5.9%
광업	18,944	16,311	1,076	0.2	910	0.1	5.7%	5.6%
제조업	3,417,164	3,957,394	119,892	27.3	178,424	28.8	3.5%	4.5%
서비스업	11,351,321	15,889,607	317,779	72.2	439,078	70.8	2.8%	2.8%

자료: 국가통계포털

☐ 경제산업 현황

❍ 충청북도 경제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GRDP는 총 52,364십억원, 총부가가치는 48,076십억원, 1차산업은 4,215십억원, 2차산업은 20,920십억원, 25,143십억원 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대비 GRDP는 23.2% 증가율을 보였고,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산업 8.9%, 2차산업 22.0%, 3차산업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산업별 비중은 3차산업이 52.3%, 2차산업이 43.5%, 1차산업이 4.2%인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1차산업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산업은 5.0%, 3차산업은 2.6%로 나타나 1차산업과 2차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충북 경제산업 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도내 비중	전국 대비 비중
GRDP	42,489	43,628	47,402	49,791	52,364		3.3%
총부가가치	39,154	40,163	43,937	45,809	48,076	100%	3.4%
1차산업	1,848	1,920	1,835	1,803	2,013	4.2%	6.1%
2차산업	17,142	17,200	19,768	20,392	20,920	43.5%	5.0%
3차산업	20,163	21,042	22,334	23,615	25,143	52.3%	2.6%

자료: 국가통계포털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 충청북도의 제조업 사업체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19.9%에 비해 9.9%p 높은 28.8%로 나타났으며, 2004년 대비 전국의 제조업 종자사수 비중이 감소한 것에 반해 충북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중은 전국 평균인 79.8%에 비해 9.0%p 낮은 70.8%로 나타남
- 2004년 대비 2014년 전국 평균 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충청북도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9>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충북		전국		충북	
	2004	2014	2004	2014	2004	2014	2004	2014
농림어업	0.1%	0.1%	0.1%	0.1%	0.2%	0.2%	0.3%	0.3%
광업	0.1%	0.1%	0.1%	0.1%	0.1%	0.1%	0.2%	0.1%
제조업	10.3%	10.4%	8.7%	9.7%	23.1%	19.9%	27.3%	28.8%
서비스업	89.6%	89.4%	91.2%	90.1%	76.6%	79.8%	72.2%	70.8%

자료: 국가통계포털

□ 114개의 산업단지 존재

❍ 2016년 4분기 기준 충청북도 내 산업단지는 총 114개로 일반산업단지가 67개로 가장 많으며, 농공단지 43개,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개씩 존재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총 1,747개 업체이며, 이 중 가동업체는 1,435개로 약 82%의 가동률을 보이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하는 고용은 82,367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 천㎡, 명, 백만원, 천달러)

2016년 4분기	단지수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입주 업체	가동 업체	고용	누계생산	누계수출
국가	2	8,806	6,773	66	53	3,709	1,497,590	181,565
일반	67	54,870	53,618	1,210	949	63,373	32,034,596	12,537,901
도시첨단	2	263	263	75	75	617	79,200	-
농공	43	6,215	6,154	396	358	14,668	6,388,372	2,181,232
합계	114	70,154	66,808	1,747	1,435	82,367	39,999,758	14,900,698

자료: 국가통계포털

□ 양호한 경제활동

❍ 충청북도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852천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 실업률 2.6%, 고용률 61.9%로 나타남

❍ 2016년 충청북도의 경제활동은 전국 비교시 경제활동인구는 적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0.8%p, 1.5%p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1.1%p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

❍ 2012년 대비 2016년 충북의 경제활동인구는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참여율은 3.7%p가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0.6%p, 고용률은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전국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참여율은 1.5%p, 실업률은 0.5%p, 고용률은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1> 경제활동 현황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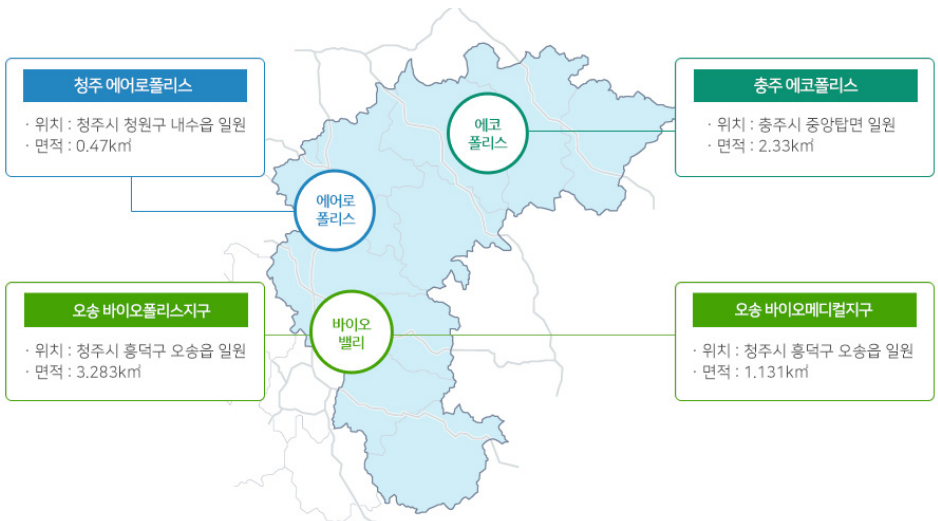
구분	충북				전국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12	766	59.9	2.0	58.7	25,501	61.3	3.2	59.4
2013	792	61.0	2.1	59.8	25,873	61.5	3.1	59.5
2014	835	63.7	3	61.8	26,536	62.4	3.5	60.2
2015	850	63.9	2.6	62.2	26,913	62.6	3.6	60.3
2016	852	63.6	2.6	61.9	27,247	62.8	3.7	60.4

자료: 국가통계포털

☐ 충북 경제자유구역

❍ 충북 경제자유구역에는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13~’20년 조성·개발 중임

<그림 2-4> 충북 경제자유구역 현황



<표 2-12>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 개요

지구	개발방향	중점유치업종
오송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차세대 의약산업 육성	연구지원시설, BT신약, 의료기기
오송 바이오폴리스	BIT융복합 의료기기 및 관광 중심지	교육기관 의료관광, 제약, 화장품
청주 에어로폴리스	세종시 관문 복합항공단지 항공물류 융복합 산업의 요람	항공기정비, 부품생산조립, 연구소

자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주: 충주에코폴리스는 17년4월 사업 철회

❍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 친환경 BT·IT 융복합 R&D 허브의 투자 최적지로 (오송첨복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인허가 기관 등 집적) BT를 기반으로 한 융합산업 육성 가능(바이오기반 신약과 의료기기 글로벌 외국기업 유치 여건 조성)

<표 2-13>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개발 내용

구역	내용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일원 (KTX오송역 주변)
면적	1,131천㎡
사업비	4조 3천억원
사업기간	2013~2020년
핵심선도사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의료업 기기제조업

자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세종시와 연계한 첨단·바이오·IT단지로 동북아 바이오 산업 허브의 중심 기지

<표 2-14>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개발 내용

구역	내용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일원 (KTX오송역 주변)
면적	3,283천㎡
사업비	1조 495억원
사업기간	2013~2020년
핵심선도사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의료업 기기제조업

자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 세종시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과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발
-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핵심기술 조기 확보

<표 2-15>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개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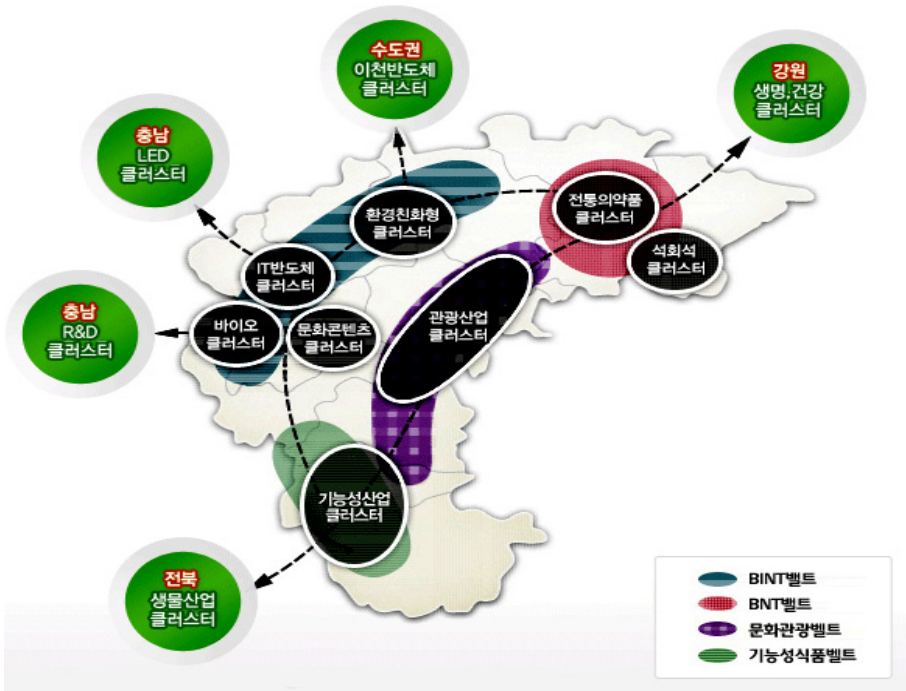
구역	내용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일원
면적	473,713㎡
사업비	1,569억원
사업기간	2013~2020년
핵심선도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자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 충북의 첨단산업

❍ 한반도 및 지구촌에서 충북의 역량이 한껏 발휘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하고자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산업/자원/기능/연계성 등을 고려해 충북 전혁을 4개의 벨트와 8개로 발전 축을 설정

<그림 2-5> 충청북도의 첨단산업단지



❍ 4대 전략산업은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전지사업, 부품소재산업이며, 4개 벨트는 BINT벨트(청주, 진천, 청원, 음성, 증평, 충주), BNT(제천-단양), 문화관광벨트(단양-충주-괴산-보은-영동), 기능성식품벨트(영동-옥천-보은-청원)

<표 2-16> 8개 클러스터

구분	거점	영향권역	핵심주체	주요기술분야
생명산업 클러스터	오송/오창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신약청 등 보건의료 4대 국책기관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바이오신약 바이오장기
반도체 클러스터	청주/오창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충북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 BK21, 하이닉스, 현대오토넷 등	반도체 차세대에너지
에듀테인먼트 클러스터	청주	청주. 청원	첨단문화산업단지, 디자인센터 등	에듀테인먼트 게임
전통의약산업 클러스터	단양	단양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광촉매콘크리트 지능형 시멘트
석회석신소재 클러스터	제천	제천, 오송, 진천, 음성	전통의약산업센터	한방신약 생태치료(에코세라피)
문화관광산업 클러스터	충주/단양/괴산	도내 전 지역	세계무술테마파크	중원문화 청풍호반관광
환경산업 클러스터	충주	충주, 음성, 진천, 청원	환경친화형 기술공원	IT부품 소재환경시험 특성평가
기능성식품 클러스터	영동/옥천	영동, 옥천, 보은, 청원	바이오테크노파크, 바이오기술교육센터	과일가공 기능성식품

자료: 충청북도 홈페이지

2) 문화·관광

□ 관광객 감소

❍ 2012년 한해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52,529,637명으로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관광객 수가 줄었으나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체 관광객 수의 0.0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

<표 2-17> 연도별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내국인	42,941,080	50,117,311	52,188,082	52,529,637	9,330,545	11,357,570	18,155,462	19,252,737
외국인	575,193	555,441	487,530	522,880	239,525	151,246	126,251	160,949
합계	43,516,273	50,672,752	52,675,612	53,052,517	9,570,070	11,508,816	18,281,713	19,413,6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주: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방문객과의 차이 고려 필요

❍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2012년 이후로 유료 관광객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무료관광객 역시 큰 증가폭을 나타냄

<표 2-18> 연도별 유·무료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료	14,814,351	16,415,179	14,399,349	14,266,268	6,344,280	6,553,772	7,821,592	7,671,501
무료	28,701,922	34,257,573	38,276,263	38,786,249	3,225,790	4,955,044	10,460,121	11,742,185
합계	43,516,273	50,672,752	52,675,612	53,052,517	9,570,070	11,508,816	18,281,713	19,413,6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주: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방문객과의 차이 고려 필요

❍ 충청북도는 비교적 고르게 관광객이 충청북도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5월 관광객이 27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달로 나타남
- 겨울인 1월, 2월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9> 2015년 월별 관광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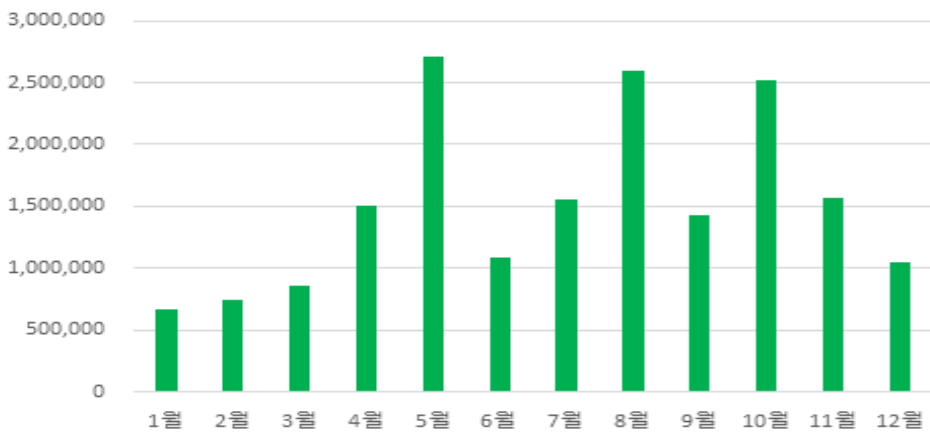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유료	310,717	314,415	399,779	752,794	945,887	400,871	658,714	1,178,614	647,370	1,021,264	636,484	554,683
무료	352,691	423,419	461,974	746,760	1,762,063	682,478	899,946	1,415,254	785,372	1,496,994	936,615	496,555
합계	663,408	737,834	861,753	1,499,554	2,707,950	1,083,349	1,558,660	2,593,868	1,432,742	2,518,258	1,573,099	1,051,238

자료: 충청북도

<그림 2-6> 2015년 충청북도 월별 관광객

(단위: 명)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 충청북도에는 총 760개의 문화재가 있으며,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가 174개이고, 도지정문화재는 478개가 존재하여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편

-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59개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존재하고 다음으로 충주시, 보은군 순으로 나타남

<표 2-20> 문화재 현황(2015)

(단위: 개수)

시군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문화재
충청북도	760	174	478	84	24
청주시	159	36	100	13	10
충주시	101	23	62	16	
제천시	72	11	56	2	3
보은군	88	25	50	13	
옥천군	38	2	25	9	2
영동군	58	14	34	7	3
증평군	12	1	10	1	
진천군	44	6	31	5	2
괴산군	74	19	39	14	2
음성군	32	8	19	3	2
단양군	79	29	49	1	
충북일원	3	0	3		

자료: 충청북도

□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부족

❍ 충청북도의 문화공간은 총 252개소로 공연시설 36개소, 전시시설 16개소, 지역문화복지시설 95개소 등 문화에 대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문화기반시설이 다소 부족한 편으로 나타남

- 많은 문화공간이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남

<표 2-21> 문화공간 현황(2015)

(단위: 개소)

시군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시민 회관	종합 복지관	청소년 회관	
충청북도	252	18	4	14	9	7	6	56	33	19
청주시	119	4	4	10	7	4	1	17	3	4
충주시	49	4	-	2	1	3	-	25	2	2
제천시	22	1	0	1	0	0	1	3	7	2
보은군	11	0	0	0	0	0	0	2	8	1
옥천군	7	2	0	0	0	0	0	1	3	1
영동군	11	3	0	0	0	0	1	2	3	2
증평군	2	1	0	0	0	0	0	0	0	1
진천군	13	1		1	1		1	2	1	2
괴산군	6	0	0	0	0	0	1	2	2	1
음성군	8	1	0	0	0	0	0	2	4	1
단양군	4	1	0	0	0	0	1	0	0	2

자료: 충청북도

❍ 충청북도의 체육시설은 총 3,383개소로 공공체육시설 1,617개소, 등록체육시설 1,728개소, 신고체육시설 38개소로 나타남

- 많은 체육시설이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남

<표 2-22> 체육시설 현황(2015)

(단위: 개수)

시군별	총계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충청북도	3,383	1,617	38	1,728
청주시	1,424	461	7	956
충주시	530	235	13	282
제천시	195	64	3	128
보은군	99	77	1	21
옥천군	289	257	0	32
영동군	102	64	0	38
증평군	135	97	0	38
진천군	234	134	6	94
괴산군	42	24	0	18
음성군	273	166	7	100
단양군	60	38	1	21

자료: 충청북도

3) 도시 인프라

□ 양호한 도로스톡(stock)

❍ 충북의 총 도로연장은 2015년 기준 6,857㎞로 2005년 대비 291㎞가 증가함

- 2005년 대비 2010년에는 총 도로연장이 2.0% 증가하였으며, 2010년 대비 2015년에는 4.4% 증가
- 도로위계별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시군도가 59.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가 전체의 21.52%, 일반국도 11.45%순임

❍ 전체 도로시설 중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5.59%로 경부고속도로가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을 통과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주요 교통축을 형성

- 주요 국도로는 청주-증평-음성-충주로 이어지는 국도 36호선이며, 그 밖의 주요국도는 괴산-음성 간의 국도 3호선과 단양-제천 간의 국도 5호선 등이 있음

<표 2-23> 도로시설 현황

(단위: ㎞)

구분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충청북도	2005년	6,566	257	3.91%	968	14.74%	1,460	22.24%	3,881	59.11%
	2010년	6,699	315	4.71%	954	14.23%	1,464	21.86%	3,966	59.20%
	2015년	6,858	384	5.59%	950	13.85%	1,476	21..52%	4,048	59.03%

자료: 충청북도

□ 청주시 이외에 주차장 및 주차면수 확보 등 주차시설 필요

❍ 2015년 기준 충청북도의 총 차량등록대수는 730,069대로 2010년 이후 연평균 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등록대수의 구성비는 승용차가 7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화물차 20.2%, 승합차 4.6% 순으로 나타남

<표 2-24> 자동차 등록대수(2015)

(단위: 대)

연도별	총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2010	617,225	443,053	37,867	133,942	2,363
2011	640,303	464,644	36,934	136,273	2,452
2012	653,610	478,529	35,608	136,850	2,623
2013	674,138	496,897	35,063	139,425	2,753
2014	699,797	519,581	34,105	143,169	2,942
2015	730,069	545,983	33,274	147,597	3,215

자료: 충청북도

❍ 충청북도의 2015년 주차시설 현황은 총 주차면수 598,510면으로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음

- 노상주차장은 2015년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2.3%에 불과하고, 노외주차장은 5.1%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2015년 충청북도의 주차장은 145개가 증가하였으며, 주차면수는 134,840면수가 증가함

❍ 2015년 주차면수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1.22대/면으로 2010년 1.33대/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주차면수의 절반 이상이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시군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편

<표 2-25> 시군별 주차시설 현황(2015)

(단위: 개소, 면수)

구분		합계		노상				노외				부설	
				유료		무료		공영		민영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충청북도	2010	39,143	463,670	40	2,297	246	12,313	374	27,172	304	13,818	38,179	408,070
	2015	39,288	598,510	38	1,787	351	11,749	328	18,812	268	11,732	38,303	554,430
청주시		16,561	346,589	15	1,093	213	6,387	115	4,715	195	6,256	16,023	328,138
충주시		7,801	90,046	0	0	18	1,369	51	2,790	50	2,563	7,682	83,324
제천시		4,393	44,769	19	572	33	1,680	13	955	7	103	4,321	41,459
보은군		674	6,183	0	0	8	103	9	440	7	1,736	650	3,904
옥천군		1,228	8,649	0	0	18	295	20	1,236	2	119	1,188	6,999
영동군		795	11,690	0	0	11	535	44	2,635	0	0	740	8,520
증평군		1,467	13,564	3	34	20	490	15	819	2	120	1,427	12,101
진천군		2,301	28,331	1	88	3	200	6	1,353	0	0	2,291	26,690
괴산군		1,189	7,529	0	0	13	241	15	542	5	835	1,156	5,911
음성군		2,218	31,503	0	0	7	211	12	1,194	0	0	2,199	30,098
단양군		661	9,657	0	0	7	238	28	2,133	0	0	626	7,286

자료: 충청북도

□ 교통사고는 증가하나 치사율은 감소

❍ 2015년 기준 충청북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335건으로 238명이 사망했고 14,92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이후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5.1%, 4.5% 증가함

- 사망자수는 2010년 262명에서 2015년 238명으로 2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6> 연도별 교통사고 추이

(단위: 건, 명)

연도별	발생건수	자동차 1만대당 발생건수	사망자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부상자	인구 10만명당 부상자
2010	8,571	107	262	18	14,032	949
2011	8,696	106	265	18	14,178	960
2012	8,636	102	280	18	14,410	933
2013	8,501	98	286	18	14,222	911
2014	8,937	101	253	16	14,759	947
2015	9,335	102	238	15	14,927	956

자료: 충청북도

□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액 절감 필요

❍ 충청북도의 2015년 화재는 1,373건으로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 차이는 있으나 2010~2016년까지 평균 1,356건의 화재가 발생함

- 2015년 기준 발생 원인으로는 실화가 88.5%로 가장 많고, 인명피해는 2012년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2015년 기준 동산 6,343백만원, 부동산 7,165백만원으로 나타남
- 따라서 방재·안전시스템의 강화가 필요

<표 2-27> 연도별 화재발생 추이

(단위: 건, 천원, 명, ㎡)

연도별	건수(건)				발생비율(%)			인명피해			피해액		소실면적	
	발생	실화	방화	기타	실화	방화	기타	계	사망	부상	동산	부동산	동수	면적
2010	1,351	1,167	79	105	86.4	5.8	7.8	87	15	72	7,838,999	9,595,907	607	93,793
2011	1,376	1,191	68	117	86.6	4.9	8.5	94	7	87	5,825,340	8,124,803	578	151,865
2012	1,372	1,209	64	99	88.1	4.7	7.2	123	15	108	5,433,682	6,038,161	594	94,337
2013	1,345	1,191	49	105	88.6	3.6	7.8	104	16	88	4,796,887	5,037,543	515	103,512
2014	1,316	1,145	55	116	87.0	4.2	8.8	76	6	70	6,480,544	7,528,212	614	96,990
2015	1,373	1,215	34	124	88.5	2.5	9.0	69	18	51	6,343,234	7,165,443	572	182,542

자료: 충청북도

4) 농림축산업

□ 지속적인 농업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인구구구조 대비책 필요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 2016년 농가수는 74,292가구로 2012년 대비 -6.0%의 변화율을 보이며 4,732가구가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도 -10.9%의 변화율을 보이며 22,17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충청북도의 농가인구 중 남자 89,664명, 여자 90,901명으로 여성이 1,237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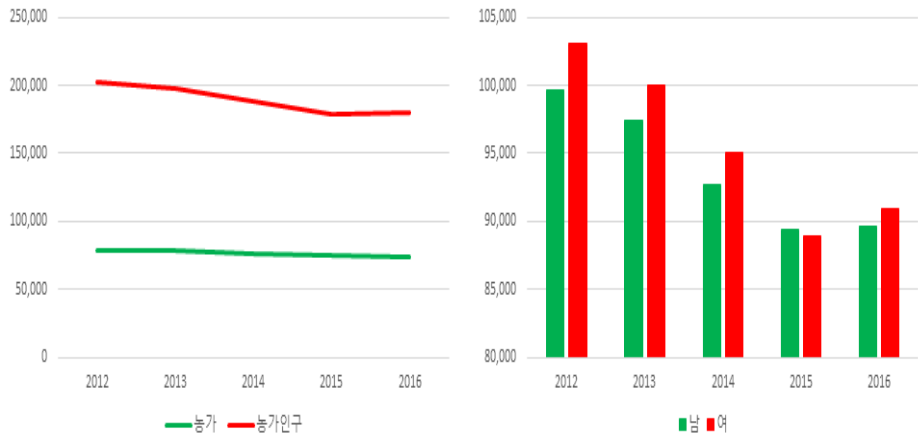
<표 2-28> 연도별 농가 현황

(단위: 명)

연도별	농가	농가인구		
		계	남	여
2012	79,024	202,735	99,667	103,068
2013	78,717	197,410	97,460	99,950
2014	76,436	187,752	92,687	95,065
2015	74,611	178,248	89,330	88,918
2016	74,292	180,565	89,664	90,901

자료: 국가통계포털

<그림 2-7>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6,740가구로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주시 10,386가구, 제천시 7,890가구 순으로 나타남

<표 2-29> 시군별 농가 현황

(단위: 명)

연도별	농가	농가인구		
		계	남	여
충청북도	74,292	180,565	89,664	90,901
청주시	16,740	45,264	22,602	22,662
충주시	10,386	25,525	12,733	12,792
제천시	7,890	17,789	8,938	8,851
보은군	4,632	10,773	5,298	5,475
옥천군	6,110	14,459	6,909	7,550
영동군	6,860	15,429	7,289	8,140
증평군	1,608	3,849	1,831	2,018
진천군	4,925	11,929	5,941	5,988
괴산군	5,330	12,243	6,173	6,070
음성군	6,614	16,733	8,573	8,160
단양군	3,198	6,572	3,377	3,194

자료: 국가통계포털

❍ 고령화 인구구조를 대비한 미래 충청북도 농가인력 확보 방안 필요

- 2010년 대비 2016년 0~54세까지의 연령층에서 농가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에는 65세 이상 노년층만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 확보방안이 필요
- 특히 감소율이 가장 높은 40~44세는 -52.5%의 감소율을 보이며 농가에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청년·중장년층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0> 연령별 농가인구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10			2016			증감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11,522	105,235	106,287	180,565	89,664	90,901	-14.6%	-14.8%	-14.5%
0~4세	4,011	2,091	1,920	2,414	1,121	1,293	-39.8%	-46.4%	-32.7%
5~9세	5,458	2,835	2,623	3,820	1,928	1,893	-30.0%	-32.0%	-27.8%
10~14세	8,618	4,541	4,077	4,171	2,191	1,981	-51.6%	-51.8%	-51.4%
15~19세	9,094	4,879	4,215	5,928	3,083	2,845	-34.8%	-36.8%	-32.5%
20~24세	6,681	3,317	3,364	5,209	2,571	2,638	-22.0%	-22.5%	-21.6%
25~29세	8,264	4,670	3,594	5,584	3,021	2,563	-32.4%	-35.3%	-28.7%
30~34세	6,234	3,561	2,673	4,396	2,655	1,740	-29.5%	-25.4%	-34.9%
35~39세	7,506	4,126	3,380	4,641	2,545	2,096	-38.2%	-38.3%	-38.0%
40~44세	10,370	5,247	5,123	4,921	3,066	1,855	-52.5%	-41.6%	-63.8%
45~49세	15,301	7,554	7,747	8,707	4,008	4,698	-43.1%	-46.9%	-39.4%
50~54세	21,725	10,696	11,029	14,782	6,629	8,152	-32.0%	-38.0%	-26.1%
55~59세	22,410	10,954	11,456	24,326	11,712	12,614	8.5%	6.9%	10.1%
60~64세	18,986	9,636	9,350	25,257	12,579	12,678	33.0%	30.5%	35.6%
65~69세	20,938	9,949	10,989	20,022	10,803	9,219	-4.4%	8.6%	-16.1%
70~74세	22,226	10,908	11,318	15,049	7,672	7,377	-32.3%	-29.7%	-34.8%
75~79세	14,203	6,729	7,474	17,019	8,218	8,801	19.8%	22.1%	17.8%
80세이상	9,497	3,542	5,955	14,318	5,860	8,459	50.8%	65.4%	42.0%

자료: 국가통계포털

<그림 2-8> 연도별, 연령대별 농가인구 현황



☐ 농업구조 변화 필요

❍ 작물 재배 경지면적 감소

- 논의 경지면적은 2010년 대비 2015년 12.7% 감소한 44,541ha이고, 밭의 경지면적은 1.6% 증가하여 67,027ha인 것으로 나타나 논의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1> 연도별 경지면적

(단위: ha)

연도별	합계	논	밭	가구당 경지면적		
				계	논	밭
2010	116,973	50,999	65,974	1.46	0.64	0.83
2011	115,821	49,222	66,599	1.44	0.61	0.83
2012	117,718	49,443	68,275	1.50	0.63	0.87
2013	114,530	48,062	66,468	1.45	0.61	0.84
2014	112,097	45,164	66,933	1.47	0.59	0.88
2015	111,568	44,541	67,027	1.50	0.60	0.90

자료: 충청북도

❍ 시군별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가장 경지면적이 넓었으며, 다음으로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순으로 나타남

- 가구당 경지면적은 괴산군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2> 시군별 경지면적 현황(2015)

(단위: ha)

시군별	합계	논	밭	가구당 경지면적		
				계	논	밭
충청북도	111,568	44,541	67,027	1.50	0.60	0.90
청주시	18,258	11,243	7,014	1.11	0.68	0.43
충주시	14,828	6,046	8,782	1.38	0.56	0.82
제천시	10,662	2,672	7,990	1.45	0.36	1.09
보은군	8,976	4,852	4,124	1.76	0.95	0.81
옥천군	8,051	2,386	5,665	1.36	0.40	0.95
영동군	9,587	1,346	8,240	1.37	0.19	1.18
증평군	2,133	1,171	962	1.30	0.72	0.59
진천군	8,211	5,091	3,120	1.82	1.13	0.69
괴산군	11,655	3,882	7,774	2.07	0.69	1.38
음성군	13,467	5,427	8,040	1.99	0.80	1.19
단양군	5,741	425	5,316	1.65	0.12	1.53

자료: 충청북도

❍ 농업진흥지역의 감소

- 충청북도의 농업진흥지역은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진흥구역은 2010년 50,655ha에서 2015년 50,242ha로 413ha가 감소하였으며, 농업보호구역은 6,892ha에서 6,880ha로 12ha가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 2010년 대비 2016년 426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3> 연도별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단위: ha)

연도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합계
2010	50,655	6,892	57,547
2011	50,615	6,887	57,503
2012	50,511	6,887	57,398
2013	50,453	6,871	57,323
2014	50,429	6,869	57,298
2015	50,242	6,880	57,122

자료: 충청북도

❍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음성군, 진천군, 보은군 순으로 나타남

<표 2-34>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변화추이(2015)

(단위: ha)

연도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합계
충청북도	50,242	6,880	57,122
청주시	9,772	795	10,567
충주시	5,422	684	6,106
제천시	2,051	233	2,284
보은군	6,013	503	6,516
옥천군	2,941	717	3,658
영동군	4,072	483	4,555
증평군	1,240	119	1,359
진천군	5,872	1,088	6,960
괴산군	5,518	826	6,344
음성군	6,839	1,432	8,271
단양군	502	0	502

자료: 충청북도

□ 대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 확보 필요

❍ 과실 생산 재배 면적은 2010년 대비 2015년 202ha 줄어들었으나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숭아와 기타 과실의 재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사과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 면적은 268ha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4,269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배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 면적은 210ha 감소했고, 생산량은 7,4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복숭아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 면적은 348ha 증가했고, 생산량은 16,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포도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 면적은 357ha 감소했고, 생산량은 7,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감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 면적은 686ha 감소했고, 생산량은 2,5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과실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 면적은 971ha가 늘어났으며, 생산량은 9,5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5> 연도별 과실 재배 면적/생산량 변화 추이(2015)

(단위: ha, M/T)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면적	14,812	14,853	14,539	14,216	14,253	14,610
	생산량	179,197	158,108	166,006	163,526	163,902	192,301
사과	면적	4,252	4,158	4,016	3,867	3,877	3,984
	생산량	64,973	42,387	53,641	63,177	56,667	69,242
배	면적	712	647	575	531	526	502
	생산량	17,439	15,222	11,228	11,803	11,647	10,034
복숭아	면적	3,826	3,610	3,743	3,709	3,775	4,174
	생산량	33,567	40,288	43,419	39,315	40,846	50,255
포도	면적	2,750	2,916	2,795	2,732	2,596	2,393
	생산량	46,686	44,411	43,462	36,745	42,522	39,173
감	면적	1,584	1,557	1,397	1,143	970	898
	생산량	9,390	7,544	7,139	5,738	4,715	6,890
기타	면적	1,688	1,965	2,013	2,234	2,258	2,659
	생산량	7,142	8,256	7,117	6,748	4,877	16,707

자료: 충청북도

□ 농업구조 개편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원

❍ 친환경 농산물 농가, 면적, 출하량 감소 추세

-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는 2010년 대비 2015년 39.1% 감소한 3,574가구로 나타났으며, 면적은 36.3% 감소한 3,367천㎡, 인증량은 70.7% 감소한 41,841톤으로 나타남
-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142,998톤에서 2015년 70.7% 감소한 41,841톤으로 101,157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저농약 농산물은 2010년 대비 2015년 농가수 87.0% 감소, 면적 86.2% 감소, 인증량 89.6% 감소율을 보이며 현저한 감소세를 나타냄

❍ 친환경 농산물의 농가,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과 육성방안이 필요

<표 2-36> 친환경 농산물 변화 추이

(단위: 건, 개, 천㎡,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건수	1,193	1,174	1,154	1,164	1,185	1,270
	농가수	5,868	5,509	5,180	4,840	4,028	3,574
	면적	5,283	5,112	4,891	4,621	3,806	3,367
	인증량	142,998	252,026	62,275	66,995	73,572	41,841
유기 농산물	건수	188	225	162	189	232	287
	농가수	822	840	609	745	819	853
	면적	869	882	708	795	862	889
	인증량	28,167	62,873	8,357	9,766	7,780	8,860
무농약 농산물	건수	493	532	579	682	769	893
	농가수	2,517	2,620	2,754	2,929	2,476	2,390
	면적	2,116	2,331	2,401	2,648	2,152	2,160
	인증량	57,625	61,067	28,651	36,577	49,781	27,024
저농약 농산물	건수	512	417	336	255	184	89
	농가수	2,529	2,049	1,516	1,069	733	330
	면적	2,298	1,899	1,486	1,073	792	316
	인증량	57,206	128,086	23,592	19,908	16,011	5,955

자료: 충청북도

❍ 시군별 친환경 농산물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농가, 면적, 인증량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괴산군, 음성군으로 나타남

<표 2-37> 시군별 친환경 농산물 현황(2015)

(단위: 건, 개, 천㎡, 톤)

연도별	합계				유기농산물				무기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건수	농가	면적	인증	건수	농가	면적	인증	건수	농가	면적	인증	건수	농가	면적	인증
충청북도	1,270	3,574	3,367	41,841	287	853	889	8,860	893	2,390	2,160	27,024	89	330	316	5,955
청주시	224	951	764	10,685	74	307	274	3,836	148	618	480	6,823	2	26	10	26
충주시	213	480	566	5,537	61	102	155	1,209	121	260	277	2,282	31	118	134	2,046
제천시	42	140	174	859	9	13	17	130	30	116	143	561	3	11	15	168
보은군	37	124	153	632	2	13	24	109	34	109	126	460	1	2	2	63
옥천군	123	370	299	1,272	22	51	37	298	88	279	235	918	13	40	27	55
영동군	122	149	116	413	19	22	29	80	87	89	61	241	16	38	27	92
증평군	15	47	36	350	7	25	23	274	8	22	13	76	0	0	0	0
진천군	83	389	401	4,978	14	76	61	674	63	299	340	4,304	6	14	0	0
괴산군	146	442	440	8,186	40	183	183	1,644	103	256	249	6,512	2	2	6	28
음성군	85	160	186	7,572	19	19	24	388	56	93	89	4,110	10	48	73	3,074
단양군	180	322	232	1,358	20	42	63	219	155	249	145	737	5	31	23	402

자료: 충청북도

5) 교육·복지

□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16년 충청북도의 학교는 총 884개, 학급 10,796개 학생수는 352,293명으로 남자 200,907명, 여자 151,386명인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 보다 49,521명 많으며, 교직원수는 23,900명이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5명으로 나타남

- 2011년 대비 2016년 학생수는 5.7% 감소했으며, 남자학생수는 3.9%, 여자학생수는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교직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1년 대비 2016년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수 감소와 교직원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2-38> 연도별 교육시설

(단위: 개소, 명)

연도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교직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2011	883	10,604	373,419	209,071	164,348	22,799	20.1
2012	884	10,733	376,006	212,905	163,101	23,257	19.6
2013	878	10,642	366,479	206,342	160,137	23,342	18.9
2014	885	10,745	361,681	203,714	157,967	23,663	18.2
2015	885	10,797	356,615	205,668	155,013	23,841	17.8
2016	884	10,796	352,293	200,907	151,386	23,900	17.5

자료: 충청북도

❍ 2016년 충청북도의 교육시설을 살펴보면, 유치원 345개, 초등학교 260개, 중학교 128개, 고등학교 83개가 있으며, 전문대학 5개, 대학교 54개가 설립되어 있고 학생수는 대학교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직원수는 초등학교가 가장 7,68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전문대학이 51.0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남
- 모든 학교에서 남자학생이 여자학생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비 불균형이 존재

<표 2-39> 교육시설 현황(2016)

(단위: 개소, 명)

연도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교직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유치원	345	1,059	18,932	9,647	9,285	1,692	12.2
초등학교	260	4,260	84,052	43,596	40,456	7,681	12.8
중학교	128	1,785	46,287	24,218	22,069	4,188	12.3
고등학교	83	1,852	54,937	28,723	26,214	4,532	12.1
전문대학	5	238	23,084	14,621	8,463	669	51.0
대학교	54	1,369	123,754	79,298	44,456	4,670	26.5

주1: 고등학교에는 일반계,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학교 포함
주2: 대학교에는 교육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포함
자료: 충청북도

□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충을 통한 평생교육 확대

❍ 2015년 충청북도의 도서관은 42개소이며, 시민회관 6개소, 종합복지회관 56개소, 청년회관 33개소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접근 용이한 시설 공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도서관과 종합복지회관을 제외한 다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실천적이며 다양한 접근 필요

<표 2-40> 평생교육 관련 시설 수(2015)

(단위: 개소)

구분	도서관	시민회관	종합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2012	36	8	36	46	12	0	9
2013	39	8	40	47	12	0	9
2014	40	6	34	36	11	1	9
2015	42	6	56	33	11	0	8

자료: 충청북도

□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 충청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33,037가구로 증가하여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가구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됨

- 2010년 대비 2015년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의 연평균 -4.3% 변화율을 나타낸 것에 반하는 결과
- 2010년 대비 2015년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늘어난 반면, 인원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소년소녀가장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209명이었던 소년소녀가장은 2016년 24명으로 8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2015년 증가한 것과 더불어 충청북도의 노령화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표 2-41>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2015)

(단위: 세대, 명)

구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래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시설	인원	가구	인원	합계	세대주	세대원
2010	31,982	57,408	31,329	50,742	179	5,591	653	1,075	209	145	64
2011	30,334	53,370	29,500	46,584	230	5,461	834	1,325	148	102	46
2012	28,553	49,669	27,775	42,638	289	5,761	778	1,270	118	101	17
2013	27,103	46,372	26,208	39,115	313	5,704	895	1,553	73	54	19
2014	26,800	44,964	25,301	36,950	334	5,625	1,499	2,389	47	44	3
2015	33,037	55,359	31,567	47,411	334	5,632	1,470	2,316	24	18	6
청주시	13,994	23,226	13,470	20,733	114	1,640	524	853	23	17	6
충주시	4,983	8,229	4,790	7,410	44	499	193	320			
제천시	3,887	6,134	3,686	5,368	36	461	201	305			
보은군	1,207	1,753	1,106	1,523	6	77	101	153			
옥천군	1,312	2,479	1,216	1,751	22	581	96	147			
영동군	1,510	2,272	1,459	2,106	22	95	51	71			
증평군	707	1,035	684	959	9	38	23	38			
진천군	1,272	1,983	1,174	1,772	19	79	98	132			
괴산군	1,277	2,051	1,188	1,776	17	130	89	145			
음성군	1,871	4,664	1,784	2,579	33	1,946	87	139			
단양군	1,017	1,533	1,010	1,434	12	86	7	13	1	1	

자료: 충청북도 통계연보

□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인프라 확충 필요

❍ 충청북도의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

❍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260개, 노인여가복지시설 4,073개, 노인주거복지시설 37개, 재가노인복지시설 84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2> 노인복지시설 현황(2015)

(단위: 개소, 명)

구분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2010	212	5511	3,951	33	589	85	498
2011	228	6334	4,018	35	727	100	513
2012	243	6333	3,992	36	750	92	502
2013	242	6514	4,044	38	805	91	502
2014	248	6995	4,037	42	829	82	496
2015	260	7502	4,073	37	771	84	500

자료: 충청북도

□ 여러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품질향상 및 주민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아동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마련

❍ 2015년 기준 충청북도의 여성복지시설은 8개, 장애인복지시설 27개, 국공립보육시설 58개, 아동복지시설 37개로 여성·장애인·아동의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표 2-43> 가족·여성·장애인 복지시설(2015)

(단위: 개소)

구분	여성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부랑인시설
2015	8	27	58	37	4

자료: 충청북도

❍ 2015년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참여는 285,90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7%에 달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가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29세, 30~39세임
-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가장 많고, 충주시, 제천시 순

<표 2-44> 자원봉사자 수(2015)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남	여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
2010	170,241	76,143	94,098	170,241	22,619	25,183	23,064	41,125	34,118
2011	193,452	86,641	106,811	193,452	28,442	29,427	24,278	43,909	39,466
2012	224,265	101,353	122,912	224,265	38,927	36,590	25,731	46,499	43,370
2013	264,540	120,511	144,029	264,540	53,151	46,067	27,576	50,281	47,242
2014	264,117	120,361	143,756	132,059	57,128	51,902	25,597	47,234	43,715
2015	285,902	130,162	155,740	285,902	63,439	62,334	26,398	47,264	45,126
청주시	132,472	57,212	75,260	132,472	35,597	33,477	12,751	20,002	17,078
충주시	41,639	20,450	21,189	41,639	11,358	9,356	3,147	5,821	5,900
제천시	30,862	14,352	16,510	30,862	3,535	7,700	2,881	6,134	5,990
보은군	6,060	2,866	3,194	6,060	618	525	529	1,300	1,487
옥천군	9,609	4,651	4,958	9,609	1,579	1,143	943	1,898	1,976
영동군	9,556	4,833	4,723	9,556	720	2,537	836	1,896	1,765
증평군	7,262	3,016	4,246	7,262	1,696	1,328	756	1,401	1,064
진천군	15,017	6,749	8,268	15,017	4,024	2,211	1,600	2,828	2,153
괴산군	9,048	4,896	4,152	9,048	1,137	987	584	1,339	2,282
음성군	16,012	7,705	8,307	16,012	2,544	1,927	1,890	3,142	3,246
단양군	8,365	3,432	4,933	8,365	631	1,143	481	1,503	2,185

자료: 충청북도

□ 청주시에 집중된 의료서비스, 타 시군 의료환경 개선 필요

❍ 2015년 충청북도의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2개소, 병원 37개소, 보건소 4개소, 보건진료소 96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인력은 총 14,947명으로 의사 2,175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458명, 간호사 3,474명으로 나타남

<표 2-45> 의료기관 수(2015)

(단위: 개소)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치과	한방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양병원
2015	12	37	811	6	37	376	4	14	96	158

자료: 충청북도

<표 2-46> 의료인력 현황(2015)

(단위: 명)

구분	합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록사
2015	14,947	2,175	510	458	150	6	3,474	5,379	2,693	102

자료: 충청북도

❍ 2015년 충청북도의 병원수는 1,679개소, 병상수 19,699개, 의료인력 14,947명, 보건소 인력 596명,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력은 503명으로 조사됐으며 민간의료에 비해 공공의료의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2015년 병원수와 병상수는 각각 194개소, 2,777개가 증가하였으며 의료인력은 3,78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2015년 병원수, 병상수 및 의료인력은 각각 13.1%, 16.4%, 33.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건소인력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력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 시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의료환경에 대한 대안 필요

- 충청북도의 총 병원수의 56.2%, 병상수의 43.2%, 의료인력의 58.2%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7> 시군별 의료인력 현황(2015)

(단위: 개소, 명)

구분	병원수 총합계	병상수 총합계	의료인력	보건소인력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력
2010	1,485	16,922	11,167	542	556
2011	1,525	18,515	12,217	546	539
2012	1,530	18,637	11,834	554	523
2013	1,584	19,610	12,944	579	528
2014	1,632	19,466	14,455	609	514
2015	1,679	19,699	14,947	596	503
청주시	944	8,503	8,701	148	71
충주시	215	2,227	2,076	71	67
제천시	152	2,443	1,451	57	43
보은군	32	736	243	37	42
옥천군	56	1,129	507	41	44
영동군	51	666	364	35	53
증평군	36	176	158	27	4
진천군	59	723	495	37	33
괴산군	23	365	171	36	53
음성군	93	2,520	695	66	52
단양군	18	211	86	41	41

자료: 충청북도

6) 환경·생태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증가

❍ 2015년 기준 충청북도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6,684개로 2010년 4,442개보다 2,242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부터 꾸준히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증가함

- 이는 2010년 대비 2015년 50.5%가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시군별 배출업소를 살펴보면 음성군이 1,386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주시 1,386개소 순으로 나타남

-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경고가 124건으로 가장 많고, 개선명령 54건, 조업정지는 14건으로 나타남

<표 2-48> 연도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현황

(단위: 개소, 건)

구분	배출업소	단속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순수고발	기타
2010	4,442	3,982	161	50	79	12	16	0	1	2	1
2011	4,742	3,738	240	88	65	26	21	10	5	0	25
2012	4,666	4,528	252	274	49	38	20	5	4	4	15
2013	4,839	2,981	238	129	54	19	25	0	2	4	6
2014	5,088	3,579	217	106	75	11	12	0	0	2	11
2015	6,684	3,520	215	124	54	14	16	0	0	3	8
충청북도	909	714	44	29	12	1	3	0	0	0	2
청주시	1,386	618	24	14	7	1	1	0	0	0	1
충주시	563	304	16	14	2	0	0	0	0	0	0
제천시	312	145	18	10	5	0	3	0	0	0	0
보은군	123	83	5	3	1	1	0	0	0	0	0
옥천군	297	165	2	2	0	0	0	0	0	0	0
영동군	153	108	8	2	3	3	0	0	0	0	0
증평군	97	62	5	2	3	0	0	0	0	0	0
진천군	972	480	41	25	7	4	0	0	0	2	4
괴산군	243	169	6	2	3	0	0	0	0	0	1
음성군	1,493	623	45	20	11	4	9	0	0	1	0
단양군	136	49	1	1	0	0	0	0	0	0	0

자료: 충청북도

□ 보은군, 괴산군 등 상·하수도 취약지역 존재

❍ 2015년 충청북도의 상수도 및 하수처리 인구 보급률은 각각 90.2%, 86.2%로 양호한 편이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상·하수도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일 1인당 급수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충청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86.0%에서 2015년 90.2%로 4.2%p 증가하였으며, 급수인구 105,549명, 급수량 116,054㎥/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상수도보급률은 증평군이 9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주시 96.7%, 제천시 90.8%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은군 47.7%, 괴산군 58.3% 등이 상수도 취약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표 2-49> 시군별 상수도 현황(2015)-1

(단위: 명)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1일 1인당 급수량(ℓ)
2010	1,573,981	1,353,205	86.0	349,300	520,150	384
2011	1,588,633	1,378,674	86.8	349,300	545,306	396
2012	1,590,457	1,393,785	87.6	343,250	566,396	406
2013	1,600,163	1,422,225	88.9	338,950	595,539	419
2014	1,609,633	1,451,481	90.2	338,950	612,576	422
2015	1,616,589	1,458,754	90.2	340,100	636,204	435
청주시	842,960	814,740	96.7	126,600	364,629	445
충주시	211,976	189,342	89.3	55,000	73,111	386
제천시	137,609	124,949	90.8	85,000	41,888	335
보은군	34,731	16,577	47.7	8,100	7,673	463
옥천군	53,193	44,704	84.0	21,750	16,243	363
영동군	51,251	39,443	77.0	19,350	17,380	441
증평군	37,260	36,893	99.0	-	13,486	366
진천군	72,818	59,548	81.8	1,100	32,221	541
괴산군	39,477	23,030	58.3	1,000	10,966	476
음성군	104,316	87,109	83.5	-	47,693	548
단양군	30,998	22,419	72.3	22,200	10,913	487

자료: 충청북도

❍ 충청북도의 하수도 보급률은 2010년 79.6%에서 2015년 86.2%로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처리인구는 97,359명이 줄었고 하수처리인구는 139,96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하수도보급률을 살펴보면 제천시가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증평군 93.0%, 충주시 92.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하수도 취약지역으로는 괴산군 47.9%, 음성군 51.9% 등으로 나타나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

<표 2-50> 시군별 상수도 현황(2015)-2

(단위: 명)

구분	총인구	비처리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도보급률(%)
2010	1,573,981	320,633	1,253,348	79.6
2011	1,588,633	269,652	1,318,981	83.0
2012	1,590,458	243,469	1,346,989	84.7
2013	1,600,213	242,367	1,357,846	84.9
2014	1,609,633	233,030	1,376,603	85.5
2015	1,616,589	223,274	1,393,315	86.2
청주시	842,960	65,880	777,080	92.2
충주시	211,976	16,242	195,734	92.3
제천시	137,609	7,169	130,440	94.8
보은군	34,731	10,122	24,609	70.9
옥천군	53,193	7,335	45,858	86.2
영동군	51,251	16,861	34,390	67.1
증평군	37,260	2,625	34,635	93.0
진천군	72,818	17,952	54,866	75.3
괴산군	39,477	20,575	18,902	47.9
음성군	104,316	50,210	54,106	51.9
단양군	30,998	8,303	22,695	73.2

자료: 충청북도

3. 상위관련계획 검토

1) 일자리관련 계획

(1) 일자리 100일 계획(2017.5.10.~8.17.)

□ 배경 및 목적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0일간 추진 일자리 정책으로 향후 일자리계획의 방향을 제시

□ 기본방향

❍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공급, 성장과 일자리간 분배 선순화 구조 형성 및 복원
-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및 경제사회적으로 인센티브 구조 형성
- 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의의 발굴 및 경제 분위기 수정
-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과이 융합

□ 계획의 주요내용

❍ 일자리 우선 정책 운영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수석실 신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통해 고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기틀 마련
- 교육, 복지, 세제, 금융, 재정 등에 대한 정책 검토 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
- 일자리 신문고 설치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공공부문
  •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 및 관련비용의 추경 예산 반영, 추가 선발을 위해 선발부터 교육까지의 점검
  •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의 수립을 통해 일자리위원회에 로드맵 상정
  • 공공기관의 「'17년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7월)하고 변경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실시
- 민간부문
  • 민간부문의 일자리 증대를 견인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 체질 개선 및 일자리 구조로의 전환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의 토대를 구축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
- 실패 부담으로 인한 창업위축 방지를 위해 재기지원을 강화
-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
-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대

-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
  -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참여·협동·연대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질 높이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고용부 총괄)」를 가동하여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
-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및 주당 법정 근로시간 16시간 단축

<그림 2-9>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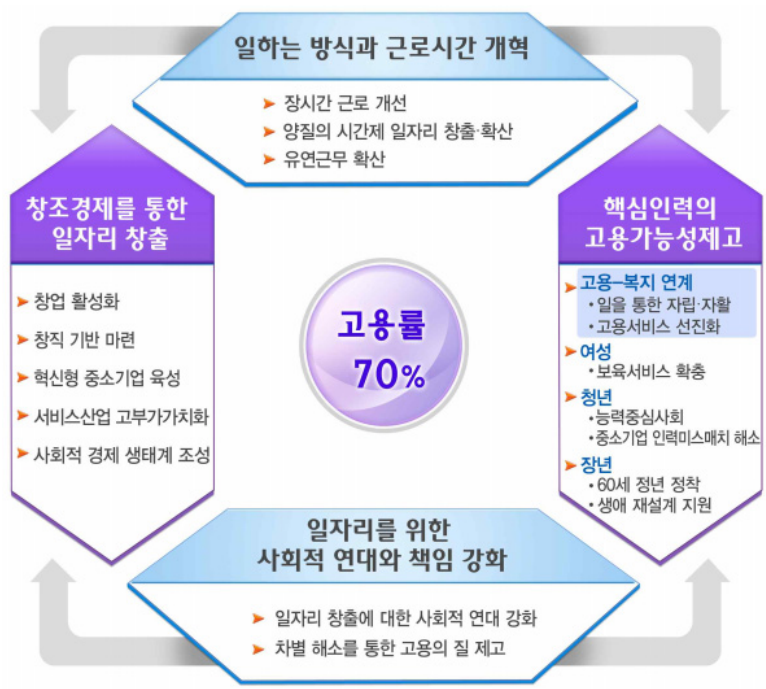
(2) 고용률 70% 로드맵(2013~2017)

□ 기본방향

❍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개혁,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출처: 고용정책 기본계획)

❍ '14년까지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등 제도·인프라의 기반을 조성하고, '15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도출

<그림 2-10> 고용률 70% 로드맵 기본방향



□ 주요정책 및 계획 과제

❍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5대 핵심부문(창업·창직·중소기업·서비스업·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요 정책을 하반기에 집중 발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지원

❍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 장시간근로 해소와 유연근로 확산이 일·가정 양립 확산과 문화소비, 내수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시간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견인
- 근로시간 3대 개혁과제(장시간근로 개선, 시간제 일자리 창출, 유연근로 확산)를 범 부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 근로빈곤층, 여성·청소년 등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는 고용률 제고의 핵심

❍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

- 새로운 고용창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노·사·정 모두의 비용 부담을 수반, 이에 대한 수용과 역할 분담 및 책임성 강화

<표 2-51> 고용률 70% 로드맵 단계별 중점과제

시기	기반조성 ('13~'14)	도약 ('15~'16)	확장 ('17~)
전제	• 거시경제의 안정과 창조경제의 실현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정부정책 및 노·사 합의문화 정착		
법·제도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및 확대 •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스마트워크촉진법 제정	• 新직업 발굴 및 자격 제도化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 자동육아휴직 관행 확산(대체인력 활성화) •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도입 • 국가직무능력표준 정책 • 점진적 퇴직제도 실시 • 파견업종의 합리적 조정	• 창조경제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 • 스펙초월 시스템 정착 •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책임화
정책	• 벤처투자 활성화방안 • 창업 붐 조성 • (사회)서비스업 발전 방안 •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시 비용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확충 • 스펙초월 시스템 구축 • 유망 중소기업 정보 시스템 구축	• 벤처창업 활성화 • 고용창출형 중소기업지원 제도 본격 실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서비스산업 선진화 • 시간제 일반직공무원 채용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3) 충북 민선6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2014~2018)

□ 배경 및 목적

❍ 민선6기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지역의 산업기반, 인적자원 등의 특성요인을 고려하고 현황과제 및 정책수요를 토대로 향후 추진해야 할 일자리창출 정책방향과 중점과제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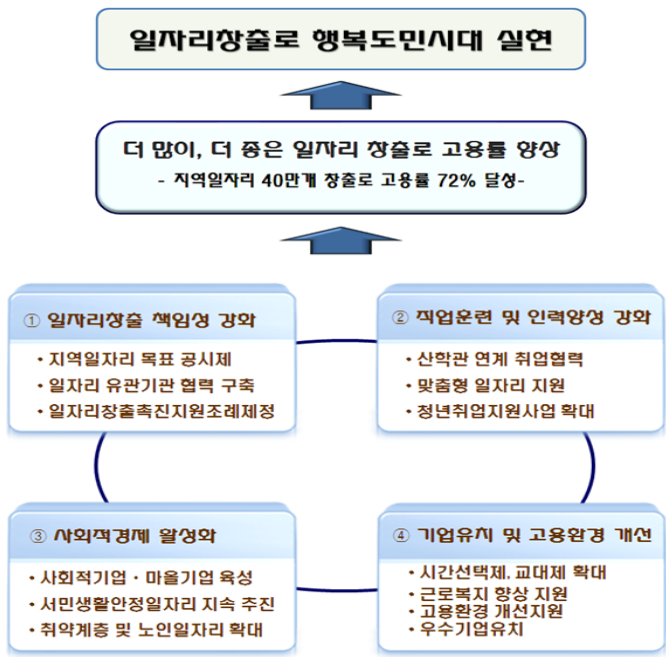
❍ 충북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

□ 비전 및 목표

❍ 비전 : 일자리창출로 행복도민시대 실현

❍ 목표 : 일자리 40만개 창출로 고용률 72% 달성

<그림 2-1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체계



<표 2-52> 계획의 성과목표

(단위: 천명)

구 분	창출목표	주요 공약내용
계	400	
따뜻한 일자리	312	■ 취약계층, 저소득층생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좋은 일자리	88	■ 우량 기업유치, 여성·청년층일자리, 공공행정분야 일자리 등

□ 부문별 사업계획

❍ 정부부문 기본방향

- 충북의 인적자원 수급현황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계획 설정
- 향후 충북의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목표의 설정
- 충북 지역전략산업 특화에 상응한 일자리의 중점적 지원
- 서민 생활안정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 사회적기업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자리 확대

❍ 정부부문 사업계획

- 직접일자리창출 : 97개 사업, 15만 16백명, 9,776억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 13개 사업, 3만 36백명, 478억원
- 고용서비스 : 19개 사업, 9만 6백명, 143억원
- 고용장려금 : 4개 사업, 24백명, 73억원
- 창업지원 : 4개 사업, 18백명, 11억원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16개 사업, 0.5억원
- 기타 일자리사업 : 49개 사업, 1만 9백명, 808억원

❍ 민간부문 기본방향

- 기업유치의 최고 가치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다각적·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 및 수도권 기업 전략적 유치

- 생명·태양광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속전개와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설투자 유도
- 신수도권시대·영충호 시대에 부응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기회를 우수기업 유치로 연계

❍ 민간부문 사업계획

- 기업유치 : 2개 사업, 11만 9백명, 1,071억원

<표 2-53> 부문별 대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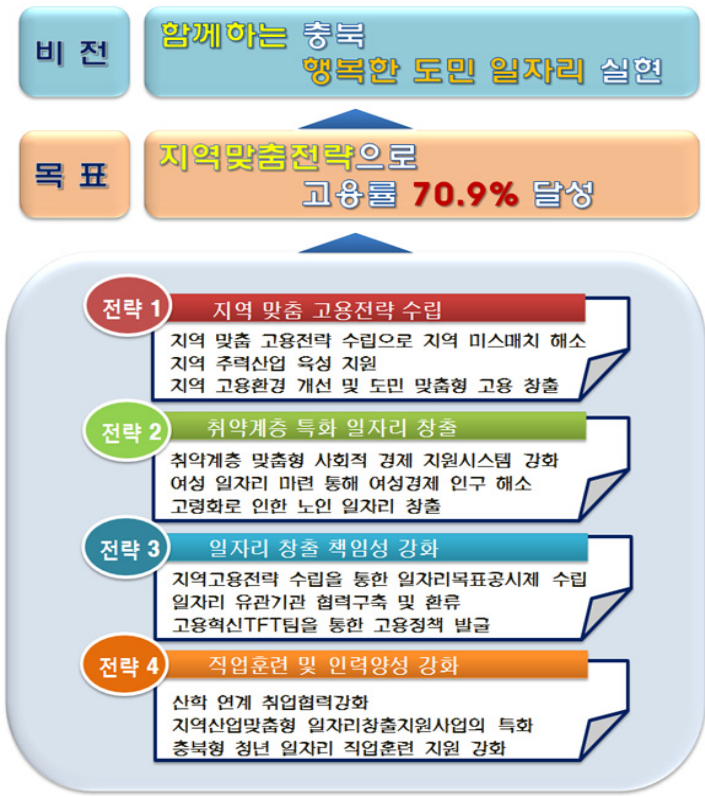
구 분		대표 단위사업명
정부 부문	○ 직접일자리창출	· 노인일자리 운영(9988 행복지키미)
	○ 직업능력개발훈련	·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직업교육훈련
	○ 고용서비스	· 일자리지원센터(취업특강)
	○ 고용장려금	·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 창업지원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
	○ 일자리 인프라구축	· 충북 고용률 72% 달성을 위한 기관간 협업시스템 구축
민간 부문	○ 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	·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항구적 일자리 창출

(4) '17년도 충청북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2017)

□ 비전 및 전략

❍ 지역맞춤 전략으로 고용률 70.9% 달성을 통한 행복 도민 일자리 실현

<그림 2-12>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체계



□ 민선6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 비전 및 일자리창출 목표 등 민선6기 일자리창출종합계획을 기초로 해 ’16년도 세부계획 수립

○ 민선6기 고용률 72% 달성

- 연도별 목표 : ’16년(69.6%) → ’17년(70.9%) → ’18년(72%)

□ 공통 일자리 목표

○ 고용률(15세~64세) : 고용률 72% 달성
- 연도별 : '17년(70.9%) → '18년(72%)
- 성별 : 남성 77.4%, 여성 63.9%
- 연령별 : 청년 46.9%, 중년 81.6%, 장년 77.3%

○ 취업자 수(15세~64세) : 774천명
- 성별 : 남성 441천명, 여성 333천명
- 연령별 : 청년 46.9%, 중년 81.6%, 장년 77.3%

○ 상용근로자 수 : 전년대비 증감률(6.7%) 및 취업자 수 증감률(1.7%) 반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목표 대비 실적 및 고용률 목표 달성을 감안하여 설정

□ 부문별 사업계획

○ 정부부문 기본방향
- 베이비 부머 등 중장년 일터 제공을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등 일자리 제공
- 여성 경제가능인구 증가에 따른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은 노인일자리 정책 발굴 및 지원
- 반도체·바이오의약·태양광 등 주력산업육성을 통한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
- 지역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훈련을 통해 지역산업맞춤 인력양성

○ 정부부문 사업계획
- 직접일자리창출 : 63개 사업, 38,704명, 208,267백만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 21개 사업, 9,760명, 8,396백만원
- 고용서비스 : 21개 사업, 18,246명, 10,467백만원
- 고용장려금 : 1개 사업, 22명, 360백만원
- 창업지원 : 7개 사업, 545명, 692백만원
- 일자리 인프라 구축 : 18가지 인프라, 81개소
- 기타 일자리사업 : 2개 사업, 1,773명, 41,999백만원

❍ 민간부문 기본방향

- 6+3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활동 강화(투자유치 컨설팅)

※ 바이오산업, 유기농·식품, 화장품·뷰티, 태양광·신에너지, 신교통·항공산업, ICT융합산업 +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뿌리기술산업

- 도내 취업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투자기업 확대 및 일자리 다수 창출
- 글로벌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신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 미래산업 연계 외자유치 활동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기간단축(자체<30⇨25일>, 위원회<60⇨50일>)
- 글로벌 바이오밸리 거점 조성을 통한 관련산업 일자리 창출 확대
  - 바이오의약(전국 3위 8.4%), 바이오식품(전국 3위 9.6%)

❍ 민간부문 사업계획

- 기업 등 유치 : 2개 사업, 21,250명, 55,100백만원

<표 2-54> 부문별 대표 사업

구분			대표 단위사업명
정부부문	1. 직접일자리창출		1. 1 생산적 일손봉사 1. 2 충북 여성인턴제
	2. 직업능력개발훈련		2. 1 지역맞춤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행복기업프로젝트) 2. 2 충북지역 인력수요 대응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3. 고용서비스		3. 1 청년 2030 기업연계 지원 사업 3. 2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4. 고용장려금		4. 1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5. 창업지원		5. 1 지역 특화형 우수 창업동아리 지원 5. 2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6. 일자리 인프라구축		6. 1 충북형 일자리 지도 작성 6. 2 충북 고용률 72%달성을 위한 기관간 협업시스템
	7. 기타	산업	7. 1 주력산업 육성
민간부문	8. 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		8. 1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 유치
	9. 기타		9. 1 오송첨복재단 연구 인력 유치

2) 개발 및 산업관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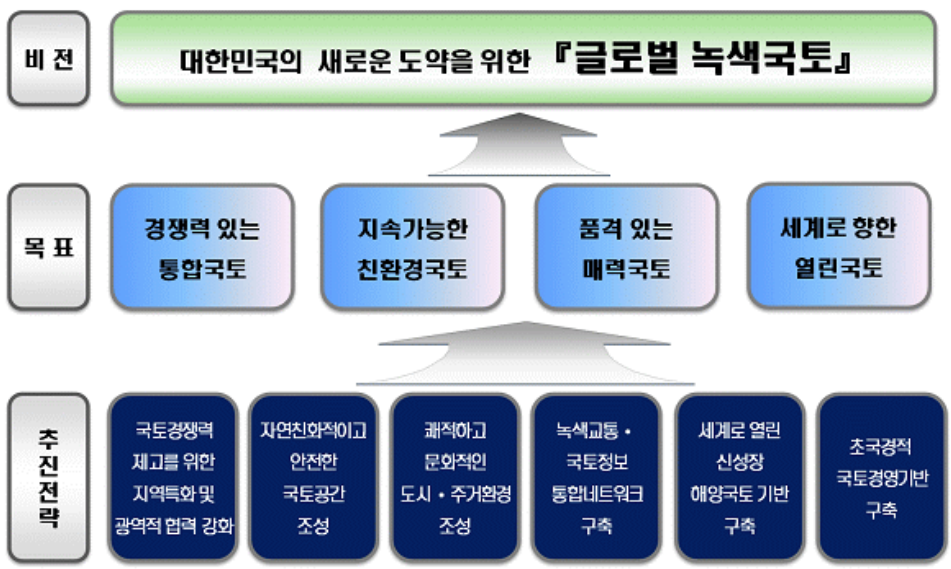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계획 기조 및 목표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 한반도 장점 활용하여 FTA 시대 대비 글로벌 국토 실현로 유라시아, 태평양 지역 선도
- 환경, 산업, 인프라, 복지, 문화 등 국토공간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녹색국토의 실현

<그림 2-13> 수정계획의 기본 틀



❍ 경쟁력있는 통합국토

- 개별 지역이 통합된 광역적 공간 단위에 기초한 신국토 골격을 형성하여 지역특화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
- 남북 간 신뢰에 기반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경제성장을 환경과 융합한 친환경 국토 형성으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추구
- 기후변화 대비 재해에 안전한 국토 구현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역사·문화자원을 우리 국토 공간에 접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
-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매력있는 국토 조성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물류, 금융, 교류의 거점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거점 확충
- 대륙-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 강화

□ 6대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3차원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
-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입지 육성
-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강·산·바다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 국민과 강이 어우러지는 친수국토 조성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생활공간 조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입지 육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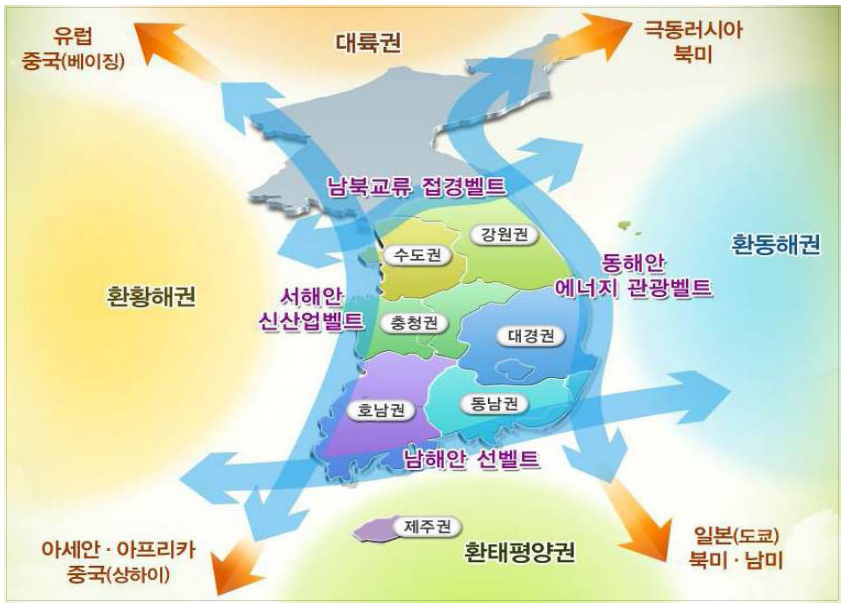
-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 문화도시 창조
- 인구 감소 및 기존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심재생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체계의 탄력적 적용
- 주거수준의 선진화 및 주거안전망 확충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를 통해 국토경쟁력 강화 지원
- 교통수단간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
-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 고부가가치 창출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 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진화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역량 강화
- G20 개발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그림 2-14>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충청권 발전방향

❍ 기본목표 : 동북아 첨단과학기술·산업의 허브, 녹색국토 창조지대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R&D산업의 중심
- 신선장동력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의 거점
- 자연과 문화와 미래가 만나는 국제관광 허브
-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성장의 중심

❍ 권역의 발전방향

- 충청권내 지역발전거점 도시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강화
- 충청권 광역연계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신성장동역산업의 육성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충청권 녹색국토 창조 및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개발
- 광역·공동개발사업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충청북도계획

❍ 기본목표 : 생명·첨단산업 거점, 녹색성장 중심지역
- 생명산업·첨단산업의 거점지역
- 차세대 대체에너지산업 핵심지역
- 국가 녹색성장의 중심지역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복지 선진지역

❍ 발전방향
- 개방적 공간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
- 글로벌 의료산업 및 BT산업의 메카 육성
- 중부내륙 휴양레저와 역사·문화관광의 거점 육성
- 지역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

□ 개요

❍ 시·도 단위 육성으로 지역 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중추산업(지역별주력산업) 지원
- 충청북도의 주력산업은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산업

❍ 추진방식
- R&D(신규인력 채용조건의 기술개발) 및 비R&D(지역 혁신기관의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디자인,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과제를 패키지 지원

❍ 추진체계
-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산업기획 및 과제발굴,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

❍ 지원예산
- 2017년도 총 2,078억원(기술개발 1,243억원, 기업지원 835억원)
- 특화프로젝트 예산 : 총 650억원(기술개발 390억원, 기업지원 260억원)

❍ 집행계획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6.12월		’17.1월		’17.2월		’17.3월

<표 2-55>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시도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자료: 2017 지역산업진흥계획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

-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14개 시·도간 자율협의를 통해 구성된 17개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 사업내용

- 17개 경제협력권 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과제 지원

❍ 추진체계

- 협력권별 1개의 주관 시·도를 선정하고,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여 시·도의 책임 운영체계 구축

❍ 지원예산

- 2017년도 총 1,875억원(R&D 1,456억원, 비R&D 419억원)

❍ 집행계획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7.1월		’17.2월		’17.3월 이내		’17.4월

<표 2-56> 경제협력권산업 현황

경제협력권산업명	참여시·도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Ⅰ	경남	전남
② 조선해양플랜트Ⅱ	부산	울산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자료: 2017 지역산업진흥계획

(3)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

□ 개요

❍ 경제자유구역 2.0시대('13~'22)를 맞아 1.0시대('03~'12)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

❍ 계획기간은 '13~'22년이며, 주요 내용은 중장기 발전방향,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등

□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평가

❍ '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개 구역, 448㎢를 지정·운영 중

<표 2-57> 경자구역 지정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추진기간	면적	사업비
1차 ('03)	인 천	'03~'20	169.5	89.1
	부산·진해	'03~'20	83.1	11.6
	광양만권	'03~'20	83.7	18.9
2차 ('08)	황 해	'08~'20	14.9	4.7
	대구·경북	'08~'20	30.1	8.0
	새만금·군산	'08~'20	49.3	4.2
3차 ('13)	동해안	'13~'24	8.3	1.3
	충 북	'13~'20	9.1	2.0
합계			448	139.8

자료: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

□ 발전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 기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

- 글로벌 경기 둔화의 장기화에 따른 특구 조성 경쟁에 대응하여 적정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
-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첨단 기술, 인적·물적 자원 유인과 이를 위한 혁신 거점 마련
- 미래 성장 전초기지,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한 특구조성

<표 2-58>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 과제

비 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 * 기존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주 요 목 표	• 2022년까지 개발률 100% 달성 * 2013년 개발진척도(개발 완료 및 진행 지구수 기준) : 52.5% • 2013~2022년간 외국인투자유치 총 200억불 달성 * 2003~2012년간 외국인투자유치(신고 기준) : 총 68억불			
추 진 전 략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로 성과 극대화	차별화·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주 요 정책과제	① 개발지구 최적화 ② 개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③ 개발지원 확대 및 재원 다변화	①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② 외국인 경영 여건 개선 ③ 외국인투자유치 규제 완화	① 인센티브 개선 및 탄력적 운영 ② 외투유치 역량 제고 ③ 전략적인 외투 유치 활동 추진	① 경자구역별 차별화 ② 타 특구와의 연계 강화 ③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중점유치업종 및 핵심프로젝트

❍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은 지역발전전략, 신정부의 지역산업공약 등 정성적 측면과 지역특화도, 성장성 등 정량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별로 3개씩 선정

<표 2-59>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구역	중점유치업종
인천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부산진해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부품, 여가·휴양
광양만권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산업, 항만물류
대구경북	IT융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첨단메디컬
새만금군산	자동차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관광
황해	철강소재, 자동차전장부품, IT관련 부품소재
동해안권	금속·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충북	바이오, NEW IT, 수송부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

❍ 선정된 각 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집적화를 위한 핵심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산업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

<표 2-60> 경제자유구역별 핵심 프로젝트

【인 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동해안】
• 송도 바이오프론트 • MICE 복합지구	• 글로벌 조선&해양 R&D 프로젝트 • 복합관광휴양단지	• 해양플랜트 RDE&P 클러스터 • 정밀화학기술연구원	• 비철금속 소재 부품 클러스터 • 해양관광레저 지구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충북】
• 의료 클러스터 • 항공전자산업 특화단지	• 철강연관복합단지 •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 자동차기계부품 연관 외국인 임대단지 • 복합 해양휴양단지	• 항공복합단지 •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클러스터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

(4)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17~2019)

□ 개요

❍ 첨단의료산업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 조성을 목표로 대구경북단지와 오송단지별로 산업 특성화 추진

❍ 중점 추진과제

-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 신약 연구개발지원
  -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 동물실험지원
  - 의약품 생산지원
- 전략적 기업지원을 통한 성과(활용) 극대화
  - 인프라 및 자원 활용성 제고
  - 체계적 연구성과 관리·활용기반 구축
  - 맞춤형 기업지원 컨설팅
  - 의료산업 전문인력양성
-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및 운영
  - 글로벌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
  - 전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 단지운영 효율성 제고
  - 단지 운영 효율화
  - 신규 수익사업 확대
  - 첨복단지 펀드 조성

□ 소요재원

❍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투자계획('17년~'19년) : 4,062억원

<표 2-61> 소요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기투입액 ('11~'16)	'17~'19 투자계획			
3차종합계획	2차종합계획		소계	'17	'18	'19
계		10,892	4,062	1,072	1,401	1,590
수요자 맞춤형 (공동)연구개발 및 제품화지원	핵심인프라 활용도 제고	5,563	1,488	265	503	720
	공동연구개발 강화	661				
보건의료산업 생태계조성	연구환경 조성	4,414	1,443	463	464	516
	협력적 네트워크 확대	254				
전략적 기업지원을 통한 성과(활용) 극대화		-	133	41	45	47
단지운영 효율성 제고		-	999	303	389	307

자료: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17~2019)

□ 재원 확보 방안

❍ 공공성, 외부효과, 지역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비와 지방비, 민간 등의 투자로 소요 재정을 분담

<표 2-62>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구분 / 연도	총계	시설/ 운영	R&D/ 기금조성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기투입) '09~'16	12,738.43	11,588.49	1,149.94	12,738.43	6,112.73	5,453.51	1,172.19
'17~'19	4,438.87	3,134.23	1,304.64	4,438.87	3,272.22	789.93	376.72

자료: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17~2019)

(5)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 개요

❍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서비스경제화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경제의 효율성·역동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 우리 경제의 서비스경제 심화 등에 대한 여건 변화에 대비해 경제활력 제고 및 양질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 세계적인 경쟁 가속으로 인하여 서비스경제 수준 제고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산업구조 재편 및 서비스-제조업 융합발전과 경제활력 제고 3대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선정

-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 충청북도 사업내용

❍ 의료인 개원 외에 창업 등을 활성화하여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오성, 대구·경북), 창업선도대학의 인프라 활용으로 의료인 창업 지원
- 신기술 사업화 R&D 지원 확대로 연구중심병원 수행 능력 강화

<그림 2-15>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6)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17~'21)

□ 개요

❍ 곤춘산업은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향후 활용할 가치가 높으며, 학습·애완용 환경정화, 미래 식품소재로 개발가치가 높은 산업

❍ 2021년까지 130억원(국21, 도비41, 시군비46, 자담16)을 투자하여 현재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고 있는 장수풍뎅이 등 학습곤충과 식용, 환경정화용 곤충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기반을 확충

□ 사육현황

❍ 곤충농가 : 82호(전국 731호의 11.2%에 해당)

❍ 전국대비 곤충 현황 : 장수풍뎅이(25.2%), 사슴벌레(8.3%), 갈색거저리(3.7%)

<표 2-6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 야	계	연도별 투자계획				
		'17	'18	'19	'20	'21
계	13,010	1,955	4,905	4,200	950	1,000
곤충산업 네트워크 구축	300	80	30	80	30	80
생산기반 조성	2,710	455	455	600	600	600
연구개발 실용화	800	240	240	240	40	40
산업인프라 확충	8,000	1,000	4,000	3,000	-	-
소비·유통 체계화	1,200	180	180	280	280	280

자료: 충청북도 홈페이지

(7)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 계획의 비전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 지역·부문·계층·산업간 균형발전
-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경쟁형 전략인 개방형 국토를 견인하기 위한 생명·첨단산업의 거점으로서의 내륙발전 실현
- 녹색성장시대 신 여가문화 및 정주패턴에 기반한 웰빙국토 중심지대로 육성
-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부문별 연계발전전략을 강구함으로서 웰빙국토중심 실현

□ 계획의 목표

❍ 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의 중심거점
- 권역별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육성을 통한 균형발전기반 구축
- 유무형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산업경제 선도
- 산업입지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자원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특색 있고 살맛나는 문화지역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
-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개발
- 충청북도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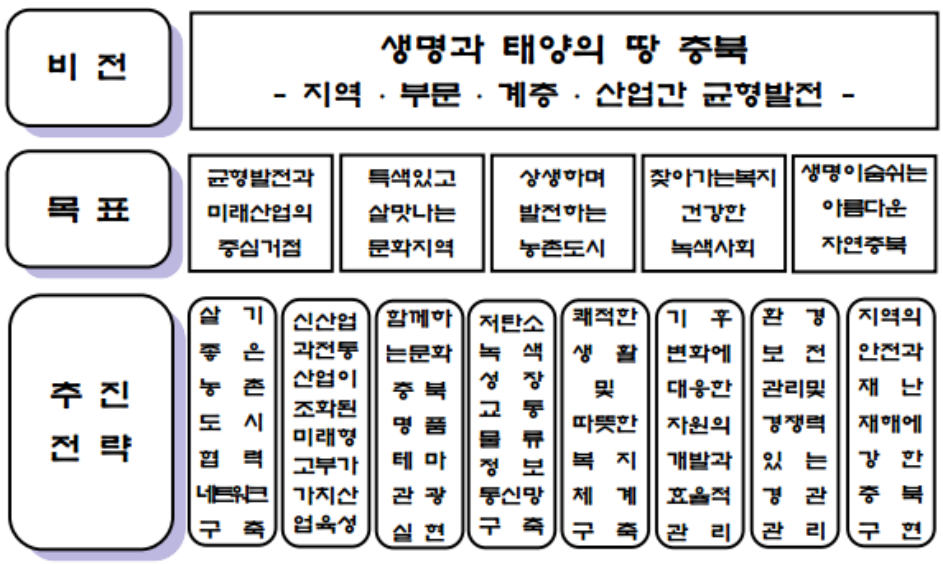
❍ 상생하며 발전하는 농촌도시
-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을 통한 농촌도시 균형발전
-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 창출 및 농촌소득증대

❍ 찾아가는 복지 건강한 녹색사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취약계층 소외 해소 및 사회적 자본을 확중하여 공동이익 추구 및 균형있는 배분
- 여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기회균등사회 실현

❍ 생명이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충북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자연환경 창출
- 기후변화시대의 재난에 대비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그림 2-16>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 공간구조

❍ 발전축 설정

- 신성장동력발전축
  - 초광역 개발축인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연계된 신성장동력발전축 육성
- 균형발전축
  - 도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축
- BIO 웰빙발전축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청주시의 근교농업 배후지역의 개발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BIO 웰빙발전축 육성

- 동서연계발전축
  • 내륙삼각발전축의 기능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이 서측의 해양지향형 개발축에서 동쪽의 내륙지향형으로 이동 필요

<그림 2-17> 발전축 설정



□ 권역별 발전을 견일할 프로젝트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충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
- 대전지구와 청원(오송·오창), 세종시의 기능지구를 연구클러스터로 조성

❍ 내륙첨단산업벨트
-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인력, IT기술, 광역 인프라의 강점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이 가진 자연자원, 제조기술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대전·강원·충청·전라지역이 동반성장네트워크 공간을 공동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동서·남해안·접경벨트와의 연계축으로써 기능 수행
  - 7개 시군 :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 음성

❍ 백두대간벨트

- 백두대간 내에서 재배되는 청정 농식품과 약초 등의 특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생명의 중심지로 특화
  - 5개 시군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오송바이오밸리

-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KTX오송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성장거점 오송바이오밸리 구축

❍ 솔라밸리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주변(청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충주)에 태양광특화단지,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솔라카운티 조성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최고 솔라밸리 육성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 통합 지향형 중원문화권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으로 중원역사문화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정체성 및 지역발전 도모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종합발전계획

- 지역내 만성적인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 남부권과 중부권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 지정구역 : 남부3군+괴산·증평(1조6,904억원)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통해 낙후된 생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디지털 경제시스템의 하이테크 코스모폴리탄 개발, 경제자유도 제고를 통한 국가 및 신지역발전 촉진
  - 청주, 청원, 증평, 충주 등 6개 지구

❍ 오송역세권 개발

- 오송역을 배후 대도시에 대한 여객수송중심의 관문역 기능은 물론 새로운 발전축 형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 지식과 가치, 문화컨텐츠가 거대규모로 이합 집산하는 국토의 교환시스템을 조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타개할 수 있는 균형국토구현의 선도거점 기능 수행

❍ 중부신도시

- 중부신도시는 세종시와 함께 수도권 일극중심의 왜곡된 국토공간구조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사업으로 중부신도시에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을 이전함으로서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며 내륙발전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기업도시는 생산기능 위주의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이 함께 개발되어 경쟁력 있는 도시,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개발의 주체가 되며, 조성과 분양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중부신도시와 함께 내륙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 유치업종 : 첨단 R&D시설, 전자·정보 부품소재산업, 환경산업

❍ 근교형 바이오웰빙지구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6대 국책연구기관의 바이오(BIO)임상 테스트 베드(Test Bed) 기능을 하는 집적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대전, 청주 등 광역도시권의 근교형 바이오 웰빙특화권역으로 육성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도내 권역간 연계성 부족으로 나타나는 개발의 확산효과 미흡 현상의 해소와 청주권의 성장효과가 중·북부권 및 남부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내 권역을 연결하는 거점간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며,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영호남을 연계한 올림픽로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 제1구간 :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원주)~단양
  - 제2구간 : 영동~보은~미원~증평(초정)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MRO산업 육성)
- 항공정비(MRO)단지 및 항공복합단지 조성
- 틈새 전략의 일환으로 화물특화형 국제공항으로 육성

❍ 청풍명월 700리, 중원문화역사로 조성사업 추진
- 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자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원문화역사로 조성사업을 추진

제2절 일자리 여건 및 잠재력 분석

1. 충북 일자리 여건 현황

1) 지역산업 특화 분석

□ 전국대비 산업의 특화 정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표 산업 다양성 부재

❍ 충청북도 산업별 특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대비 입지상법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입지상법(Location Quotient)에서는 전국전산업 총고용자 대비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자 비중과 충청북도의 전산업 총고용자 대비 특정산업의 고용자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산업은 특화되었다고 평가함

$$LQ_a = \frac{(E_a^r / E^r)}{(E_a^n / E^n)}$$

E_a^r : 충청북도 r 산업 a의 고용자수

E^r : 충청북도 r의 총고용자수

E_a^n : 전국 산업 a의 고용자수

E^n : 전국 총고용자수

❍ 2010년 전국대비 충청북도의 산업별 입지상법을 이용하여 특화산업을 선정하면 충청북도는 도소매,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를 제외하고 전국 대비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중, 농림수산품, 광산품의 특화도가 전국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14년 충청북도의 특화도는 음식점 및 숙박을 제외하고 대체로 2010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0년 특화도가 높았던 건설, 통신 및 방송, 공공행정 및 국방은 2010년 대비 각각 특화도가 0.05, 0.02, 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 3차 산업에 대한 충청북도 지역특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차 산업(농림수산품, 광산품) 및 3차 산업 중 일부(금융및보험)의 저성장

❍ 충청북도의 산업은 건설, 통신 및 방송, 공공행정 및 국방의 종사자수가 2010년 대비 2014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종사자수가 감소한 산업의 특화도는 2010년과 유사하게 2014년 나타남으로써 국가 전체 산업의 특성 역시 동반하여 변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종사자 기준으로는 충청북도의 여건 중 우세하게 나타난 산업은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산업의 특화도가 1,2차 산업에서 발생함

- 신행정수도의 인근으로써의 부가적인 지리적인 편익은 달성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 반면,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연계 산업에 대한 동반성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3차산업의 특화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나 특화기준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산업의 특화도는 변경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청북도의 산업 여건은 전국 대비 특화도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우세한 산업은 1차 산업 중 농림수산품 및 광산품,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의 공공행정 및 국방으로 나타남

<표 2-64> 충북 입지계수

구분	종사자수		전국대비입지상			사업체수		전국대비입지상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변화분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변화분
농림수산품	1,488	2,145	1.52	2.19	0.67	118	174	1.59	2.35	0.75
광산품	863	910	1.97	2.08	0.11	68	98	1.22	1.76	0.54
제조업	143,580	178,424	1.35	1.68	0.33	9,073	11,564	0.88	1.12	0.24
전력, 가스 및 수도	5,354	6,056	1.31	1.48	0.17	342	488	1.57	2.24	0.67
건설	35,814	34,259	1.22	1.16	-0.05	3,846	5,045	1.26	1.65	0.39
도소매	65,993	76,267	0.82	0.95	0.13	26,494	29,979	0.96	1.09	0.13
음식점 및 숙박	53,966	63,869	0.97	1.15	0.18	22,249	25,087	1.11	1.25	0.14
운수 및 보관	24,790	26,850	0.88	0.96	0.07	10,045	10,516	0.92	0.96	0.04
통신 및 방송	5,517	5,243	0.39	0.37	-0.02	505	562	0.61	0.68	0.07
금융 및 보험	15,403	15,938	0.82	0.85	0.03	1,255	1,262	1.01	1.02	0.0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8,729	49,220	0.60	0.76	0.16	6,197	7,359	0.85	1.00	0.16
공공행정 및 국방	27,864	27,512	1.60	1.58	-0.02	545	557	1.45	1.48	0.03
교육 및 보건	78,914	92,120	1.01	1.18	0.17	8,646	9,426	1.00	1.10	0.09
사회 및 기타서비스	35,270	41,744	1.00	1.18	0.18	16,373	17,382	1.08	1.15	0.07

2) 전국대비 충청북도 산업 특화 분석

□ 전국대비 성장요인의 부재로 인한 충청북도 주도 산업의 부재

❍ 변이할당법을 이용하여 행정구역 전체의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충청북도의 산업별 성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고용변화,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경쟁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분석이 필요

- 이를 위해 충청북도의 고용 성장효과를 전국의 경제성장요인, 산업구조요인, 경쟁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 국가의 경제성장요인이란, 전국의 경제성장이 충청북도 지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이며, 산업구조요인은 산업의 전국의 성장 특징이 충청북도 지역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임
- 또한, 경쟁요인이란 충청북도의 생산 환경의 특징으로 인한 충청북도의 성장효과를 의미

❍ 충청북도의 산업 성장은 최대 44%, 최소 -5%로 나타남

- 가장 크게 산업이 성장한 산업은 농림수산품업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운수 및 보관업이 각각 27%,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산업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제조업은 2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핵심 산업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차 산업은 농림수산품 44% 증가, 광산품 5%가 증가하여 충청북도에서의 1차 산업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차 산업의 지원 및 주민 편의와 관련된 3차산업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 통신 및 방송업과 공공행정 및 국방은 각각 5%,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차 산업의 정체 현상을 나타내는 원인으로 나타남

❍ 국가 전체의 산업별 성장을 고려했을 경우, 충청북도의 고용변화는 14개 전 산업에서 (-)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림수산품, 광산품, 건설업, 공공행정및국방의 고용변화는 국가의 산업성장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저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충청북도 산업 성장은 국가의존형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의 성장효과를 고려한 충청북도의 산업구조 변화는 통신 및 방송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큰 산업은 농림수산업, 제조업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체 산업은 충청북도의 산업 구조 변화에 의해 변화되는 특성을 나타내 충청북도의 특화된 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와의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경쟁요인 성장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중 일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통신 및 방송에서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와 대비하여 단순하게 산업의 특화도를 제시한 입지계수법과는 다소 일치하지만, 국가의 산업구조변화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난 산업이라도 성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경쟁요인을 토대로한 충청북도의 경쟁변화는 동일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국가대비 순변화는 건설, 통신 및 방송, 공공행정 및 국방에서 낮은 성장 및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가의 성장 및 경쟁변화를 고려한 총변화는 전체 산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5> 충북 변이할당 분석 결과

구분	종사자수				산업별 성장율		고용 변화	국가 성장 효과	산업 구조 변화	경쟁 변화	순변화	총변화
	충북		전국									
	2010년	2014년	2010년	2014년	충북	전국						
농림 수산품	1,488	2,145	30,418	36,474	0.44	0.20	-1.20	-1,784	0.24	361	657	-1,423
광산품	863	910	16,377	16,311	0.05	-0.00	-1.40	-1,210	0.06	50	47	-1,160
제조업	143,580	178,424	3,417,698	3,957,394	0.24	0.16	-1.24	-178,065	0.08	12,171	34,844	-165,894
전력, 가스 및 수도	5,354	6,056	135,399	152,809	0.13	0.13	-1.27	-6,797	0.00	14	702	-6,783
건설	35,814	34,259	1,180,659	1,098,535	-0.04	-0.07	-1.47	-52,562	0.03	936	-1,555	-51,626
도소매	65,993	76,267	2,617,891	2,998,923	0.16	0.15	-1.25	-82,659	0.01	669	10,274	-81,990
음식점 및 숙박	53,966	63,869	1,766,290	2,071,581	0.18	0.17	-1.23	-66,122	0.01	575	9,903	-65,547
운수 및 보관	24,790	26,850	992,546	1,047,788	0.08	0.06	-1.34	-33,279	0.03	680	2,060	-32,599
통신 및 방송	5,517	5,243	468,585	533,297	-0.05	0.14	-1.26	-6,951	-0.19	-1,036	-274	-7,987
금융 및 보험	15,403	15,938	706,859	698,516	0.03	-0.01	-1.41	-21,717	0.05	717	535	-21,000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38,729	49,220	1,979,623	2,401,194	0.27	0.21	-1.19	-45,899	0.06	2,243	10,491	-43,656
공공 행정 및 국방	27,864	27,512	663,673	648,579	-0.01	-0.02	-1.42	-39,590	0.01	282	-352	-39,308
교육 및 보건	78,914	92,120	2,505,650	2,922,489	0.17	0.17	-1.23	-97,201	0.00	78	13,206	-97,123
사회 및 기타 서비스	35,270	41,744	1,165,360	1,315,896	0.18	0.13	-1.27	-44,755	0.05	1,918	6,474	-42,837

3) 충청북도 산업연관분석

□ 생산력이 낮은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산업간 연계 악화 및 경쟁력 부재

❍ 충청북도의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은 2010년 16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함

- 충청북도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 산업연관표에 양비례법을 적용하여 충청북도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추출할 수 있으나,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활용도를 제고함
- 충청북도의 20개 산업은 14개 산업 분류로 재편성하여 충청북도 산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으며, 기존 입지계수법과 변이할당법에 의한 산업 특화 및 경쟁력과의 일관성을 유지함

❍ 충청북도의 산업연계를 통해 주요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전체산업과 하위 산업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지역경제현상 및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

- 기존의 방법과 달리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연관관계의 제시가 가능하여 충청북도의 구체적인 경제구조 분석이 가능하는 측면에서 기존 방법과 차별됨
- 특히, 향후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업 발전으로 인한 증가가 해당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을 받은 산출물이 타 산업으로 유발시키는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 기본적인 충청북도의 산업구조 파악이 필요

❍ 지역별 산업연관효과는 생산승수, 소득승수, 고용승수로 구분되어 제시가 가능하며, 생산승수(O_j)는 산업 j제품에 대한 1단위 최종 수요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효과를 나타냄

- 산업의 생산승수는 산업간의 연관 정도를 나타내며, 산업 j의 생산 승수가 높을 때는 산업 j와 타 산업간의 연관관계가 높음을 나타냄
- 충청북도 산업의 생산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사회및기타서비스로 나타남

-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 전력, 가스 및 수도는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생산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주소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산업다양성의 부재

○ 소득승수는 각 산업 제품에 대한 외부 수요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수요의 변화가 가계 부문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임
- 산업 j제품에 대한 1단위 수요의 변화가 가계 부문의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반면, 생산효과가 낮은 공공행정 및 국방의 소득이 충청북도에서는 소득의 주원천인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유발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승수는 산업의 생산량과 산업의 고용자와의 관계가 측정 가능하다면 각 산업 제품에 대한 외부 수요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
- 고용 투입산출계수는 산업 j제품 1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고용의 가치를 의미하며, 고용계수는 산업 j제품 1단위 생산에 고용되는 고용자의 수를 나타내며, 산업 j에 고용된 종사자 수는 산업 j의 평균 노동임금과 투입산출표에서 가계 부문의 노동 소득을 이용하여 파악함
- 충청북도 고용승수는 1차 산업, 3차 산업 중 사회 및 기타서비스, 운수 및 보관, 교육 및 보건에 의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농림수산품,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에서의 충청북도의 산업별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차 산업 중 광상품, 3차산업 중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의 고용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서비스산업 중심의 충청북도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산업 연계를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은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간 연계 효과는 전방효과 및 후방효과로 구분하여 분석되며, 전방계수는 산업의 전방연계효과(forward linkage effect)의 상대적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임

- 산업 i의 제품이 다른 산업들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충청북도 산업발전으로 인해 유발된 소득으로 인해 발전되는 산업효과를 나타냄
- 전방효과가 1보다 큰 경우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반면, 1보다 작은 산업은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임
- 충청북도 전방계수가 큰 산업은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다른 산업 제품들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그 산업의 생산이 1단위 이상으로 증가하는 산업인 것으로 나타남

○ 후방계수는 산업의 후방연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의 상대적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임

- 이는 산업 j의성장이 산업 j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로써, 충청북도 산업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에 주로 영향을 주는 타산업의 영향도를 측정
- 후방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산업재화에 대한 최종 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나타내며, 이에 해당하는 산업은 광산품,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인 것으로 분석됨

<표 2-66> 충북 투입산출효과

구분	생산승수	소득승수	고용승수	전방효과	후방효과
농림수산품	1.7322	0.1491	0.0547	0.8289	0.9650
광산품	1.8022	0.3394	0.0122	0.5799	1.0040
제조업	2.1005	0.2843	0.0153	3.2724	1.1702
전력, 가스 및 수도	1.5439	0.2943	0.0069	0.9440	0.8601
건설	2.0353	0.4275	0.0190	0.6243	1.1339
도소매	1.6595	0.3666	0.0455	0.8326	0.9245
음식점 및 숙박	2.0487	0.3364	0.0405	0.7668	1.1413
운수 및 보관	1.8677	0.4547	0.0271	0.8383	1.0405
통신 및 방송	1.8251	0.3223	0.0117	0.8524	1.0168
금융 및 보험	1.6243	0.3635	0.0137	0.9840	0.904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000	0.2634	0.0118	1.3007	0.8356
공공행정 및 국방	1.4865	0.4958	0.0140	0.5783	0.8281
교육 및 보건	1.5127	0.6615	0.0222	0.6175	0.84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2.3916	0.3592	0.0299	0.9799	1.3324

2. 충북 일자리 관련 시사점 및 SWOT 분석

1) 일자리관련계획

□ 고용친화환경 구축

❍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체계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와 민간,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용친화적 환경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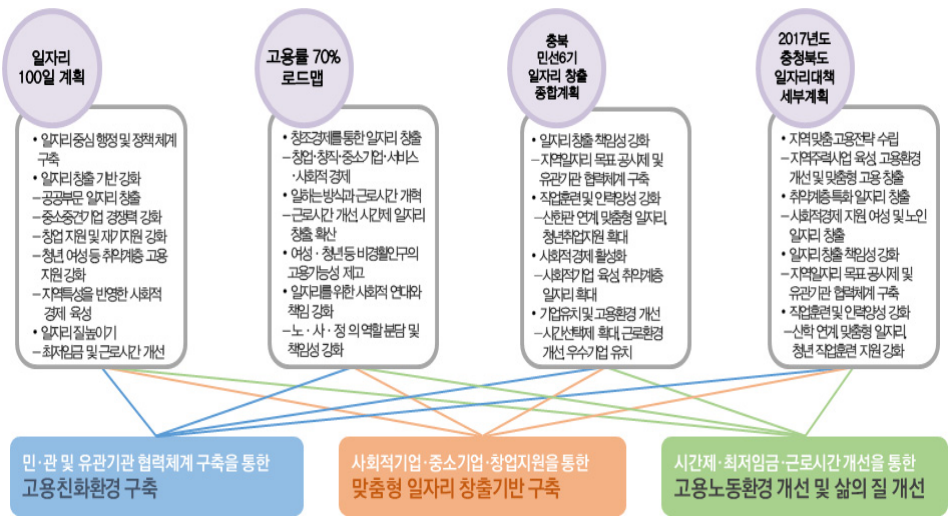
□ 맞춤형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 사회적 기업 육성, 중소기업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 고용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개선

❍ 시간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상향 및 근로시간단축을 통하여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 추구

<그림 2-18> 일자리관련계획 시사점



2) 개발 및 산업관련계획

□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구축

❍ R&D, 바이오, 의학·의료, 반도체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

□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구축

❍ 자연과 산업, 산업별, 계층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실현

□ 문화·관광 중심지 육성

❍ 역사·지역자원을 보존 개발하고 농업경쟁력 및 농촌어메니티 개선을 통해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그림 2-19> 개발 및 산업관련계획 시사점



3) 내부역량

□ 강점(Strength)

❍ 대한민국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교통의 요지로 철도 및 물류 유통의 입지적 우월성 보유

❍ 총 760개의 문화재와 국립공원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풍부

❍ 54개 대학, 5개의 전문대학 등 다수의 고등교육기관 보유로 우수인력확보 및 창업환경 우수

❍ 다수의 산업단지 및 대학이 위치하고 세종시의 공공기관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등과 인접하여 산·학·연·관이 연계한 일자리 협업시스템 구축에 유리

□ 약점(Weakness)

❍ 인구의 고령화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기업의 구인난 확대와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부족 가능성 증대

❍ 청주시에 집중된 인구 및 기반시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권역별 노동수급 시스템 부족

❍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지원 정책 미흡 및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

❍ 문화·관광자원 및 기반시설간 연개 부족으로 인한 낮은 관광자원 활용

4) 외부환경

□ 기회(Opportunity)

❍ 중소·창업기업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등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기업경영환경 개선 예상

❍ 지역중심 고용정책 추진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지역특화 일자리 확대 가능성 증대

❍ 균형발전 기조의 정부정책과 상향식 정책추진에 따른 낙후지역 및 산업 발전 가능성 증대

❍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과 고속철도로 인한 고급 인력유입 가능성 증대

□ 위협(Threat)

❍ 저출산 및 고령화 지속으로 국가적 인적자원 손실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 증가

❍ 광역개발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고학력 및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가능성 증대

❍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리스크가 큰 특정국가 및 특정품목 중심의 수출구조

❍ 복지·분배·균형중심 정책에 따른 재원 확보의 어려움 및 지방재정 부담 증대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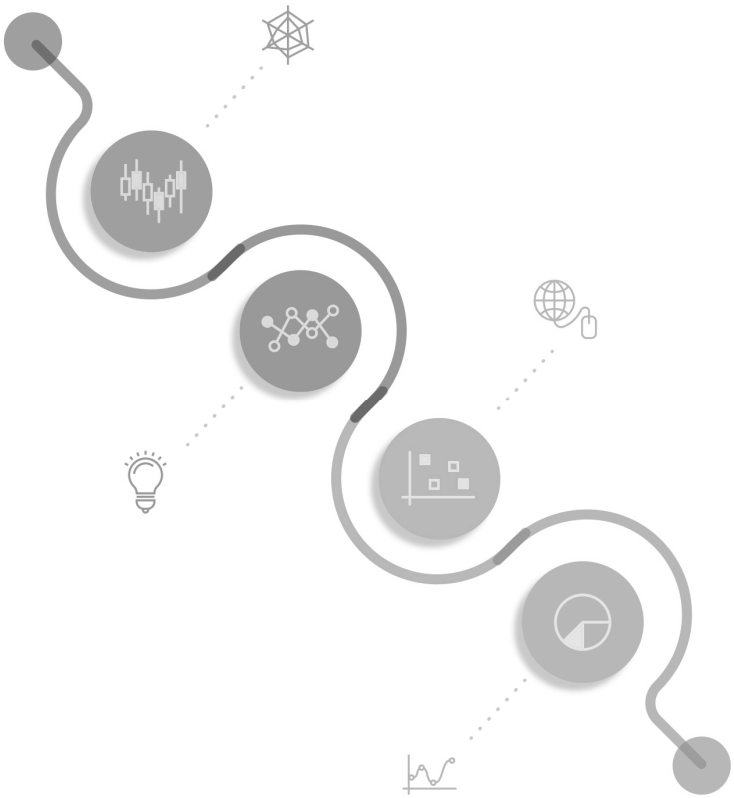
<그림 2-20> 현황 및 여건 분석에 따른 SWOT 분석



제3장
일자리정책 사례분석

제1절 국내 일자리 정책

제2절 국외 일자리 정책



제3장 일자리정책 사례분석

제1절 국내 일자리 정책

1. 중앙행정기관

1) 고용노동부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 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등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과 컨소시엄(공동참여방식)을 구성하고 자체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인건비, 훈련비 및 훈련수당 등
-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 사업목적

-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제고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고졸이하 비진학, 대졸이상 졸업자),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지원내용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 수당, 상담 등
- 직업훈련, 취업알선

□ 내일배움카드제

❍ 사업목적
- 청년·장년층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 등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창업 촉진

❍ 지원대상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예정)자, 영세자영업자 등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의 50~100%지원(취업성과 등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
- 개인상담을 통한 훈련 필요성을 검토하고 직업훈련 실시

□ 국각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 사업목적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인력양성 필요 직종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여 기업의 인력난 및 실업문제 해소

❍ 지원대상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 3학년 중 상급학교 비진학(예정)자, 대학(전문대 포함) 최종학년 재학생(다음년도 2월말까지 졸업예정자) 등

❍ 지원내용
- 훈련기관에 필요한 훈련비 전액 지급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생, 대학교 졸업 및 재학생에게 교육훈련 실시

□ 청년취업인턴 사업

❍ 사업목적

- 청년들에게 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 및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인턴) 취업경력 1년 미만인 만 15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인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기간 근속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원 지원
- (기업)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50~6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시 최대 390만원 지원

□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 사업목적

- 국가기간·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에 필요한 융합형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생, 대학교 재학 및 졸업생, 청년 미취업자

❍ 지원내용

- 다기능기술자 과정, 기능사 과정 교육훈련 제공
- 다양한 장학금 혜택, 졸업 후 취업연계 및 사후지도

□ 청년취업아카데미

❍ 사업목적

- 기업·사업주단체·대학·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에게 무료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연계를 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재학생,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기업·사업주단체·대학·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취업관련 교육과정을 제공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 사업목적

-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 인재 확보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청년구직자(만15세이상 34세이하, 고교·대학졸업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대기업/공공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교육훈련(직업훈련 및 인턴)을 실시
- 수료생에 대해 협력업체 등 우수기업 채용 및 창업을 적극 지원

□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사업목적

- 지역 강소기업 탐방, 직업체험을 실시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취업연계 유도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자

❍ 지원내용

- 참여자에겐 1일 5시간 기업탐방과 참가비 지원하고 운영기관에겐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프로그램 내용 : 산업·기업 이해 및 CEO(인사담당) 특강, 기업체험, 청년고용 정책, 취업전략 수립 등

□ K-Move(해외취업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맞춤형 교육, 해외 취업알선 등을 통해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의 해외취업 지원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 해외취업에 필요한 역량 및 준비사항 상담, 인적 네트워크 소개, 현지 생활 정보 제공 등 온·오프라인 멘토링
- 성공적인 해외취업 및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 해외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하고, 교육비,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원의 장려금을 제공

□ 중소기업 취업연수 사업

❍ 사업목적

- 일경험 기회 적은 인문계 재학생에게 신기술·신성장 유망 중소기업 등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중소기업 취업연계 유도

❍ 지원대상

- 만 18~29세 인문·사회계열 대학 재학생

❍ 지원내용

- 연수생에겐 2박 3일 21~24시간 연수 프로그램 참가(참가비 지원)

- 프로그램 내용 : 산업·기업 이해 및 CEO(인사담당) 특강, 기업체험, 청년고용정책, 취업전략 수립 등
- 운영기관에게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 사업목적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급 기술·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우수 직업능력 개발전문가 양성

❍ 지원대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학생 중 선발

❍ 지원내용

- 직업능력개발 담당자(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 HRD 담당) 양성을 위한 경비(강사료, 재료비, 실험 실습비 등) 및 장기현장실습 경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업목적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가진 창업희망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창업자(팀)

❍ 지원내용

- 공모에 선정되면 창업진행과정에 따라 창업공간, 창업자금(홍보비, 사업개발비 등), 멘토링 및 교육 등을 지원(총 5,000만원 한도 내)

□ 취업사관학교

❍ 사업목적

- 학업중단·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가출·범죄 등 일탈행위,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사회적·경제적·학업적인 어려움에 처해 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지원내용

-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6개월, 700시간 이상의 예비학교 + 직업훈련 + 맞춤형(특화)프로그램
- 자립 장려금 월 300,000원, 운영기관에겐 훈련비 실비 지급

□ 일학습병행제

❍ 사업목적

-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중심 사회 구현
  -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후 역량을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 기업

❍ 지원내용

- 참여기업에서 일학습병행제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전담인력 양성교육 등 인프라 구축비와 훈련비 지원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사업목적

- 대학 내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통합 및 연계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취·창업지원을 원하는 지역 청년

❍ 지원내용

- 대학 내 취업지원부서, 여성커리어센터 등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통합 및 연계하여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 청년고용 정책 안내 및 참여, 진로상담, 구직신청, 취업상담 등 적성과 전공을 고려한 진로지도 지원

□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 사업목적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의 현장 채용 행사를 통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일반 구직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생, 대학교 재학 및 졸업생, 청년 미취업자

❍ 지원내용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의 현장 채용 행사
- 직업진로지도 서비스(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취업지원관 서비스

❍ 사업목적

- 대학 등에 취업전문인력 채용을 지원,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4년제, 전문대학)

❍ 지원내용

- 취업지원관 인건비의 60%를 지원

□ 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고, 인지도가 높은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 지원내용

- 컨설턴트 인건비(대학은 40%이상 매칭)(1인 월 250만원), 운영경비(연 8~10백만원), 취업프로그램비(연 5~6백만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 사업목적

-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지원요건: 자치단체가 지역고용 관련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용촉진, 능력개발사업을 발굴하면 공모를 통해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교육훈련지원사업: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인건비 지원
- 고용환경개선사업: 근로자 숙소, 통근버스 운영 등을 통해 근무환경개선을 지원
-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의 혁신 선도산업을 발굴·육성

□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 사업목적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산업계와 공동으로 맞춤형 고졸 인재를 육성하고, 자격이 연계되는 실전·창의인재 양성모델 구축

❍ 지원대상
- 특성화고 3개교* 대상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 지원내용
-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 적용, 학과·학생별 평생 경력개발 경로 수립 지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을 통해 실전형·창의적 고졸 인재 양성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사업목적
- 사업주와 계약학과 운영 대학이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훈련비, 훈련수당, 숙식비 지원

□ 기업대학

❍ 사업목적

- 기업이 고졸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업대학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인프라 구축비용, 훈련비용(식대·기숙사비·임금) 등

□ 산업단지 환경개선 패키지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복지·보육시설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합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 지원내용

- 합동공모 대상 사업별 보조금 등 지원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 사업목적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 (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채용여력을 늘려 청년채용을 확대

❍ 지원대상

-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2) 교육부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기업 맞춤형반

❍ 사업목적
-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을 갖춘 인력 양성

❍ 지원대상
- 마이스터고 2학년, 특성화고 2~3학년 재학생

❍ 지원내용
- 현장체험 및 실습, 장학금 및 취업 지원
- 학교에서 방과 후 및 방학 중에 맞춤형 교육 시행(기업에서 산학겸임 교사 파견), 기업에서 인턴십(1~4주) 시행

□ 중소기업 취업·창업 희망사다리장학금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대학내 창업문화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지원내용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 사업목적

-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

❍ 지원대상

- 국내 (전문)대학생 및 일부 졸업생 가능(취업취약계층 우대)

❍ 지원내용

- 항공료, 체재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또는 전액)를 사업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외 파견 기간 동안 지원

□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 사업목적

- 일반고 3학년 재학생 중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고졸 취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

❍ 지원내용

-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여 단기(1학기) 또는 1년 과정의 직업교육 운영 및 교육비 지원

□ 지역 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대학-산업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과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석·박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대학과 기업으로 구성된 사업단

❍ 지원내용
- 지역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 국고지원금의 30~60%를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지원 및 기업 현장 실습 의무화

□ 대학 창업교육

❍ 사업목적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실행을 통하여 대학생의 창업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창업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 대학교 및 대학생 등 대학 사회 전반

❍ 지원내용
- 대학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 및 창업교육 전문가 연수, 멘토링 등 지원

□ 학교기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체계적 현장실습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 등에 기반한 창업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 지원대상
- 전문대학, 대학 및 특성화고의 학교기업

❍ 지원내용
- 현장실습비, 시설·기자재·제품 등 인프라 구축비, 창업 시제품 제작 등 학교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미래창조과학부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 사업목적

-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연수 또는 직장내 교육훈련 (OJT : on-the-job training)를 통해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함

❍ 지원대상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학사~석박사)

❍ 지원내용

- (학사) 기업현장 맞춤형 전문교육(4개월) 및 기업현장연수(2개월)를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인재로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 (석·박사) 미취업 석박사 대상으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인턴으로 참여시켜 교육 훈련(9개월) 후 취업연계

□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초고속정보통신 기반인력양성)

❍ 사업목적

- ICT 분야의 성장 원동력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실현할 정보통신 설비 시공 전문 기능인력 양성 사업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활성화

❍ 지원대상

-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취득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장학금 성적기준을 하향하여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혜택 기회 확대

□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 사업목적

- 대학·기업의 인력 양성체계 지원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 고급인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대학 및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

❍ 지원내용

- 석사과정을 전액 지원(정부지원+대학·기업 매칭펀드)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석사과정 수료후 참여기업에 2년간 의무 근무

□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사업목적

- 출연(연) 특성에 맞는 R&D 실무역량 배양을 통한 우수연구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 지원내용

- 채용일로부터 2년간 1인당 연간 50백만원 (법정부담금 별도지원)

□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지원

❍ 사업목적

- ICT 분야 재도전 기업인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선정하여 사업기획·제품화·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재도전 기업인이 대표 또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는 ICT 분야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예정자(본인 및 공동창업)

❍ 지원내용

- (단계별 자금지원) 재도전 기업인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교육(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장 진출 등의 단계별 지원(1년)
- (민간투자연계형 자금지원) 민간투자를 통해 시장성이 검증된 재도전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매칭(최대 3억) 지원(1년)

□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질적 수준제고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업부: 자체 또는 계약 R&D, 시험·분석, 설계·해석, R&D컨설팅 등을 수행 하는 활동

❍ 지원내용

- 연구개발서비스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R&D기획·관리·사업화전략 수립, 연구제안서 skill 실무 등) 기회제공

□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글로벌 유명 엑셀러레이터 등과 네트워크가 있는 국내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엑셀러레이터: 성공 창업자 등 선배 기업인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고 멘토링·네트워킹 등을 지원하여 우수 벤처로 육성하는 초기창업지원 전문회사

❍ 지원대상

- 국내 엑셀러레이터,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10개 내외 창업초기기업 발굴·육성

❍ 지원내용

- 1년 간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공동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 창조경제타운 운영

❍ 사업목적

-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현시켜나감으로써 도전과 희망의 창조경제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사업화·창업하기 위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개인, 예비·초기창업자, 벤처 등)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정보, 사업화 사례 공유 및 교류·소통 등 제공
- 아이디어 선별 과정을 통해 기술 권리화, 사업성 진단, 실물모형 제작, 사업화 교육, 마케팅 컨설팅, 정부·민간 프로그램 연계 등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

❍ 사업목적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되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브로서, 고용복지+센터 등 고용지원기관과 산업계를 연결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

❍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 허브) 취업, 창업 등 일자리와 관련된 지역의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상담서비스 제공

- (일자리 중매자) 지역 우수·유망기업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소개·연결해 주며, 기업들을 위해 채용지원, 일자리 질 개선 등 서비스 제공
- (취업 트레이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별 전담 기업의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훈련, 직무체험 등을 청년들에게 제공
- (인재 인큐베이터) 청년들이 지역 전략산업,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공트랙과 교육과정 제공

4) 문화체육관광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일자리 사업(청년 체육인 일자리 창출)

❍ 사업목적

-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 보조 및 스포츠클럽 지도 실시

❍ 지원대상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지원내용

- 11개월 간 인건비 월 1,854천원

□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관광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지원대상

- 관광업계 종사자, 관광 전공 대학생, 관광 고교 학생, 유원시설업 사업주 등

❍ 지원내용

-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원(연중 수시, 교육비무료)

□ 생활체육 지도자 일자리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지역단위 생활체육 현장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17개 시·도/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지도자

❍ 지원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지원

□ 문화시설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국립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야간개장,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미정리유물 및 자료 정리

❍ 지원대상

- 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사서자격증 소지자 및 도서관 근무 경력자, 취약계층, 박물관 관련 전공자 등

❍ 지원내용

- 연중 지속 채용을 기본으로 월 근로시간 160~209시간, 임금 120~155만원 및 4대 보험 지원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콘텐츠 창조분야에 특화된 멘토링 숙련과정을 통해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재교육 서비스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콘텐츠 분야 창작자, 현업인, 재직자 등

❍ 지원내용
- 콘텐츠 사업의 청년 인재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멘토)의 도제식 창의 숙련과정 운영을 지원
- 재직자, 프리랜서 등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원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문화예술분야 취업지원)

❍ 사업목적
-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에게 인턴 연수를 제공하여 향후 진로에 실무 능력 배양 및 사회진출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198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의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지원

□ 국제회의산업(MICE)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MICE 분야 재직자 보수교육 및 입문자 취업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MICE : Meeting(회의), Incentive tour(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 & Event(전시 이벤트)와 관련된 사업

❍ 지원대상
- MICE업계 신입사원 및 경력자, MICE업계 취업을 원하는 특성화고교생 및 대학생/취업준비자 등

❍ 지원내용
- (지역 MICE 단체별 맞춤형 교육 지원) 신청 단체에 대해 지역별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실시

- (MICE 기업별 맞춤형 교육 지원) 신청 기업에 대해 기업별 일정 및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 (특성화고 교육) 관광관련 고등학교 MICE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대상 실무 소양교육 실시
- (고급자 아카데미) MICE 업계 경력 3년 이상 실무자 대상

□ 박물관 전문인력 일자리 사업

❍ 사업목적

-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국민 에게 수준 높은 박물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학예사자격증 취득자 및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
-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소지자, 교육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지원내용

- 연중 채용: 학예인력 월평균 138만원, 교육인력 월평균 125만원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사업

❍ 사업목적

-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특수체육전공자(석·박사 및 졸업예정자 포함), 국가자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및 국가공인자격 (생활체육지도자 1급~3급, 경기지도자 1급~2급) 보유자,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교육 수료자(2008년~2011년/대한장애인체육회) 등

❍ 지원내용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법정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예술강사 일자리 지원 사업(문화예술교육활성화)

❍ 사업목적

- 현장 예술인을 예술강사로 채용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사 및 해당 예술 분야 전공자 등

❍ 지원내용

- 10개월 간 인건비 월 1,184천원 지원

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직무능력 향상, 장기재직 유도 및 적합인재 육성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재교육형 계약학과) 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주말·야간 과정으로 45개 학과 운영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기업과 채용약정을 맺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과정으로 11개 지역특화산업학과 운영 예정

□ 재도전지원센터 운영사업

❍ 사업목적

- 경영위기 기업 및 재도전기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상담과 진단을 통해 재창업자금,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재도전기업(인)

❍ 지원내용

- 전문가 심층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자금,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방안 제시 및 지원사업 연계
- 재도전 종합 애로 상담 및 재창업·구조개선 자금 융자 직접 지원을 통해 상담 → 지원의 원스톱 지원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상담 활성화

□ 청년 가젤형기업 지원

❍ 사업목적

- 고용창출이 우수한 고성장기업에게 수출마케팅·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신규 고용창출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가젤형기업 :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 지원대상

- 최근 4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 지원내용

- (정책자금)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시설 8년, 운전 5년)
- (수출마케팅) 고성장기업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1년)
- (고성장 R&D) 고성장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2년)

□ 여성벤처 창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 특성화 전문교육 및 선배기업연계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층 여성의 벤처창업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교육) 여성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창업 아이템을 사전진단하고 창업교육 및 코칭 지원
- (창업사업화) 창업코칭을 받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밀착 멘토링 및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등 초기사업화 지원
- (성과관리) 초기사업화 기업 중 10개 내외팀에 대해 투자유치 및 사업 협력 기회 창출 지원

□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 사업목적

- 콘텐츠·앱·소프트웨어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 창업자에 대한 개발 및 사업화 등 실전 창업 지원으로 청년 창업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계획 수립에서 개발 및 사업화까지 단계별 일괄 지원
- 창업팀별 개발공간 제공,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개발·사업화 자금(총 사업비 70% 이내, 최대 1억원)

□ 본글로벌 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 사업목적

- 창업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본 글로벌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창업스타 기업 육성
  - 본 글로벌 : Born Global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정부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해외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 지원내용

- 국내연수 및 현지보육, 해외 마케팅비 등
- (연수) 사업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등
- (보육) 사무공간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체재비 지원, 네트워킹 및 투자자 데모데이

□ 창업기업 자금 지원(청년전용 창업자금)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3년 미만인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당 1억원 이내(2년 거치 3년상환, 2.7% 고정금리)

□ 청년창업사관학교

❍ 사업목적

-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일괄 지원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팀)로써 창업 후 3년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교육 및 코칭(1:1 전담코칭) 등 제공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기능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특성화고로서 제조업·서비스업 등 인력양성 가능 학교

❍ 지원내용

-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 실습비, 연수비 등

□ 대학생 창업 아카데미

❍ 사업목적

-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저변 확대 및 성공창업자 육성

❍ 지원대상

-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생, 휴학생 및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 창업동아리

❍ 지원내용

- 학점인정형 실전창업강좌 제공 및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6)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 사업목적

- 청년인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청년인턴제를 운영 청년층 일자리 제공과 취업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15세~34세)을 원칙적으로 채용하되 기관별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내용

- 신규인력을 인턴과정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턴의 최소70% 이상 정규직 채용

□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제도

❍ 사업목적

- 지나친 학벌·학력 위주의 채용을 지양하고, 사회 형평적 채용의 일환으로 고졸자에 공공기관 취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연령은 만 18세 전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 고졸적합직무를 기준으로 고졸을 채용하되, 공통 고졸적합직무외 기관 업무특성에 맞는 고졸적합직무를 적극 발굴
  • 총무, 행정, 인사, 기획지원, 회계, 홍보, 콜센타관리, 전산, 서무출납 등
- 고졸자의 특성을 감안한 기초 직무능력 평가와 면접 등 기관에 맞게 다양한 채용전형을 선택하여 채용

□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사업목적

-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무가입기간을 완화(5년 → 3년)하여 도입
  -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 유지

❍ 지원대상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15세 이상 29세 이하

❍ 지원내용

- 의무가입기간(3년) 이후 인출 시 운영수익을 통산하여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하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저율분리과세(농특세 비과세)

□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혜택

❍ 사업목적

-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통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
  -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핵심 인력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기금(중진공+기업+핵심인력)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한 비용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성과보상기금에 기업이 납입하는 비용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기업 기여금에 대해 손비 인정뿐만 아니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25%) 추가 적용

7) 외교부

□ ODA 청년인턴(협력지원사업/공적개발원)

❍ 사업목적

- KOICA 해외사무소 및 ODA 사업수행기관의 개발협력사업 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청년의 글로벌 경쟁력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성 제고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사업)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 TOEIC 730점 이상자

❍ 지원내용

- (KOICA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수당(월40만원), 파견경비, 현지 체제비 지원, 활동 종료 후 평가우수자는 KOICA 직원채용시 등 우대
- (ODA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 국내 근무시 월 120만원, 해외 근무시 월 180만원, 해외 상주 파견 또는 사업현장 출장 시 파견(출장) 경비 지원, 활동 종료 후 평가 우수자는 KOICA 직원채용시 등 우대

□ 다자협력전문가(KMCO) 파견 사업

❍ 사업목적

-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 개발협력분야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 KMCO: 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약정을 체결한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업무수행하는 전문가

❍ 지원대상

-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가진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 지원내용
- 보험(해외근로자종합보험 및 SOS보험) 가입, 파견준비금 지급, 출국항공권(료) 지급, 비자 등 지원
- 현지체재비(국별 물가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 인건비, 생활환경개선비, 현지교육비(연간 500달러), 안전지원장비 및 비상의약품 등 지원
- 귀국항공권(료) 지급, 귀국 후 건강검진 지원, 사업 종료 후 취업정보 제공 등

8) 법무부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O.K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청년법조인들에게 국제 업무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청년법조인 취업 기반 마련
  • O.K. Project: 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Project

❍ 지원대상
- 장기 인턴과정: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변호사
- 단기 인턴과정: 예비법조인(사법연수원생 또는 로스쿨 재학생)

❍ 지원내용
- 법무부·대한변협·세계한인변호사회 공동으로 「O.K. 아카데미」 개설하여 청년법조인들을 교육
- 국제 업무에 정통한 변호사 등을 강사진으로 섭외하여 교육하고, 아카데미 수료자들을 해외 로펌 또는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등에 장기 인턴으로 파견
- 예비법조인들을 1년 중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해외 로펌, 국내로펌 해외사무소, 국제기구(IBA, UNHCR 등) 등에 단기 인턴으로 파견

9) 행정자치부

□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사업목적

- 민·관 협력의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
- 전국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실적관리 등의 전문 인력을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496명

❍ 지원내용

- 월급여 및 퇴직금, 맞춤형복지, 명절휴가비 지급(1년 계약)

10) 농림축산식품부

□ 특성화농고 인력육성 프로그램(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사업목적

- 농업계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업분야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재학생

❍ 지원내용

- 현장실습, 농산업분야 자격증 취득, 창업동아리 활동, 승계농/후계농양성,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교사 직무연수, 선도농업인 코칭프로그램, 우수학생 국외연수 등

11)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이공계 석·박사 우수 연구개발인력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당해 연도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석사 2,000만원, 박사 2,500만원)

□ 중소·중견기업(연구개발분야) 인턴사업

❍ 사업목적

- 지역내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간 교육·취업을 연계하여 산학협력 및 취업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기관) 광역권역별 6개 컨소시엄(2개 대학 + 테크노파크)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또는 정부 R&D사업 참여 중소· 중견기업으로 인턴에게 R&D직무 부여가 가능한 기업
- (인턴) 공과대학 3,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 지원내용

- (기업) 기업별 최대 3명 이내 R&D인턴지원, 월 30만원 기업멘토 지원비 (인턴 1인당 : 180만원(6개월×30만원))
- (인턴) 6개월간 장기 R&D현장 인턴쉽을 통해 매월 120만원 교육수당 지원, 12학점 이내 졸업 및 졸업외 학점 취득

□ 에너지분야 인력양성 사업

❍ 사업목적

- 에너지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R&D수요에 대응한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재직인력의 R&D역량 제고

❍ 지원대상

- 에너지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의 석사학위과정 개설·운영 지원(4년)

□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산업 및 미래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우수인력 공급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 대학(원), 연구소 등에 기업이 대학원, 연구소 등에 참여하여 산업별 핵심기술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

❍ 지원내용

- 세부과제별 5년 내외로 미래 유망산업, 신산업 분야 관련 교과과정 개설 및 운영(특성화 대학원, 전문대학원 등)
-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원 등

12) 환경부

□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PM) 양성사업

❍ 사업목적

- 물산업의 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개발을 선도하는 미래의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양성

❍ 지원대상
- 이공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교육훈련(집합교육 + 현장교육(인턴십) + 해외교육), 1년간

□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미개척 생물분류군을 전공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생물자원 분야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련 국제법, 지속가능 경제·경영 등 융합학문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관련 전문가 양성)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경영, 경제학, 국제협력, 국제통상법, 환경법, 생물정보 등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및 석사학위자,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자

❍ 지원내용
-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된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과정생)의 인건비(120만원/월) 정액 지급, 국외 연수 및 해외 전문가 초빙 지원, 관련 학회 발표 및 논문 투고 지원, 현장조사 및 표본채집에 대한 여비 지원
-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관련 전문가 양성)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하여 세부 단독과제 (석사 : 1천 5백만원 이내, 박사 : 2천만원 이내), 융합과제(5천만원 이내)에 대해 지원

□ 생태 독성·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환경유해성시험 분석 인력 양성 필요

❍ 지원대상

- 대학 관련학과(화학, 생물, 환경, 보건 등) 재학생 및 졸업자, 미취업자

❍ 지원내용

- 3개월간 관련 기관(GLP 또는 컨설팅)에서 인턴쉽 과정수행
  - GLP :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 생태 독성·위해성평가 교육비 무상지원 및 교육 수료기준(태도, 성적, 시험)에 적합한 인원에게 체제비 지급

13) 여성가족부

□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성차별적인 취업현실,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조적 장애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년 여성의 커리어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여성의 중장기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 지원대상

- 여대생 및 지역사회 청년여성 등

❍ 지원내용

- 사회적 성역할(성평등) 강화훈련, 개인별 커리어코칭, 직무능력훈련 등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제공

13) 국토교통부

□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고교·전문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물류마인드 및 물류 전문지식과 현장실무 능력을 겸비한 단계별 전문인력 양성

❍ 지원대상
- 물류 관련 기관으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대· 대학(원)

❍ 지원내용
- 국내외 현장실습·견학, 인턴, 전문가 특강, 장학금, 물류장비·실습 기자재 구입 및 실습, 기업실습, 외국어 교육, 장학금 등 지원

□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항공핵심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로 연계하여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조종인력) 학력조건 무관, 항공신체검사 1종, 토익 700점 이상(항공대 750점 이상), 군필 또는 면제자
- (기타분야) 위탁대학 및 인턴실시기업의 채용요건에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 항공 조종인력, 특성화대 석·박사급 인력, 항공인턴 및 기초인력 4개 분야 총 500여명의 인원양성 (5년간 2,550명)

□ U-City 인력양성사업

❍ 사업목적
- 대학별 U-City 특성화 교육으로 U-City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이끌 고급인력을 양성
  • U-City: Ubiquitous City(도시의 시설물이 정보기술(IT)로 지능화 되어 안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도시

❍ 지원대상
- 전일제 정규 주간 석·박사과정으로 U-City 관련 학과 내 U-City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의 석·박사과정 재학생

❍ 지원내용

- 장학금, 논문 등 연구 관련 비용, 인턴십·현장실습 및 U-City Job Fair와 같은 취업지원 활동을 통해 국내외 U-City 산업계로의 진출 지원

□ 해외 건설현장 훈련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중소업체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건설현장으로 보낼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해외공사 적기 수행 지원

❍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내용

- 1개사당 2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1,140만원 내외의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

□ 산업단지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

❍ 사업목적

- 국가 및 지방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

❍ 지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지원내용

- 산업단지내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허용되도록 고시

14) 해양수산부

□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실무중심의 사전교육 및 인턴십을 통해 중소규모인 해운항만 물류 기업에 우수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

❍ 지원대상

- 학점·어학 및 사업에 지속적 참여가능성 등 사업기관에서 대학 2학년 이상의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 지원내용

- 사업기관에 보조금 85백만원을 지급
- 사업기관에서는 1년 동안 사업참여자에게 비즈니스 외국어, 관련분야 이론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산학협력 기업에서 8주 이상 인턴십 실시

□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 사업목적

- 현장 맞춤형 신규 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응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예산 집행 전담 인력 또는 조직을 갖추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습장 등 시설을 확보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학교자체프로그램(9개교): 수산(해기사, 양식기능사 자격 등), 해양(스킨스쿠버 등), 기타(강사초빙, 산업체 방문
- 수산고 교육실습장비 지원
- 수산마이스터고(1개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15)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 사업목적

-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 촉진을 위하여 학원수강료 지원 및 직업교육 훈련기관 입소 지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등 본인 및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당해 채용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취업수강료,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지원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취업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등 본인 및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 지원내용

- 채용시험 가점,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보훈특별고용

16) 관세청

□ FTA전문인력 양성 사업

❍ 사업목적

- 세관별「YES FTA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FTA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인력과 구인기업 간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구인 난 및 청년 실업 해소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

❍ 지원내용

- 유관기관·단체 등과 교육·취업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구직자(특성화 고교생, 대학생, 경력단절여성 등)에 교육제공 후 취업 지원

17) 병무청

□ 맞춤특기병제

❍ 사업목적

- 고졸이하 병역의무자들에게 맞춤형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 군복무로 경력을 유지하여, 전역 후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취업 활성화를 도모함

❍ 지원대상

- 18~24세 고졸이하(대학중퇴 포함)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비진학·미청년 중 기술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받고 있거나 마친 사람

❍ 지원내용

- (기술훈련) 입영 전 병역설계 및 진로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 습득(훈련비 및 수당 지급)
- (군 복무) 기술훈련 관련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하면서 기술을 숙련하고, 자격 취득 등 자기개발 지원

- (취업지원) 전역 후 취업지원, 전 근무업체 복직보장, 전역 후 3개월 내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 사업목적

-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하여 청년 고용 지원 및 국가산업 발전 기여

❍ 지원대상

- 징병검사 결과 등으로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 지원내용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단계적 확대
- 관공서에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을 산업기능요원(보충역)으로 단계적 전환

18) 농촌진흥청

□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사업

❍ 사업목적

- 농과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취업 전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센터에서 해외농업에 관한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국내 농과계 대학 재학생/졸업생으로서 해외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계약기간 보장, 체재비 및 인건비, 파견준비금, 항공료, 4대보험 등

□ 이공·농학계 인턴십

❍ 사업목적

- 국내 이공계·농학계 대학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규 취업 전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국내 이공계·농학계 대학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미경과자로서, 계약서 작성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사람

❍ 지원내용

- 임금 170만원/월, 보험료 일부 및 초과근무 수당

19) 산림청

□ 해외산림 인턴

❍ 사업목적

- 산림분야 해외 직장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한 활성화 국제산림협력사업

❍ 지원대상

- 산림관련 대학(원)·전문대 졸업예정자, 졸업 후 미취업자, 재·휴학생(5학기 이상 수료자),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업체 2년 이상 종사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5세 이하)

❍ 지원내용

- 체재비(800천원~1,400천원/월, 급지별 차등지원), 왕복항공료(실비), 파견준비비(한도 1,200천원) 등

□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임업·산림분야에 대한 현장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임업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특성화고로서 임업· 산림 분야 교육이 가능한 교육과정과 설비를 갖춘 학교

❍ 지원내용
-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실습장비 구입비, 연수비, 직업능력개발비용 등

20) 특허청

□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 사업목적
- 지식재산서비스업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지식재산서비스 업체로 취업 유도

❍ 지원대상
- 이공계 졸업 미취업 대학생, R&D(연구·개발) 분야 퇴직인력 등

❍ 지원내용
- 미취업 대학생, R&D(연구·개발) 퇴직인력 등을 선발, 교육 실시 및 지식재산서비스 업체로의 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양성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벤처창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하여 물적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초기 벤처·중소기업에 보증 및 대출 연계

❍ 지원대상
- 특허권을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담보대출 특허기술평가) 산업은행·기업은행으로부터 지식재산권(IP: Internet Protocol) 담보대출을 받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사업목적

-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교육(해외 주요국 지식재산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향후 자생적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 지원내용

-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통해 즉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
- (집체 교육)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 전략, 분쟁사례 및 협상 전략 등 사례학습을 통한 분쟁 예방과 대응전략 교육지원
- (찾아가는 지식재산 실무교육) 매년 2~4월 사업공고 시 신청, 집체교육은 연중 수시

21)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창조경제 오감만족 체험단

❍ 사업목적

- 청년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등 실제 창업에 대한 영감을 받도록 유도

❍ 지원대상

-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창업활동 중인 청년

❍ 지원내용

- 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창업 지원기관 탐방, 창업 프로그램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디자인씽킹, 인터넷기술, DIY(do it yourself), 3D프린팅 등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

□ 찾아가는 청년버스

❍ 사업목적

- 청년들의 일자리, 진로에 관련한 다양한 고민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지원사업 관련 정보들을 모아 제공
- 정보 및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수도권 지역을 위주로 운영

❍ 지원대상

- 19~39세 청년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현장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부처 유관기관 및 민간 컨설턴트들이 상담 공간으로 청년 버스 내·외부에서 일자리 및 진로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및 청년 지원정책의 정보 제공

22) 2016년 중앙부처 청년고용정책 종합

<표 3-1> 중앙행정기관 정책 현황

부처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기업	교육·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취업진로상담, 지원금·보조금
	내일배움카드제	청년	교육·훈련, 지원금·보조금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청년	교육훈련
	청년취업인턴 사업	청년	체험·인턴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청년	교육·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	교육·훈련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	교육·훈련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청년	체험·인턴
	K-Move	청년	해외진출
	중소기업 취업연수 사업	청년	체험·인턴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청년	교육·훈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청년	창업
	취업사관학교	학교 밖 청소년	교육·훈련, 지원금·보조금
	일학습병행제	(재직)청년, 기업	교육·훈련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	취업진로상담
	고용센터취업지원 서비스	청년	취업진로상담, 교육·훈련
	취업지원관 서비스	대학	지원금·보조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광역·기초 자치단체	지원금·보조금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훈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기업	교육·훈련
	기업대학	기업	지원금·보조금
	산업단지 환경개선 패키지 지원 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기업	지원금·보조금

부처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교육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기업 맞춤형반	고등학교 재학생	취업진로상담, 교육·훈련
	중소기업 취업·창업 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생	지원금·보조금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대학생	해외진출, 체험·인턴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훈련
	지역 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	대학, 기업	지원금·보조금
	대학 창업교육	대학생	창업
미래창조 과학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대졸 미취업자	교육·훈련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청년	교육·훈련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대학, 기업	지원금·보조금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지원	청년	창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금·보조금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	청년	교육·훈련, 체험·인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창조경제타운 운영	청년	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창업
문화체육 관광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일자리 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생활체육 지도자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문화시설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청년	체험·인턴
	국제회의산업(MICE) 육성 사업	청년	교육·훈련
	박물관 전문인력 일자리 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사업	청년	교육·훈련
	예술강사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임직원 연수사업	기업	교육·훈련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청년	지원금·보조금
	재도전지원센터 운영사업	기업	창업
	청년 가젤형기업 지원	기업	지원금·보조금
	여성벤처 창업 지원 사업	청년여성	창업
	창업 인프라 지원 사업	창업센터	지원금·보조금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청년	창업

부처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본글로벌 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청년	창업
	창업기업 자금 지원	청년	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창업
	산학맞춤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	대학	지원금·보조금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훈련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대학	지원금·보조금
	벤처기업 공동 채용·훈련사업	청년	교육·훈련
	대학생 창업 아카데미	대학생	창업
	예비창업자 창업아카데미	청년	창업
	창업대학원 지원	대학	지원금·보조금
	엔젤 투자 매칭 펀드	기업	창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청년	체험·인턴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제도	청년	직접일자리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청년	직접일자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	지원금·보조금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혜택	기업	지원금·보조금
외교부	ODA 청년인턴	청년	체험·인턴, 해외진출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	청년	해외진출
법무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청년	체험·인턴, 해외진출
농림축산식품부	특성화농고 인력육성 프로그램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훈련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중소·중견기업 인턴사업	청년	체험·인턴
	에너지분야 인력양성 사업	기업	교육·훈련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환경부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이공계 대학생	체험·인턴, 교육·훈련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학생	교육·훈련
	생태 독성·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학생	교육·훈련
여성가족부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	청년여성	교육·훈련
국토교통부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학	지원금·보조금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U-City 인력양성사업	대학생	교육·훈련
	해외 건설현장 훈련지원 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부처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산학연계 사업	대학생	교육·훈련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훈련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청년	교육·훈련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관세청	FTA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병무청	맞춤특기병제	청년	교육·훈련
	산업기능요원	청년	교육·훈련
농촌진흥청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이공·농학계 인턴십	석사 학위 취득한 자	체험·인턴
산림청	해외산림 인턴	청년	체험·인턴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 사업	고등학교	지원금·보조금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청년	교육·훈련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벤처창업 지원 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업	교육·훈련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찾아가는 청년버스	청년	취업진로상담
	능력중심채용 설명회	청년	취업진로상담

23) 2017년 중앙부처 청년고용정책 종합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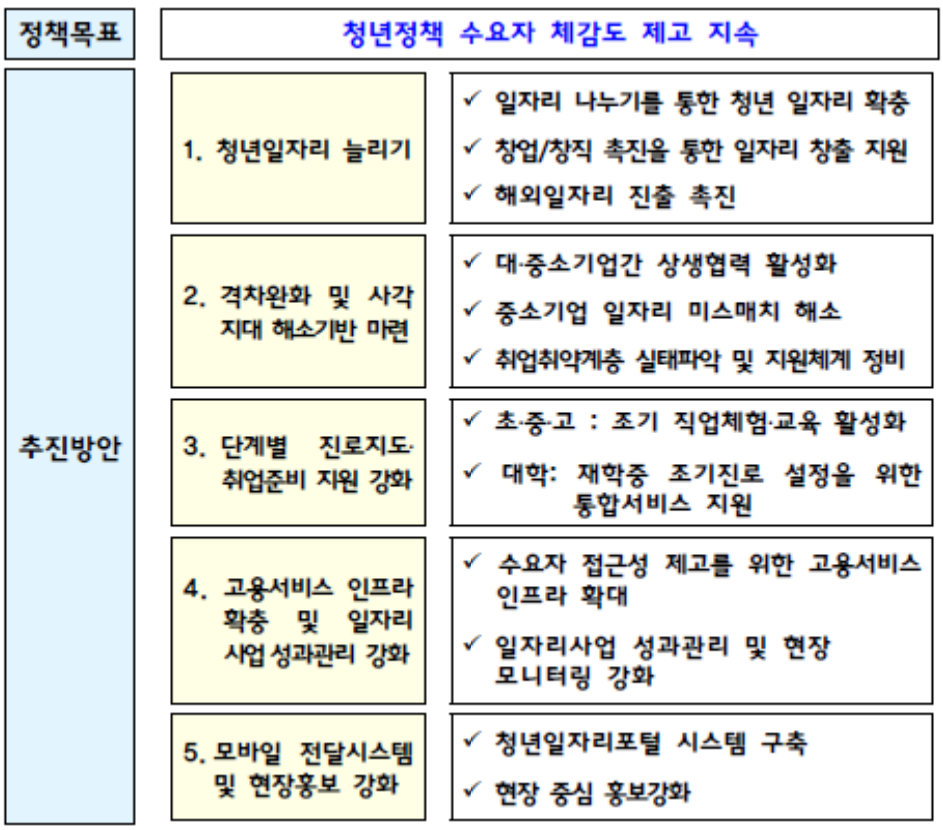
❍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자리 만들기·격차완화 등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

- ’17년 청년 일자리 사업은 14개 부처, 60개 사업, 2조 6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9.5% 증액
  -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미스매치해소를 위한 취업역량제고, 창업 및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 등 지원 강화

❍ 성과중심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및 정책발굴노력 지속 추진

❍ 현장고용상황 및 청년고용 관련 지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그림 3-1> 2017년 청년고용정책 추진 방향



❑ 2017년 범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60개) 예산

<표 3-2> 일자리 정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유형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예산	증감율
총계		2,349,157	2,572,796	9.5
고용노동부 소계(18개)		1,402,538	1,541,424	9.9
직접일자리	중소기업청년인턴제	42,001	24,565	-41.5
직업훈련	실업자능력개발지원(대학최종학년)	-	14,456	100
직업훈련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대학죄종학년)	-	29,346	100
직업훈련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374,055	384,066	2.7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73,272	335,349	22.7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 및 보급)	1,335	1,395	4.5
직업훈련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확충 (폴리텍, 다기능기술자과정)	72,776	75,912	4.3
직업훈련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108,897	129,531	18.9
직업훈련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3,500	23,897	1.7
직업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35,894	35,086	-2.3
직업훈련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2,930	0	-100
고용서비스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지원	16,517	29,540	78.8
고용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147,396	187,287	27.1
고용서비스	해외취업지원	40,998	45,776	11.7
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고보)	194,078	108,573	-44.1
고용장려금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51,507	35,937	-30.2
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내일채움공제)(고보)	0	15,667	100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0	47,592	100
창업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17,382	17,449	0.4
중기청 소계(8개)		399,127	509,678	27.7
직접일자리	청년창직인턴	10,000	0	-100
직업훈련	중소기업 연수사업	20,928	19,098	-8.7
고용서비스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1,548	1,644	6.2

유형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예산	증감율
창업지원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여성벤처 활성화)	0	0	0
창업지원	창업성공패키지	0	50,000	100
창업지원	중소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0	0	0
창업지원	창업사업화지원	103,285	126,148	22.1
창업지원	창업선도대학	75,266	92,240	22.6
창업지원	창업인프라지원	48,200	52,788	9.5
창업지원	창업저변확대	39,900	47,760	19.7
창업지원	창업기업자금융자	100,000	120,000	20
문화부 소계(11개)		266,940	210,101	-21.3
직접일자리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8,082	29,376	62.5
직접일자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7,868	101,082	3.3
직접일자리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학예인력지원, 사립박물관문화예듀케이터지원)	3,675	3,491	-5
직접일자리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32,121	33,717	5
직접일자리	예술인력 육성(예술인력 재교육)	4,568	4,014	-12.1
직접일자리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3,771	6,032	60
직접일자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2,776	10,868	-14.9
직업훈련	MICE산업 육성지원 (MICE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395	395	0
직업훈련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관광전문인력육성)	1,119	1,028	-8.1
직업훈련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90,365	17,898	-80.2
창업지원	관광사업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2,200	2,200	0
외교부 소계(1개)		117,472	111,629	-5
직접일자리	국제기구협력(ODA)(다자협력전문가)	1,423	0	-100
직접일자리	해외봉사단(ODA)(해외봉사단)	102,353	111,629	9.1
직접일자리	협력사업지원(ODA)(ODA 청년인턴)	13,696	0	-100
국토부 소계(2개)		3,950	3,360	-14.9
직접일자리	글로벌청년 리더양성(해외인턴쉽)	3,270	2,930	-10.4
직접일자리	항공전문 인력양성(항공인턴쉽지원)	680	430	-36.8
직업훈련	U-City 인력양성(석박사 과정)	0	0	0
직업훈련	물류전문인력양성 지원	0	0	0
미래부 소계(6개)		56,600	63,900	12.9
직접일자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4,399	4,119	-6.4
직업훈련	지역 신산업 선도인력 양성	10,000	8,807	-11.9

유형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예산	증감율
직업훈련	SW전문인력 역량강화(R&D)	22,435	22,561	0.6
직업훈련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10,436	19,083	82.9
직업훈련	정보통신 창의인재양성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3,830	3,830	0
창업지원	연구공동체 기술사업화 지원 (과기 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5,500	5,500	0
산자부 소계(3개)		60,316	77,094	27.8
직업훈련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GTEP)	2,696	2,696	0
직업훈련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R&D)	52,361	67,520	29
직업훈련	산업주도형 기술교육 혁신(R&D)	5,259	6,878	30.8
교육부 소계(3개)		29,601	41,759	41.1
직접일자리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8,317	8,475	1.9
창업지원	대학창업펀드	0	12,000	100
고용장려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 장학금)	21,284	21,284	0
농진청 등 6개 부처 소계(8개)		12,613	13,851	9.8
직접일자리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R&D)	1,827	0	-100
직접일자리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1,809	1,775	-1.9
직업훈련	보훈처, 취업지원(국가유공자 공공직업 교육훈련)	168	168	0
고용서비스	보훈처, 취업지원(국가유공자 취업지원)	1,321	1,407	6.5
직접일자리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286	286	0
직업훈련	여가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취업사관학교 운영)	0	2,930	신규
직접일자리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5,111	5,194	1.6
직업훈련	환경부,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1,281	1,281	0
직업훈련	환경부, 환경산업육성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물산업 전문가 양성)	810	810	0

2.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서울에 집적된 우수 기관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창의인재 양성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대학생 이상의 취업대상자

❍ 지원내용
- (서울크리에이티브랩)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허브 및 프로그램 인큐베이션
- (창조아카데미 운영) 대학에 서울의 특화산업 및 유망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최우선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산업현장 맞춤형인재양성
- (캠퍼스 CEO 육성) 대학에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역량 강화
- (미래형 신직업군 창출) 미래사회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유망직업 발굴
- (서울커뮤니티크리에이터 양성) 창의적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방안 모색
- (청소년 생각배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양성

□ 챌린지 1000프로젝트

❍ 사업목적
-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에게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 우수창업가 양성 및 혁신형 창업기업 창출

❍ 지원대상
- 20～30대 (예비)청년창업가

❍ 지원내용
- 창업공간, 교육·컨설팅, 자금, 투자, 유통·마케팅
- 창업 이행단계별 선발 및 맞춤형 지원

□ 서울 앱비즈니스센터

❍ 사업목적

-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모바일 앱산업이 IT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앱 개발자 양성과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앱관련 창업준비자 또는 3년이내 창업자

❍ 지원내용

- 6개월 간 입주개발실, 테스트베드(가상실험), 교육장 제공

□ 서울게임콘텐츠센터

❍ 사업목적

- 유망 중소게임 기업에 대한 인프라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고 서울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소규모(2~30인 이하) 게임관련 콘텐츠제작 기업

❍ 지원내용

- 게임제작지원, 교육강좌 및 비즈니스 미팅, 소프트웨어 및 마케팅 대행, 법률서비스 등
- 2년(1년 연장가능)간, 임대료, 임대보증금, 공용공간 관리비 지원

□ 청년허브

❍ 사업목적

- 청년고용, 직업에 대하여 연구 및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의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설치·운영

❍ 지원대상

- 청년층(만 19세~39세 미만)

❍ 지원내용
-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
- 청년정책 연구 및 문제해결 혁신사례 발굴·혁신
- 국내·외 청년활동 협력망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등

2) 부산광역시

□ 제5단계 BB(Brain Busan)21 사업

❍ 사업목적
- 산학협력을 통한 R&D 능력제고 및 대학·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부산대 등 13개 대학 20개 사업단

❍ 지원내용
- 석·박사 등 장학금 지원, 전략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
- 시비의 20%이상 대응자금 매칭, 전체금액의 70%이상 장학금 지원

□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육성 및 재도약을 위한 신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신발업체 재직자, 경남정보대학교 신발패션산업과 재학생

❍ 지원내용
- 의료용 맞춤형 교육, 기업 방문형 통합교육, 현장 실무자 역량 교육
- 현장실무 신발제작 교육, 업체 방문 현장교육, 신발품질평가사 교육

□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 사업목적

- 청년층에게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능력 향상

❍ 지원대상

- 근로장학생(비예산), 만29세이하 고졸이상 5년이내 졸업자중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1인 월 120만원정도

□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 사업목적

- 입체영상 및 콘텐츠 실무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 및 청년 취업지원

❍ 지원대상

- 지역내 교육과정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 지원내용

- 실무능력향상 교육 3개 과정 : 5일
- 취업지원 위탁교육 2개 과정 : 4개월
- 기업 고용지원 사업 : 고용보조금 지원

□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자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자

❍ 지원내용
- 사무공간 지원, 창업교육 및 전문가 창업컨설팅
- 사업화자금 및 정책융자지원(창업특례자금), 네트워킹 지원 등
- 판로개척지원(전시회 참가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웹메거진 제작 배포 등)

□ 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부산지역 전략산업 필요인력에 대해 지역대학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층 실업난 해소

❍ 지원대상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 중 미 취업자

❍ 지원내용
- 미취업자 대상 교육 및 취업지원(사업대상 학교는 공모 후 선정)
- 과정 당 25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통해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공급

□ 센팀맞춤형 콘텐츠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장애인, 고졸자, 게임과몰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 지원대상
- 고졸자, 장애인, 게임과몰입자 등

❍ 지원내용
-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 참여자 훈련수당 지급

□ 에너지 분야 기초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지역내 에너지기업에 산학연관협의 네트워크체제를 강화하고 에너지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현장실무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현장견학, 현장실습, 산업체 인사특강 등 실무능력과 인성교육을 통해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

❍ 지원대상

- 기계계열 및 신재생전기계열의 재학생 중 에너지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 이수하는 학생

❍ 지원내용

- 지자체에서 주요 실습기자재 지원

□ 미음 풍력부품산업 협동화 단지 조성 사업

❍ 사업목적

- 세계적으로 급신장하고 있는 풍력발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풍력부품전용 산업단지 내 전문기업 이전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 풍력·기계부품 업체

❍ 지원내용

- 역외기업 및 역내기업 이전으로 기업경쟁력 확보

□ 부산 모바일앱센터

❍ 사업목적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창업 활동 지원
- 클라우드 시스템 및 테스트베드(가상실험) 제공 등 모바일 앱 개발 환경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모바일 앱 분야 예비창업자 (개발자, 기업, 학생 등)

❍ 지원내용
- 모바일 앱 개발 전문교육 실시 및 창업 활성화 교육
- 모바일앱 창업 멘토링 지원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

□ 부산게임아카데미

❍ 사업목적
- 게임제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및 인적 인프라 조성 기여

❍ 지원대상
- 관련학과 졸업자중 미취업자

❍ 지원내용
- 게임제작 전문과정 운영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조선기자재 특성화고의 기능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공급 및 취업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전기 및 특수용접 자격반 구성 운영

❍ 지원내용
- 용접 자격증 취득, 동아리반 운영 지원 및 취업지원
  • 강사 운영, 실습 재료비, 기자재 수리보수 등

□ 부산시립미술관 청년인턴사업

❍ 사업목적

- 미술관 전문직 취업희망자에게 미술관 업무의 실무경험과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국내·외 미술 관련학과 등 4년제 대학 졸업자

❍ 지원내용

- 전시 및 교육 추진 실무, 소장품 조사·관리 실무, 전시 및 교육 추진 실무에 적합한 인원 채용

□ 달리는 부산문화

❍ 사업목적

- 시민들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기동성과 가변성이라는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지역 공연예술분야 인력

❍ 지원내용

- 생활문화커뮤니티,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등 콘텐츠를 보유한 단체의 무대 차량지원
- 상설공연을 포함한 자체 기획을 통한 운영

□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젊고 유능한 청년예술인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청년예술가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문화 육성

❍ 지원대상
- 부산 거주 만35세 이하 청년예술인(개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창작활동지원,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지원 등)
-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양성(전문인력 인큐베이팅, 아카데미 등 운영)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청년문화 박람회, 젊은 예술가 해외진출 지원 등)
-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육성(자생적 청년문화공간 육성, 아트 프리마켓 활성화

□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대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교 10개 대학교

❍ 지원내용
- 기업이 원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 및 취업마스터플랜형 등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대학생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 사업비

□ 청년 취업역량 향상사업

❍ 사업목적
-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잡 매치를 지원하는 토탈 맞춤형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년의 진로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지원내용
- 진단(직업적성 및 직업동기) - 탐색(직업세계) - 설계(자신의 진로)의 맞춤형 취업역량 향상 지원

□ 부산지역 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청년 취업난 해소를 통한 지역 고용창출 잠재력 강화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강소기업(제조업 중심), 부산지역 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자

❍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선정, 고용분야 중점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고용 창출력 강화
- 지역 우수 강소기업(450여개) 방문, 지역 대학생이 요구하는 인사·복지·채용정보 등 고용관련 복합정보 조사·제공
- 지역 강소기업 방문, 경영체험 및 체험수기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업 체험단 운영(35개 기업, 125명)

3) 대구광역시

□ 기업인턴사업

❍ 사업목적

- 취업난에 시달리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력개발을 지원, 지역기업들에게는 우수 인재를 공급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대구시 거주 만 15~39세 이하 미취업자,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가입 종업원수 상시 5인이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임금지원) 3개월간 90만원(최대 270만원)
- (정규직전환) 2개월간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원
- (취업장려금)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인턴에 100만원 지원

□ 청년창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들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창업 성공률 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한 아이템을 가진 대구시 거주 만15~39세 청년

❍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 창업공간 및 회의실, 공용 사무집기 제공
-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제작 지원 등

□ 대학 리크루트 투어

❍ 사업목적

- 지역의 성장유망하고 우수한 기업을 제대로 알려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및 청년들의 지역기업 취업의욕 고취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 지원내용

- 지역 주요기업 및 공공기관(약 50개 내외)이 대학(6개 예정)을 찾아가 현장 채용상담, 기업설명회 개최 등

4) 인천광역시

□ 찾아가는 특성화고교 취업특강

❍ 사업목적

- 지역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PR법, 취업동기부여, 취업목표설정, 자아성취감 향상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강좌를 진행하여 고교생의 취업 준비에 도움

❍ 지원대상
- 특성화고교 2, 3학년 취업준비생 200여명

❍ 지원내용
- 특성화고교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 강의
- 각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강의 제공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강의로 취업 의욕 및 취업 성공률 고취

□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 사업목적
- 국제기구에서의 업무체험으로 미취업 청년층의 능력 개발 및 경력형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대학(원)생 및 졸업자 중 영어능통자 중 대학교 추천으로 선발

❍ 지원내용
- 참가자 활동 보조금(교통비 및 식비) 지원

□ 인천시 청년인턴사업(행정체험)

❍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직경험을 통한 경력개발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인천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고졸 이상의 만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들에게 주 5일, 1일 6시간의 공직경험 제공

□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일자리창출 사업

❍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을 센터에 유치 후,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일자리 채용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기관

❍ 지원내용

- 문화콘텐츠관련 업체를 센터에 유치 후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일자리 채용 기반 조성
- 문화콘텐츠 입주업체와 연계한 인재교육사업 추진 및 지원

□ 인천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 사업목적

- '국제기구 도시, 인천'의 경쟁력 기반 지역특화 MICE 발굴 및 육성 추진

❍ 지원대상

- 국제기구 및 MICE 직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 가능

❍ 지원내용

- 진로·채용상담 및 홍보부스 운영, 국제기구 진출 사례발표 및 글로벌 MICE 아카데미, 국제기구 방문 및 MICE 테마 관광

□ 취업지원플랫폼 구축 사업

❍ 사업목적

-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청년의 우수한 기술 기능인재 미스매치 해소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체계 구축으로 고졸자 채용기반 조성

❍ 지원대상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 지원내용
- 진로교육, 모의면접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모션인포그래픽스전문인력 양성과정, 업종별 전산회계와 세무실무, 임베디드 프로젝트 실무과정, ERP정보관리사(물류,생산)
- 동행면접, 현장채용관, 취업특강, 학부모동행진로상담, 청년채용설명회

5) 광주광역시

□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 사업목적
- 공공·사회서비스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광주거주 미취업 청년 20명

❍ 지원내용
- 지역 청년에게 공공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 제공

□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지역 청년들의 성공 가능한 아이템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창업 희망자(광주거주)

❍ 지원내용
- 창업준비실, 공동 작업공간, 회의실 등 무상 제공
- 창업지원 정보제공, 창업활동 단계별 교육(경영·회계·세무·특허 등)
- 우수벤처기업 탐방, 창업대전(박람회) 참가 지원, 성과교류 워크숍 등

□ 찾아가는 청년취업 라운드테이블

❍ 사업목적

- 청년취업 애로사항 청취, 취업지원 시책과 구인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 취·창업 지원

❍ 지원대상

- 청년 다중 집합장소 순회(청년센터, 대학 등)

❍ 지원내용

- 취·창업 애로사항 청취 및 성공사례 공유
- 미래의 인재상,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 등 강연
- 취업지원 시책 및 구인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알선 등

6) 대전광역시

□ 일취월장 123 청년 인력양성사업

❍ 사업목적

- 지역청년이 일자리 도전에서 취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 될 때까지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 청년미취업자

❍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 훈련비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시 지원
- 전문상담 및 맞춤형 교육 → 취업알선 및 인턴지원 → 사후지원 및 관리

□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창업 초기기업들에게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

❍ 지원내용
- 초기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
- 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전문 멘토링
- 창업 후 성장을 위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 후속지원

□ Good-Job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청년미취업자의 관내 중소기업 인턴근무 후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지원과 알선으로 청년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및 월 급여 140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3인 이상 대전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인턴근무 3개월간 월 80만원, 정규직 전환 3개월간 월 8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 후 5개월경과 시 100만원 지원(1회)

□ 찾아가는 Good-Job 행복드림버스

❍ 사업목적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하는 등 취업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특성화고 등 청년층, 노인, 여성 등 전 계층 대상 매일 방문

❍ 지원내용
-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Good-Job카페” 운영

- 대학생, 여성, 노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관련기관, 전문가 참여로 운영 내실화
- 구인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상설면접, 취업특강, 이벤트 행사 등 맞춤형 취업지원 고용 활성화

7) 울산광역시

□ 청년일자리 희망 한마당

❍ 사업목적

-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미래 유망 직업 및 창조적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토크·나눔 콘서트 개최

❍ 지원대상

- 취업준비 고교생·대학생, 예비창업자, 시민 등 10,000여명

❍ 지원내용

- 개막식, 미래유망·이색직업 체험, 토크콘서트, 자기소개서 및 면접 특강, 나눔콘서트 등

□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사업

❍ 사업목적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청년 미취업자 인턴 지원을 통한 정규직 전환 유도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울산시 거주 39세이하 미취업자, 기업)울산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0명 미만 일자리 창출기업

❍ 지원내용

-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8개월(인턴 3개월+정규직 5개월)

□ 청년CEO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창업관련 교육 및 절차 등에 관한 노하우 축적과 경험 획득 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만 18세~39세,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및 집기 제공, 교육·컨설팅 및 창업활동비(월 30만원 ~ 100만원 차등 지원/ 9개월) 지원, 오프라인 매장 운영

□ 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

❍ 사업목적

-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사회경험 제공 및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한 행정보조 업무체험 기회제공

❍ 지원대상

- 울산에 증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지원내용

- 연 2회(1월, 7월) 근무지 배치를 통한 행정보조업무 수행

□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D 인력난 해소와 공과대학생의 취업활성화 지원으로 청년 취업률 제고

❍ 지원대상

- 공과대학 4학년생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에 R&D 실무실습(6개월) 후 기업 채용 연계

□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울산청년CEO 육성사업' 수료자 및 지역내 초기창업자를 위한 지식기술 분야 창업자 계속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경영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39세(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제공, 교육·컨설팅 및 사업화 중점 지원

□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 사업목적

- 유망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창업스타기업'으로 집중 지원하여 고용과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유망 창업기업 5개사

❍ 지원내용

- 창업스타기업 선정 후 기업별 맞춤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지원 전략 수립

□ 톡톡팩토리(제조업 창업공간)

❍ 사업목적

- 냄새, 소음, 먼지를 유발하는 제조업종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종 분야의 창업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울산지역 청년창업자 중 제조업을 해 보고자 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제조공간 제공, 시설비·마케팅·재료비 지원 등

8) 세종특별자치시

□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캠프

❍ 사업목적
-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취업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 지원대상
- 세종시 청년구직자 또는 세종시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기업 직무분석, 1분 스피치 전략, 실전 모의면접 등 청년 취업 역량 강화

□ 창업보육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지원 및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예비창업자 창업 촉진 도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

❍ 지원내용
- 입주기업의 사업화지원(특허출원,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 연중)
-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강좌 개설

□ 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 훈련

❍ 사업목적

-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단계적, 체계적 맞춤 훈련과정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실업자

❍ 지원내용

- 훈련비(무료), 훈련수당(20만원/월)

9) 경기도

□ 굿모닝론

❍ 사업목적

- 금융소외계층(소상공인)에게 무담보·저금리 소액대출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활·자립 및 가계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만20세 이상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무담보·저금리 소액대출 지원(창업자금 3천만원 이내,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 경기 청년뉴딜

❍ 사업목적

- 청년층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대학 및 특성화고 또는 35세미만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 개인별 역량평가에 기초한 취업역량강화 및 잡매칭 지원 사전 프로파일링 → 취업캠프 → 잡매칭 → 사후관리

□ 예비창업 프로그램

❍ 사업목적
- 예비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G-베이스캠프)과 창업교육 및 교류·협업 및 네트워크 등 지원

❍ 지원대상
- 창업에 관심있는 경기도민

❍ 지원내용
- 경험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교류·협업 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창업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제공

□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 사업목적
- 도내 산업체에 고급 첨단 기술·기능인력 공급 및 경기도 일자리창출 기여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전액 도비 지원(교재, 실습비, 자격검정료 포함)
- 졸업생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 선도적인 빅데이터 현장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 대학(원)생, 취·창업희망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

❍ 지원내용
-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빅데이터 재직자 과정 운영

□ 창업프로젝트

❍ 사업목적
- 창업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 가능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창업자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 기술·경영컨설팅, BI 입주비용, 창업 교육, 특허등록비용, 각종 전시회 참가비 등 지원

□ 고졸취업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경쟁력 배양

❍ 지원대상
- 경기도소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3학년생)

❍ 지원내용
- 취업 컨설팅 및 실무교육, 현장(직업)체험

□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 사업목적
- 대학생의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전공 관련 기업체 실습경험 제공, 기업은 우수인재 사전 확보를 통한 인력난 해소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대학(4년제 및 2~3년제 포함) 중 기업과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 협약을 맺은 대학

❍ 지원내용
- 하계방학 중 대학-기업 협약을 통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교육훈련비의 일부 지원

□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 및 사업성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우수한 창업기업과 이를 성장·육성시킬 능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엑셀러레이터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
- 아이템 검증·보완·보육, 투자 유치 등 지원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 사업목적
-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도내 대학(원)생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대학(원)생 또는 거주 대학(원)생 10개팀 선정

❍ 지원내용
- 차세대융합기술원의 공간 및 장비, 회의실 등 인프라 활용을 지원
- 시제품제작, 디자인개발, 컨설팅, 멘토링, 인력(인턴) 등 지원

□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사업

❍ 사업목적

- e-커머스(전자상거개) 분야의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일자리창출과 수출증가 유도

❍ 지원대상

- e-커머스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 소재 1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중 공모를 통해 10개팀 선정

❍ 지원내용

- 해외 역직구 e-커머스 사업에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희망자(10팀)에 대한 선발·교육 후 전자상거래 활동지원
- 창업자금 지원(법인설립, 세무, 쇼핑물 입점 등), 사업역량 강화(기본교육, 전문멘토링, 컨설팅 등), 사무공간 제공(G-베이스켐프)
- 자금지원: 팀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 사업목적

- 환경분야 취업준비생에게 미래직장에 대한 취업정보와 현장체험의 기회 제공 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취업역량 제고

❍ 지원대상

- 경기북부 소재 대학 및 특성화고

❍ 지원내용

-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직무특강 및 취업컨설팅, 현장 체험 등) 운영 지원

□ 경기문화창조허브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 창업 숏주기 지원을 통한 선순환 문화창업생태계 구축

❍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창업자 및 스타트업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제공, 창작·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사업

❍ 사업목적
-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

❍ 지원대상
- 경기도 의료원 6개 숟병원

❍ 지원내용
- 사업 초기 인건비 보전, 인센티브 수당, 기숙사 임차비, 홍보비 등

□ 경기 청년문화창작소

❍ 사업목적
- 새로운 청년문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조성 및 운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청년단체, 청년기업, 청년협동조합 등 프로젝트 공간지원, 교육, 컨설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을 연계하여 대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육성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대학(4년제 및 2~3년제 포함) 중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전공 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 지원내용

- 대학-학생, 대학-중소기업(단체) 간 협약을 통한 전공과정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취업 지원

□ 창업보육센터

❍ 사업목적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초기 기업이 성장·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운영중인 51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인프라, 인력, 자금, 시설, 성과 등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등급별 50백만원 ~ 20백만원 지원(도비 30%, 시군비 70%)

□ 슈퍼맨펀드

❍ 사업목적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투자하여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우수 초기기업으로, 운용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20억원 한도 내 투자 지원
- 200억원 규모 펀드 조성(도 50억원, 민간 150억원)

10) 강원도

□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강원도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직장 실무경험으로 경력계발 및 건전한 근로 체험 제공

❍ 지원대상

- 강원도 내 대학생(1~4학년)

❍ 지원내용

- 직장 실무경험 제공

□ 대학생 부업활동 운영

❍ 사업목적

- 강원도의 시정 간접체험을 통한 시정 이해 도모 및 학비 마련 지원

❍ 지원대상

- 대학생(1~4학년생)

❍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상 법정임금 지급

11) 충청북도

□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고졸자 및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청년 미스매치 해소

❍ 지원대상
- 도내 만18~39세 고졸(예정)자 및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찾아가는 리쿠르트 투어, 특성화고교생 체험캠프

□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 사업목적
-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 및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연계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도모

❍ 지원대상
- 도내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 지역 업체와 함께하는 대학생, 기업 도보 대장정, 청년 구인·구직 만남 행사, 취업동아리 활동 지원, 도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

□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및 도내 우수기업과 취업연계로 도내 대학생 취업률 제고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대학 졸업자 또는 도내 등록기준지를 둔 대졸자(졸업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취업역량 강화 교육, 취업멘토링프로그램, 대학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취업캠프, 고용지원금

□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민간부분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창출로 청년 고용율 향상

❍ 지원대상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 근로복지시설(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개·보수 등 인센티브 제공
-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유효기간 2년)

□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체계적인 창업지원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도내 대학생, 청년(18세~39세이하), 창업기업 (5년 이내)

❍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우수 창업 동아리 지원, 창업 우수 기업 발굴 기업별 맞춤 지원

12) 충청남도

□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 사업목적

-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우수 중소기업 탐방을 통해 인식 개선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선순환 구조 구축

❍ 지원대상

- 충남 소재 우수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 지원내용
- 고교생 기업현장 방문 및 기업 인사담당자 고교방문 등 특성화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및 현장면접 진행
- 예비취업준비생을 위하여 특성화고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채용행사 지원
- 참여기업, 참여학교 및 행사진행 내용 등을 책자에 담아 배포하여 도내 기업과 학교에 사업홍보

□ 청년CEO500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창직(invent a job)·창업(Start-up)에 도전하는 청년 CEO를 발굴하여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청년 창업가로 육성

❍ 지원대상
- 도내 18세~만 39세의 예비 창업희망자 및 창업한지 1년 이내의 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지원 : 기업당 3~6m^2 내외 창업공간, 회의실, 공용 사무집기 제공
- 맞춤형 창업지원 :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마케팅 홍보 등
- 창업활동비 지원 : 평가에 따라 월 25~60만원(최대 지원기간 10개월)
- 창업지원비 지원 : 시제품 제작, 전시회참가자가 필요한 CEO대상으로「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사업참여 기회 제공

□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 사업목적
- 일자리 도전에서 취업 후 안정적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 지원내용
- 전기·전자 / ICT(정보기술) / 기계·메카트로닉스분야 훈련
- 연수생(연수수당), 기업체(인턴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

□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 사업목적
- 지역 해양수산대학의 인력 및 지역전문가를 활용한 업종별 수산전문인력 정예화를 통해 지역 수산업 리더로 양성, 수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충청남도 내 수산업(어로 및 양식어업, 수산가공업) 및 수산 유통업을 경영하는 자 이거나 종사자 등

❍ 지원내용
- 어한기(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기) 활용 3개월 내외 기간 중 100시간 이상 (12주, 1~2일 / 주, 6시간) 교육
- 업종별 세부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운영,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신지식인, 선도업체, 관계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장교육 및 수산경영, 리더십 등 교육 실시

□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

❍ 사업목적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조성

❍ 지원대상
- 도내에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한 기업으로서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최소증가인원 5명)기업

❍ 지원내용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및 도·시군의 물품구매 시 우선구매
- 국·내외 마케팅 우대 지원 및 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우대

13) 전라북도

□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

❍ 사업목적

- 산·학·관 연계를 통한 전문자격증 취득과 현장실습 등의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졸 취업 제고

❍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특성화고 재학생

❍ 지원내용

- 산·학·관 협력 통한 지역특성화 및 학교 특화분야 인력양성
- 직업의식교육,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위한 교육강사수당, 교재비, 재료비, 식비 및 간식비 지원 및 취업연계 활동비 지원

□ 인문사회·예체능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 사업목적

- 청년실업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도·대학· 기업 협력체제로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공급을 위하여 청년취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 지원내용

-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창조적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기업 맞춤형 교과목 편성·운영, 학생 현장실습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이공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 사업목적

- 청년실업 및 구인·구직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도·대학·기업 협력 체제로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공급을 통해 청년취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도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 지원내용

- 산업 현장중심 기업 수요 맞춤형 이공계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맞춤형 교과목 편성·운영, 학생 현장실습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기업이 청년을 상시근로 인원 외에 더 채용하도록 촉진시키고, 청년은 현장 실무 체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 청년실업 해소와 기업 인력난 해소

❍ 지원대상

- 도내거주 만 25 ~ 39세 미취업 청년층

❍ 지원내용

- 기업지원 월 최대 80만원×12개월(수습3+정규9)/1인, 참여기업은 월 110만원 이상 부담

□ 공공기관-대학교 잡(JOB) 멘토링

❍ 사업목적

- 도내 공공기관·출연기관 등이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잡(JOB)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취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 1년 간 대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멘토링 지원 (5회) 및 현장체험 기회 (1회) 제공
- 도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기관 멘토단 구성, 취업관심 기관(분야) 멘토에 대학생(멘티)을 매칭, 취업노하우 및 진로설계 등 멘토링 실시

□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 사업목적
- 기술, 지식서비스 기반의 아이템을 연계한 창업교육과 자금 지원, 창업 공간 제공 등 통합적 창업 패키지 제공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우수 기술 창업 유도

❍ 지원대상
- 도내 우수아이디어 보유자 및 청년창업 준비자 중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기술융합 창업 아이템 관련 필수 및 심화교육과정 운영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펀드자금 지원

□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도내 고교·대학생 개인 및 창업동아리의 창의적인 창업아이템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도내 고교·대학생 개인 및 창업동아리팀 중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공개 오디션 및 컨설팅지원, 우수 아이템 제품개발지원
- 입상자들에 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후속 사업화
- One-Stop 서비스 지원(전문가컨설팅-시제품제작-보육센터 입주 등)

14) 전라남도

□ 청년 잡콘서트

❍ 사업목적
-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신규 채용계획, 취업성공담 등을 소개하는 '잡 콘서트' 개최로 지역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의 공동협력

❍ 지원대상
- 대학·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등

❍ 지원내용
- 채용설명회, 취업성공 스토리, 청년인턴 현장채용 등

15) 경상북도

□ 중소기업인턴 사업

❍ 사업목적
- 청년 등 미취업자의 취업난과 어려운 지역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

❍ 지원대상
- 인턴참여자: 청년 실업자
- 인턴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최대 6개월(인턴 2개월, 정규직 채용 4개월)
- 1인당 월130만원(도비 20, 시군비 50, 기업 60)

□ 청년CEO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도전정신을 창업으로 연결시켜 창조적 기업마인드 함양

❍ 지원대상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1년~3년차 유경험자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등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등

□ 경북 청년몰

❍ 사업목적

- 경북도가 육성한 1,000여명의 청년CEO들의 제품홍보 및 판매공간 제공

❍ 지원대상

- 도내 39세이하의 청년 창업가

❍ 지원내용

- 청년 프리마켓 운영 등 청년 CEO 생산제품 판매 지원
- 블로그·SNS 등 인터넷 매체 및 지하철 홍보
- 창업특강(우수CEO 및 유명강사 초빙, 소규모의 창업특강)

16) 경상남도

□ 취업멘토링 콘서트

❍ 사업목적

- 도내 청년들에게 열정과 꿈을 심어주는 취업멘토링 개최를 통한 정확한 자기탐색과 취업난으로 지친 심신 힐링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도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

❍ 지원내용
- 취업성공 멘토 특강, 문화공연,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안내
- 기업채용 홍보부스 운영으로 취업정보 제공

□ 경남형 기업트랙

❍ 사업목적
- 기업 맞춤형 특화인력 공급 및 대학생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도내 20개 전대학 및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대상 채용협약 체결

❍ 지원내용
- 청년 미취업자 교육, 실습, 채용, 연계 지원

□ 경남 청년 EG사업

❍ 사업목적
- 개개인의 적성과 취업역량을 분석하여 구직자의 역량에 맞는 취업지원
  • EG: Employment Guide(취업 길잡이, 취업 가이드)

❍ 지원대상
- 도내 만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 구직자 밀착상담 및 취업스킬 강화(적성검사, 이력서 작성 등)
- 필요시 전문교육 또는 인턴근무

□ 주문식 교육사업

❍ 사업목적
-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률 제고

❍ 지원대상
- 도내 만39세 미만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 기계, 사무 등 기업수요 분야의 교육과정 제공
- 훈련수당 지원 : 1인당 8천원/1일

□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 사업목적
- 학력 등 스펙 위주 채용관행 타파, 서민층 취업지원 강화 및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기업체 인력난 해소

❍ 지원대상
- 도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 CAD/CATIA, 전산세무회계 실무 교육과정 제공
- 교육과정 수료자 취업지원

□ IT엘리트 양성사업

❍ 사업목적
- IT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실업 해소

❍ 지원대상
- 도내 만34세 이하 청년구직자

❍ 지원내용
- HTML5 차세대 웹표준 양성교육과정 제공
- 교육과정 수료자 취업지원

□ 설계엔지니어(CAD) 양성사업

❍ 사업목적

- 지역산업체 인력수요가 많은 분야의 기술습득 및 취업지원으로 청년 실업해소

❍ 지원대상

- 도내 만34세 이하 청년구직자

❍ 지원내용

- CAD/CATIA 활용 설계엔지니어 양성교육과정 제공
- 교육과정 수료자 취업지원

□ 창업아카데미

❍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

❍ 지원대상

- 도내 만 34세이하 예비청년창업가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제공 및 운영지원: 공용사무기기 제공
- 창업교육 지원: 창업전문맞춤형 교육, 창업멘토
- 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특허·인증 획득관련 지원 등
- 재정지원: 창업활동비 지원, 창업자금 대출 알선 등(등급별 차등지원)

□ 경남하이(Hi) 트랙

❍ 사업목적

- 도-기업-특성화고등학교 간 안정적 인력공급 시스템 구축 및 고등학교 졸업생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조기 진입 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 병역미필 고졸자 최소 3개월 이상 채용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설비자금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0.5%) 우대 지원
-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 우대 지원
- 도 고용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17) 제주특별자치도

□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 사업목적
-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해외 전문기관에서 양성하여 좋은 일자리 취업연계

❍ 지원대상
- 만34세 이하의 미취업자(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에 한함)
- 제주도내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또는 제주출신자로서 타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지원내용
- 1년이내 해외연수 후 해외 또는 외국투자기업
- 취업연계(해외취업후 국내복귀시 투자기업 경력승계 취업)

□ 기업체 인턴 사업

❍ 사업목적
- 도내 청장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체에서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과 기업체 취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지원내용
- 9개월간 월 700천원 고용보조금 지원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사업목적
-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하여 청년 취업률 증대

❍ 지원대상
- 도내 대학 재학생 및 청년 실업자

❍ 지원내용
-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과정 심사를 통하여 교육·취업 지원

□ 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 사업목적
-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업여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유도

❍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지원내용
- 2년간 월 600천원 고용보조금 지원

<표 3-3> 지방자치단체 정책 현황

시도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서울특별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청년	창업
	서울 앱비즈니스센터	청년	창업
	서울게임콘텐츠센터	기업	지원금·보조금
	청년허브	청년	취업진로상담, 교육·훈련
부산광역시	제5단계 BB21 사업	대학	지원금·보조금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학생	교육·훈련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청년	체험·인턴
	부산 입체영상아카데미	청년	교육·훈련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창업
	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센터맞춤형 콘텐츠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에너지 분야 기초인력양성사업	대학생	교육·훈련
	미음 풍력부품산업 협동화 단지 조성 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부산 모바일앱센터	청년	창업
	부산게임아카데미	청년	교육·훈련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풍력발전 고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고급과정 운영	청년	교육·훈련
	부산시립미술관 청년인턴사업	청년	체험·인턴
	달리는 부산문화	청년	직접일자리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원사업	고등학교	지원금·보조금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청년	창업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대학	지원금·보조금
	청년 취업역량 향상사업	청년	교육·훈련
	부산지역 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사업	청년, 기업	체험·인턴, 지원금·보조금
	해상풍력 고출력 발전기 핵심기술 고급인력 양성사업	석·박사	교육·훈련
대구광역시	기업인턴사업	청년	체험·인턴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대학 리크루트 투어	대학	교육·훈련

시도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특성화고교 취업특강	고등학교 재학생	취업진로상담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대학생	해외진출
	인천시 청년인턴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문화콘튼체산업지원센터 일자리창출 사업	기업	체험·인턴
	인천 국제기구-MICE 커리어페어	청년	취업진로상담
	취업지원플랫폼 구축 사업	청년	취업진로상담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청년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	청년	창업
	찾아가는 청년취업 라운드테이블	청년	취업진로상담
대전광역시	일취월장 123 청년 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청년	창업
	Good-Job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	청년	체험·인턴
	찾아가는 Good-Job 행복드림버스	청년	교육·훈련, 취업진로상담
울산광역시	청년일자리 희망 한마당	청년	취업진로상담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청년CEO 육성사업	청년	창업
	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	청년	체험·인턴
	지역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대학생	체험·인턴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기업	창업
	톡톡팩토리	청년	창업
세종특별 자치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캠프	청년	교육·훈련
	창업보육 지원사업	청년	창업
	채용연계형 일자리맞춤 훈련	청년	교육·훈련
경기도	굿모닝론	청년	지원금·보조금
	경기 청년뉴딜	청년	직접일자리
	예비창업 프로그램	청년	창업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청년	교육·훈련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창업프로젝트	청년	창업
	고졸취업 활성화 사업	고등학교 재학생	체험·인턴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대학	지원금·보조금
	해양레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시도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경기북부 문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	청년	직접일자리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사업	청년	해외진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대학생	창업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	청년	창업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교육·훈련
	경기문화창조허브	청년	창업
	경기 청년문화창작소	청년	교육·훈련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 지원 사업	청년	교육·훈련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대학	지원금·보조금
	창업보육센터	대학	지원금·보조금
	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별협약 보증 지원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슈퍼맨펀드	기업	지원금·보조금
강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대학생	체험·인턴
	대학생 부업활동 운영	대학생	체험·인턴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 사업	청년	교육·훈련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청년	취업진로지도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청년	교육·훈련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청년	창업
충청남도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청년, 기업	체험·인턴, 지원금·보조금
	청년CEO500 프로젝트	청년	창업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교육·훈련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청년	교육·훈련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	기업	지원금·보조금
전라북도	특성화고 명장육성 사업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훈련
	인문사회·예체능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대학생	교육·훈련
	이공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대학생	교육·훈련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	청년	교육·훈련
	공공기관-대학교 잡(JOB) 멘토링	대학생	취업진로지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청년	창업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전라남도	청년 잡콘서트	청년	취업진로지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인턴사업	청년	체험·인턴
	청년CEO 육성 사업	청년	창업
	청년무역사관학교 운영	청년	교육·훈련
	경북 청년몰	청년	창업

시도	정책명	정책대상	정책유형
경상남도	취업멘토링 콘서트	청년	취업진로지도
	경남형 기업트랙	청년	교육·훈련, 체험·인턴
	경남 청년 EG사업	청년	취업진로지도
	주문식 교육사업	청년	교육·훈련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고등학생	교육·훈련
	IT엘리트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설계엔지니어(CAD) 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창업아카데미	청년	창업
	경남 하이(Hi)트랙	기업	지원금·보조금
제주도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	청년	해외진출, 교육·훈련
	기업체 인턴사업	청년	체험·인턴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청년	교육·훈련
	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	청년, 기업	체험·인턴, 지원금·보조금

제2절 국외 일자리 정책

1. 영국

1) 뉴딜(New Deal)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영국은 1980년대부터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적극적 구직활동 노력을 게을리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보험제도의 개혁과 함께 노동시장의 혁신을 위해 노력

❍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노동시장정책과 고용관련 복지정책의 통합서비스를 시도하면서 1998년부터 '뉴딜(New Deal)'이라는 집중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작

❍ Jobcentre plus가 제공하는 뉴딜 프로그램은 무직자(공식적으로 실업으로 분류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 구직자들이 기술 및 경험을 습득하거나 취업하도록 지원하여 급여로부터 탈피하도록 설계

❍ 또한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도 취업 기회를 탐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정책과 맥락을 같이함(Ken Jones, 2004)

<표 3-4> 뉴딜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작 연도

프로그램명	시작 연도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 NDYP)	1998년 1월
25세 이상 뉴딜(New Deal 25 plus: ND25+)	1998년 7월
한부모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s : NDLP)	1998년 10월
배우자 뉴딜(New Deal for Partners: NDP)	1999년 4월
50세 이상 뉴딜(New Deal 50 plus: ND50+)	2000년 4월
강화된 25세 이상 뉴딜(New Deal 25 plus: ND25+)	2001년 4월
장애인 뉴딜(New Deal for Disabled People : NDDP)	2001년 7월
장애인 프로그램(Pathway to work)	2003년 10월
유연한 뉴딜	2009년 10월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09a).

□ 프로그램 구조

❍ 뉴딜 프로그램의 구조는 진입(gateway) 단계, 뉴딜옵션(New Deal options) 단계, 사후관리(follow-through) 단계로 구성

❍ 첫 번째 진입 단계에서는 집중적인 상담과 취업지도를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임금보조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진입단계는 4개월간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에 급여신청자를 다음 단계인 뉴딜옵션에 위탁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

❍ 두 번째 뉴딜옵션 단계에서는 실업급여신청자가 다음 4개의 뉴딜 옵션들 중 한 가지에 참여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훈련수당이나 고용에 의한 임금을 수령

- ① 고용 옵션-고용주에게 최소 26주간 임금이 보조되는 일자리에 취업
- ② NGO 부문 고용
- ③ 환경사업단 부문 고용
- ④ 최대 52주간 전일 교육 및 훈련 참여

❍ 뉴딜옵션 참가자들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것이며 다른 피용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훈련 중이더라도 주당 16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뉴딜의 규정에 따라 옵션 참가자들은 급여 목적의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 해당 노동시장의 통상임금율이 적용되며 정부가 26주 동안 임금을 보조
- 뉴딜 피용자가 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 가족 보호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당 최소 24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고용주 혹은 고용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 적어도 주당 하루 이상의 유급휴가가 제공되어야 함
- NGO 부문이나 환경사업단 옵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수당이나 임금 중 한 가지를 지급 받음
- 교육 및 훈련 옵션은 구직자들이 전일제 취업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최장 52주간 주당 적어도 5일, 주당 30시간은 반드시 출석해야 함

❍ 세 번째 사후관리 단계는 두 번째 뉴딜옵션 참여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진입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더불어 추가적인 지원과 지도를 제공
- 고용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뉴딜 참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뉴딜 프로그램의 중심 원리

❍ 뉴딜 프로그램은 ① 개인적인 상담, ② 참여자 맞춤형, ③ 권리와 책임, ④ Jobcentre Plus의 역할, ⑤ 고용주와 함께 일함의 다섯 가지 중심 원리에 초점을 둠
- 개인적인 상담: 뉴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개인 상담자(PA)가 전담하여 개인별 구직자의 구직활동 장애물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
- 뉴딜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및 기술을 고려하여 취업을 지원

- 상담자는 참여자의 기대를 높이고 동기부여 하도록 돕지만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성과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므로, 참여자의 구직과 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과 강제조항을 성실히 실행하도록 하는 책임을 권리와 동시에 요구
- Jobcentre Plus는 다양한 고용서비스 및 연금제도를 연결시켜 주며, 참여자가 권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돕고, 또한 뉴딜 및 근로연계 복지 제도를 안내하여 참여자를 지원
- 뉴딜은 항상 고용주와 가깝게 일하며, 구직자가 직장을 찾는 것과 동시에 구인자인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2) 유연뉴딜(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영국의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뉴딜의 10년을 맞이하는 2008년에 그 동안 눈부신 성공을 했다는 평가

❍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의 10년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뉴딜의 성과를 점검하며 뉴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

❍ 새로운 뉴딜은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것으로서 무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능력에 집중하는 것으로, 실직하여 급여를 요구하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도 동시에 집중
- 글로벌 경쟁시대에 개인의 기술과 재능을 발전시켜 경제의 성장을 유도

□ 유연뉴딜의 다섯 가지 전략적 원칙

❍ 첫째는, 수동적인 수급자에서 적극적인 구직자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틀의 필요성으로 이와 관련하여 “Ready for Work: full employment in our generation”이란 보고서를 발행
- 정부의 장기적인 고용정책의 목표를 고용률 80%와 세계적 수준의 기술 향상으로 설정

❍ 둘째는 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으로, 유인뉴딜처럼 참여자의 니즈에 더욱 잘 반응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강화하고, Jobcentre Plus의 직원과 상담자, 민간과 3섹터의 단계에서 권한을 부여하며, 지역고용파트십을 통하여 고용주와 개인의 고용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둠

❍ 셋째는 공공, 민간, 3섹터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데이비드 프로이드 보고서(David Freud's report)의 내용을 차용

- 이 보고서에는 기간의 고용서비스를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80%대인 고용률을 높이어 완전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낮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현금급여에 의존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러한 구체적 대안으로 그는 집중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는 민간위탁을 통한 심층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실업자를 위하여 성과위주의 민간위탁 모델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책임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강조

❍ 넷째는 지역에 권리를 이양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을 펴며, 다음 3년 동안 빈곤한 지역에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

❍ 다섯째는 취업만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취업 전이나 취업 후에도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러한 원칙하에서 유연뉴딜(Flexible New Deal)은 기존의 뉴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9년 10월에 도입된 제도인데, 그 동안의 민간위탁사업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 고용촉진지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존의 뉴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12개월 이상을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유연뉴딜' 프로그램이 시작

- 그러나, 실행 몇 개월 만에 유연뉴딜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새로운 Work Programme으로 전환되어 실행기간은 얼마되지 않은 프로그램

□ 유연뉴딜 프로그램 구조

❍ 유연뉴딜 단계에서의 특징은 Jobcentre Plus에서 훈련 제공업체로 성과의 부담이 이전

- 유연뉴딜에서는 구직지원의 1~3단계와 게이트웨이에 대해 Jobcentre Plus가 여전히 책임을 지지만, 52주 이후에는 실적이 우수한 훈련·직업 제공업체가 4단계를 제공
- 유연뉴딜은 개인의 선택, 서비스 모듈의 우연성 등 위탁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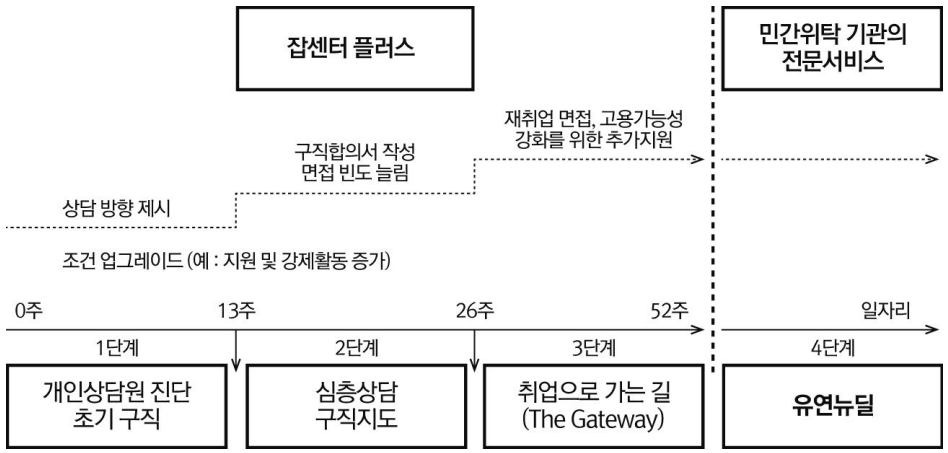
❍ 유연뉴딜은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업체의 노하우 또는 블랙박스로 간주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위탁업체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창의적 서비스를 유도(이상현, 2009)

- 이들 기관은 장기실업자를 위해 고용 지속을 얼마나 유지했는지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음

❍ 유연뉴딜 하에서 정부는 13~26주차의 고용 지속 결과에 대해 계약 예산의 80%를 제공업체에게 지급

-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3부문의 업체는 장기실업자가 직업경험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전일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
- 대규모 정액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는 그들이 제공하는 전일제 업무에(52주 이상) 장기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참여

<그림 3-2> 유연뉴딜 모형



<표 3-5> 유연뉴딜 단계별 서비스 내용

단계	기간	과정	세부 내용
1단계	0~5개월	자가 서비스	• 2주 1회 실시되는 검사를 통해 재강화되는 자가 구직활동에는 의무적인(work first) 세미나
2단계	5~6개월	구직지도	• 신청자의 20%에 대해 임금 및 근로시간, 주당 출석, 일자리 수락, 목표에 따른 별도 PA 개입에 기반한 구직활동 확대
3단계	6~12개월	재취업 eater 관문과정 (Gateway)	• 2주 1회 상담인에게 경과보고(PA 재량사항)를 해야하며, 월 1회 정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신청자에 대해 PA 지정, 유연성 확대 및 상담인에 대한 일부 재량적 재원조달 가능. 신청자의 다수의 활동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완료
4단계	12~24개월	유연뉴딜	• 고용관련 필요에 대한 초기 사정 및 '도전적인' 행동계획의 수립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약 기반의 제공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위탁 • 4주의 의무 근로 기회가 구직 실패자에 대해 제공되며, 실직 상태인 이 신청자들은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JSA 3단계로 복귀

자료: Finn(2009).

3) The Work Programme

□ 사업개요

❍ The Work Programme은 성과형(payment-for-results) 고용-복지연계 프로그램(welfare-to-work programme)으로 공공, 민간,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경기 침체기에 빈곤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500만의 근로연령대 중 각종 실업 관련 수급자들의 수급의존을 축소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주에 살고 있는 인구비중이 EU에서 가장 높은 영국의 상황에서, 장기 실업의 위험에 놓인 대상들을 돕기 위하여 영국 연립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한 야망을 담은 중심적인 정책으로, 2011년 6월에 영국 전 지역에 도입

❍ 영국의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인 Jobcentre Plus는 급여 관련 업무와 고객상담, 급여 신청 초기의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며,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취업상담원들에게도 재량권을 확대하여 구직자들의 보다 더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게 되며, Work Programme은 장기 실업 상태이거나, 장기 실업의 위기에 놓인 대상을 중점적으로 지원

❍ Work Programme은 장기 실업의 위험에 놓여있는 대상자, 장애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구직자,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대상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포괄하는 프로그램

❍ 과거 영국의 고용복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뉴딜 프로그램과 같이 연령, 장애, 미혼모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분화 되었는데, Work Programme은 이러한 인위적인 장벽을 없애고 과거 다양한 그룹별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개인과 개인의 특성에 맞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

□ 사업특징

❍ 이 프로그램은 과거의 고용복지프로그램이 민간위탁 기관에 세부적 지침으로 인하여 유연하지 못하며, 낮은 인센티브제도, 서비스의 분절성, 단기적이면서도 고비용이라는 문제와 가장 취약계층들에게 서비스가 잘 전달되지 않

는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실행된 지 몇 개월 안 되는 유연 뉴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실업자들을 위해 실행되고 있는 산발적 제도들을 정비하여 통합화된 프로그램

- ❍ 고용유지 시에는 더 많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장기적인 인센티브제가 설계되며, 취약의 정도가 어려운 계층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
- ❍ 공공과 민간, 비영리의 서비스 기관의 혁신적 서비스를 위하여 자율권을 확대
- ❍ 5년의 장기 계약을 통하여 주계약자가 지역의 서비스 연결망인 중소 기관들과 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민간위탁기관의 인프라와 자원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유도

□ Work Programme 모형

- ❍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급여 대상자로서 영국에서는 네 가지의 주요한 실업관련 급여가 존재
- ❍ 첫째, 구직수당(JSA)은 주당 16시간 이하의 근로자와 구직활동 중에 있는 대상을 위한 급여
- ❍ 둘째, 고용지원수당(ESA)은 실업상태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대상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2008년부터 장애수당(IB)의 신청자는 고용지원수당으로 대체되나, 그 이전의 장애인과 어린자녀를 둔 한 부모와 일부 그룹들은 여전히 수입보조 및 장애급여 수급자 상태에 머물게 됨
- ❍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표 5>에서와 같이 Work Programme에 참여하는 시기 및 참여의 유무에 차이가 나게 되어, Jobcentre Plus 상담사와의 상담과 실업관련 급여에 따라서 프로그램 참가가 의무적이거나 선택적
  - 이러한 참여자는 프로그램의 참여의 시점에 따라서 각종 급여를 받게 되는 조건이 되어, 이러한 급여 자격은 Work Programme 운영 위탁기관이 참여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표 3-6> Work Programme 참여그룹

	수급 형태	참여자 그룹	위탁 시점	참여 선택
1	구직자 수당 수급자	15~24세	9개월	의무
2		25세 이상	12개월	의무
3		노동시장 참여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그룹, 최근 장애 급여 수급자 포함	3개월	일부는 의무 일부는 자발적
4	지원	활성화 그룹에 관련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적정한 일자리가 가까운 때	의무
5		모든 수급자	적정한 때	자발
6	수입 지원 및 장애 급여 수급자	모두	적정한 때	자발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1)

□ Work Programme 내용

❍ 과거의 영국 고용복지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의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으나, Work Programme은 위탁기관에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보다 더 큰 유연성을 확대하여 그들의 경험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특성이 무시되고 획일화된 서비스(one-size-fits-all service)를 지양하고 다양한 참여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정부에게는 지역의 노동시장의 특성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권을 보장

❍ 이 프로그램의 위탁 비용의 단가 구성은 위탁기관이 서비스 제공의 주요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Work Programme의 단가 구성은 고용 유지에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

❍ 고용유지비(sustainment payment) 참여자가 취업하여 매 4주 동안 고용을 유지할 때마다 기관은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불 기간은 참여자가 얼마나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참여하지 못하였는가에 따라서 1년, 18개월, 2년으로 각각 인센티브가 다르게 제공

- 이러한 고용유지비가 민간위탁 단가의 가장 큰 인센티브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관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
- 단지 직업알선을 통한 취업에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다양한 직업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직업능력을 키워나가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서비스 취지

❍ 아래의 표는 영국 다섯 곳의 지역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인 A4E의 간략한 서비스 내용으로 취업관련 고용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건강, 가정문제 등의 복지서비스 등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

<표 3-7> A4E의 Minimum Service Delivery

주요서비스	세부내용
완전한 접근 서비스	대중교통으로 35-45분에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
개인 사정 및 계획	모든 고객은 맞춤형 취업능력에 대한 사정을 받게 되며, action plan을 작성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재점검
건강지원	우리는 근로에 지장이 없는지 건강 검진 전문가를 통하여 검진을 받게 하고, 취업계획에 맞게 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1:1 서비스	최소한 한 달에 한번씩 1:1 상담가와 상담하면서 다양한 필요에 맞는 맞춤형 계획
고객강화 및 근로윤리	초기에 기관에 연관될 때 근로 중심 활동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고, ‘job first’를 통하여 근로습관들을 개발
적적한 기술 습득	직업기초훈련 및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등에 참여
활동의 변경	프로그램에 참여중 개인에게 발전이 없을 때 활동을 변경
인센티브	고객이 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에 잘 도달하게 될 때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
통합적 지원	다양한 기관에 연계되어 고객의 다양한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가정 서비스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
피드백	고객은 어느 시점에나 서비스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7일 안에 기관에서는 답변

자료: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해외사례연구(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연구센터(2010)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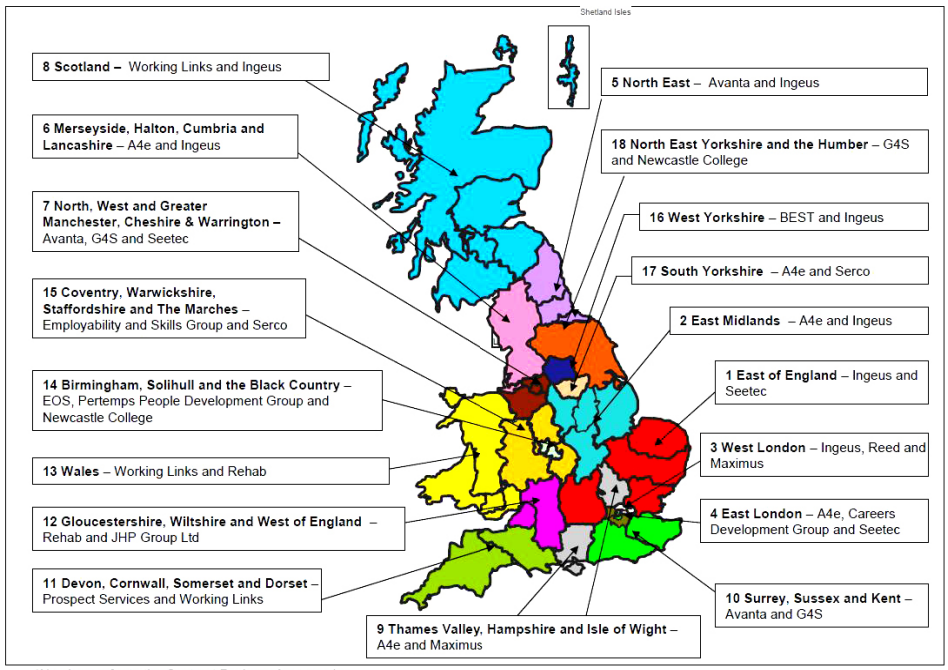
□ 서비스 전달체계

❍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인 Jobcentre Plus는 Work Programme의 대상자 선정과 위탁기관에 이관하는 업무를 맡게 되고, 위탁 기관들은 지역에서 이관 받아 참여자에 필요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관련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

❍ Work Programme은 주계약자 제도를 도입하여 18개의 주계약자 민간위탁 기관이 위탁 받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Work Programme에서는 기존의 고용복지 프로그램 민간위탁에 민간 영리기관 중심에서 새롭게 비영리 기관과 공공 영역의 기관이 민간위탁 시장에 진입

- 주요계약기관 신청자격은 다음 두 요건을 충족하는 영리·비영리단체 모두에게 주어짐
  - ① 해당 권역의 워크프로그램을 관할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규모(연 최소 2천만 파운드의 자금회전율)의 기관, ②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들과 광범위 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기관
  - 주요계약기관은 고용연금부와 계약을 체결함

<그림 3-3> 워크프로그램의 권역과 주요계약기관



*Numbers refer to the Contract Package Area number

❍ 영국의 18개 지역에서 두 개의 주계약자들이 선정되면, 각 주계약자들은 지역 내 소규모 직업소개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특수서비스 제공기관(심리치료,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하부계약자(sub-contractors)를 통한 체인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 주요계약기관은 관할 CPA의 실업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 워크프로그램 이전에는 일반실업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민자, 알코올중독자 등 집단별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분리되어 있고, 각 하부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는 민간단체도 특화되어 있었음

- 워크프로그램에서는 Jobcentre Plus가 실업자들의 기초면담만 하고, 모든 유형의 실업자를 주요계약기관에 보내고, 주요계약기관은 실업자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재활, 심리치료, 자원봉사, 직업훈련, 구직서비스를 연계
- 이는 Jobcentre Plus의 레드테이프(red tape)를 줄이고, 각 실업자에게 적합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
- 주요계약기관은 실업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로 실업자를 관리·배치하는 역할을 수행

❍ 모든 주계약자들은 작지만 전문적이고 지역의 기관으로 구성된 체인망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

- 이러한 체인망의 보조 계약자 기관에는 1,0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500개는 비영리기관이고, 나머지는 중소의 민간기관으로 구성

2. 호주

□ 사업개요

❍ 호주는 2009년 7월 1일에 새로운 고용서비스인 'Job Services Australia'를 시작

❍ Job Services Australia는 4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잡 네트워크(기존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지원과 견습제도, 직업교육, 훈련, 주 및 지역정부의 고용과 훈련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추구

- Job Services Australia는 개인이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

□ 사업특징

❍ 기존의 고용서비스로는 증가하는 실업률과 기술부족의 확대, 취약계층과 장기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성장 둔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금융위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부양적 조치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노동시장을 지원

❍ Job Services Australia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가장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확대
- 더욱 더 사회적인 참여를 확대
- 고용 참여를 향상
- 인력의 생산성 제고
- 기술이 부족한 영역에 대처
- 고용주의 필요를 충족

□ Job Service Australia 구조

❍ Job Service Australia는 4개의 유형으로, 크게 취업준비자(유형1)와 취약계층 구직자(유형2~4)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유형은 구직자유형분류체계(JSCI: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와 직업능력평가(JSC: Job Capacity Assessment)에 의해서 평가되어 분류
- 각 유형의 서비스 수준은 구직자의 구직 준비정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 비용과 실적지원금은 유형1에서 4로 갈수록 증가

❍ 유형1의 구직자들은 즉시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유형으로 국가취업정보망(AJS: Australia Job Search)을 이용하여 취업알선을 제공받고, 이력서 작성 지원,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주요 서비스 내용

❍ 유형2, 3, 4의 구직자는 유형1보다 더 취업이 어려운 상태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할 대상으로, 이 유형의 구직자는 구직경로계획(Employment Pathway Plan)을 수립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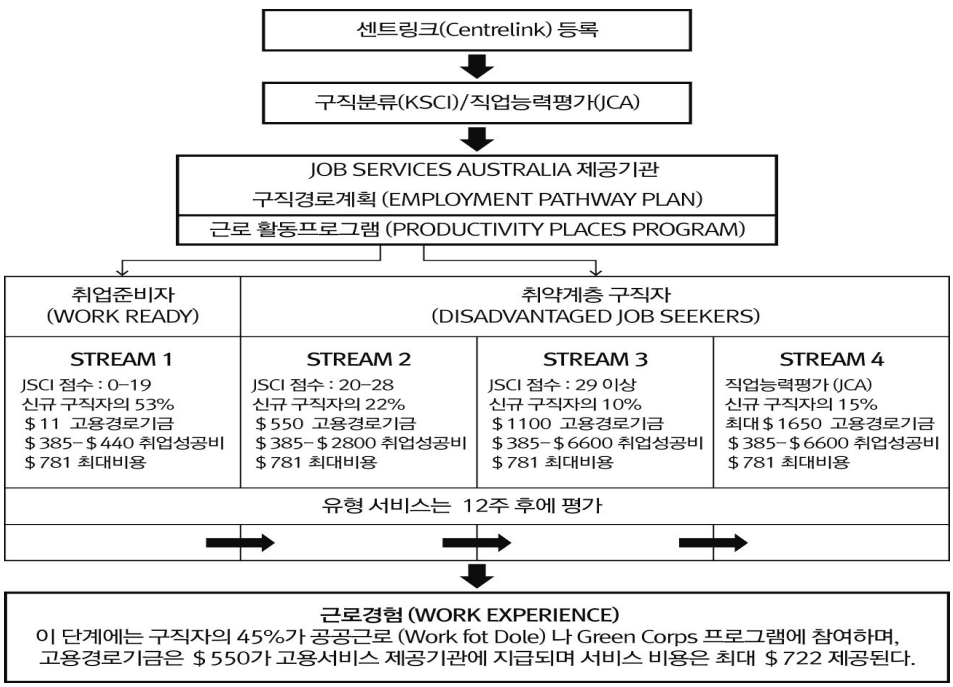
❍ 유형 2, 3에 해당되는 구직자는 개인별 맞춤지원을 1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받으며, 유형 4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18개월 동안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받음

- 해당 기간 내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받거나 다른 근로체험활동을 수행

❍ 근로 경험(Work Experience)의 단계는 각 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데, 18세에서 49세까지 12개월 안에 26주 이상 참여가 요구되며, 각 유형1에서 4까지에서 12개월을 마친 구직자는 각 유형의 서비스의 평가(review)에 따라서 이 단계를 시작함

- 이 평가에서 이 단계가 제안되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의 유형으로 이동하거나, 유형4에 포함됨
- 유형 4에서 18개월이 지난 구직자는 자동적으로 근로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공공근로(Work for the Dole), Green Corps, Droughtforce, 파트타임 학습, 임시직이 포함됨

<그림 3-4> Job Service Australia, 2009~2012 서비스 개요



3. 독일

□ 독일 고용서비스 혁신

❍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종종 “유럽의 병자(the sick man of Europe)”로 불릴 정도로 경제사회적 상황이 좋지 못했으며, 실제 독일의 연평균 경제성장은 1998년에서 2005년 동안 불과 1.2%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업률은 1998년에 9.2%에서 2005년에 11.1%까지 치솟음

- 이는 1970년대 오일쇼크 등에 의한 노동시장 충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관대한 복지정책에 따른 구조적 어려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독일 통일에 따른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은 하르츠 개혁(Hartz reforms, 2002~2005) 등의 광범위한 노동시장제도 개혁을 실행하고, 이후 2008~09년의 대불황 시기에 놀라울 정도의 안정적인 고용성과를 보임으로써 OECD 등으로부터 “고용시장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음

❍ 독일 고용서비스 혁신의 주요 역사는 다음과 같음

- 1927년, 실업보험 도입 및 고용알선·실업보험청 설립, 그 일선 조직으로 전국적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설치 및 운영
- 1952년, 고용알선·실업보험청을 연방고용알선·실업보험청으로 개칭
- 1967년, 실업보험법을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으로 전면개정, 실업보험을 고용보험으로 전환, 연방고용알선·실업보험청을 연방고 용청(Bundesanstalt für Arbeit: BA)으로 개칭(소극적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전반을 관장)
- 1998년, 고용촉진법 폐지, 대산“ 사회법전 제3권-노동촉진(SGB III-Arbeitförderung)”으로 대체. 주요내용으로 실업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책임 강조,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정예산의 10% 자율집행 등
- 2002년, 이른바 “알선스캔들”(연방고용청의 알선통계조작사건)로 하르츠 개혁 착수

- 2004년, 연방고용청을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 BA)으로 변경
- 2005년, 기존의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실업급여II로 대체

❍ 독일이 이처럼 대대적인 고용서비스 혁신을 추진한 데는 단순히 “알선스캔들”과 같은 우발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제기된 독일 공공고용서비스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

- 첫째, 연방고용공단의 거버넌스와 내부관리구조가 실업자들의 재통합 및 알선취업 등과 관련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음
- 둘째, 연방고용공단이 관리하는 실업부조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부조 간의분리로 금융상의 부담을 주는 수급자를 서로 떠넘기려 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의 고용복지서비스 전달 상 부조화의 문제를 초래
- 셋째, 이처럼 실업자를 세 집단(실업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으로 분리하는 구조 속에서 전체적인 비효율성이 증가
- 이러한 요소들 외에 2000년대 초의 악화하는 경제적 상황, 특히 OECD 평균 이상의 높은 실업률과 미래 독일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관적 전망은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도록 압박

□ 독일의 급여프로그램 및 전달체계의 혁신

❍ 독일의 사회보장체계는 실업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 세 체계는 하르츠 개혁으로 실업보험은 “실업급여I”으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는 통합되어 “실업급여II”로 재편됨

- 실업급여 II는 근로능력이 있는 과거의 실업부조 또는 사회부조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체계적인 취업상담 및 알선을 강화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수급자격조건의 엄격화)

❍ 주로 단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I은 연방고용공단(지역고용사무소)가 담당하고 장기실업자를 담당하는 실업급여II는 연방고용공단과 지방정부가 함께 개입

<표 3-8> 실업급여Ⅰ 및 실업급여Ⅱ의 비교

	실업급여Ⅰ	실업급여Ⅱ
법 규정	사회법전 제3권(SGB Ⅲ)	사회법전 제2권(SGB Ⅱ)
대상 집단	단기실업자	근로능력이 있고 빈곤한 자, 수급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급여	실업급여Ⅰ	실업급여Ⅱ, 사회급여
재원	강제적 사회보험 기여금, 부족시 연방정부 보조	연방재정 - 급여와 능동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 - 주거·난방비용의 일부부담
관리	연방고용공단(BA), 본부 및 지방고용공단과 지역고용 사무소	Jobcenter(구 A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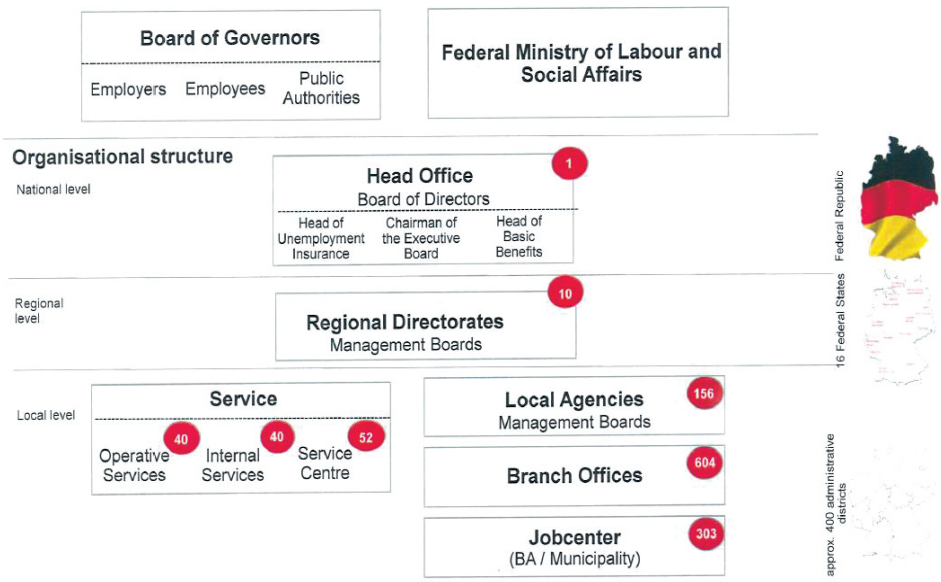
자료: 유길상 외(2011)

❍ 2005년 하르츠 개혁(하르츠 법 IV :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의 통합, 즉 실업급여 II)에 따른 새로운 관리조직 세 가지가 등장

- ① 업무공동체형 ARGE(Arbeitsgemeinschaft): 약 350개(75%)
  - 연방고용공단 산하 지역고용사무소와 지방정부 공동운영(컨소시엄)
  - 2007년, 12월 연방헌법재판소의 ARGE위헌 판결(지방고유사무를 침해할 수 없다)
  - 결국, 2010.7.21. 헌법개정에 의해 현행 체제 유지
- 지방관할옵션형(Optionskommunen): 약 110개(25%)
  - 69개의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ARGE
- ③ 분리관할형(Getrente Traegerschaft)
  - 23개 지역에서 지역고용사무소와 지방정부가 장기실업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제를 유지했으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2년 폐지
  - 결국, 현재 고용복지사무를 담당하는 형태는 두 개만 남음

❍ 한편, 사회법전II는 2011년 1월 이후 실업급여II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명칭을 “Jobcenter”로 부르도록 통일시켰으며, 형식상 여전히 ARGE를 쓰기도 하지만 현재 독일에서 공식명칭은 “Jobcenter”로 통일

<그림 3-5> 독일연방고용공단 구조



❍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 BA)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취업알선, 고용보험, 실업부조 등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연방노동사회부로부터 감독과 통제를 받긴 하나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법인체로 독자적 법인격을 가지며, 노사정(각각 7인씩 총 21명)이 공동운영방식으로 고용 복지서비스 제공

- 연방고용공단 본부 하부조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청에 해당하는 10개의 지역공단과 178개의 지역고용사무소(Argentur für Arbeit: AA), 660여개의 출장소(급여는 담당하지 않고 취업, 상담만 담당) 거느림
- 연방고용공단의 정원은 약 11만 명으로 본부에 93천여명(공무원 26%, 민간인 74%), 지역고용사무소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최소 150명에서 최대 1,000여명 근무, 전체 직원 중 상담 및 취업알선에 약 60%가량 종사
- 연간 사업 예산은 약 370억 유로(2010년)로 약 52조원

□ 하르츠(Hartz) 개혁

❍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Hartz 개혁의 핵심은 구직자 스스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며(activate),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qualify), 직업능력이 취약한 구직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며(train), 취약계층이 사회보장급여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invest),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place into jobs)에 역점을 둠

- 이러한 전략에 따라 Hartz 법은 종전의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실업부조와 공적부조를 통합하여 실업급여Ⅱ로 명명하면서 종전의 실업부조 수급자와 공적부조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도 중단하는 상호의무를 강화

❍ 또한 연방고용청의 관료적 성격을 불식하고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의 명칭을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ur Arbeit)으로 개편

- 연방고용공단은 종전의 연방고용청의 공무원과 민간인의 혼합 조직에서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공적 법인체로서 철저하게 서비스의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에따라 임직원의 보수와 고용이 영향을 받도록 함

❍ 연방고용공단의 행정적인 업무를 통폐합하여 직원 17,000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원하는 대신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에 역량을 집중 하도록 함

- 이를 위해 너무 복잡해진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25%이상 통합하여 단순화 하도록 하여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집행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청년층의 학교나 직업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

- 또한 직업훈련 바우처제도를 확대하여 모든 취업알선 및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하여 바우처제도를 확대
- 민간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는 모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기관은 그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품질에 대하여 인증을 받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

□ 맞춤형 고용서비스 내용

❍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는 대학교수와 같이 개별적으로 개인사무실을 배정받아 한 사람의 구직자에 대하여 전담 관리자로서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최초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선 고용사무소를 방문하면 고용센터 1층의 reception desk에서 안내를 받아 초기 상담을 받게 되며, 초기 상담 과정에서 실업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장기실업의 위험성을 진단받고,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구인정보를 검색하고 스스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안내를 받게 됨

- 그러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직자는 전문 관리자에게 배정되며, 배정받은 구직자와 심층 면담을 하고, 이를 통해 구직자가 안고 있는 취업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직업수행능력을 판단하여 미래의 희망직업과 취업을 위한 전략을 수립
-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자와 구직자 간에는 상호의무협약(Integ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는데, 상호의무협약은 사례관리자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지원하게 될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하고 구직자도 사례관리자의 지원을 받아 성실히 노력할 것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대로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이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서 구직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

❍ 관리자는 구직자의 취업장애요인에 따라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취업장애요인이 매우 복합적일 경우에는 다른 동료 관리자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

- 직업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알선하고 직업훈련바우처를 발급해 주며, 자신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와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제공
- 또한 구인정보와 구인자에 대한 서비스를 전담하는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찾고 있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담당하고 있는 구직자를 취업시킬만한 일자리가 있는지를 탐색하여 구직자에게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일자리가 원하는 역량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진단하여 필요한 맞춤형훈련을 직업훈련기관에 의뢰

4. 스웨덴

1) J&D 프로그램(Job and Development Programme)

□ 사업개요

❍ J&D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정부가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서 구직자가 공공고용사무소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면 고용서비스기관이 취업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구직자가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 J&D 프로그램은 1단계(150일), 2단계(300일), 3단계(최대 2년)로 구성되어 있고, 실업급여를 소진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75일 이상 단시간근로를 한 부모 구직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18개월 이상 계속해서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 Youth Job Programme에 15개월 이상 참가하고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실업자, 출소자, 질병이 있으

면서 최대 550일의 질병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 J&D 프로그램 구조

❍ J&D 프로그램의 구조는 고용서비스공단의 일선 고용사무소가 고용사무소를 방문한 개별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취업장애요인 등을 진단하고 평가한후 위에서 언급한 취업취약계층을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훈련기관, 기타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을 해결하게 하는 맞춤식 고용서비스를 지향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상담과정에서 구직자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해 구직자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붙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공공고용사무소에 요청하고,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훈련 필요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훈련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에 훈련을 의뢰하고 훈련비용을 지원

❍ 취업취약계층 중에 약 70%는 직업훈련을 수강하지않고 취업을 하고 있으며 약 30%의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있음

-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적으로 단기훈련(1주일~1개월)이 많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훈련
- J&D 프로그램의 민간위탁은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2회 연장하여 총 18개월까지 J&D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J&D 프로그램의 민간위탁 비용지불 체계를 보면, 1인당 6개월간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3,600크로나를 지급하고 있는데, 1단계로 전체 비용의 45%를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2단계로 취업 시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3단계로 6개월 이상 전시간 근로의 일자리(full time job)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유지에 대한 성과급으로 나머지 45%를 지급

- 따라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위탁받은 구직자를 취업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착수금 45%만 지급받게 되고 성과급에 해당하는 전체 비용의 55%는 받지 못하는 구조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조기에 구직자를 취업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
- 그러나 6개월 고용 유지 시 고용 유지 성과급 45%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취약한 장기실업자의 고용 유지 적정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왜냐하면 취업취약계층은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더라도 다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
- 이에 따라 제4단계로 고용 유지 기간을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추가성과급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2) 기타 노동시장 프로그램

□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Job youth programme)

❍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job youth programme)은 고용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16～25세 청년실업자로서 구직등록 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질병휴가 후 working life introduction programme에 참가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출감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에서는 3개월간은 주로 컴퓨터를 통한 일자리 탐색을 수행하고, 이 기간 동안 적합한 일자리 탐색과 코칭을 받음
- 이후 15개월간은 보다 심층적인 일자리 탐색과 취업 가능성 등을 탐색하는 지도를 받는데, 각종 구직관련 활동과 함께 최소한 주당 4시간의 일자리 탐색이 의무화되어 있음
- 프로그램은 일자리 경험(최대 3개월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최대 6개월간), 창업(최대 6개월간) 등을 포함

□ 뉴스타트(New Start)

❍ 뉴스타트(New start) 프로그램은 청년층과 장기실업자, 그리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임금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서비스 프로그램

❍ 20세에서 25세의 청년층과 55세 이상 고령자는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가 대상이고, 26세에서 54세까지의 연령대는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프로그램 대상

❍ 또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 병가 등에 의해 휴직을 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가지며, 입국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법적인 이민자와 그 가족들도 이 프로그램의 대상

❍ 지원방식은 고용주에게 세금감면 형식으로 구체화되므로, 고용주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임금 지원 대상은 모든 고용주가 해당되며 전일제나 시간제도 가능하고, 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안정기관은 취업 전에 해당자의 임금지원 여부를 알려주어야 함
- 지원받는 금액은 프로그램 시작 연도에 25세 이하인 청년층은 현재 31.42%인 소득세 전액이고, 26세 이상은 소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26세 이상은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5세 이하 청년층은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상은 근로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나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65세 이후에는 지원되지 않음

□ 기타 프로그램

❍ 그 밖에도 실업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본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취업기술교육(employment skills education), 장기실업자에게 6개월간 근로경험을 쌓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고용주와 맞춤형 훈련을 수강하게 하면서 직업에 대한 기본 태도를 함양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직업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근로경험프로그램(work experience) 등이 있음

- 근로경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임금지급이나 고용보조금의 지급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산재환자에 대한 직업재활과 취업을 지원하는 preparatory programme, 장기 질병휴가 이후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working life introduction, 창업지원 등이 있음

❍ 모든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첫 3개월 동안에는 셀프서비스, 구직자의 경험과 능력에 대한 평가, 적합한 일자리와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등으로 이루어짐

❍ 3개월 이후 15개월 동안에는 구직자의 경험과 취업 가능한 직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 적합한 일과 직업훈련에 대한 심층 상담, 코칭을 동반한 구직활동, 최대 3개월간의 직업훈련과 일자리경험 프로그램 참가, 최대 6개월간의 직업훈련,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자영업 창업지원,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각각의 활동은 최소한 1주 4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함

5. 핀란드

□ 사업개요

❍ 핀란드에서는 단기실업자와 장기실업자에 대한 능동화 정책이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능동화 정책은 주로 장기실업자 혹은 복합적인 고용 장애요인들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함

- 단기실업자의 경우에는 지역고용·경제개발사무소에서 노동시장정보와 구직스킬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는 소위 LAFOS라는 고용서비스 센터에서 별도의 능동화 서비스를 받게 됨

❍ 핀란드에서 능동화 정책의 실행은 PES, Kela(사회보험기관),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PES와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긴밀한 협력은 능동화 전략의 핵심요소

- 이는 능동화 정책의 주된 대상인 장기실업자는 지역 고용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 고용서비스센터 네트워크 LAFOS

❍ 핀란드에서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협력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 바로 LAFOS라는 네트워크 조직(Fuller, 2011; Karjalainen and Saikku, 2011)으로 LAFOS는 가장 직장을 구하기 힘든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고용서비스센터 네트워크

❍ LAFOS 네트워크의 구축은 핀란드 PES 서비스 모형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졌고,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관련 공공 서비스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에서 비롯

-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LAFOS 네트워크 모형은 장기실업자 대상의 고용서비스를 주로 민간 서비스기관에 위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음

❍ LAFOS 서비스의 개념은 지역 고용·경제개발사무소, 지자체의 사회복지 및 보건사무소, Kela 지역사무소 등 파트너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음

❍ LAFOS 모형에서 고용서비스는 고용·경제개발사무소, 복지 및 보건서비스는 지자체의 해당 부서, 사회보험 관련 서비스는 Kela 사무소의 직원들이 공동의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

- 아울러 모든 파트너 기관의 직원들이 개별 고객에 대해 두 명이 한 팀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개별 고객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LAFOS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서비스 단위는 지역적인 수준에서 운영되며, 개별 LAFOS 단위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고용·경제개발사무소와 지자체를 포함

- 2010년 기준 핀란드 전국에 39개의 LAFOS 단위가 구축되어 있고, 여기에 40개의 고용·경제개발사무소와 138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

❍ LAFOS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총 600명이며, 한 개 LAFOS 단위당 평균적으로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LAFOS는 주로 구조적 실업이 심각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

□ 파트너십 내용

❍ LAFOS 협력기관들의 직원은 같은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하나의 전문적인 팀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9> LAFOS 협력기관과 서비스의 범위

협력기관	역할과 서비스 내용
지역 PES 사무소	지역 PES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고용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시행 - 일자리 중개 및 취업 알선 서비스 - 경력개발 지도 및 지원 - 경력 상담 및 노동시장 정보 - 노동시장훈련 - 고용보조금과 훈련생 제도 - 기술과 근로능력 구축 - 의료 상담
지자체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	- 지자체의 보건 의료 서비스 -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 지자체의 소득보조
사회보험기관 (Kela)	Kela는 노동시장 및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수당을 지급함. - 노동시장 보조금,기초실업수당,훈련 보조금 - 의료 지출비용 환불,질병수당 - 개인과 집단 재활,재활수당 - 은퇴급여

자료: Fuller(2011).

❍ 복합적인 전문 팀에는 고용상담사, 사회복지사, 보건 서비스 전문가 등이 포함
- 더 큰 LAFOS 단위에는 간호사도 포함되지만, 더 작은 단위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외부에 위탁
- 실제 운영 모형, 서비스의 범위, 중점적인 활동은 각각의 LAFOS 단위가 지역적 특성, 고객 수,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LAFOS의 고객이 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가 여부이며, 지역 PES 사무소는 고용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고객을 LAFOS에 위탁
- 지자체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PES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을 LAFOS에 위탁
- Kela 기관도 주도적으로 LAFOS에 고객을 위탁할 수 있으며, 고객들 또한 스스로 LAFOS 서비스에 접근할 수도 있음

<표 3-10> 2010년 기준 LAFOS 서비스 위탁 현황

협력기관	위탁 고객 수	%
지역 PES 사무소	5,676	64.9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	2,052	23.4
Kela	5	0.1
고객의 직접 방문	572	4.3
기타	676	7.4
계	8,752	100

자료: 핀란드 고용경제부(MoEE)의 LAFOS 자료; Fuller(2011).

□ 고용서비스 구조

❍ LAFOS의 개별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과정은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지며, 물론 개별 고객에게 이 세 가지 서비스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고, 한두 단계의 서비스만 적용

- 이러한 LAFOS의 전반적인 서비스 과정은 통상적으로 최대 2-3년까지 진행되기도 하는데, 만일 이 기간 동안에도 취업에의 전망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해당 고객은 지자체가 관장하는 사회 및 보 건 의료 서비스로 돌려 보내짐
- 고객과 LAFOS와의 관계가 종료되면, LAFOS는 어떤 협력기관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함
- 또한 LAFOS는 그 협력기관에게 그동안 고객에게 제공되었던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

<표 3-11> LAFOS 서비스 과정

서비스	수단
진단	서비스 욕구의 진단, 의료, 재활 욕구 조사, 개별 고용/능동화 계획의 개발
재활 및 지도	재활활동, 지도 및 지원
훈련 및 고용	고용보조금, 훈련생 등 고용 조치, 훈련활동, 기타 적극적 고용 조치

자료: 핀란드 고용경제부(MoEE)의 LAFOS 자료; Fuller(2011).

6. 미국

□ 사업개요

❍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개인 책임 및 고용기회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을 제정하여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던 AFDC(Aids for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폐지하고, 한시적 빈곤 지원 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를 도입(1997.7월부터 시행)

❍ TANF는 “부양가족을 둔 빈곤가정”에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을 통한 빈곤탈출을 목표로 AFDC와 달리 획일적인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급여 기간을 제한하며 취업의무를 부여하는 등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인

❍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TANF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소요예산도 포괄적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수급요건의 설정, 지원금액, 전달 체계 등 실제 제도 운영은 주정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과 책임을 부여

❍ TANF에서 강조하는 “근로 연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급자에게 엄격한 근로의무를 부여 : 성인수급자는 수급개시 후 2년 이내 주당 35시간(한부모 가정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해야 하며, 연방정부 는 이와 관련하여 주정부에게 다음의 “근로 참여율” 기준을 할당하고 이를 충족치 못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 부여
  - 근로참여율 기준: 전체 수급자 가정(1명이라도 근로능력자 보유)의 50% 이상이 주 30시간(6세미만의 편부모는 20시간) 이상 일자리 취득을 위한 근로 관련 활동(12가지)에 참여
  - 취업, 일경험, 잡트레이닝,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 9개 핵심활동과 구직관련 교육 등 3개 비핵심활동(주당 20시간 이상 핵심활동에 참여해야 함)
  - 양부모 가정의 90% 이상이 주당 35시간(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아동보호를 받는 가정은 주당 55시간) 이상 근로제공
-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급여삭감, 수급제한 등 제제를 받음
- 생애기간 동안 최대 60개월(일부 주는 이보다 낮게 규정)까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간 제한
- TANF는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 취업을 통해 복지수급 대상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Medicaid), 아동보호비용 등을 지원

❍ 한편, 미국은 1975년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 유인 제도로 근로소득세액보전제도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시행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

❍ EITC는 저소득 또는 중위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환급제도로 신청자의 소득수준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짐(2013년 3자녀 이상의 경우 최대 $6,044까지 환급)

❍ EITC는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이 복지 급여만 받는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계되어 있어 TANF 수급자들의 일을 통한 복지탈피 유인을 제공

□ TANF 구조

❍ TANF는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ACF)에서 총괄하고, 주정부(일부 주는 county 등에 위탁)가 운영(서비스는 주정부의 Welfare agency 등을 통해 제공)

- 주정부는 TANF 운영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 실제 운영은 주나 지역 정부에 따라 다양

❍ 일반적으로 TANF의 수급자격 판단, 현금 및 복지급여 지급 등의 업무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제공되나,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단, 고용서비스 제공 및 근로 활동 관리 등 고용 관련 업무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주나 지역 정부에 따라 다양

❍ 특히, 모든 고용 관련 서비스를 One-stop Career Center를 통해 제공토록 하는 1998년 제정된 인력투자법(WIA: Workforce Investment Act)과의 관계 및 협력(coordination)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중요

❍ WIA의 One-stop Career Center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에 TANF는 제외(선택사항)10) 되어 있고, 개인 책임 및 고용기회법(PRWORA)도 TANF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WIA를 통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대다수의 주나 지역 정부는 과거 AFDC 운영에 따른 오랜 타성 또는 인력 및 공간 부족, 민원 접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두 서비스를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Texas, Florida and Utah 등과 같이 두 개의 전달체계를 통합·운영하거나 TANF와 고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일부 주 또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Texas 주의 Choices(TANF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 사례

❍ Texas의 TWA(Texas Workforce Commission) 및 28개 LWDC(Local Workforce Development Board)는 “고용 우선”의 독특한 TANF 전달체계를 운영

❍ 즉, Texas Department of Human Service는 일차적으로 TANF 수급자격 및 근로능력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텍사스 전역의 약 270여개의 WSO(Workforce Solution Office)를 통해 제공

❍ 수급자는 TANF 신청에서 지원 전 단계에 거쳐 끊임없이 “정부지원은 한시적으로 가족부양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취업이 최종 목적”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음

❍ TANF 수급 신청자는 WSO에 등록하고, TANF 수급자를 위한 고용 훈련 프로그램인 Choice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이를 거부시 수급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음

❍ Choices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수급 신청자는 첫 단계로 WOA(Workforce Orientation for Application)을 통해 WSO에서 제공하는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소개받음
- 수급자로 선정되면 EPS(Employment Planning Session)에 참여하여 가족을 포함하여 취업능력 등을 심층으로 평가받아 가족 고용계획인 FEB(Family Employment Plan)를 수립
- FEB에 따라 근로활동에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TANF 수급자 에게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중단
- Choices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Child Care, 교통지원, 일 또는 자격증 관련 비용,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등 지원

- 취업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Post Employment Service(Child Care, 교통비, 일 관련 비용 지원, 직업탐색, 전직 및 Job Development 서비스, 교육 또는 직업훈련, 경력 관리 및 상담, 멘토링 등) 제공

7. 일본(헬로우 워크)

□ 사업개요

❍ 일본에서 복지와 고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이 담당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 설치법 23조에 의거하여 공공 직업 소개소(헬로우 워크)가 설치

❍ 일본의 공공직업안정소인 헬로우 워크(Hello Work, ハローワーク)는 고용안정서비스의 대민 접촉 창구이자 정부의 고용 및 노동시장정책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기관으로서 1979년 이래로 사업의 부문제(部門制) 도입과 사업인력에 대한 전문관제(專門官制) 실시

- 공공 직업 소개소인 헬로우 워크는 2013년도 기준 전국 544개(본소 437개, 출장소 94개, 분실 13개)가 있으며, 11,348명의 직원과 17,941명의 상담원이 있음

□ 헬로우 워크 구조

❍ 헬로우 워크의 소장사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성

- 첫째, 직업소개 관련 사무로 직업상담·소개업무, 구인접수·개척업무, 재취업 지원업무 등을 관장
- 둘째, 고용보험 관련 사무로 고용보험 적용, 실업인정·급부업무 등을 관장
- 셋째, 고용대책 관련 사무로 장애인·고령자 고용기업 지도업무, 조성금 업무 등을 관장

❍ 실업안정에 있어서는 재취업 의사가 의심스러운 자에 대하여 보험자인 정부가 직접 직업소개를 실시하고 진의를 엄격히 확인

❍ 또한, 비정규직 젊은이,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모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취업 실현에는 기업에 대한 지도·지원과 일체화된 직업소개 및 관련기관과 연계된 팀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구직자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책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까지 제공

<그림 3-6> 헬로우 워크의 기능



❍ 각지에 있는 헬로우 워크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노동국이 소관

- 각 지방노동국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 부국으로 나누어지며, 하나는 노동기준부로서 각 소할 내 '노동기준감독서'를 소관하고, 또 하나는 직업안정부로서 각 소관 내의 '공공 직업안정소'인 헬로우 워크를 소관
- 각 도도부현 노동국의 직업안정부는 후생노동성 직업안정부에 소관됨

❍ 각 도도부현의 직업안정부는 헬로우 워크 이외에도 '정보 플라자' 및 '워크 플라자'(이 두 가지는 정보단말 활용을 중시한 시설), '취업 서포트 센터' 및 '조기취업 지원센터'(카운슬링 기능 중시), 그리고 '인재은행'(주로 화이트

컬러를 대상으로 한 시설), ‘학생 종합 직업 지원센터’(학생 대상), ‘지방직업 지원센터’(U턴 학생 등 대상), ‘영(Young) 헬로우 워크’(30세 미만 젊은 층 대상),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외국인 노동자 대상), ‘일본계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일본계 노동자 대상), ‘커리어 교류 플라자’(중년, 고령자 이직자 대상), ‘비정규직 뱅크(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등, 대상별 기능별로 다양한 시설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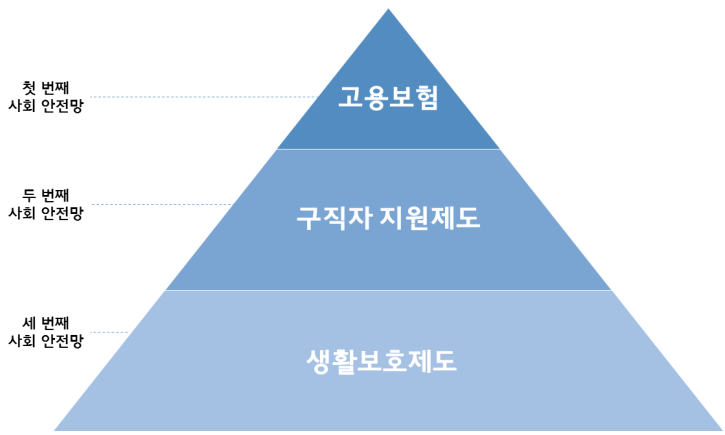
- 상기의 각 시설은 모두 헬로우 워크의 기능을 부문적으로 특화시켜 설치된 것으로 헬로우 워크는 이러한 전문시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고용 서비스 대규모 종합체로 이해됨

❍ 또한 각지의 헬로우 워크는 지역의 복지시설 이용자를 비롯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개인에 대하여 복지시설 직원과 헬로우 워크 직원(중심적으로 담당)이 팀을 결성하여 취업에서 직장정착까지 일관된 지원을 실시(2006년)

□ 헬로우 워크의 사회 안전망

❍ 헬로우 워크가 실시하는 사회 안전망은 세 가지로 주로 고용보험, 구직자 지원제도 및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지원으로 구성

<그림 3-7> 헬로우 워크의 사회 안전망



❍ 헬로우 워크에서는 일하는 희망을 갖는 젊은이·여성·고령자·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취업실현을 지원, 구직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 부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

- 노동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증에 대해서는 그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헬로우 워크가 주체가 된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헬로우 워크와 복지 사무소 연계를 강화

❍ 2013년도에 창설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 자립촉진 사업'은 헬로우 워크와 지자체의 협정 등에 의한 연계를 기반으로 세분화된 팀 지원을 함으로써 기존의 '복지에서부터 취업' 지원사업을 발전시켜 복지 사무소에 헬로우 워크 창구를 설치하거나 순회상담을 실시하는 등, 헬로우 워크와 지자체가 일체화된 취업지원 체제를 강화

<표 3-12> '복지에서부터 취업' 지원사업의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지원대상자 수	2.1만명	4.5만명	6.4만명
취업자 수	1.3만명	2.5만명	4만명

8. 프랑스, 세대간 계약

□ 사업개요

❍ 세대간 계약은 2012년 5월 당선된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고용분야 핵심 고약 사항 가운데 하나로, 당선 후 전국단위 노사 합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에 근거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2013년 2월 상·하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

❍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한편으로 만 26세 미만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57세 이상의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혹은 55세 이상 고령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 한건의 청년구직자 정규직 신규채용과 한건의 기존 고령노동자의 일자리 유지를 한쌍으로 하여, 각 일자리별로 연간 2,000유로(세대간 계약 한쌍당 연간 4,000유로)의 보조금을 최장 3년간 지급(총 12,000유로)

❍ 보조금 지급이라는 지원 방법과 더불어, 기업별 혹은 부문별 단체협상을 통해 청년고용, 고령층 고용유지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강압 방법을 동시에 사용

□ 세대간 계약 구조

❍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노사단체협상의무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

- 종업원 50명 이하의 기업
  - 단체협상의 의무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체협상을 통한 청년 고용 및 고령 일자리 유지목표치 제시의 의무는 없음
- 종업원 50인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
  - 단체협상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별 혹은 부문별 단체협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기업내 청년층 및 고령층 실태조사
    2) 청년 고용 확대와 고령층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사 단체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
    3) 합의에는 청년 신규고용 및 고령층 기존고용 유지에 관한 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청년 신규노동자들의 기업내 적응 및 노하우 전수를 용이하게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이 같은 단체협상 결과를 제시하거나 적어도 사용자가 단체협상 로드맵을 제출해야 하며, 단체 합의나 로드맵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
  - 보조금은 없으며 단체협상이 의무사항으로 부과됨

- 정해진 기간내에 단체협약을 도출하지 못했거나 기업주가 협상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엔 정부는 기업임금총액의 1% 혹은 총 세제감면혜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전체 기업수 대비 99.5%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기업에서 프랑스 근로자의 56%가 종사하고 있음

- 세대간 계약을 통해 청년 실업해소와 고령층 취업률 제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더불어 직장내 세대간 노하우 전수를 용이하게 하는데도 기여함으로써,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를 위한 상생전략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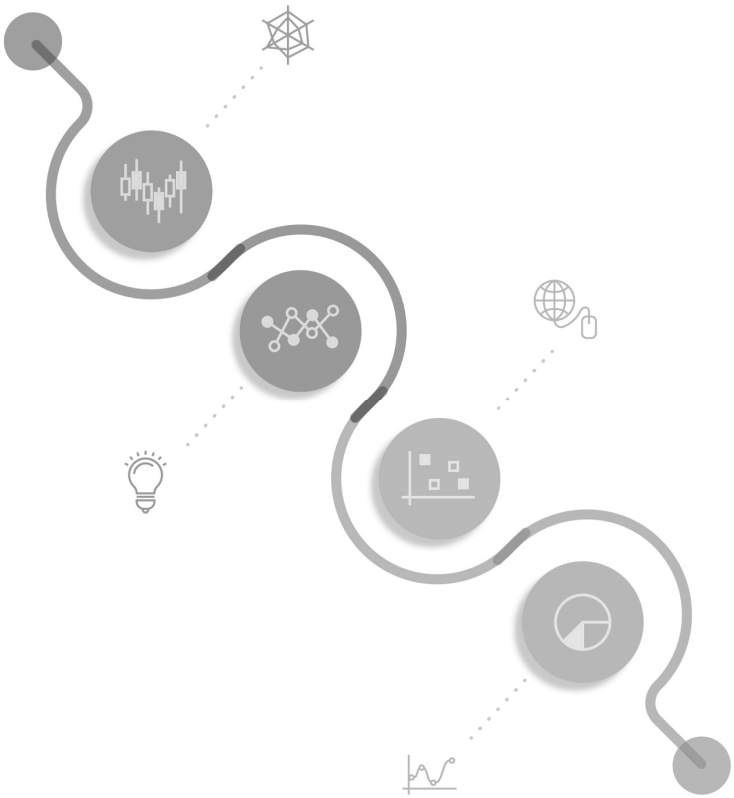
<표 3-13> 세대간 계약 현황(2014)

	50인 미만 기업	50-299인 기업	300 이상 기업
전체 기업수 대비 비중	98%	1.5%	0.5%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비중	41%	15%	44%

제4장
사업체 및 참여자 설문조사

제1절 사업체 설문조사

제2절 참여자 설문조사



제 4 장 사업체 및 참여자 설문조사

제1절 사업체 설문조사

1. 사업체 설문조사 설문개요

1) 설문조사 개요

❍ 충북 도민의 생활, 일자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충청북도가 도민서비스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사업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는 총 132개 업체로 업체 일반 현황, 사업장 이전 및 업종 변경 계획, 기업간 협력 및 네트워크 활용 실태, 인력 및 일자리 관리, 업황전망 및 기타 등에 대한 설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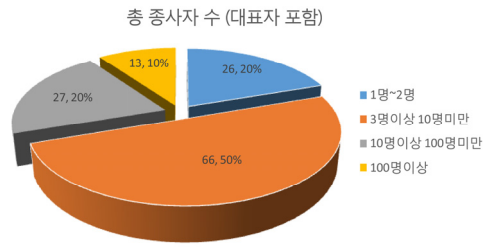
2) 인구통계 특성

☐ 총 종사자수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에서는 총 종사자수가 3명 이상 10명 미만인 업체가 50.0%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명 이상 100명 미만 20.5%, 1명~2명 19.7% 순으로 나타남

- 반면, 100명이상인 대규모 사업체는 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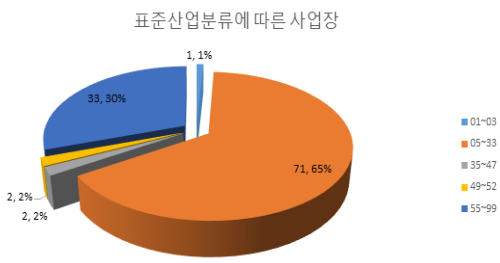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2명	26	19.7%
3명이상 10명미만	66	50.0%
10명이상 100명 미만	27	20.5%
100명이상	13	9.8%



☐ 표준산업분류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업종을 조사한 결과 '70. 연구개발업'이 20개 업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33. 기타 제품 제조업'이 16개 업체,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01~03	1	0.9%
05~33	71	65.1%
35~47	2	1.8%
49~52	2	1.8%
55~99	33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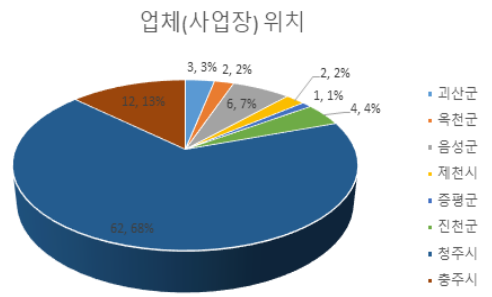


☐ 업체(사업장) 위치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에서는 사업체의 위치가 청주인 업체가 66.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주 13.0%, 음성 6.5%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사업장 위치로는 진천 4.3%, 괴산 3,3%, 옥천 2.2%, 제천 2.2%, 증평 1.1%, 청원 1.1%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괴산군	3	3.3%
옥천군	2	2.2%
음성군	6	6.5%
제천시	2	2.2%
증평군	1	1.1%
진천군	4	4.3%
청주시	62	66.3%
충주시	12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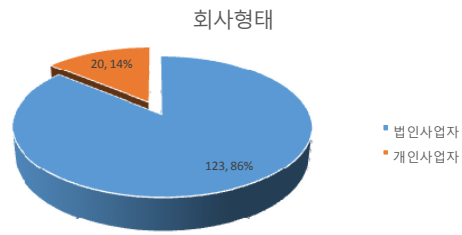
2.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업체 일반 현황

□ 일반현황 - 회사형태

❍ 사업체 회사형태에서는 법인사업자가 86.0%로 개인사업자 14.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법인사업자	123	86.0%
개인사업자	20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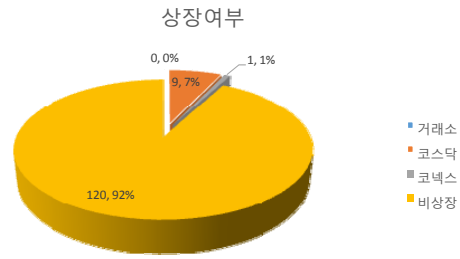


□ 상장여부

❍ 설문에 참여한 사업체는 비상장 기업이 92.3%로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닥 기업이 6.9%, 코넥스 기업이 0.8%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거래소의 경우는 0.0%으로 모든 사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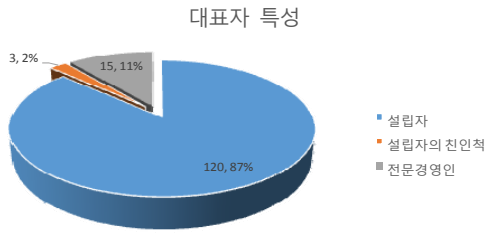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거래소	0	0.0%
코스닥	9	6.9%
코넥스	1	0.8%
비상장	120	92.3%



□ 대표자 특성

❍ 대표자 특성으로는 설립자가 87.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경영인 10.9%, 설립자의 친인척 2.2%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설립자	120	87.0%
설립자의 친인척	3	2.2%
전문경영인	15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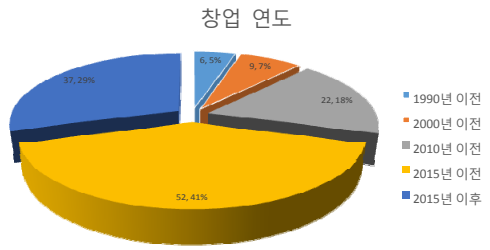


☐ 창업 연도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에서는 창업 연도가 2015년 이전 (2010~2014)이 41.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15년 이후 (2015~2017) 29.4%, 2010년 이전(2005~2009) 17.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창업 연도가 오래된 사업체는 2000년 이전 7.1% 과 1990년 이전 4.8%로 비교적 응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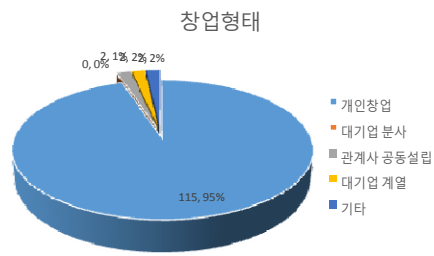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990년 이전	6	4.8%
2000년 이전	9	7.1%
2010년 이전	22	17.5%
2015년 이전	52	41.3%
2015년 이후	37	29.4%



☐ 창업 형태

❍ 창업 형태로는 개인 창업의 형태가 95.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관계사 공동설립, 대기업 계열, 기타가 각각 2%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개인창업	115	95.0%
대기업 분사	0	0.0%
관계사 공동설립	2	1.7%
대기업 계열	2	1.7%
기타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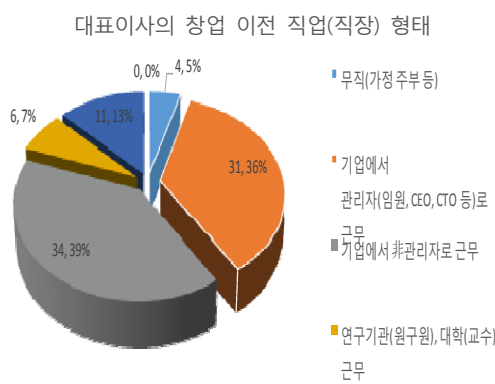


☐ 대표이사의 창업 이전 직업(직장) 형태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 대표이사의 이전 직업 형태의 경우 기업에서 非관리자로 근무가 3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업에서 관리자(임원, CEO, CTO 등)로 근무 36.0%, 대학(원)생 12.8%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연구기관(연구원), 대학(교수)근무의 경우 7.0%, 무직(가정 주부 등)의 경우가 4.7%로 적게 나타났으며, 기타(정부 및 공공기관, 의사 등 전문직종사자, 자영업 등)의 경우 0.0%로 모든 대표이사의 이전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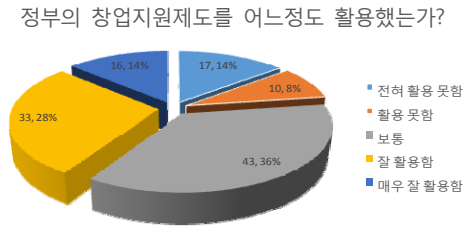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무직(가정 주부 등)	4	4.7%
기업에서 관리자(임원, CEO, CTO 등)로 근무	31	36.0%
기업에서 非관리자로 근무	34	39.5%
연구기관(원구원), 대학(교수)근무	6	7.0%
대학(원)학생	11	12.8%
기타(정부 및 공공기관, 의사 등 전문직종사자, 자영업 등)	0	0.0%



☐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한 정도

❍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활용 응답으로는 보통이 3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잘 활용함 27.7%, 전혀 활용 못함 14.3%, 매우 잘 활용함 13.4%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활용 못함	17	14.3%
활용 못함	10	8.4%
보통	43	36.1%
잘 활용함	33	27.7%
매우 잘 활용함	16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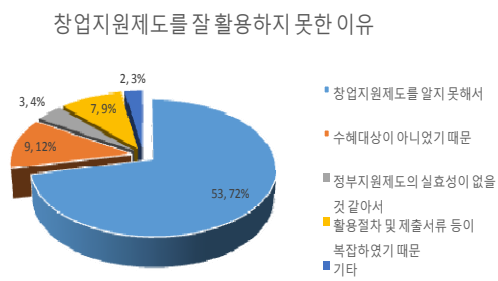


☐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

❍ 창업지원제도 활용 정도 설문에서 '활용 못함', '전혀 활용 못함'을 응답한 사업체가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창업지원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71.6%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수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12.2%, 활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복잡하였기 때문이 9.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정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4.1%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고, 기타 의견은 2.7%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임

항목	빈도수	비율
창업지원제도를 알지 못해서	53	71.6%
수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9	12.2%
정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3	4.1%
활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복잡하였기 때문	7	9.5%
기타	2	2.7%



2) 사업장 이전 및 업종 변경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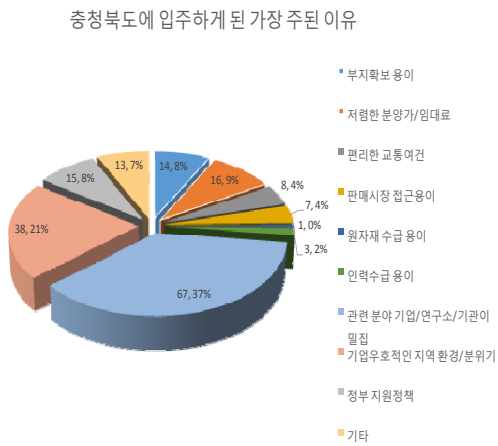
☐ 충청북도에 입주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응답에 따르면, 충청북도에 입주하게 된 원인으로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기관이 밀집이 36.8%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기업우호적인 지역환경/분위기 20.9%, 저렴한 분양가/임대로 8.8%, 정부지원 8.2% 순으로 나타남

- 뒤를 이어 부지확보 7.7%와 기타 7.1%로 조사됐으며, 편리한 교통여건 4.4%, 판매시장 접근용이 3.8%, 인력수급 용이 1.6%, 원자재 수급용이 0.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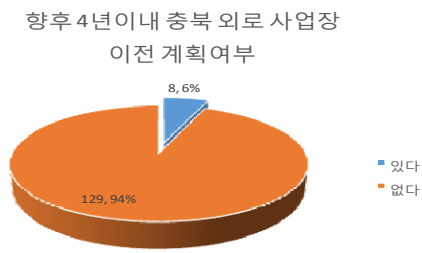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부지확보 용이	14	7.7%
저렴한 분양가/임대료	16	8.8%
편리한 교통여건	8	4.4%
판매시장 접근용이	7	3.8%
원자재 수급 용이	1	0.5%
인력수급 용이	3	1.6%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기관이 밀집	67	36.8%
기업우호적인 지역 환경/분위기	38	20.9%
정부 지원정책	15	8.2%
기타	13	7.1%



☐ 향후 5년 이내에 충북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

❍ 향후 5년 이내에 충북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없다'가 94.2%로 '없다' 5.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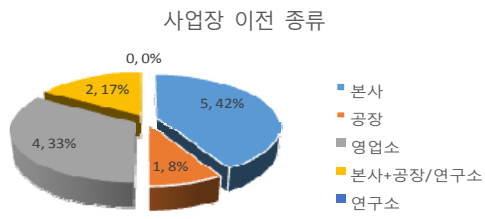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있다	8	5.8%
없다	129	94.2%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이전 계획 사업장 종류

❍ 이전 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종류에 대한 응답으로 본사 41%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업소 33.3%, 본사+공장/연구소 16.7%, 공장 8.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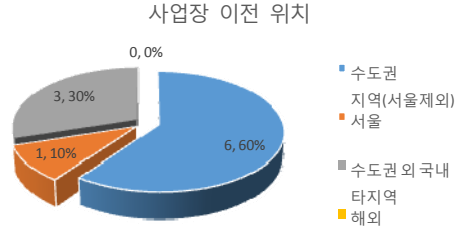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본사	5	41.7%
공장	1	8.3%
영업소	4	33.3%
본사+공장/연구소	2	16.7%
연구소	0	0.0%



☐ 사업장 이전 예정 위치

❍ 사업장 이전 예정 위치에 수도권 지역(서울 제외)이 6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권 외 국내 타 지역 30.0%, 서울 10.0%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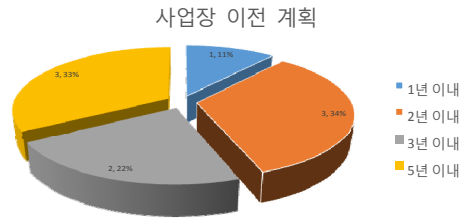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수도권 지역(서울제외)	6	60.0%
서울	1	10.0%
수도권 외 국내 타지역	3	30.0%
해외	0	0.0%



☐ 사업장 이전 계획 시기

❍ 사업장 이전 계획 시기로는 5년 이내 33.3%와 2년 이내 33.3%가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년 이내 22.2%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1년 이내	1	11.1%
2년 이내	3	33.3%
3년 이내	2	22.2%
5년 이내	3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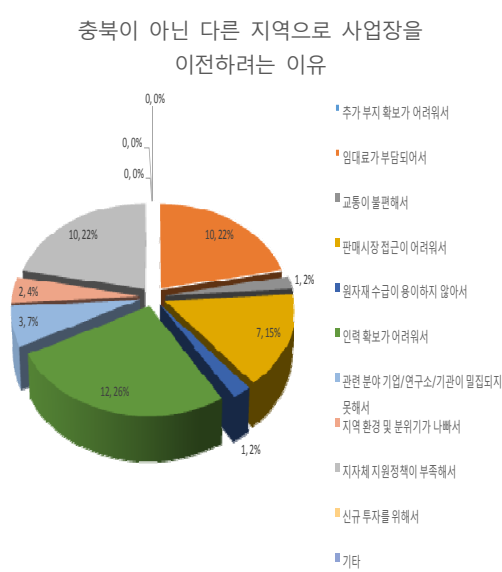
☐ 충청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주된 이유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응답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주된 이유로는 '인력확보가 어려워서'가 2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지자체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21.7%, '임대료가 부담되어서' 21.7%, '판매시장 접근이 어려워서' 15.2%,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기관이 밀집되지 못해서' 6.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비교적 응답이 적었던 5% 미만의 이유로는 '지역 환경 및 분위기가 나빠서' 4.3%, '교통이 불편해서' 2.2%, '원자재 수급이 용이하지 않아서' 2.2%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신규 투자를 위해서', '기타'는 0%로 응답 사업체의 모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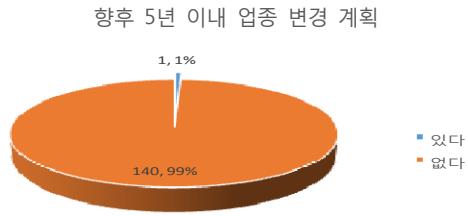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0	0.0%
임대료가 부담되어서	10	21.7%
교통이 불편해서	1	2.2%
판매시장 접근이 어려워서	7	15.2%
원자재 수급이 용이하지 않아서	1	2.2%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12	26.1%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기관이 밀집되지 못해서	3	6.5%
지역 환경 및 분위기가 나빠서	2	4.3%
지자체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10	21.7%
신규 투자를 위해서	0	0.0%
기타	0	0.0%



□ 향후 5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할 계획

❍ 향후 5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가 99.3%로 대부분의 사업체가 현재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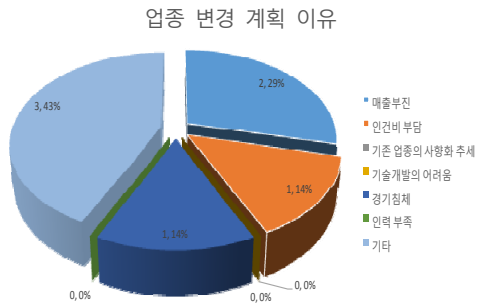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있다	1	0.7%
없다	140	99.3%



□ 업종변경 계획 이유

❍ 업종 변경 계획 이유로는 '기타'가 42.9%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출부진' 28.6%, '인건비 부담' 14.3%, '경기침체' 14.3%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매출부진	2	28.6%
인건비 부담	1	14.3%
기존 업종의 사향화 추세	0	0.0%
기술개발의 어려움	0	0.0%
경기침체	1	14.3%
인력 부족	0	0.0%
기타	3	42.9%



3) 사업장 이전 및 업종 변경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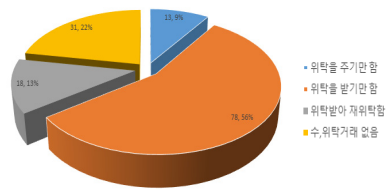
□ 주력제품 생산 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납품거래) 형태

❍ 주력제품 생산 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형태의 경우, '위탁을 받기만 함(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납품)'이 55.7%로 가

장 많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수. 위탁거래 없음' 이 22.1%, '위탁받아 재 위탁함(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일부물량을 다른 중소기업에 재 위탁)' 12.9%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위탁을 주기만 함	13	9.3%
위탁을 받기만 함	78	55.7%
위탁받아 재위탁함	18	12.9%
수,위탁거래 없음	31	22.1%

주력제품 생산 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납품거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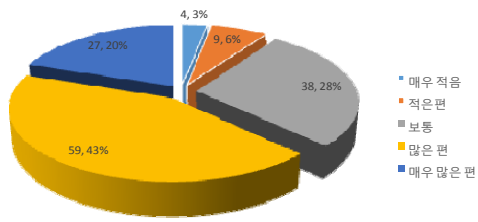
☐ 기업 활동 중 기업과의 교류

❍ 타 기업과의 교류에 대해 '많은 편'의 응답이 4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 27.7%, '매우 많은 편' 19.7% 순으로 나타남

- '많은 편'과 '매우 많은 편'의 응답 비중이 6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기업 활동 중 타 기업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매우 적음	4	2.9%
적은 편	9	6.6%
보통	38	27.7%
많은 편	59	43.1%
매우 많은 편	27	19.7%

기업활동중 타 기업과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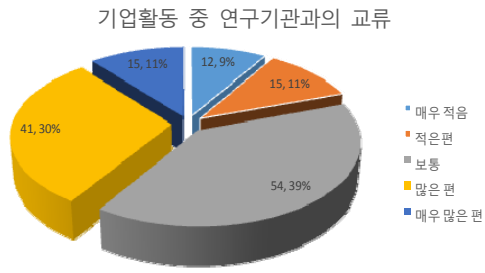


☐ 기업 활동 중 연구기관과의 교류

❍ 연구기관과의 교류에 대해 '보통'이 39.4%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많은 편' 29.9%, '매우 많은 편'과 '적은 편' 10.9% 순으로 나타남

- '많은 편'과 '매우 많은 편'의 응답 비중이'매우 적음'과 '적은 편'의 응답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기업 활동 중 연구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매우 적음	12	8.8%
적은 편	15	10.9%
보통	54	39.4%
많은 편	41	29.9%
매우 많은 편	15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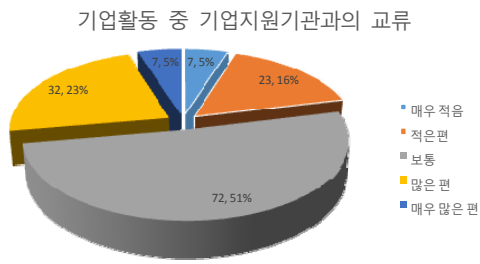


☐ 기업 활동 중 기업지원기관과의 교류

❍ 기업지원기관과의 교류에 대해 '보통'이 51.1%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많은 편' 22.7%, '적은 편' 16.3% 순으로 조사됨

- '많은 편'과 '매우 많은 편'의 응답 비중이'매우 적음'과 '적은 편'의 응답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기업 활동 중 기업지원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매우 적음	7	5.0%
적은 편	23	16.3%
보통	72	51.1%
많은 편	32	22.7%
매우 많은 편	7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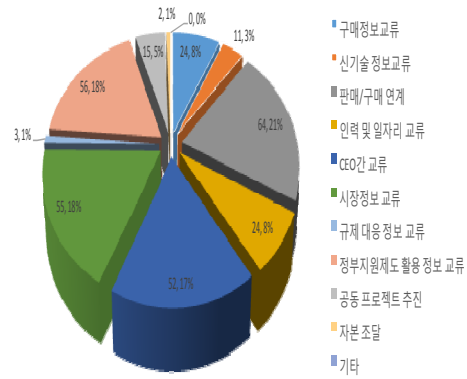
☐ 타 기업과 시행하고 있는 교류 형태

❍ 타 기업과 시행하고 있는 교류 형태는 '판매/구매 연계'의 응답이 2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18.3%, '시장정보 교류' 18.0%, 'CEO간 교류' 17.0%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인력 및 일자리 교류' 7.8%, '구매정보교류' 7.8%, '공동 프로젝트 추진' 4.9%, '신기술 정보교류' 3.6%, '규제 대응 정보 교류' 1.0%, '자본조달' 0.7%인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구매정보교류	24	7.8%
신기술 정보교류	11	3.6%
판매/구매 연계	64	20.9%
인력 및 일자리 교류	24	7.8%
CEO간 교류	52	17.0%
시장정보 교류	55	18.0%
규제 대응 정보 교류	3	1.0%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56	18.3%
공동 프로젝트 추진	15	4.9%
자본 조달	2	0.7%
기타	0	0.0%

응답 사업체가 타 기업과 시행하고 있는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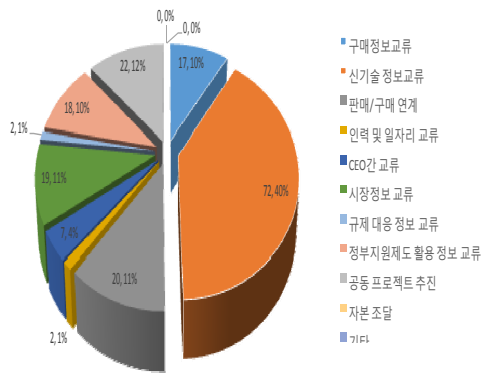
☐ 연구기관과 시행하고 있는 교류 형태

❍ 연구기관과과 시행하고 있는 교류 형태는 '신기술 정보교류' 40.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동 프로젝트 추진' 12.3%, '판매/구매 연계' 11.2%, '시장정보 교류' 10.6%,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10.1%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구매정보교류' 9.5%, 'CEO간 교류' 3.9%, '규제 대응 정보 교류' 1.1%, '인력 및 일자리 교류' 1.1%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구매정보교류	17	9.5%
신기술 정보교류	72	40.2%
판매/구매 연계	20	11.2%
인력 및 일자리 교류	2	1.1%
CEO간 교류	7	3.9%
시장정보 교류	19	10.6%
규제 대응 정보 교류	2	1.1%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18	10.1%
공동 프로젝트 추진	22	12.3%
자본 조달	0	0.0%
기타	0	0.0%

응답 사업체가 연구기관과 시행하고 있는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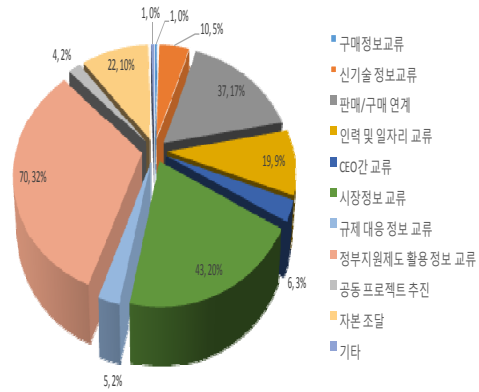
☐ 기업지원기관과 시행하고 있는 교류 형태

❍ 기업지원기관과 시행하고 있는 교류 형태는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가 32.1%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장정보 교류' 19.7%, '판매/구매 연계' 17.0%, '자본 조달' 10.1% 순으로 조사됨

- 이외에 '인력 및 일자리 교류' 8.7%, '신기술 정보교류' 4.6%, 'CEO간 교류' 2.8%, '규제 대응 정보 교류' 2.3%, '공동 프로젝트 추진' 1.8% 순으로 나타났고, '구매정보교류', '기타'가 각각 0.5%로 가장 적은 응답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구매정보교류	1	0.5%
신기술 정보교류	10	4.6%
판매/구매 연계	37	17.0%
인력 및 일자리 교류	19	8.7%
CEO간 교류	6	2.8%
시장정보 교류	43	19.7%
규제 대응 정보 교류	5	2.3%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70	32.1%
공동 프로젝트 추진	4	1.8%
자본 조달	22	10.1%
기타	1	0.5%

응답 사업체가 기업지원기관과 시행하고 있는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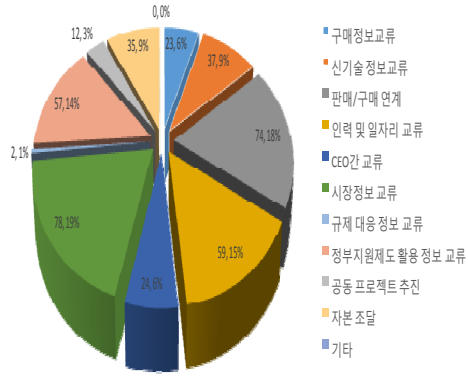
☐ 관내 타 기업과 시행하고 싶은 희망 교류 형태

❍ 관내 타 기업과 시행하고 싶은 희망 교류 형태는 '시장정보 교류'가 19.5%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매/구매 연계' 18.5%, '인력 및 일자리 교류' 14.7%,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14.2% 순으로 조사됨

- '신기술 정보교류' 9.2%, '자본 조달' 8.7%, 'CEO간 교류' 6.0%, '구매정보 교류' 5.7%, '공동 프로젝트 추진' 3.0%, '규제 대응 정보 교류' 0.5%인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구매정보교류	23	5.7%
신기술 정보교류	37	9.2%
판매/구매 연계	74	18.5%
인력 및 일자리 교류	59	14.7%
CEO간 교류	24	6.0%
시장정보 교류	78	19.5%
규제 대응 정보 교류	2	0.5%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57	14.2%
공동 프로젝트 추진	12	3.0%
자본 조달	35	8.7%
기타	0	0.0%

응답 사업체가 타 기업과 시행하고 싶은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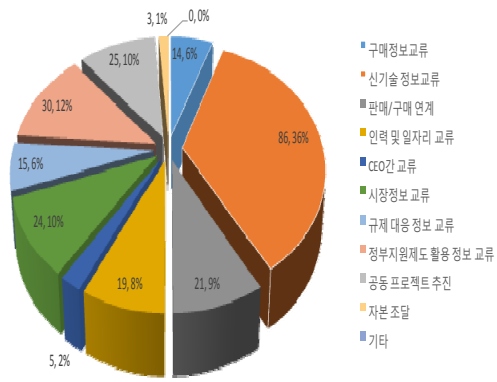
☐ 연구기관과 시행하고 싶은 희망 교류 형태

❍ 연구기관과 시행하고 싶은 희망 교류 형태는 ‘신기술 정보교류’가 35.5%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12.4%, ‘공동 프로젝트 추진’ 10.3%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시장정보 교류’ 9.9%, ‘판매/구매 연계’ 8.7%, ‘인력 및 일자리 교류’ 7.9%, ‘구제 대응 정보 교류’ 6.2%, ‘구매정보교류’ 5.8%, ‘CEO간 교류’ 2.1%, ‘자본 조달’ 1.2%인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구매정보교류	14	5.8%
신기술 정보교류	86	35.5%
판매/구매 연계	21	8.7%
인력 및 일자리 교류	19	7.9%
CEO간 교류	5	2.1%
시장정보 교류	24	9.9%
규제 대응 정보 교류	15	6.2%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30	12.4%
공동 프로젝트 추진	25	10.3%
자본 조달	3	1.2%
기타	0	0.0%

응답 사업체가 연구기관과 시행하고 싶은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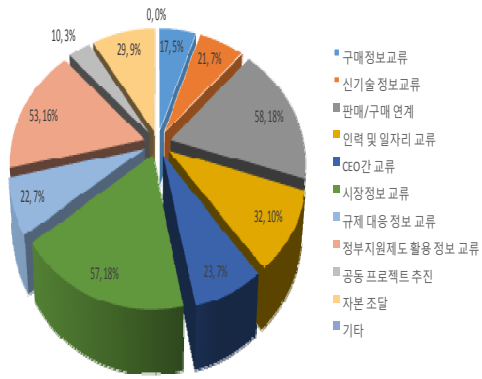
□ 기업지원기관과 시행하고 싶은 희망 교류 형태

❍ 기업지원기관과 시행하고 싶은 희망 교류 형태는 '판매/구매 연계'가 18.0%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장정보 교류' 17.7%, '정부지원제도' 16.5%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인력 및 일자리 교류' 9.9%, '자본 조달' 9.0%, 'CEO간 교류' 7.1%, '규제 대응 정보 교류' 6.8%, '신기술 정보교류' 6.5%, '구매정보교류' 5.3%, '공동 프로젝트 추진' 3.1%인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구매정보교류	17	5.3%
신기술 정보교류	21	6.5%
판매/구매 연계	58	18.0%
인력 및 일자리 교류	32	9.9%
CEO간 교류	23	7.1%
시장정보 교류	57	17.7%
규제 대응 정보 교류	22	6.8%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53	16.5%
공동 프로젝트 추진	10	3.1%
자본 조달	29	9.0%
기타	0	0.0%

응답 사업체가 기업지원기관과 시행하고 싶은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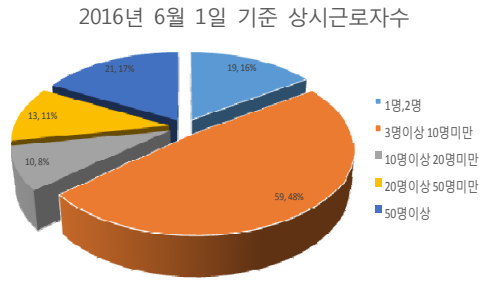


4) 인력 및 일자리관리

□ 상시근로자 수(2016)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2016년 6월 1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상 10명 미만'이 48.4%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명 이상' 17.2%, '1명, 2명' 15.6%, '20명 이상 50명 미만' 10.7%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2명	19	15.6%
3명 이상 10명 미만	59	48.4%
10명 이상 20명 미만	10	8.2%
20명 이상 50명 미만	13	10.7%
50명 이상	21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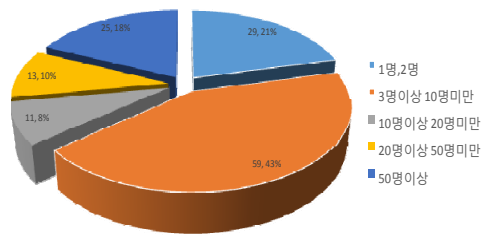


☐ 상시근로자 수(2017)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2017년 6월 1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상 10명 미만'의 응답이 43.1%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명, 2명' 21.2%, '50명이상' 18.2%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인 2016년 대비 2017년 '1명, 2명'의 응답인 소규모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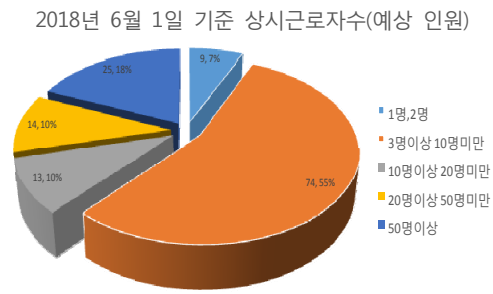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2명	29	21.2%
3명 이상 10명 미만	59	43.1%
10명 이상 20명 미만	11	8.0%
20명 이상 50명 미만	13	9.5%
50명 이상	25	18.2%



☐ 2018 상시근로자 수(예상인원)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2018년 6월 1일 기준 예상 상시근로자 수는 '3명 이상 10명 미만'의 응답 비중이 54.8%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명 이상' 18.5%, '20명 이상 50명 미만' 10.4%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2명	9	6.7%
3명 이상 10명 미만	74	54.8%
10명 이상 20명 미만	13	9.6%
20명 이상 50명 미만	14	10.4%
50명 이상	25	18.5%



☐ 사업체 전체 종사자수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수는 4,39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내국인 남자 3,034명, 여자 1,221명인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수가 '10명 이하' 사업체가 54.1%로 가장 많게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전체		4,392	100%
내국인	남자	3,034	69.1%
	여자	1,221	27.8%
외국인	122	2.8%	

항목	빈도수	비율
10명 이하	46	54.1%
50명 이하	20	23.5%
100명 이하	8	9.4%
100명 초과	11	12.9%

☐ 종사자수(고용주)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고용주(1인 사업체)는 8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내국인 남자 55명, 여자 12명인 것으로 조사됨

- 전체 고용주 중 1명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전체		80	100%
내국인	남자	55	68.8%
	여자	12	15.0%
외국인	122	2	2.5%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70	94.6%
2명	3	4.1%
3명 이상	1	1.4%

☐ 사무관리직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은 총 1,34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내국인 남자 812명, 여자 510명인 것으로 조사됨

- 사무관리직의 응답 비중 중 '10명 이하'가 71.3%로 가장 많게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전체		1345	100%
내국인	남자	812	60.4%
	여자	510	37.9%
외국인	122	1	0.1%

항목	빈도수	비율
10명 이하	57	71.3%
50명 이하	15	18.8%
100명 이하	5	6.3%
100명 초과	3	3.8%

☐ 영업직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영업직은 총 1,34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내국인 남자 812명, 여자 510명인 것으로 조사됨

- 영업직의 응답 비중 중 '5명 이하'가 71.9%로 가장 많게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전체		452	100%
내국인	남자	380	84.1%
	여자	67	14.8%
외국인	122	6	1.3%

항목	빈도수	비율
5명 이하	46	71.9%
10명 이하	8	12.5%
20명 이하	6	9.4%
20명 초과	4	6.3%

☐ 연구개발직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연구개발직은 총 55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내국인 남자 402명, 여자 146명인 것으로 조사됨

- 영업직의 응답 비중 중 '5명 이하'가 83.0%로 가장 많게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전체		553	100%
내국인	남자	402	72.7%
	여자	146	26.4%
외국인	122	1	0.2%

항목	빈도수	비율
5명 이하	78	83.0%
10명 이하	9	9.6%
20명 이하	3	3.2%
20명 초과	4	4.3%

□ 기술직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기술직은 총 37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내국인 남자 331명, 여자 24명인 것으로 조사됨

- 기술직의 응답 비중 중 '5명 이하'가 68.1%로 가장 많게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전체		376	100%
내국인	남자	331	88.0%
	여자	24	6.4%
외국인	122	21	5.6%

항목	빈도수	비율
5명 이하	32	68.1%
10명 이하	6	12.8%
20명 이하	3	6.4%
20명 초과	6	12.8%

□ 기능직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기능직은 총 49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내국인 남자 462명, 여자 15명인 것으로 조사됨

- 기능직의 응답 비중 중 '5명 이하'가 34.8%로 가장 많게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전체		495	100%
내국인	남자	462	93.3%
	여자	15	3.0%
외국인	122	18	3.6%

항목	빈도수	비율
5명 이하	8	34.8%
10명 이하	6	26.1%
20명 이하	3	13.0%
20명 초과	6	26.1%

□ 단순노무직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단순노무직은 총 1,09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내국인 남자 592명, 여자 447명인 것으로 조사됨

- 단순노무직의 응답 비중 중 '50명 이하'가 53.8%로 가장 많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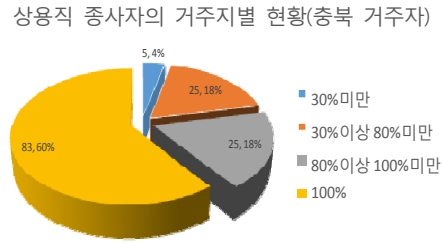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전체		1,091	100%
내국인	남자	592	54.3%
	여자	447	41.0%
외국인	122	74	6.8%

항목	빈도수	비율
10명 이하	7	26.9%
50명 이하	14	53.8%
100명 이하	4	15.4%
100명 초과	1	3.8%

☐ 상용직 종사자의 거주지 현황 - 충북 거주자

❍ 상용직 종사자 중 충북에 거주하는 비중이 '100%'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60.1%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 이상 80% 미만'과 '80% 이상 100% 미만'이 각각 18.1%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30% 미만	5	3.6%
30% 이상 80% 미만	25	18.1%
80% 이상 100% 미만	25	18.1%
100%	83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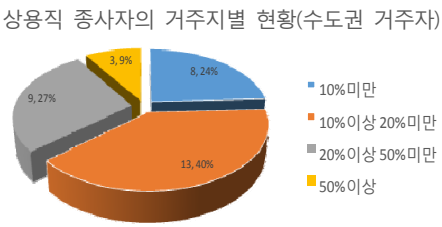


☐ 상용직 종사자의 거주지 현황 - 수도권 거주자

❍ 상용직 종사자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10% 이상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9.4%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이상 50%미만' 27.3%, '10%미만' 24.2%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내 수도권 거주자 비중은 10% ~ 20%가 가장 많은 비중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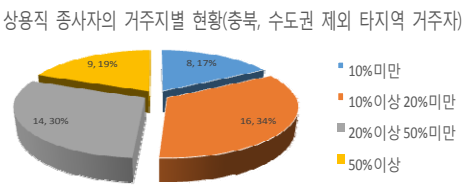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0% 미만	8	24.2%
10% 이상 20% 미만	13	39.4%
20% 이상 50% 미만	9	27.3%
50%이상	3	9.1%



☐ 상용직 종사자의 거주지 현황 - 충북 제외 타 지역 거주자(수도권 제외)

❍ 상용직 종사자 중 충북 제외 타 지역 거주자(수도권 제외)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이 34.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20%이상 50%미만' 29.8%, '50%이상' 19.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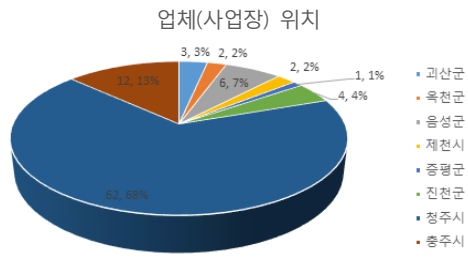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0% 미만	8	17.0%
10% 이상 20% 미만	16	34.0%
20% 이상 50% 미만	14	29.8%
50%이상	9	19.1%



☐ 고용인원 연령(상용직)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상용직 종사자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30대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대 27.1%, 40대 20.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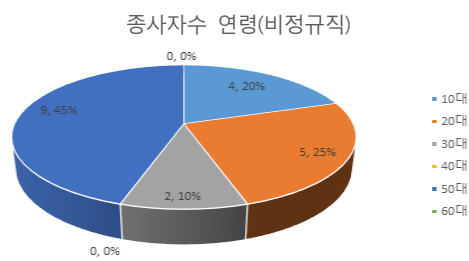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0대	14	0.3%
20대	1180	27.1%
30대	1580	36.3%
40대	902	20.7%
50대	474	10.9%
60대	207	4.8%



☐ 고용인원 연령(비정규직)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비정규직 종사자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50대가 4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대 25.0%, 10대 20.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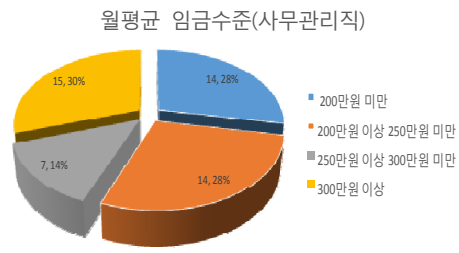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0대	4	20.0%
20대	5	25.0%
30대	2	10.0%
40대	0	0.0%
50대	9	45.0%
60대	0	0.0%



□ 월 평균 임금 수준 - 사무 관리직(2017)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2017년 6월 1일 기준 사무 관리직 월 평균 임금 수준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30.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각각 28.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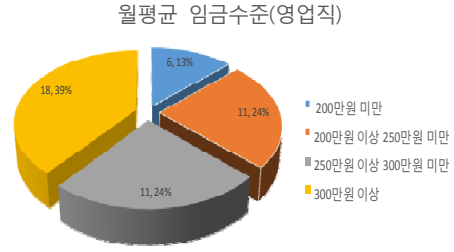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200만원 미만	14	28.0%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4	28.0%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	14.0%
300만원 이상	15	30.0%



□ 월 평균 임금 수준 - 영업직(2017)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2017년 6월 1일 기준 영업직 월 평균 임금 수준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39.1%로 가장 많은 응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과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각각 23.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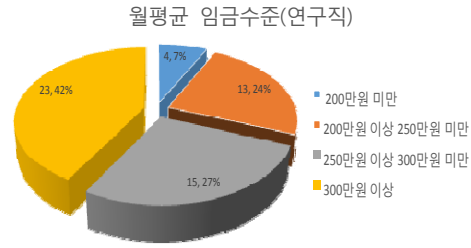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200만원 미만	6	13.0%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1	23.9%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1	23.9%
300만원 이상	18	39.1%



□ 월 평균 임금 수준 - 연구 개발직(2017)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2017년 6월 1일 기준 연구 개발직 월 평균 임금 수준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41.8%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7.3%,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3.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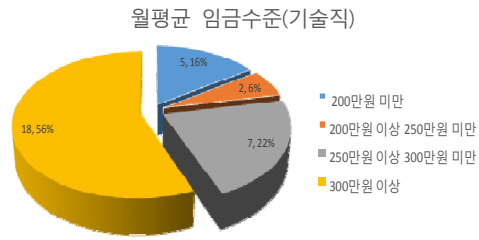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200만원 미만	4	7.3%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3	23.6%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	27.3%
300만원 이상	23	41.8%



☐ 월 평균 임금 수준 - 기술직(2017)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2017년 6월 1일 기준 기술직 월 평균 임금 수준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56.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9%, '200만원 미만' 15.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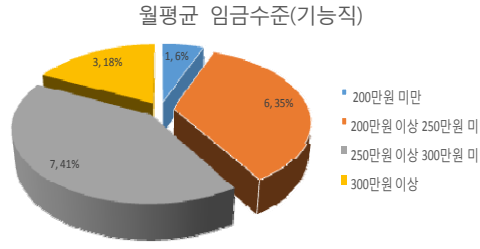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200만원 미만	5	15.6%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	6.3%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	21.9%
300만원 이상	18	56.3%



☐ 월 평균 임금 수준 - 기능직(2017)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2017년 6월 1일 기준 기능직 월 평균 임금 수준의 경우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1.2%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5.3%, '300만원 이상' 17.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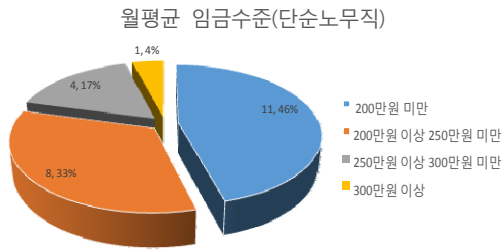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200만원 미만	1	5.9%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6	35.3%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	41.2%
300만원 이상	3	17.6%



☐ 월 평균 임금 수준 - 단순노무직(2017)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2017년 6월 1일 기준 단순노무직 월 평균 임금 수준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45.8%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3.3%,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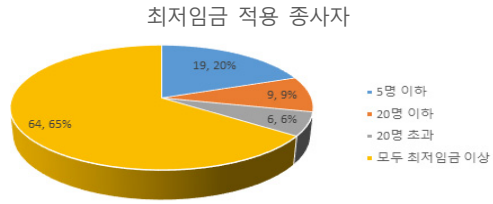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200만원 미만	11	45.8%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8	33.3%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6.7%
300만원 이상	1	4.2%



☐ 최저임금(6,470원) 적용 근로자 명수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종사자는 '모두 최저임금 이상'이 65.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5명 이하'가 19.4%, '20명 이하'가 9.2%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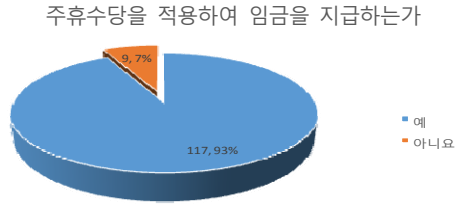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5명 이하	19	19.4%
20명 이하	9	9.2%
20명 초과	6	6.1%
전체 최저임금 이상	64	65.3%



☐ 주휴수당 적용 유무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 중 주휴사당을 적용하는 사업체는 92.9%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주휴수당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예	117	92.9%
아니요	9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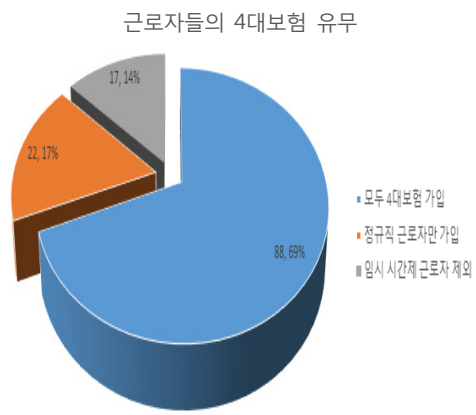


☐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

❍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는 '임시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구분 없이 모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가 69.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다'가 17.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되어 있지만, 임시 시간제 근로자는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13.4%로 가장 적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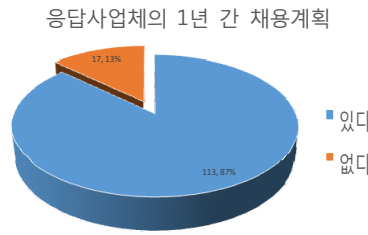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임시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구분 없이 모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88	69.3%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다	22	17.3%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되어 있지만, 임시 시간제 근로자는 되어 있지 않다.	17	13.4%
비상장	120	92.3%



☐ 향후 1년간 채용계획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향후 1년간 채용 계획에 대한 응답으로는 '있다'가 86.9%로 가장 많게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있다	113	86.9%
없다	17	13.1%



☐ 사업장 채용 계획(사무관리직)

❍ 현재 부족한 사무관리직 인원으로는 '1명'이 69.2%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명 이상 4명 미만' 19.2%, '6명 이상' 7.7%, '4명 이상 6명 미만' 3.8%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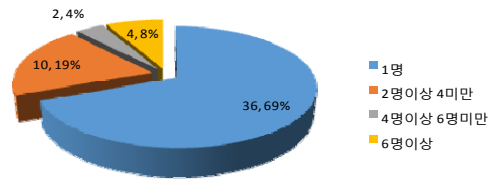
❍ 향후 1년간 채용 예상인원으로는 '1명'이 57.5%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명 이상 5명 미만' 27.5%, '10명이상' 10.0%, '5명 이상 10명 미만' 5.0% 순으로 조사됨

❍ 경력직 채용 인원으로는 '1명'이 57.1%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명' 23.8%, '5명 이상' 14.3%, '3명 이상 5명 미만' 4.8% 순으로 조사됨

- 최소학력 수준으로는 '고졸' 40.4%, '전문대졸' 35.1%, '4년대 대졸' 19.3% 순으로 조사됨
- 채용 희망 연령대로는 '25~29세' 37.0%, '30~34세' 25,9%, '20~24세' 18.5% 순으로 조사됨
- 연봉수준은 최저 1,800만원, 최고 4,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수준은 2,662만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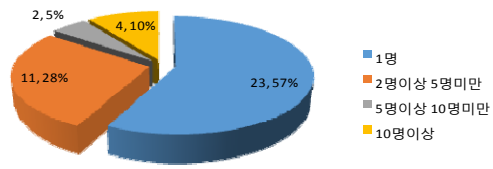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36	69.2%
2명 이상 4명 미만	10	19.2%
4명이상 6명 미만	2	3.8%
6명이상	4	7.7%

현재 부족인원(2017.6.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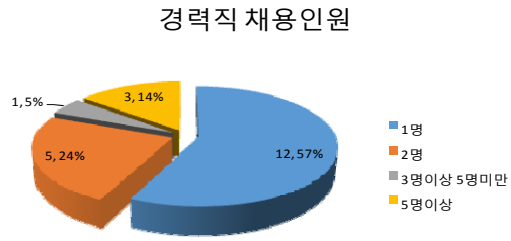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23	57.5%
2명이상 5명미만	11	27.5%
5명이상 10명미만	2	5.0%
10명이상	4	10.0%

향후 1년 동안 채용 예상인원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12	57.1%
2명	5	23.8%
3명이상 5명미만	1	4.8%
5명이상	3	14.3%



☐ 사업장 채용 계획(영업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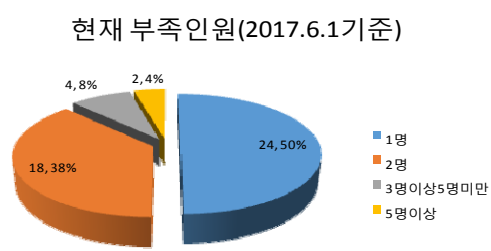
❍ 현재 부족한 영업직 인원으로는 '1명'이 50.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명' 37.5%, '3명 이상 5명 미만' 8.3%, '5명이상' 4.2% 순으로 조사됨

❍ 향후 1년간 채용 예상인원으로는 '2명'이 36.7%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명' 32.7%, '5명 이상' 24.5%, '3명' 4.1%, '4명' 2.0% 순으로 조사됨

❍ 경력직 채용 인원으로는 '1명'이 56.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명' 25.0%, '5명' 12.5%, '4명' 6.3%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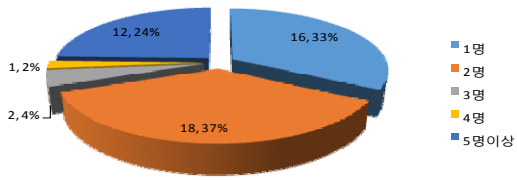
- 최소학력 수준으로는 '4년제 대졸' 56.8%, '전문대졸'과 '석사'가 각각 18.9%로 조사됨
- 채용 희망 연령대로는 '25~29세' 33.3%, '30~34세' 27.1%, '35~39세' 13.6% 순으로 조사됨
- 연봉수준은 최저 1,800만원, 최고 4,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수준은 2,551만원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24	50.0%
2명	18	37.5%
3명 이상 5명 미만	4	8.3%
5명 이상	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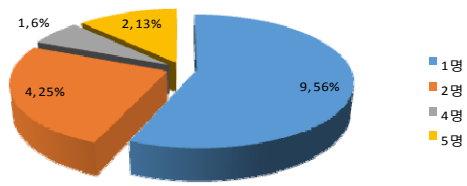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16	32.7%
2명	18	36.7%
3명	2	4.1%
4명	1	2.0%

향후 1년 동안 채용 예상인원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9	56.3%
2명	4	25.0%
4명	1	6.3%
5명	2	12.5%

경력직 채용인원



□ 사업장 채용 계획(연구개발직)

❍ 현재 부족한 연구개발직 인원으로는 '1명'이 50.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명 이상 4명 미만' 43.8%, '4명 이상 6명 미만' 4.2%, '6명 이상' 2.1%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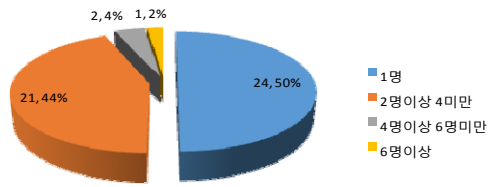
❍ 향후 1년간 채용 예상인원으로는 '2명 이상 5명 미만'이 42.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명' 32.7%, '5명 이상 10명 미만' 22.4%, '10명 이상' 2.0% 순으로 조사됨

❍ 경력직 채용 인원으로는 '1명'이 56.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명' 25.0%, '5명 이상' 12.5%, '3명 이상 5명 미만' 6.3% 순으로 조사됨

- 최소학력 수준으로는 '4년제 대졸'이 56.8%, '석사', '전문대졸'이 각각 18.9%로 나타남
- 채용 희망 연령대로는 '30~34'세 31.7%, '25~29세' 24.4%, '35~39세' 14.6% 순으로 조사됨
- 연봉수준은 최저 1,800만원, 최고 3,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수준은 2,800만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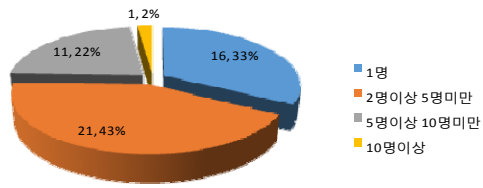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36	69.2%
2명 이상 4명 미만	10	19.2%
4명 이상 6명 미만	2	3.8%
6명 이상	4	7.7%

현재 부족인원(2017.6.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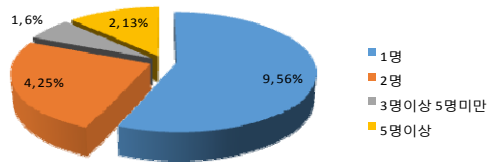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23	57.5%
2명 이상 5명 미만	11	27.5%
5명 이상 10명 미만	2	5.0%
10명 이상	4	10.0%

향후 1년 동안 채용 예상인원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12	57.1%
2명	5	23.8%
3명 이상 5명 미만	1	4.8%
5명 이상	3	14.3%

경력직 채용인원



☐ 사업장 채용 계획(기술직)

❍ 현재 부족한 기술직 인원으로는 ‘1명’이 42.1%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명’ 26.3%, ‘3명’ 15.8%, ‘5명’ 10.5%, ‘4명’ 5.3%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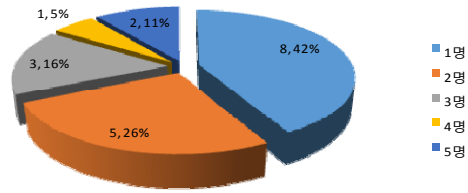
❍ 향후 1년간 채용 예상인원으로는 ‘2명 이상 5명 미만’이 50.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명’ 35.0%, ‘5명 이상 10명 미만’ 10.0%, ‘10명 이상’ 5.0% 순으로 조사됨

❍ 경력직 채용 인원으로는 ‘1명’이 46.7%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명’ 33.3%, ‘5명’ 13.3%, ‘3명’ 6.7% 순으로 조사됨

- 최소학력 수준으로는 '고졸'과 '학력 무관'이 각각 27.3%,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이 각각 22.7% 순으로 조사됨
- 채용 희망 연령대로는 '25~29'세 38.1%, '30~34세' 28.6%, '35~39세' 19.0% 순으로 조사됨
- 연봉수준은 최저 2,100만원, 최고 3,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수준은 2,706만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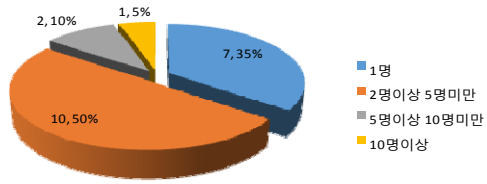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8	42.1%
2명	5	26.3%
3명	3	15.8%
4명	1	5.3%
5명	2	10.5%

현재 부족인원(2017.6.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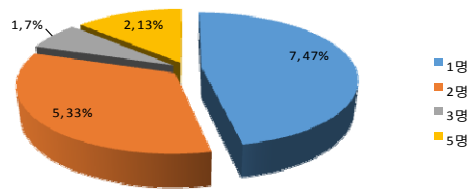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7	35.0%
2명 이상 5명 미만	10	50.0%
5명 이상 10명 미만	2	10.0%
10명 이상	1	5.0%

향후 1년 동안 채용 예상인원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7	46.7%
2명	5	33.3%
3명	1	6.7%
5명	2	13.3%

경력직 채용인원



☐ 사업장 채용 계획(기능직)

❍ 현재 부족한 기능직 인원으로는 '2명'이 40.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명' 30.0%, '3명' 20.0%, '7명' 10.0%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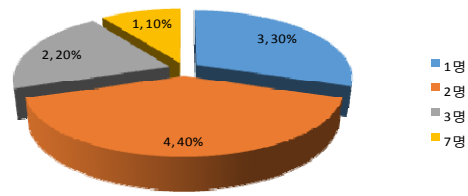
❍ 향후 1년간 채용 예상인원으로는 '2명 이상 5명 미만'이 50.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명' 25.0%, '10명 이상' 16.7%, '5명 이상 10명미 만' 8.3% 순으로 조사됨

❍ 경력직 채용 인원으로는 '2명'이 50.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명' 33.3%, '10명' 16.7% 순으로 조사됨.

- 최소학력 수준으로는 '고졸' 50.0%, '학력 무관' 25.0%, '전문대졸' 16.7% 순으로 조사됨.
- 채용 희망 연령대로는 '25~29세' 45.5%, '30~34세' 27.3%, '35~39세' 18.2% 순으로 조사됨
- 연봉수준은 최저 2400만원, 최고 3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수준은 2975만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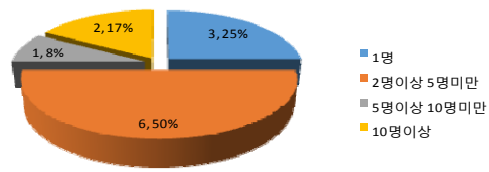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3	30.0%
2명	4	40.0%
3명	2	20.0%
7명	1	10.0%

현재 부족인원(2017.6.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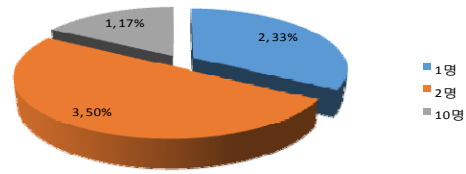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3	25.0%
2명 이상 5명 미만	6	50.0%
5명 이상 10명 미만	1	8.3%
10명이상	2	16.7%

향후 1년 동안 채용 예상인원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2	33.3%
2명	3	50.0%
10명	1	16.7%

경력직 채용인원



☐ 사업장 채용 계획(단순노무직)

❍ 현재 부족한 기능직 인원으로는 '2명 이상 4명 미만'이 60.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명이상' 16.0%, '1명'과 '4명 이상 6명 미만'이 각각 12.0%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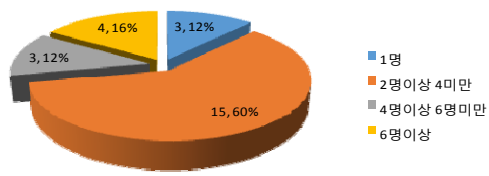
❍ 향후 1년간 채용 예상인원으로는 '2명 이상 5명 미만'이 61.1%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명 이상 10명 미만'과 '10명 이상'이 각각 16.7%, '1명' 5.6% 순으로 조사됨

❍ 경력직 채용 인원으로는 '2명'과 '3명 이상'과 '5명 미만'이 각각 33.3%로 나타났고 '1명'의 경우 0.0%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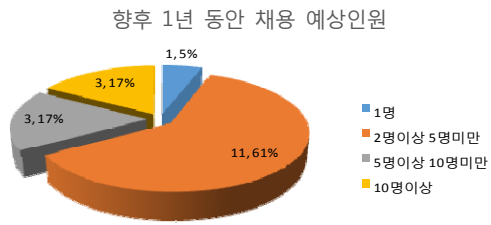
- 최소학력 수준으로는 '학력 무관'이 50.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졸' 42.9%, '4년제 대졸' 7.1% 순으로 조사됨
- 채용 희망 연령대로는 '30~34세' 30.0%, '25~29세' 20.0%, '20~2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연령무관'이 각각 10.0% 순으로 조사됨
- 연봉수준은 최저 1,632만원, 최고 2,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수준은 2,230만원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3	12.0%
2명 이상 4명 미만	15	60.0%
4명 이상 6명 미만	3	12.0%
6명 이상	4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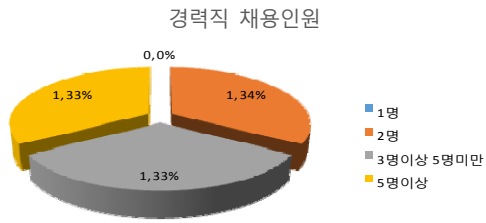
현재 부족인원(2017.6.1기준)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1	5.6%
2명 이상 5명 미만	11	61.1%
5명 이상 10명 미만	3	16.7%
10명 이상	3	16.7%



항목	빈도수	비율
1명	0	0.0%
2명	1	33.3%
3명 이상 5명 미만	1	33.3%
5명이상	1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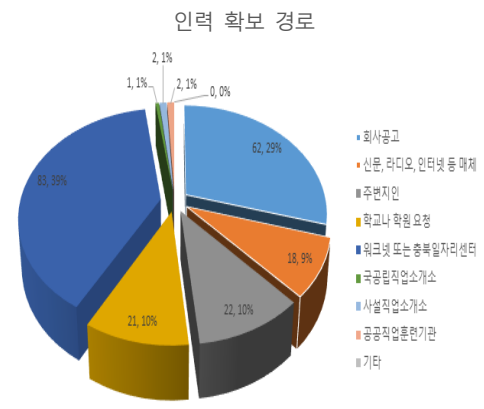


☐ 인력 확보 경로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인력 확보 경로는 '워크넷 또는 충북일자리센터를 통해'가 39.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회사공고를 통해' 29.4%, '주변 지인을 통해' 10.4%, '학교나 학원 요청을 통해' 10.0% 순으로 나타남

- 반면, 10%미만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8.5%, '사설직업소개소를 통해' 0.9%,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0.9%, '국공립 직업소개소를 통해' 0.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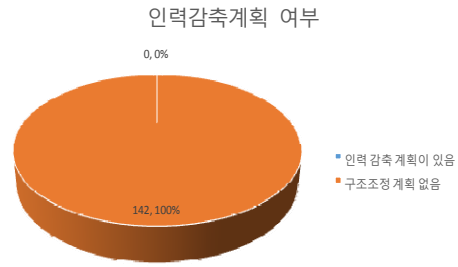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회사공고	62	29.4%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체	18	8.5%
주변 지인	22	10.4%
학교나 학원 요청	21	10.0%
워크넷 또는 충북일자리센터	83	39.3%
국공립직업소개소	1	0.5%
사설직업소개소	2	0.9%
공공직업훈련기관	2	0.9%
기타	0	0.0%



☐ 향후 1~2년 이내 인력 감축 구조조정 계획 여부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향후 1~2년 이내 인력 감축 구조조정 계획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는 '구조조정 계획 없음'이 100.0%로 나타나 모든 사업체에서 인력 감축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인력 감축 계획이 있음	0	0.0%
구조조정 계획 없음	1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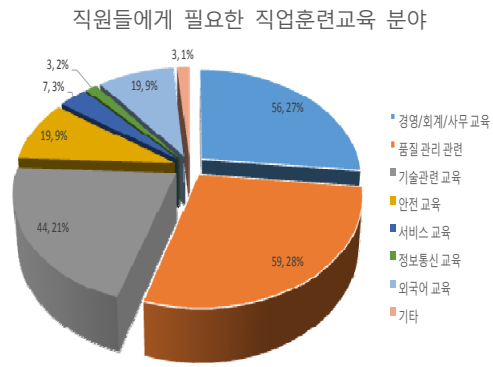


☐ 응답 사업체 직원들에게 필요한 직업훈련교육 분야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가 당사 직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훈련 교육 분야로는 '품질 관리 관련'이 28.1%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회계/사무 교육' 26.7%, '기술관련 교육' 21.0%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안전 교육' 9.0%, '외국어 교육' 9.0%, '서비스 교육' 3.3%, '정보통신 교육' 1.4%, '기타' 1.4% 등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경영/회계/사무 교육	56	26.7%
품질 관리 관련	59	28.1%
기술관련 교육	44	21.0%
안전 교육	19	9.0%
서비스 교육	7	3.3%
정보통신 교육	3	1.4%
외국어 교육	19	9.0%
기타	3	1.4%
기타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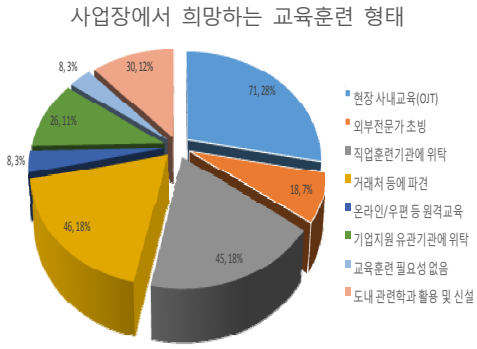


☐ 희망하는 교육훈련 진행 형태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가 희망하는 교육훈련 진행 형태로는 '현장 사내교육(OJT)'가 28.2%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거래처 등에 파견' 18.3%,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17.9%, '도내 관련학과 활용 및 신설' 11.9%, '기업지원 유관기관에 위탁' 10.3%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외부전문가 초빙' 7.1%, '온라인/우편 등 원격교육' 3.2%, '교육훈련 필요성 없음' 3.2% 등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현장 사내교육(OJT)	71	28.2%
외부전문가 초빙	18	7.1%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45	17.9%
거래처 등에 파견	46	18.3%
온라인/우편 등 원격교육	8	3.2%
기업지원 유관기관에 위탁	26	10.3%
교육훈련 필요성 없음	8	3.2%
도내 관련학과 활용 및 신설	30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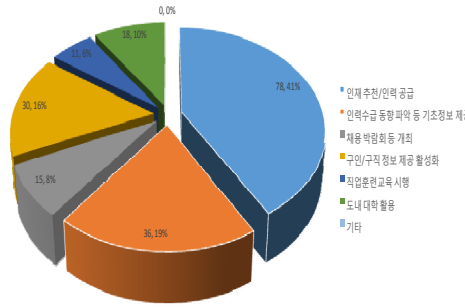
☐ 인력 충원 시, 충청북도 등 관련 기관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인력 충원 시, 충청북도 등 관련 기관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인재 추천/인력 공급'이 41.5%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 기초정보 제공' 19.1%, '구인/구직 정보 제공 활성화' 16.0%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도내 대학 활용' 9.6%, '채용 박람회 등 개최' 8.0%, '직업훈련교육 시행' 5.9%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인재 추천/인력 공급	78	41.5%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 기초정보 제공	36	19.1%
채용 박람회 등 개최	15	8.0%
구인/구직 정보 제공 활성화	30	16.0%
직업훈련교육 시행	11	5.9%
도내 대학 활용	18	9.6%
기타	0	0.0%

필요 인력충원시, 충북 등 관련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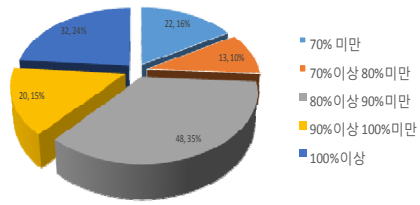
5) 업황전망 및 기타

☐ 사업체의 정상적인 업황 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업황 대비 현재 업황(%)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정상적인 업황 대비 현재 업황에 대한 응답으로는 ‘80%이상 90%미만’이 35.6%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 이상’ 23.7%, ‘70%미만’ 16.3.3%, ‘90%이상 100%미만’ 14.8%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70%미만	22	16.3%
70%이상 80%미만	13	9.6%
80%이상 90%미만	48	35.6%
90%이상 100%미만	20	14.8%
100%이상	32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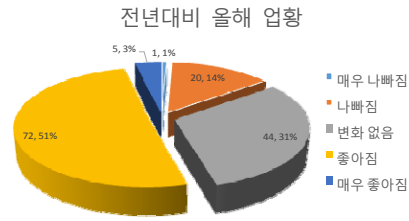
정상적인 업황 대비 현재 업황
(정상적인 업황 수준으로 100%으로 보았을 때)



☐ 전년 대비 올해 업황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전년 대비 올해 업황에 대한 응답으로는 ‘좋아짐’이 50.7%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변화 없음’ 31.0%, ‘나빠짐’ 14.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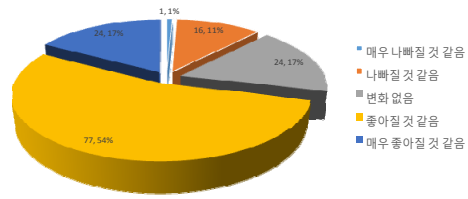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매우 나빠짐	1	0.7%
나빠짐	20	14.1%
변화 없음	44	31.0%
좋아짐	72	50.7%
매우 좋아짐	5	3.5%



☐ 금년 대비 향후 1년 뒤 업황 예상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금년 대비 향후 1년 뒤 업황 예상에 대한 응답으로는 '좋아질 것 같음'이 54.2%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좋아질 것 같음' 16.9%, '변화 없음' 16.9%, '나빠질 것 같음' 11.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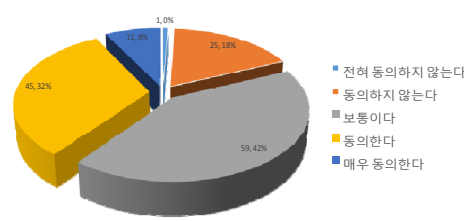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매우 나빠질 것 같음	1	0.7%
나빠질 것 같음	16	11.3%
변화 없음	24	16.9%
좋아질 것 같음	77	54.2%
매우 좋아질 것 같음	24	16.9%



☐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의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로는 '보통이다'가 41.8%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한다' 31.9%, '동의하지 않는다' 17.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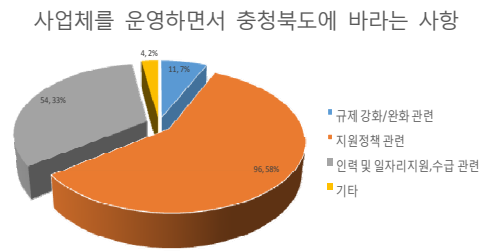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0.7%
동의하지 않는다	25	17.7%
보통이다	59	41.8%
동의한다	45	31.9%
매우 동의한다	11	7.8%



☐ 사업체 운영 중 충청북도에 바라는 사항

❍ 설문에 응답한 사업체가 충청북도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지원정책 관련'이 58.2%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력 및 일자리지원, 수급 관련' 32.7%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규제 강화/완화	11	6.7%
지원정책	96	58.2%
인력 및 일자리지원·수급	54	32.7%
기타	4	2.4%



제2절 참여자 설문조사

1. 참여자 설문조사 설문개요

1) 설문개요

□ 설문개요

❍ 충북 도민의 생활, 일자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충청북도가 도민서비스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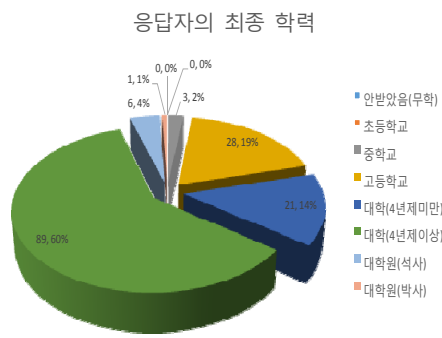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총 148명으로 경제활동상태 및 향후 고용상태, 참여자의 충북 생활 등에 대한 설문 실시

2) 인구통계 특성

□ 최종학력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의 최종 학력으로는 '대학(4년제 이상)'이 60.1%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18.9%, '대학(4년제 미만)' 14.2%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안 받았음(무학)	0	0.0%
초등학교	0	0.0%
중학교	3	2.0%
고등학교	28	18.9%
대학(4년제 미만)	21	14.2%
대학(4년제 이상)	89	60.1%
대학원(석사)	6	4.1%
대학원(박사)	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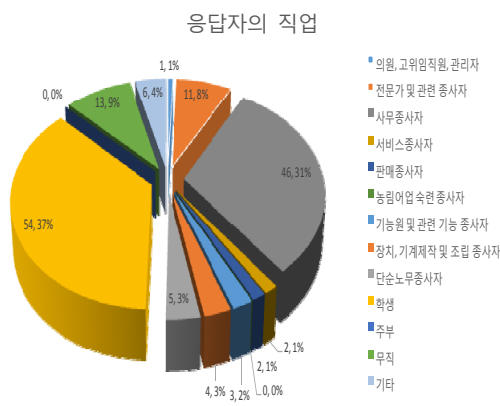


☐ 직업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의 직업으로는 ‘학생’이 36.7%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종사자’ 31.3%, ‘무직’ 8.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5%미만의 응답으로는 ‘기타’ 4.1%, ‘단순노무종사자’ 3.4%,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 ‘서비스종사자’ 1.4%, ‘판매종사자’ 1.4%,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0.7%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주부’의 경우 0.0%로 모든 참여자의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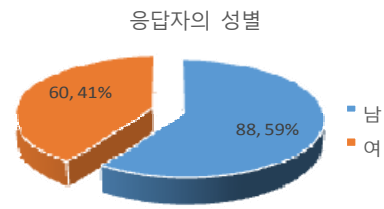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1	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	7.5%
사무종사자	46	31.3%
서비스종사자	2	1.4%
판매종사자	2	1.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	2.0%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 종사자	4	2.7%
단순노무종사자	5	3.4%
학생	54	36.7%
주부	0	0.0%
무직	13	8.8%
기타	6	4.1%



□ 성별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59.5%로 여성 40.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남	88	59.5%
여	60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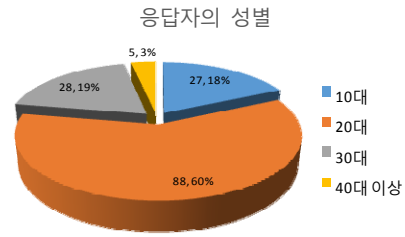


□ 연령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의 연령으로는 '20대'가 5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 18.9%, '10대' 18.2% 순으로 조사나타남

-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3.4%로 가장 적게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10대	27	18.2%
20대	88	59.5%
30대	28	18.9%
40대 이상	5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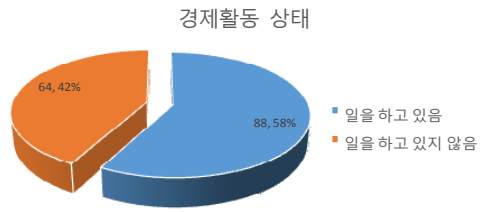
2. 참여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1) 경제활동 상태 및 향후 고용상태

□ 지난 1주일간 일(경제활동) 상태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의 지난 1주일간 일(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응답으로는 '일을 하고 있음'이 57.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일을 하고 있지 않음'은 42.1%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일을 하고 있음	88	57.9%
일을 하고 있지 않음	64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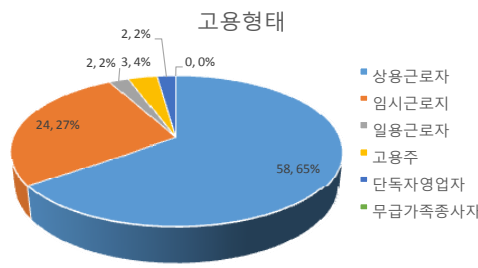


☐ 고용 형태

❍ 참여자의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가 65.2%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임시근로자' 27%로 나타남

- 반면, 10%미만의 응답에서는 '고용주' 3.4%, '일용근로자' 2.2%, '단독자영업자' 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0.0%로 모든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상용근로자	58	65.2%
임시근로지	24	27.0%
일용근로자	2	2.2%
고용주	3	3.4%
단독자영업자	2	2.2%
무급가족종사자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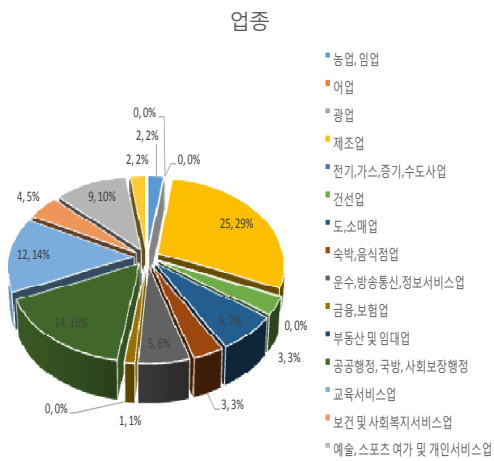
☐ 현 직장 업종

❍ 참여자의 현 직장 업종은 '제조업'이 29.1%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16.3%, '교육 서비스업' 14.0%, '예술, 스포츠, 여가 및 개인서비스업' 10.5%, '도·소매업' 7.0% 순으로 나타남

- 5% 미만의 응답으로는 '운수,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5.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7%, '건설업' 3.5%, '숙박·음식집 업' 3.5%, '농업·임업' 2.3%, '기타' 2.3%, '금융·보험업' 1.2% 순으로 나타남

- ‘부동산 및 임대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광업’, ‘어업’의 경우 0.0%로 모든 참여자의 현 직장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농업, 임업	2	2.3%
어업	0	0.0%
광업	0	0.0%
제조업	25	29.1%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0	0.0%
건설업	3	3.5%
도·소매업	6	7.0%
숙박·음식점업	3	3.5%
운수,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5	5.8%
금융·보험업	1	1.2%
부동산 및 임대업	0	0.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14	16.3%
교육서비스업	12	14.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4.7%
예술, 스포츠 여가 및 개인서비스업	9	10.5%
기타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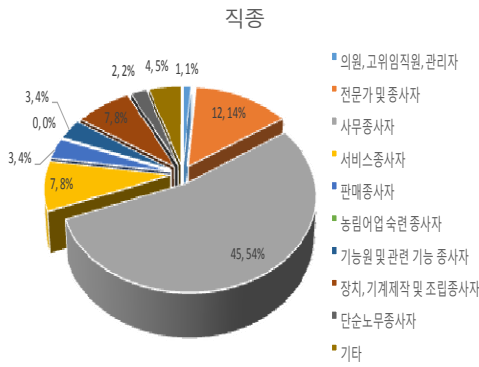


☐ 직종

❍ 참여자의 직종은 ‘사무종사자’가 5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3%, ‘서비스종사자’ 8.3%,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8.3%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기타’ 4.8%, ‘판매종사자’ 3.6%,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3.6%, ‘단순노무종사자’ 2.4%,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1.2%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0.0%로 모든 참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1	1.2%
전문가 및 종사자	12	14.3%
사무종사자	45	53.6%
서비스종사자	7	8.3%
판매종사자	3	3.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	3.6%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7	8.3%
단순노무종사자	2	2.4%
기타	4	4.8%
주부	0	0.0%
무직	13	8.8%
기타	6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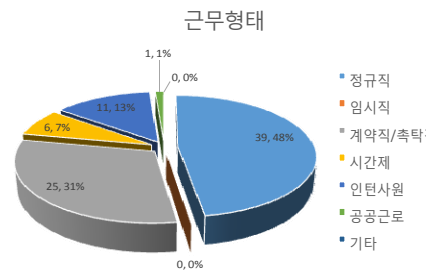


☐ 근무형태

❍ 참여자의 근무형태로 ‘정규직’이 47.6%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계약직’ 30.5%, ‘인턴사원’ 13.4%, ‘시간제’ 7.3%인 것으로 나타남

- 5%미만의 응답으로는 ‘공공근로’가 1.2%로 나타났으며, ‘임시직’과 ‘기타’는 0.0%로 모든 참여자의 근무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정규직	39	47.6%
임시직	0	0.0%
계약직/촉탁직	25	30.5%
시간제	6	7.3%
인턴사원	11	13.4%
공공근로	1	1.2%
기타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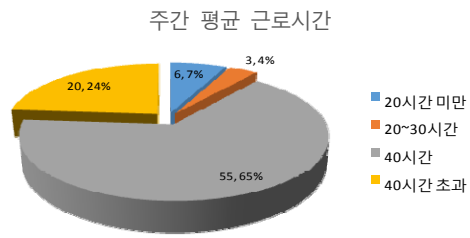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참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 6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시간 초과'가 23.8%로 뒤를 이음

- 반면 '20시간미만' 7.1%, '20~30시간' 3.6%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20시간미만	6	7.1%
20~30시간	3	3.6%
40시간	55	65.5%
40시간 초과	20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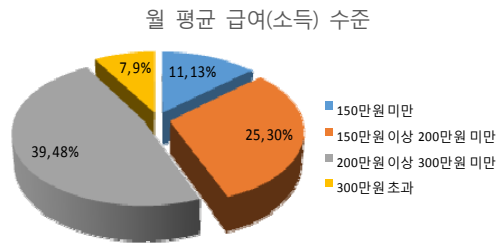


☐ 월평균 급여(소득) 수준

❍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소득) 수준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7.6%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5%, '150만원 미만' 13.4% 순으로 나타남

- 반면, '300만원 초과'의 경우 8.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150만원 미만	11	13.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5	30.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9	47.6%
300만원 초과	7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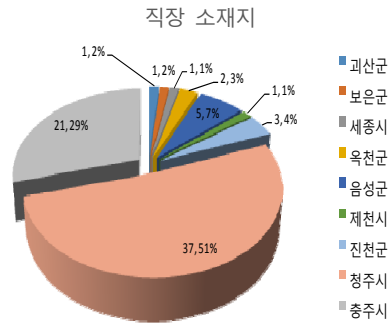


☐ 직장 소재지

❍ 참여자의 직장 소재지는 '청주'가 51.4%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충주' 29.2%, '음성' 6.9% 순으로 나타남

- '진천'과 '옥천'은 각각 4.2%, 2.8%로 나타났으며, '괴산', '보은', '세종', '제천'은 1.4%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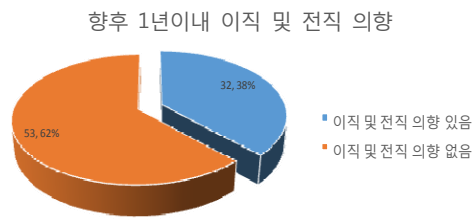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괴산군	1	1.4%
보은군	1	1.4%
세종시	1	1.4%
옥천군	2	2.8%
음성군	5	6.9%
제천시	1	1.4%
진천군	3	4.2%
청주시	37	51.4%
충주시	21	29.2%



☐ 향후 1년 이내 이직 및 전직 의향

❍ 향후 1년 이내 이직 및 전직 의향으로는 '이직 및 전직 의향 없음'이 62.4%로 많게 나타났으며, '이직 및 전직 의향 있음'의 경우 37.6%로 적게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이직 및 전직 의향 있음	32	37.6%
이직 및 전직 의향 없음	53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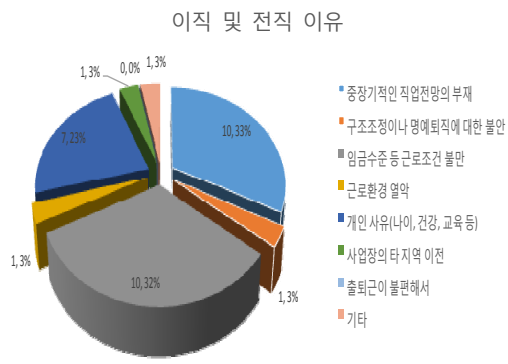


☐ 이직 및 전직 이유

❍ 이직 및 전직 이유로는 '중장기적인 직업전망의 부재'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불만'이 32.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유(나이, 건강, 교육 등)'가 22.6%로 나타남

-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에 대한 불안', '근로환경 열악', '사업장의 타 지역 이전', '기타'가 각각 3.2%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중장기적인 직업전망의 부재	10	32.3%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에 대한 불안	1	3.2%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불만	10	32.3%
근로환경 열악	1	3.2%
개인 사유(나이, 건강, 교육 등)	7	22.6%
사업장의 타 지역 이전	1	3.2%
출퇴근이 불편해서	0	0.0%
기타	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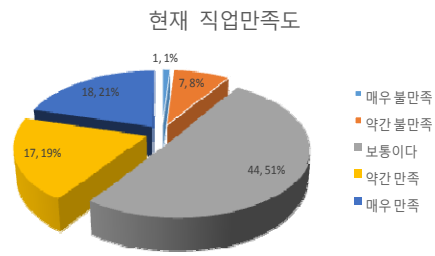


☐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0.6%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만족' 20.7%, '약간 만족' 19.5% 순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은 9.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참여자는 현재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매우 불만족	1	1.1%
약간 불만족	7	8.0%
보통이다	44	50.6%
약간 만족	17	19.5%
매우 만족	18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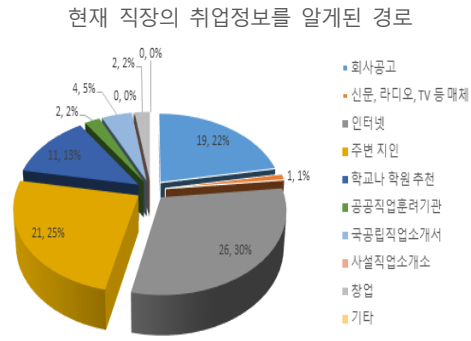


☐ 현재 직장의 취업정보를 알게 된 경로

❍ 현재 직장의 취업정도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을 통해'가 3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변 지인을 통해(가족포함)' 24.4%, '회사공고를 통해' 22.1%, '학교나 학원 추천을 통해' 12.8% 순으로 나타남

- ‘국공립직업소개서(고용안정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센터 등)를 통해’ 4.7%,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2.3%, ‘창업’ 2.3%, ‘신문, 라디오, TV 등 매체를 통해’ 1.2%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회사공고	19	22.1%
신문, 라디오, TV 등 매체	1	1.2%
인터넷을 통해	26	30.2%
주변 지인	21	24.4%
학교나 학원 추천	11	12.8%
공공직업훈련기관	2	2.3%
국공립직업소개서	4	4.7%
사설직업소개소	0	0.0%
창업	2	2.3%
기타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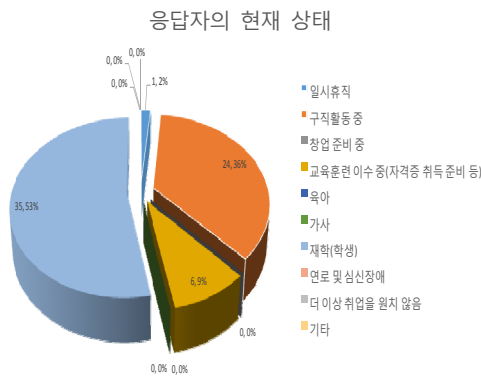


☐ 구직여부 - 현재 상태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의 현재 상태는 ‘재학(학생)’이 53.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직활동 중’ 36.4%, ‘교육훈련 이수 중(자격증 취득 준비 등)’ 9.1% 순으로 나타남

- ‘일시휴직’이 1.5%, ‘창업 준비 중’, ‘육아’, ‘가사’, ‘연로 및 심신장애’, ‘더 이상 취업을 원치 않음’, ‘기타’의 경우 0.0%로 모든 응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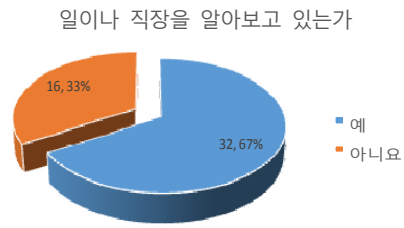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일시휴직	1	1.5%
구직활동 중	24	36.4%
창업 준비 중	0	0.0%
교육훈련 이수 중 (자격증 취득 준비 등)	6	9.1%
육아	0	0.0%
가사	0	0.0%
재학(학생)	35	53.0%
연로 및 심신장애	0	0.0%
더 이상 취업을 원치 않음	0	0.0%
기타	0	0.0%



☐ 구직현황

❍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일이나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인원이 6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예	32	66.7%
아니요	16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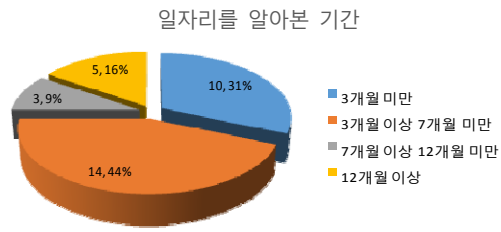


☐ 일자리를 알아본 기간

❍ 일자리를 알아본 기간으로는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 4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개월 미만' 31.8%, '12개월 이상' 15.6% 순으로 나타남

- 반면,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경우 9.4%로 가장 적은 응답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3개월 미만	10	31.3%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4	43.8%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	9.4%
12개월 이상	5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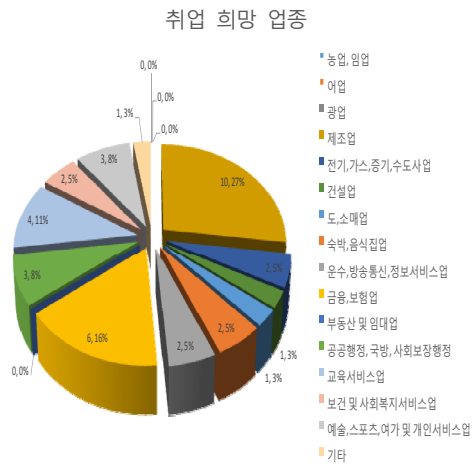


☐ 취업 희망업종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의 취업 희망 업종으로는 '제조업'이 2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업' 16.2%, '교육서비스업' 10.8%, '예술·스포츠. 여가 및 개인서비스업'과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이 각각 8.1%,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숙박·음식집업', '운수·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각각 5.4%으로 뒤를 이음

- 반면, ‘건설업’, ‘도·소매업’의 경우 각각 2.7%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것을 나타났으며, ‘농업·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0.0%로 모든 참여자의 취업 희망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농업, 임업	0	0.0%
어업	0	0.0%
광업	0	0.0%
제조업	10	27.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2	5.4%
건설업	1	2.7%
도·소매업	1	2.7%
숙박·음식집업	2	5.4%
운수,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	5.4%
금융, 보험업	6	16.2%
부동산 및 임대업	0	0.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3	8.1%
교육서비스업	4	10.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	5.4%
예술, 스포츠, 여가 및 개인서비스업	3	8.1%
기타	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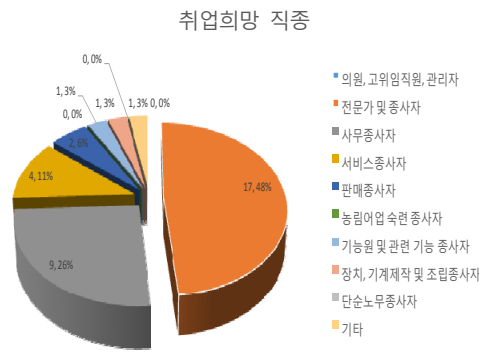


☐ 취업 희망직종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의 취업 희망직종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가’가 4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무종사자’ 25.7%, ‘서비스종사자’ 11.4%, ‘판매종사자’ 5.7%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기타’가 각각 2.7%로 나타났으며,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0.0%로 모든 참여자의 희망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0	0.0%
전문가 및 종사자	17	48.6%
사무종사자	9	25.7%
서비스종사자	4	11.4%
판매종사자	2	5.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	2.9%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1	2.9%
단순노무종사자	0	0.0%
기타	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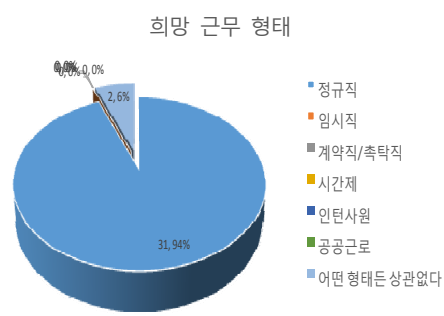


☐ 희망근무형태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의 희망근무형태는 '정규직'이 93.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가 6.1%로 나타남

- 반면 '임시직', '계약직/촉탁직', '시간제', '인턴사원', '공공근로'의 경우 0.0%로 모든 참여자의 희망근무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정규직	31	93.9%
임시직	0	0.0%
계약직/촉탁직	0	0.0%
시간제	0	0.0%
인턴사원	0	0.0%
공공근로	0	0.0%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2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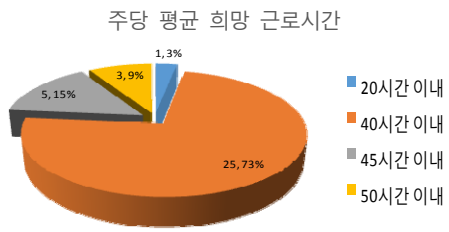


☐ 주당 평균 희망 근로시간

❍ 주당 평균 희망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가 7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5시간 이내' 14.7%, '50시간 이내' 8.8% 순으로 나타남

- 반면 '20시간 이내'의 경우 2.9%로 가장 적게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20시간 이내	1	2.9%
40시간 이내	25	73.5%
45시간 이내	5	14.7%
50시간 이내	3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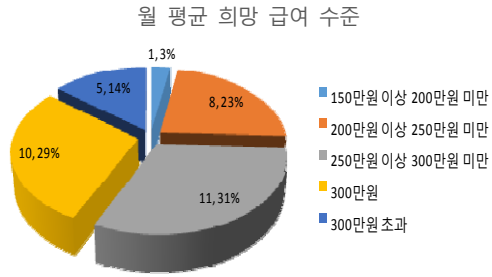


☐ 월 평균 희망 급여 수준

❍ 참여자의 월 평균 희망 급여 수준은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1.4%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0만원' 28.6%,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2.9%, '300만원 초과' 14.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 2.9%로 가장 적게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	2.9%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8	22.9%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1	31.4%
300만원	10	28.6%
300만원 초과	5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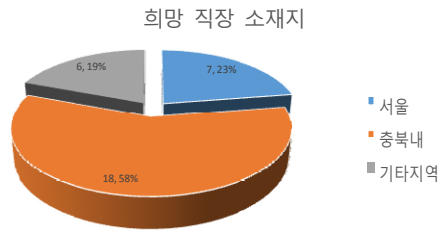


☐ 희망 직장 소재지

❍ 참여자의 희망 직장 소재지는 '충북 내'가 58.1%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22.6%로 뒤를 이었음

- 반면 '기타지역'의 경우 19.4%로 가장 적게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서울	7	22.6%
충북내	18	58.1%
기타지역	6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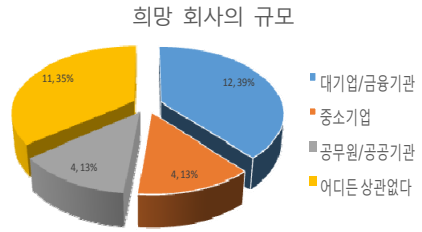


☐ 희망 회사 규모

❍ 희망 회사 규모로는 '대기업/금융기관'이 38.7%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디든 상관없다'가 35.5%로 나타남

- '중소기업'과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 각각 12.9%로 상대적으로 응답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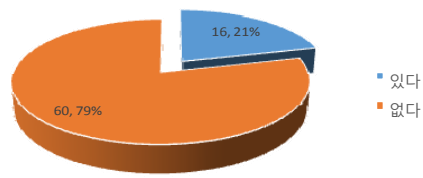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대기업/금융기관	12	38.7%
중소기업	4	12.9%
공무원/공공기관	4	12.9%
어디든 상관없다	11	35.5%



☐ 직장 이전 경력

❍ 참여자들의 직장 이전 경력은 '없다'가 78.9%로 직장 이전 경력이 있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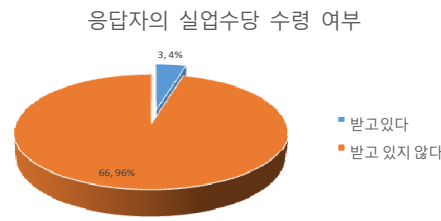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있다	16	21.1%
없다	60	78.9%



☐ 실업수당 수령 여부

❍ 실업수당 수령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는 '받고 있지 않다'가 95.7%로 많게 나타나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실업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받고 있다	3	4.3%
받고 있지 않다	66	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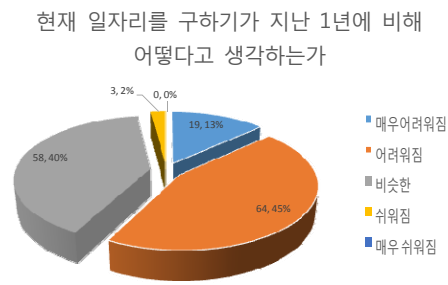


☐ 일자리 전망 - 현재(2017년 6월 1일 기준) 지난 1년 대비 현재 구직 난이도

❍ 참여자가 체감한 현재(2017년 6월 1일 기준) 지난 1년 대비 현재 구직 난이도는 '어려워짐'이 44.4%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슷함' 40.3%, '매우 어려워짐' 13.2%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쉬워짐'은 2.1%로 적게 나타났으며, '매우 쉬어짐'의 경우 0.0%로 모든 참여자가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매우 어려워짐	19	13.2%
어려워짐	64	44.4%
비슷함	58	40.3%
쉬워짐	3	2.1%
매우 쉬워짐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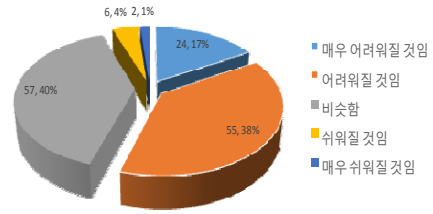
☐ 향후 1년 뒤 구직 난이도 예상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가 예상한 향후 1년 뒤 구직 난이도는 '비슷함'이 39.6%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려워질 것임' 38.2%, '매우 어려워질 것임' 16.7% 순으로 조사됨

- 반면, 5%미만의 응답으로는 ‘쉬워질 것임’ 4.2%, ‘매우 쉬워질 것임’ 1.4%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매우 어려워질 것임	24	16.7%
어려워질 것임	55	38.2%
비슷함	57	39.6%
쉬워질 것임	6	4.2%
매우 쉬워질 것임	2	1.4%

향후 1년 뒤 지금보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떨 것 같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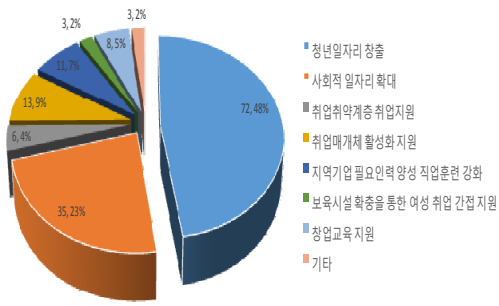
☐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적 추진 부문 - 1순위

❍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문 1순위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47.7%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 23.2%, ‘취업매개체 활성화 지원’ 8.6%, ‘지역기업 필요인력 양성 직업훈련 강화’ 7.3%, ‘창업교육 지원’ 5.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5%미만 응답으로는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4.0%,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 취업 간접 지원’ 2.0%, ‘기타’ 2.0% 순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해당 부문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청년일자리 창출	72	47.7%
사회적 일자리 확대	35	23.2%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6	4.0%
취업매개체 활성화 지원	13	8.6%
지역기업 필요인력 양성 직업훈련 강화	11	7.3%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 취업 간접 지원	3	2.0%
창업교육 지원	8	5.3%
기타	3	2.0%

충청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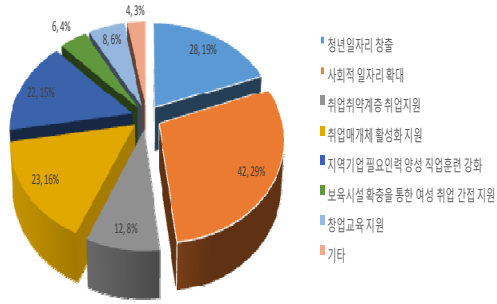
☐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적 추진 부문 - 2순위

❍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문 2순위로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가 29.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19.3%, '취업매개체 활성화 지원' 15.9%, '지역기업 필요 인력 양성 직업훈련 강화' 15.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8.3%, '창업교육 지원' 5.5%,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 취업 간접 지원' 4.1%, '기타' 2.8%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청년일자리 창출	28	19.3%
사회적 일자리 확대	42	29.0%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12	8.3%
취업매개체 활성화 지원	23	15.9%
지역기업 필요인력 양성 직업훈련 강화	22	15.2%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 취업 간접 지원	6	4.1%
창업교육 지원	8	5.5%
기타	4	2.8%

충청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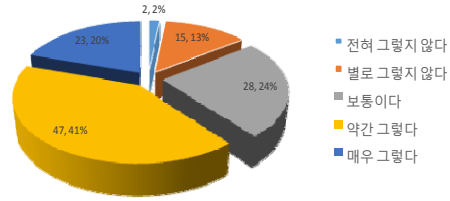
☐ 가치관 :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 가치관에 대한 물음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에 대한 응답으로는 '약간 그렇다'가 40.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24.3%, '매우 그렇다' 20.0%, '별로 그렇지 않다' 13.0%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1.7%로 가장 적게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1.7%
별로 그렇지 않다	15	13.0%
보통이다	28	24.3%
약간 그렇다	47	40.9%
매우 그렇다	23	20.0%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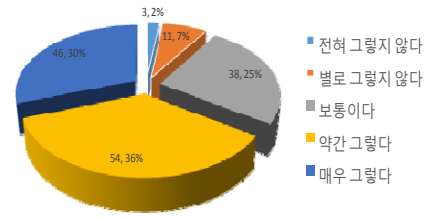
☐ 가치관 :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 가치관에 대한 물음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에 대한 응답으로는 '약간 그렇다'가 35.5%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30.3%, '보통이다' 25.0%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 7.2%, '전혀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응답은 2.0%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일보단 여가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2.0%
별로 그렇지 않다	11	7.2%
보통이다	38	25.0%
약간 그렇다	54	35.5%
매우 그렇다	46	30.3%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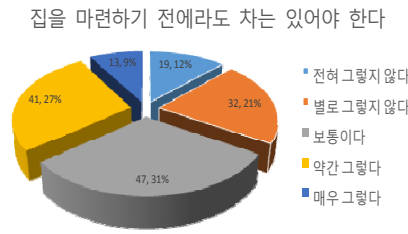


☐ 가치관 : 집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 가치관에 대한 물음 '집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다'가 30.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약간 그렇다' 27.0%, '별로 그렇지 않다' 21.1%, '전혀 그렇지 않다' 12.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매우 그렇다'의 경우 8.6%로 가장 적게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9	12.5%
별로 그렇지 않다	32	21.1%
보통이다	47	30.9%
약간 그렇다	41	27.0%
매우 그렇다	13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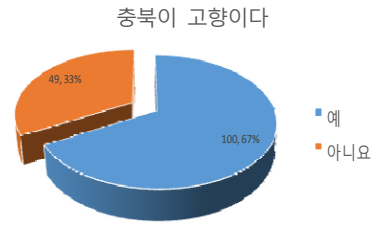
2) 충청북도 생활 관련

☐ “충북이 고향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 ‘충북이 고향이다.’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67.1%가 ‘예’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아니요’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9명으로 32.9%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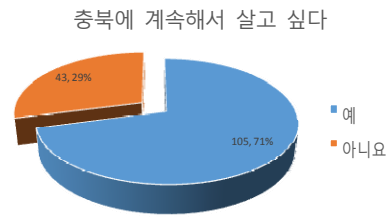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예	100	67.1%
아니요	49	32.9%



☐ 계속해서 충북에 살고 싶은가?

❍ ‘계속해서 충북에 살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예’가 70.9%로 많게 나타났으며, ‘아니요’의 경우 29.1%로 적게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예	105	70.9%
아니요	43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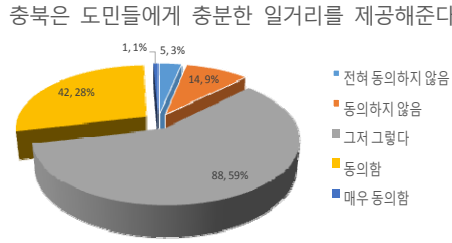


☐ 충북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해주는가?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충북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라는 의견에 '그저 그렇다'가 58,7%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함' 28.0% '동의하지 않음' 9.3% 순으로 나타남

-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의 항목들 응답에 비하여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충북이 도민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3.3%
동의하지 않음	14	9.3%
그저 그렇다	88	58.7%
동의함	42	28.0%
매우 동의함	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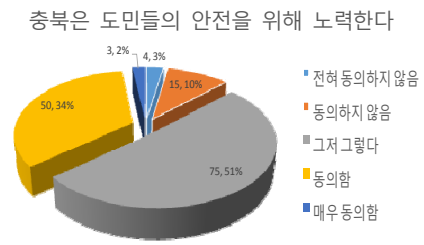


☐ 충북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가?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충북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의견에 '그저 그렇다'가 51.0%로 가장 많은 응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함' 34.0%, '동의하지 않음' 10.2% 순으로 조사됨

-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의 항목들 응답에 비하여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충북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2.7%
동의하지 않음	15	10.2%
그저 그렇다	75	51.0%
동의함	50	34.0%
매우 동의함	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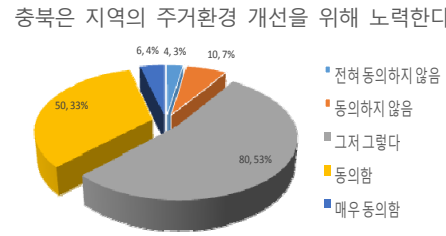


☐ 충북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가?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충북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견에 '그저 그렇다'가 5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함' 33.3%, '동의하지 않음' 6.7% 순으로 조사됨

-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의 항목들 응답에 비하여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충북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2.7%
동의하지 않음	10	6.7%
그저 그렇다	80	53.3%
동의함	50	33.3%
매우 동의함	6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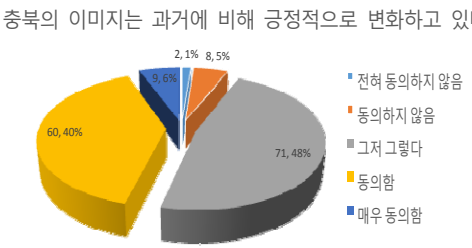


☐ 충북의 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충북의 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에 '그저 그렇다'의 응답이 47.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함' 40.0%, '매우 동의함' 6.0%, '동의하지 않음' 5.3% 순으로 나타남

-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의 항목들 응답에 비하여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충북의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1.3%
동의하지 않음	8	5.3%
그저 그렇다	71	47.3%
동의함	60	40.0%
매우 동의함	9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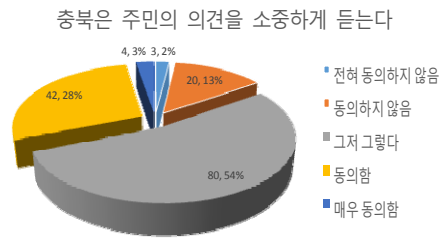


☐ 충북은 주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는가?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충북은 주문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는다.'는 의견에 '그저 그렇다'가 53.7%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함' 28.2%, '동의하지 않음' 13.4% 순으로 조사됨

-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의 항목들 응답에 비하여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충북이 주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3	2.0%
동의하지 않음	20	13.4%
그저 그렇다	80	53.7%
동의함	42	28.2%
매우 동의함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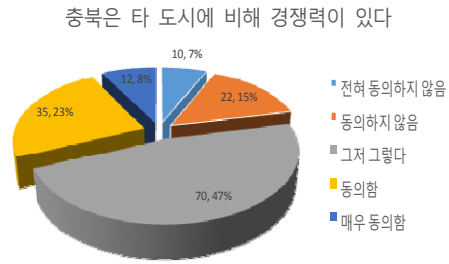


☐ 충북은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충북은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라는 의견에 '그저 그렇다'가 47.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함' 23.5%, '동의하지 않음' 14.8%, '매우 동의함' 8.1% 순으로 나타남

-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의 항목들 응답에 비하여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충북이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10	6.7%
동의하지 않음	22	14.8%
그저 그렇다	70	47.0%
동의함	35	23.5%
매우 동의함	12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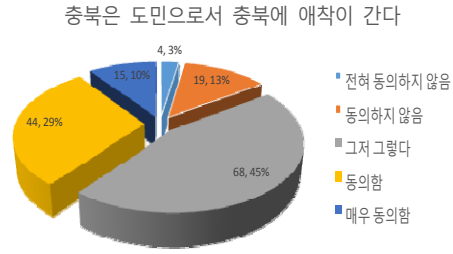


☐ 도민으로서 충북에 애착이 가는가?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충북은 도민으로서 충북에 애착이 간다.'라는 의견에 '그저 그렇다'가 45.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함' 29.3%, '동의하지 않음' 12.7%, '매우 동의함' 10.0% 순으로 나타남

-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의 항목들 응답에 비하여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도민으로서 충북에 애착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4	2.7%
동의하지 않음	19	12.7%
그저 그렇다	68	45.3%
동의함	44	29.3%
매우 동의함	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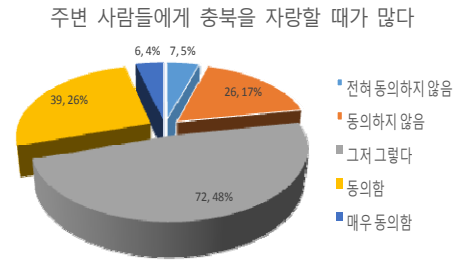


☐ 주변 사람들에게 충북을 자랑할 때가 많은가?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충북을 자랑할 때가 많다.'라는 의견에 '그저 그렇다'가 48.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함' 26.0%, '동의하지 않음' 17.3% 순으로 조사됨

-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의 항목들 응답에 비하여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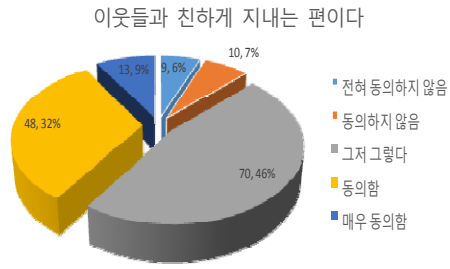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4.7%
동의하지 않음	26	17.3%
그저 그렇다	72	48.0%
동의함	39	26.0%
매우 동의함	6	4.0%



☐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인가?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라는 의견에 '그저 그렇다'가 46.7%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함' 32.0%, '매우 동의함' 8.7% 순으로 나타남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9	6.0%
동의하지 않음	10	6.7%
그저 그렇다	70	46.7%
동의함	48	32.0%
매우 동의함	13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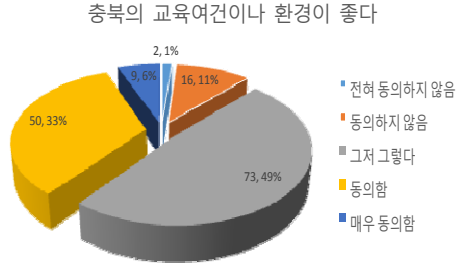


☐ 충북은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좋은가?

❍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충북은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좋다.'는 의견에 '그저 그렇다'가 48.7%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의함' 33.3%, '동의하지 않음' 10.7% 순으로 나타남

-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의 항목들 응답에 비하여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은 충북이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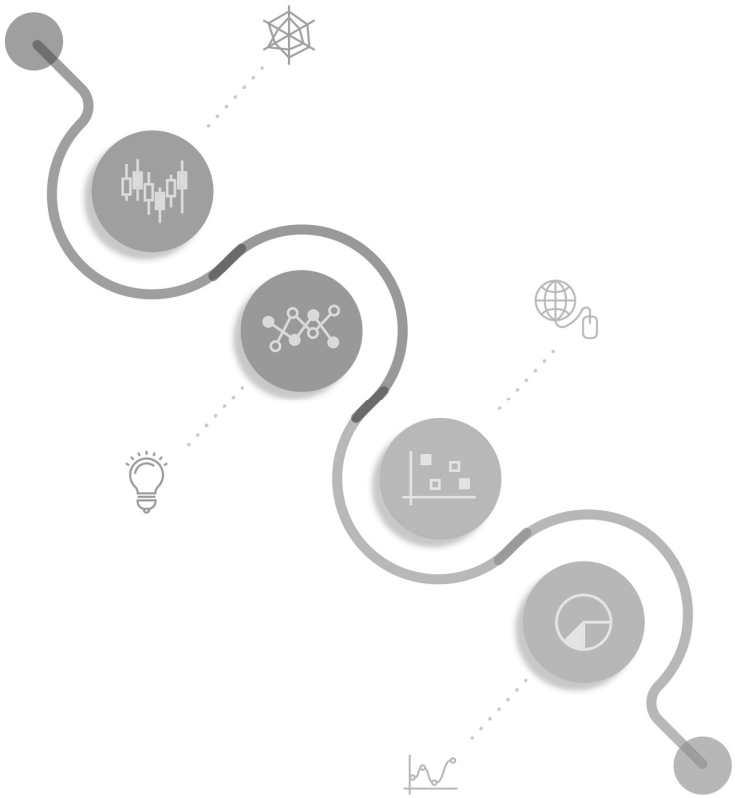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1.3%
동의하지 않음	16	10.7%
그저 그렇다	73	48.7%
동의함	50	33.3%
매우 동의함	9	6.0%



제5장 일자리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제1절 충북 고용승수 산출

제2절 충북 일자리 대응방안



제 5 장 일자리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제1절 충북 고용승수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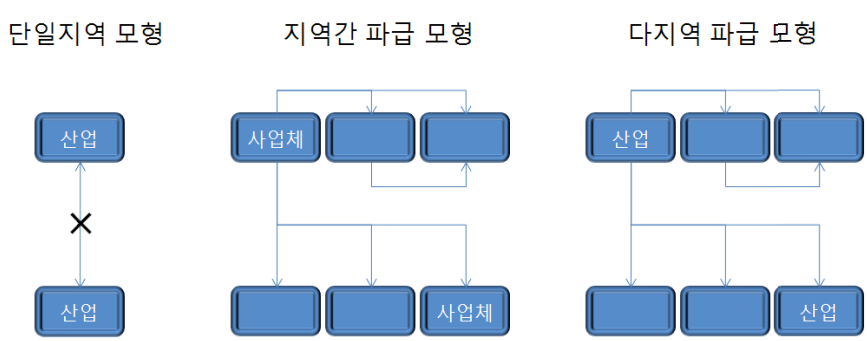
1. 충북 고용승수 산출 개요

❍ 지역의 발전효과로 단일 지역 모형(single-regional input output table), 지역간 투입산출표(inter-regional input output table), 다지역투입산출표(multi-regional input output table)를 이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

❍ 이중 지역간 파급 모형과 다지역의 파급 모형을 이용한 경우는 단일 지역 모형을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지역내파급효과와 지역간 파급효과로 구분

- 이는 단일 지역 모형을 이용한 한계로 나타나는 지역간 교역을 고려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용했을 때 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의 측정이 가능하며, 사업체 및 산업의 고려에 따라서 지역간 파급 모형과 다지역 파급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림 5-1> 분석모형별 차이



❍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용할 경우의 장래 예측치의 추정은 단일지역, 지역간, 다지역으로 구분되어 추정되었으며, 이는 정태적 및 동태적으로 분석되어 단일시점과 시점간의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정태적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직접조사법 등 전국 투입산출표에서 추출하여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작성의 오차를 배제하여 사용한데 의의가 있음

2. 모형별 고용파급효과 개요

1) 단일지역모형의 파급효과

❍ 단일지역모형을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으로 도출된 고용승수는 고용승수는 산업의 생산량과 산업의 고용자와의 관계가 측정 가능하다면 각 산업 제품에 대한 외부 수요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

- 고용 승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자 투입산출계수($Z_{n+1,j}$)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고용 투입산출계수는 산업 j제품 1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고용의 가치를 의미
- 고용계수($Z_{n+1,j}=\frac{e_j}{X_j}$)는 산업 j제품 1단위 생산에 고용되는 고용자의 수(e_j)를 나타내며, 산업 j에 고용된 종사자 수($e_j=\frac{W_j}{w_j^{avg}}$)는 산업 j의 평균 노동임금(w_j^{avg})과 투입산출표에서 가계 부문의 노동 소득을 이용하여 측정

2) 지역간모형의 파급효과

❍ 지역간모형을 이용했을 때의 고용승수는 j제품 1단위 최종 수요의 변화에 의한 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고용승수는 E_j^A에 의해서 산출되며, 산업별 고용계수 z_{n+1}^A를 고려한 E_j^A는 $E_j^A = \sum_i z_{n+1}^A \lambda_{ij}^{AA}$에 의해서 산출

3) 다지역모형의 파급효과

❍ 지역 생산의 변화에 따라 지역간모형의 효과는 지역내 효과(intraregional effect)와 지역간 효과(interregional effect)로 구분
- 지역내효과는 최종 수요 1단위 변화에 따라 지역내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지역간효과는 최종 수요 1단위 변화에 따라 지역간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
- 또한 지역내효과와 지역간효과의 합은 전국효과(national effect)로 최종 수요 1단위 변화에 따라 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냄
- 지역내효과와 지역간효과는 생산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로 세분화되어 구분이 가능하며, 지역내파급효과(intraregional effect), 지역간확산효과(interregional spillover effect), 그리고 지역간환류효과(interregional feedback effect)로 세분화되어 구성

❍ 다지역모형의 파급효과는 지역내효과와 지역외효과로 구분이 되며, 지역내/지역간의 고용승수가 차별적으로 도출됨
- 지역내 고용승수는 j제품 1단위 최종 수요의 변화에 의한 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E_j^{AA}와 E_j^{BB}에 의해서 산출되며, 산업별 고용계수 z_{n+1}^A와 z_{n+1}^B를 고려한 E_j^{AA}와 E_j^{BB}는 $E_j^{AA} = \sum_i z_{n+1}^A \lambda_{ij}^{AA}$와 $E_j^{BB} = \sum_i z^B \lambda_{ij}^{BB}$에 의해서 산출
- 지역간 고용승수는 j제품 1단위 최종 수요의 변화에 의한 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E_j^{AB}에 의해서 산출되며, 산업별 고용계수 z_{n+1}^A를 고려한 E_j^{AB}는 $E_j^{AB} = \sum_i z_{n+1}^A \lambda_{ij}^{AB}$에 의해서 산출

❍ 또한 지역간 상호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확산효과(spillover effect)와 환류효과(feedback effect)를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

- 특히 지역의 투입산출표는 지역의 제품 생산에 있어서 지역의 투입과 산출만을 고려함으로써 지역간 교역에 의한 확산효과와 환류효과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간 투입산출표의 작성은 확산효과와 환류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간 교역을 보다 정확한 파급효과의 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또한 지역간 투입산출 모형은 각 산업 제품의 지역간 흐름을 지역내 산업으로부터 직접 조사하지만,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은 각 산업의 지역간 교역을 고려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모형별 고용파급효과

1) 단일모형 파급효과

<표 5-1> 충청북도 단일모형 분석 결과

구분	생산승수	소득승수	고용승수	전방효과	후방효과
농림수산품	1.7322	0.1491	0.0547	0.8289	0.9650
광산품	1.8022	0.3394	0.0122	0.5799	1.0040
제조업	2.1005	0.2843	0.0153	3.2724	1.1702
전력, 가스 및 수도	1.5439	0.2943	0.0069	0.9440	0.8601
건설	2.0353	0.4275	0.0190	0.6243	1.1339
도소매	1.6595	0.3666	0.0455	0.8326	0.9245
음식점 및 숙박	2.0487	0.3364	0.0405	0.7668	1.1413
운수 및 보관	1.8677	0.4547	0.0271	0.8383	1.0405
통신 및 방송	1.8251	0.3223	0.0117	0.8524	1.0168
금융 및 보험	1.6243	0.3635	0.0137	0.9840	0.904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000	0.2634	0.0118	1.3007	0.8356
공공행정 및 국방	1.4865	0.4958	0.0140	0.5783	0.8281
교육 및 보건	1.5127	0.6615	0.0222	0.6175	0.84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2.3916	0.3592	0.0299	0.9799	1.3324

2) 지역간모형 파급효과

<표 5-2> 지역간모형 고용승수 결과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농림 수산품	6.3	1.0	1.5	-	-0.3	1.1	1.0	0.9	10.1	1.1	0.4	2.8	0.5	0.2	0.2	1.1
광산품	-1.1	-0.1	-0.8	-	1.1	-1.4	2.2	-1.9	-0.6	0.2	-0.1	-13.4	-0.0	0.6	-0.2	2.3
제조업	0.1	-0.0	-0.0	-	-0.2	-0.2	-0.5	1.9	-0.5	0.0	-0.1	0.2	-0.0	-0.0	0.1	0.1
전력, 가스 및 수도	-1.3	0.0	0.1	-	0.5	0.2	-1.7	-9.8	-7.0	-0.1	0.1	-1.5	-0.0	0.0	0.5	-0.6
건설	0.1	-0.1	-0.1	-	-0.1	-0.6	-0.0	3.8	-2.1	-0.0	-0.1	1.4	-0.0	0.2	-0.1	0.4
도소매	-0.1	-0.0	-0.3	-	0.4	-0.5	0.4	2.4	-3.8	-0.0	0.0	-0.0	-0.0	0.1	-0.3	1.1
음식점 및 숙박	-0.0	-0.0	-0.1	-	0.0	0.1	0.3	-1.6	0.0	-0.0	0.0	-0.2	0.0	0.0	-0.0	-0.0
운수 및 보관	-0.0	-0.0	-0.3	-	0.7	-0.4	0.4	-0.5	-0.5	-0.0	-0.0	-1.3	-0.0	-0.0	-0.1	0.8
통신 및 방송	-0.2	0.1	0.6	-	-0.0	0.1	-1.0	-0.2	1.2	0.1	-0.1	0.3	-0.0	-0.1	0.1	0.2
금융 및 보험	0.1	0.1	0.6	-	-0.1	0.0	-0.1	0.9	0.1	0.0	-0.1	-0.0	0.0	0.0	0.0	0.2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	-0.0	-0.1	-	-0.1	-0.1	0.1	3.1	-3.2	-0.0	-0.0	0.8	-0.0	0.0	-0.2	0.3
공공행정 및 국방	0.2	-0.1	-0.4	-	0.8	0.4	0.4	-8.7	6.9	-0.2	0.0	-1.0	0.0	-0.4	-0.1	-2.6
교육 및 보건	-0.0	-0.1	-0.5	-	0.8	0.0	0.4	-2.8	0.1	-0.1	0.1	-1.7	0.0	0.3	-0.1	-1.1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2	-0.1	-0.5	-	0.4	0.5	0.2	-7.3	4.3	-0.1	-0.0	-0.3	0.0	-0.1	-0.1	-0.9

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고용승수는 100을 곱하여 산정

3) 다지역모형 파급효과

(1) 지역내효과

<표 5-3> 다지역모형 지역내 고용승수 결과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농림 수산품	4.3	0.2	0.7	-	0.7	0.7	0.7	0.4	0.4	0.9	-0.2	1.8	0.4	0.4	-0.1	2.9
광산품	-3.7	-0.2	0.3	-	0.9	-0.6	0.1	0.8	-1.1	1.0	-0.8	-0.5	0.0	0.3	0.2	-9.2
제조업	0.9	-0.1	-0.1	-	0.3	0.1	0.1	-0.1	0.0	0.0	0.1	0.6	-0.0	0.1	-0.2	3.2
전력, 가스 및 수도	0.4	-0.0	0.0	-	0.6	-0.0	0.4	-0.1	-0.0	0.1	0.0	0.0	0.0	-0.3	0.0	-0.9
건설	-0.0	0.1	-0.1	-	0.2	0.1	-0.0	-0.1	-0.1	0.0	0.1	0.3	-0.0	0.1	0.0	0.5
도소매	-0.2	0.1	0.1	-	0.6	0.2	-0.3	0.4	-0.2	0.3	-0.7	-0.8	0.0	-0.2	0.3	0.0
음식점 및 숙박	-1.3	0.5	0.0	-	-0.1	-0.3	-0.5	0.3	-0.4	0.2	-0.5	-2.1	0.0	-0.8	-0.0	4.4
운수 및 보관	-0.5	0.1	0.1	-	0.2	-0.1	0.0	0.2	-0.1	0.1	-0.4	-0.3	0.0	-0.1	0.1	-1.7
통신 및 방송	0.4	-0.2	-0.6	-	1.3	1.4	-0.1	0.2	-0.1	-0.0	-0.2	-0.1	-0.1	0.7	-0.1	0.1
금융 및 보험	-0.0	-0.1	0.0	-	-0.6	0.5	0.0	-0.3	0.0	-0.0	0.1	0.0	-0.1	0.3	-0.0	0.0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2	0.1	0.1	-	0.3	-0.0	-0.1	-0.1	-0.1	0.0	-0.4	0.0	-0.0	-0.1	0.1	0.3
공공행정 및 국방	-1.0	-0.1	0.1	-	0.4	-0.1	0.4	-0.1	-0.3	0.0	-1.0	0.8	0.0	-0.1	0.1	-7.3
교육 및 보건	0.4	0.6	0.1	-	0.2	-0.2	-0.1	0.2	-0.3	0.1	-0.8	-0.9	0.0	-0.5	0.1	0.3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1	-0.0	0.1	-	0.5	-0.0	0.1	-0.1	-0.2	0.0	-0.8	0.1	0.0	-0.2	0.1	-0.6

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고용승수는 100을 곱하여 산정

(2) 지역간효과

<표 5-4> 다지역모형 지역간 고용승수 결과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농림 수산품	-1.6	9.3	0.5	-1.6	-1.0	-0.3	0.0	0.2	-2.3	0.1	1.9	0.3	0.7	0.1	-3.0	0.3
광산품	-6.0	15.0	-9.5	3.4	1.7	14.7	-1.6	-0.2	-6.5	0.5	3.0	-1.0	0.4	1.3	7.8	4.1
제조업	1.5	-1.1	-0.3	1.4	-0.7	-0.1	-0.2	0.2	0.4	-0.1	-0.4	0.1	-0.0	-0.4	-5.3	0.2
전력, 가스 및 수도	0.2	-0.0	0.1	0.2	-1.1	-2.9	3.3	-1.2	0.7	-0.4	-0.1	-0.5	-0.3	-0.4	2.8	0.6
건설	-0.1	-3.0	0.5	1.8	-0.4	-2.9	-0.0	0.5	0.3	0.0	-0.6	-0.0	-0.2	-0.0	-0.4	-0.2
도소매	-0.6	2.9	0.2	0.2	-1.3	-6.7	0.1	0.7	-1.2	0.4	1.0	-0.5	-0.5	6.2	6.1	-0.2
음식점 및 숙박	-2.6	-1.6	0.9	-2.8	0.5	-7.7	-0.6	0.9	-2.4	1.8	1.5	-0.5	-2.8	28.7	2.6	-1.6
운수 및 보관	-0.9	4.1	-2.1	0.5	0.7	1.1	-0.4	0.4	-0.4	-0.1	0.8	-0.2	0.3	1.1	4.0	0.6
통신 및 방송	0.1	-1.4	-0.5	-1.0	-3.5	-2.4	-0.7	0.1	0.4	0.2	1.0	-0.3	1.2	1.0	-1.1	0.1
금융 및 보험	-0.0	0.5	0.2	-0.2	1.4	-1.0	0.5	-1.2	0.6	0.0	0.2	0.5	1.2	-0.1	-0.3	0.1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1	-1.0	0.6	1.0	-0.7	-1.9	-0.1	0.3	-0.2	-0.0	0.5	-0.2	0.2	0.2	1.0	-0.2
공공행정 및 국방	-1.3	1.9	-2.0	1.1	-0.1	4.4	-0.1	0.8	-2.2	-1.2	1.9	-0.2	4.9	-15.8	5.9	2.8
교육 및 보건	0.7	-3.3	0.6	1.6	0.0	-1.1	-0.3	0.5	-1.2	-0.3	1.6	-0.4	0.4	0.1	9.1	-0.4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1	0.4	-0.1	0.4	-1.0	1.0	-0.1	1.0	-1.5	-0.3	1.4	-0.2	0.7	-0.2	2.4	0.1

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고용승수는 100을 곱하여 산정

제2절 충북 일자리 대응방안

1. 청년실업대책 기본방향

1) 충북에 특화된 일자리 업종 개발

❍ 지역 산업분야별로 첨단업종과 낙후업종 간에 괴리 발생
- 이러한 차이는 구직부문에는 실업을 발생시키고, 구인부문에는 인력부족의 문제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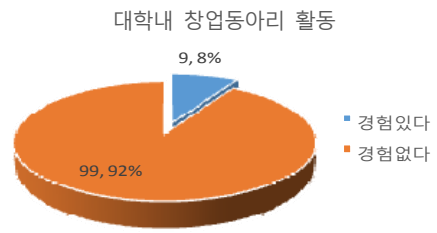
❍ 반면,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고용창출효과와 고용구조 개선효과가 약화되었으며, 타지역에 비해 낮은 자체 고용 및 파급이 이루어짐
-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학교 및 직업관련 프로그램의 개편 방안이 필요
- 또한, 지자체 사업체 수요 대비 실질적인 노동 공급 매치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방안의 구축 및 실행이 필요

❍ 청년계층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직종선호 또는 취업관행에 대한 인식변화반영 필요
- 청년계층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직종선호 또는 취업관행에 대한 인식변화반영으로 청년계층은 대기업 직원 또는 공공기관을 조건 없이 목표로 하기보다는 적공에 맞는 분야의 계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관 직종을 선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요에 맞춘 충북에 특화된 일자리 공급 개발이 필요

2) 창업교육을 통한 사전적 일자리 구득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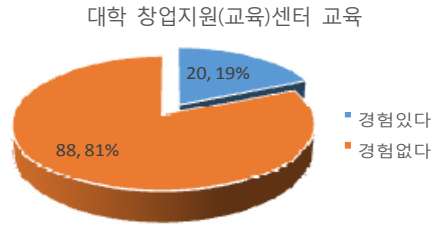
❍ 창업교육을 통한 자생적 일자리 확보 노력 필요
- 대학 내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이 없는 것에 근거함으로써 창업교육을 통한 예비 교육이 필요

항목	빈도수	비율
경험 있다	9	8.3%
경험 없다	99	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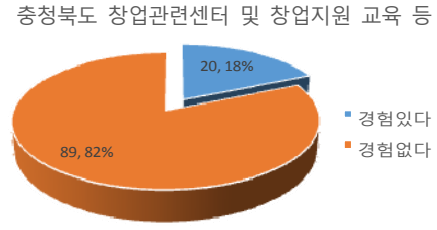


- 또한, 대학창업지원(교육)센터 및 충북에서 주관하는 교육 경험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창업지원센터 교육을 통해 사전적인 직업 체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

항목	빈도수	비율
경험 있다	20	18.5%
경험 없다	88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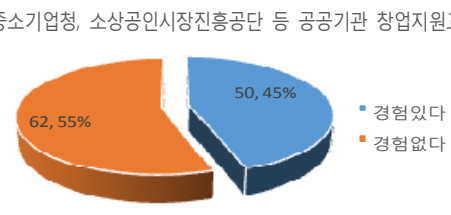
항목	빈도수	비율
경험 있다	20	18.3%
경험 없다	89	81.7%



❍ 공공기관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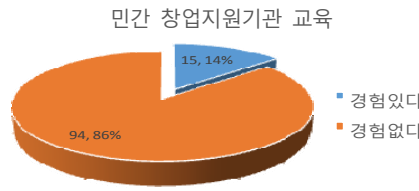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창업지원 교육과 연계한 충북 사업체의 자체 노력 필요

항목	빈도수	비율
경험 있다	50	44.6%
경험 없다	62	55.4%



❍ 더불어, 민간창업지원기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 필요

항목	빈도수	비율
경험 있다	15	13.8%
경험 없다	94	86.2%



3)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자리 제공 방안 도출

❍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에 맞춰 해외 취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확보 노력 필요

- 해외취업의 활성화는 청년계층 실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제공
- 도내 우수 인력의 해외진출은 향후 그들이 배운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충북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충북형 해외취업 종합지원체제를 구축
- 통합전산망의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부문 해외취업·인턴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 충북의 청년계층을 위한 실업대책이 실업률 감소와 같은 양적인 목표 달성이 아닌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단축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청년 취업애로층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 추진

- 청년계층 실업 축소 방안을 연령별, 전공별 등으로 구분하여 취업애로 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 확보 필요
- 더불어, 맞춤형 일자리 확보 후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한 문제해결형 접근방법 필요

❍ 청년계층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실업문제 해소 대책의 세분화 필요
- 청년계층을 위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실업대책을 근간으로 설정
- 더불어 연수,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으로의 일원화된 연계 및 사후관리로 단계별 일자리 방안 투입

❍ 비자발적 실업에 있는 고학력 비경제활동 청년층에 대한 심화교육과정 개편 필요
- 현행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의 현실적인 반영으로 현재 충북 산업부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향후 노동자 확보를 수요공급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교육, 정보축적, 성과의 공유 등에 대한 보조장치 마련

4) 효율적인 고용인프라 구축

❍ 청년 고용의 증대 및 실질적인 효과 견인을 위해서는 고용인프라 확충에 기반한 일자리정책 운영 필요
-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대학 및 직업훈련학교와 노동시장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 필요
- 충북 청년패널조사에 근거하여 교육생과 졸업생의 패널을 확보함으로써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

❍ 청년계층을 위한 취업알선과 취업상담 기능 강화
- 학교 내 직업정보센터 설치 및 전문상담원 배치로 사전적인 조치 실행

❍ 경제활동 참여연령을 낮추기 위한 제도 도입
- 고학력 청년계층의 실업률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여 연령대의 하향 조정을 통해 젊은 세대의 참가율 촉진
- 산학협력 취업연계 제도 도입,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등 직업교육학교 졸업자의 실질적 취업연계 도모

❍ 차별화된 충북형 대학교육제도의 시행
-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행동양식이나 사고 틀 대신 충북의 일자리 특성에 맞는 실전적인 학문 공급
- 규모 위주의 대학 운영보다는 연구중심의 일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
- 이를 위해, 대학 간 통합, 학과 개편, 전문대학을 직업훈련 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2. 일자리 100일 플랜의 조기 대응

❍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0일동안의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춘 국정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의 공감대 확산 기반 구축
- 기발표된 정책들이 충북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평가를 강화
- 질 좋은 일자리가 공공·민간부문에서 창출되어 고용증가를 통해 충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일자리 창출

❍ 2017년 8월 8일 발표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의 이행상황에 맞는 주기적인 점검 필요
-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 특히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의 일자리 성과 반영될 수 있는 조기 대응 노력 필요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 새정부 출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관계되는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일자리 확보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 적용

❍ 벤처 및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연계한 일자리 제공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함으로써 주력산업의 발전, 신규투자 유치, 신산업 발전 등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고려

❍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

❍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충북형「보건의료 일자리」확보

3. 충북 주력 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확보

❍ 충청북도 주요 사업은 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 사회 및 기타서비스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산업 특성은 1차 산업의 높은 발전가능성, 2차 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 3차 산업 중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산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조업으로 인한 높은 특화도와 고용순변화 창출 가능성, 산업간 연계효과의 창출 가능성은 충청북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차 산업은 전국적인 우위는 있는 반면, 충청북도에서의 내적 성장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충청북도의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간 연계는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조업은 충청북도 산업 연계에 있어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충청북도의 건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농림수산품은 전국 대비 우세하나 타지자체로의 연계를 고려할 경우에는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동력 확보가 필요함

<표 5-5> 충북 산업 경쟁력 종합

구분	입지계수법		변이 할당법	투입산출법		종합	순위
	종사자	사업체	전국	전방 효과	후방 효과		
농림수산품	○	○	○			3	5
광산품	○	○	○		○	4	2
제조업	○	○	○	○	○	5	1
전력, 가스 및 수도	○	○	○			3	5
건설	○	○			○	3	5
도소매		○	○			2	10
음식점 및 숙박	○	○	○		○	4	2
운수 및 보관			○		○	2	10
통신 및 방송					○	1	14
금융 및 보험		○	○			2	1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	○		3	5
공공행정 및 국방	○	○				2	10
교육 및 보건	○	○	○			3	5
사회 및 기타서비스	○	○	○		○	4	2

○ 반면,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에는 충청북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파급력을 보유

- 따라서, 전력, 가스 및 수도업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높은 산업의 일자리 확보 노력 경주
- 더불어, 높은 3차 산업의 일자리 잠재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업 및 창업 여건을 활용

4. 충북 차원의 일자리 정책 개발

□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현재 추진 정책 사업의 실효성 검토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개발

○ 현재 충청북도가 추진해 오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청년실업해소 혹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각종 정책 사업의 실효성 검토

- 고학력 청년인력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 향상

-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인턴사업, 기업체 인턴사업, 그리고 산·학 인턴사업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 해외 인턴십'사업 운영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 새터민 직업훈련 / 영세자영업자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
-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표 5-6> 직접일자리 유형 및 수행

(단위: %)

구분		사례수	공원 및 녹지	지자체 공공 시설	산림	사회 복지 시설	도시 거리	교육장
전체		(2,281)	14.2	20.6	6.0	6.6	7.9	4.2
직접 일자리 유형	공공업무지원형	(751)	14.1	31.6	6.5	7.3	8.9	5.7
	경기대응형	(212)	25.9	15.1	19.3	0.5	15.6	1.9
	사회서비스형	(104)	6.7	5.8	8.7	30.8	1.9	3.8
	인턴형	(56)	1.8	39.3	-	3.6	-	1.8
	사회봉사복지형	(107)	14.0	15.9	0.9	19.6	13.1	1.9
	기타	(858)	16.2	17.8	4.3	4.5	7.6	4.9
지자체 유형	광역	(234)	12.0	15.0	1.3	8.1	2.1	5.6
	기초	(2,047)	14.4	21.2	6.5	6.4	8.6	4.1
지역	서울	(238)	7.1	22.7	0.8	11.3	9.7	5.5
	부산	(79)	5.1	32.9	8.9	13.9	5.1	7.6
	대구	(33)	6.1	6.1	-	12.1	15.2	9.1
	인천	(52)	5.8	28.8	1.9	15.4	11.5	9.6
	광주	(120)	12.5	30.8	5.0	9.2	1.7	5.8
	대전	(32)	25.0	25.0	6.3	9.4	3.1	-
	울산	(22)	18.2	13.6	13.6	-	4.5	-
	경기	(227)	14.5	15.0	10.6	7.5	7.9	6.6
	강원	(87)	10.3	11.5	1.1	5.7	3.4	1.1
	충남	(462)	21.4	21.4	8.7	3.5	12.6	1.1
	충북	(94)	11.7	14.9	13.8	6.4	1.1	3.2
	전남	(128)	14.1	17.2	2.3	8.6	5.5	0.8
	전북	(51)	9.8	29.4	2.0	9.8	7.8	5.9
	경남	(383)	16.2	19.3	4.4	4.2	9.4	6.3
	경북	(272)	12.1	20.6	6.3	3.7	4.4	3.7
	제주	(1)	-	-	-	-	-	-
권역	수도권	(604)	10.3	18.7	4.6	9.4	8.3	5.6
	영남권1	(484)	14.5	21.3	5.6	5.6	8.5	6.2
	영남권2	(305)	11.5	19.0	5.6	4.6	5.6	4.3
	호남권	(300)	12.7	24.7	3.3	9.0	4.3	3.7
	중부권	(588)	20.1	20.6	9.4	4.3	10.2	1.4

□ 청년 고용촉진정책의 방향 설정

○ 청년 일자리확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

○ 청년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교육기간과 수요공급 논리 개발 및 운영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직업고등학교, 충북내 대학, 직업훈련학교 및 기관, 사업체간 네트워킹

○ 21세기 선도 충북 청년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종합정책 수립
- 충북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충북 청년고용촉진 중장기 종합 대책」 수립

○ 충북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자구노력 확대를 통한 청년층 노동풀 확보
- 외부 투자 유치 확대
- 지역내 우수 기업 육성 및 지원
-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과의 고용 계획 수립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확보 전략 구축
- 충북지역의 전략산업별 고용계획 수립
-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고려되는 교육, 의료, CT, IT, BT에 관한 전략 수립

○ 청년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과 직업 훈련 등 일자리 개발을 위한 기반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민관 협력 시스템 운영

○ 청년고용·인적자원개발의 총괄 조정 기구의 운영
- 청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고용지원 및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기획·조정하는 총괄 조정 기구 설립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고용 촉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 중앙정부 청년고용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청년 인턴제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해외 취업, 청년 스타트 정책 등 중앙정부에서 운여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 사업 지원 및 추가적인 도차원의 예산 마련

○ 취약계층 고용 지원책 마련 및 강화
- 차상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회의 균등 제공

○ 충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강화
- 충북내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및 복지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부적 및 인적자원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여 우수 노동력의 유입 촉진
- 직업훈련 기관간 연계, 우수 환경 유지 중소기업 선발 및 확대 지원,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방안 구축 등과 함께 중앙부처 사업의 활용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시스템 도입

□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천 과제

○ 고학력 청년연수 인턴제와 일자리 연계 강화
- 산·학·행 인턴제의 효과성 증대
- 행정기관 연수인턴제를 점차 기업체 인턴제로 전환
- 기업체 인턴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 지원 강화

○ 장기 청년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실직이 3개월 이상 된 청년실업자 대상으로 직업훈련 제공
- 중앙정부에서 지원·실시하는 실업자 직업훈련교육과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의 질적 개선

○ 우량 중소기업 유치단 운영 및 지원
- 도외 IT·BT 분야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유치단 상시 운영 및 지원
- 도내의 IT·BT 분야 우량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 발굴 및 지원

○ 타시·도 우량 중소기업「충북 일자리박람회」참가 확대 지원

○ 도내 대학 취업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지원 사업
- 도내 대학 취업관계자 간에 다양한 취업정보 교류와 협력 체제 구축
- 도내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직업능력개발원, 진로상담 기관 등의 적극 참여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빈곤아동, 결식아동, 학습부진 아동, 가정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학습·교육·놀이 등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및 인력지원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및 고학력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 청년고용·인력수급 조사 지원 사업
- 청년인적자원 및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청년인력수급 분석과 청년고용·인적자원의 지표개발

○ 농어촌 지역 청년 리더 양성 사업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을활력·재생을 위한 청년 리더 양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젊은 청년층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 지원

○ 청년 예비경영인 창업지원 컨설팅 교육사업
- 청년 예비경영인 창업을 위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
- 창업 희망하는 청년 예비경영인에 대한 실태 조사

○ 청년 고용·인적자원의 정보 DB 구축 사업
- DB 구축을 위한 청년층 고용·인적자원 자료 수집을 위한 지표 개발
- 충북도외 이주 청년층 고용·인적자원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통계 및 DB 구축

【참고문헌】

김신양. (2007).「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 그 유용성과 가능성- 충북 청주· 청원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보센터

김은정. (2005). "미국 최저 소득계층 여성가장의 취업과 일상생활에서의 곤궁경험".「가족과 문화」17(1): 85-114.

마상진 외,『취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2015.

이인재. (2006).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정책과 사회서비스 인력".「월간 복지동향」98: 14-19.

채창균·오호영·윤형한·정재호·신동준·이인재(2012). 주요 청년고용 정책 이슈 분석. 기본연구 2012-3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강식·박철성·장기표·김별·이종수(2014).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고용노동부.

하미승· 강황선. (2002).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의 지역사회 구축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 11(4): 47-74.

한상철·김영한(200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인생관, 가정관, 교육관, 직업관. 교육학논총, 24(1). pp.55-79.

행정안전부·지방행정연수원(2010),「2010년도 지역경제·지역개발 현장 사례집」.

Boyle, P.G.(1982). Planning Better Program. New York: McGrow-Hill.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3).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3 : A Generation at Risk.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부 록】

1. 2017년 충북 청년일자리조사(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체)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도민들을 대상으로 『**충북 청년실업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충북 도민의 생활, 일자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충청북도가 도민서비스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일반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주관기관	충북도청	조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 소장 박승규

조사표 작성 요령

충북 소재 사업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충북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충북 산업·경제에 대한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향후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됩니다. 조사표에 기록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는 본사뿐만 아니라 연구소, 공장 등 모든 사업장 대상 조사입니다.

○ 본 조사표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2016년 기준입니다.

○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문자는 한글 또는 영문 정자로 기입합니다. 선택형 질문은 해당번호 한개만 선택하고, 중복응답은 복수의 해당번호를 기재하거나 해당번호에 직접 동그라미(O)를 표시하면 됩니다.

○ 조사표 작성 시 일부 조사항목의 내용을 정정하였을 때는 반드시 이와 연관되는 항목은 정정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회수 시에는 조사표 앞쪽 하단에 있는 조사표 작성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추후 조사표 기재 상 의문이 있는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Ⅰ 업체개요 (2017년 6월 1일 기준)

총 종사자수 (대표자 포함)	_____ 명	표준산업분류	□□
주생산품/ 취급품목		업체(사업장) 위치	충청북도 ----------시(군)

Ⅱ 업체 일반 현황 (2016년 6월 1일 기준)

문1. 일반 현황

회사형태	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상장여부	① 거래소 ② 코스닥 ③ 코넥스	④ 비상장
대표자 특성	① 설립자 ② 설립자의 친인척	③ 전문경영인

문2. 귀사의 창업 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 창업한지 10년 이상인 기업은 문3)으로 가시오

문2-1. 귀사의 창업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개인창업(▶문2-2로) ② 대기업 분사 ③ 관계사 공동설립
④ 대기업 계열 ⑤ 기타( )

문2-2. (개인창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창업 이전 직업(직장)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무직(가정 주부 등) ② 기업에서 관리자(임원, CEO, CTO 등)로 근무
③ 기업에서 非관리자로 근무 ④ 연구기관(연구원)·대학(교수) 근무
⑤ 대학(원)학생 ⑥ 기타(정부 및 공공기관, 의사 등 전문직종사자, 자영업 등)

문2-3. (개인창업의 경우) 귀사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였습니까?

전혀 활용 못함 ~ 매우 잘 활용함

|----------|----------|----------|----------|
1 2 3 4 5

문2-4. 귀사가 창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셨다면(문2-3에서 ①,②에 응답),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창업지원제도를 알지 못해서 ② 수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③ 정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④ 활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복잡하였기 때문
⑤ 기타( )

문2-5. 창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창업 관련 교육	경험 있다	경험 없다
가) 대학내 창업동아리 활동	①	②
나) 대학 창업지원(교육)센터 교육	①	②
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창업지원 교육	①	②
라) 충청북도 창업관련 센터 및 창업지원 교육 등	①	②
마) 민간 창업지원기관 교육	①	②

Ⅲ 사업장 이전 및 업종 변경 계획

문3. 충청북도에 입주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지확보 용이 ② 저렴한 분양가/임대료 ③ 편리한 교통여건
④ 판매시장 접근용이 ⑤ 원자재 수급 용이 ⑥ 인력수급 용이
⑦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기관이 밀집 ⑧ 기업우호적인 지역 환경/분위기
⑨ 정부 지원정책 ⑩ 기타 ----------

문4. 귀사는 향후 5년 이내에 충청북도에 소재한 사업장을 충청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4-1로) ② 없다 (▶문5로)

문4-1. (문4의 ① 이전 계획 있는 사업장)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사업장을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표해 주십시오(중복응답)

① 본사 ② 공장 ③ 영업소 ④ 본사+공장/연구소 ⑤ 연구소

문4-2. (문4의 ① 이전 계획 있는 사업장)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① 수도권 지역(서울제외) ② 서울
③ 수도권 외 국내 타지역 ④ 해외

문4-3. (문4의 ① 이전 계획있는 사업장) 구체적으로 언제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 년

문4-4. (문4의 ① 이전 계획있는 사업장) 충청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시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② 임대료가 부담되어서
③ 교통이 불편해서 ④ 판매시장 접근이 어려워서
⑤ 원자재 수급이 용이하지 않아서 ⑥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⑦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기관이 밀집되지 못해서
⑧ 지역 환경 및 분위기가 나빠서 ⑨ 지자체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⑩ 신규 투자를 위해서 ⑪ 기타 ----------

문5. 귀 사의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어떤 업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까? ---------- 업 ② 없다

문5-1. (문5의 ① 5년 이내 업종 변경 계획 있는 사업장) 업종변경을 계획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매출 부진 ② 인건비 부담 ③ 기존 업종의 사향화 추세
④ 기술개발의 어려움 ⑤ 경기침체 ⑦ 인력 부족
⑦ 기타 ----------

Ⅳ 기업간 협력 및 네트워크 활용 실태(2016년 1년간 실적)

문6. 귀사의 주력제품 생산 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납품거래)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위탁을 주기만 함(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을 주기만 함)
② 위탁을 받기만 함(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납품)

③ 위탁받아 재위탁함(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일부물량을 다른 중소기업에 재위탁)
④ 수·위탁거래 없음

문7. 귀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기업/연구기관/기업지원기관과 얼마나 교류가 있습니까?

1) **기업** ① 매우 적음 ② 적은 편 ③ 보통 ④ 많은 편 ⑤ 매우 많은 편
2) **연구기관** ① 매우 적음 ② 적은 편 ③ 보통 ④ 많은 편 ⑤ 매우 많은 편
3) **기업지원기관** ① 매우 적음 ② 적은 편 ③ 보통 ④ 많은 편 ⑤ 매우 많은 편

※ 기업지원기관 :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진흥재단(공단)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문7-1. (문7에서 ③, ④, ⑤ 응답기업) 귀사는 기업/연구기관/기업지원기관과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1) 기업

① 구매정보교류	② 신기술 정보교류	③ 판매/구매 연계
④ 인력 및 일자리 교류	⑤ CEO간 교류	⑥ 시장정보 교류
⑦ 규제 대응 정보 교류	⑧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⑨ 공동 프로젝트 추진
⑩ 자본 조달	⑪ 기타----------	

2) 연구기관

① 구매정보교류	② 신기술 정보교류	③ 판매/구매 연계
④ 인력 및 일자리 교류	⑤ CEO간 교류	⑥ 시장정보 교류
⑦ 규제 대응 정보 교류	⑧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⑨ 공동 프로젝트 추진
⑩ 자본 조달	⑪ 기타----------	

3) 기업지원기관

① 구매정보교류	② 신기술 정보교류	③ 판매/구매 연계
④ 인력 및 일자리 교류	⑤ CEO간 교류	⑥ 시장정보 교류
⑦ 규제 대응 정보 교류	⑧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⑨ 공동 프로젝트 추진
⑩ 자본 조달	⑪ 기타----------	

문8. 귀사는 향후에 충북 관내 기업/연구기관/기업지원기관과 어떤 교류를 하고 싶습니까?

1) 기업

① 구매정보교류	② 신기술 정보교류	③ 판매/구매 연계
④ 인력 및 일자리 교류	⑤ CEO간 교류	⑥ 시장정보 교류
⑦ 규제 대응 정보 교류	⑧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⑨ 공동 프로젝트 추진
⑩ 자본 조달	⑪ 기타----------	

2) 연구기관

① 구매정보교류 ② 신기술 정보교류 ③ 판매/구매 연계
④ 인력 및 일자리 교류 ⑤ CEO간 교류 ⑥ 시장정보 교류
⑦ 규제 대응 정보 교류 ⑧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⑨ 공동 프로젝트 추진
⑩ 자본 조달 ⑪ 기타_____

3) 기업지원기관

① 구매정보교류 ② 신기술 정보교류 ③ 판매/구매 연계
④ 인력 및 일자리 교류 ⑤ CEO간 교류 ⑥ 시장정보 교류
⑦ 규제 대응 정보 교류 ⑧ 정부지원제도 활용 정보 교류 ⑨ 공동 프로젝트 추진
⑩ 자본 조달 ⑪ 기타_____

V 인력 및 일자리관리 (2017년 6월 1일 기준)

문9. 귀사의 연도별 종사자수는 몇 명입니까? 향후 1년 후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대표자 포함)

2016년 6월 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2017년 6월 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2018년 6월 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예상인원)
명	명	명

문10. 귀사의 종사자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 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고용주 (1인 사업체)	사무 관리직	영업직	연구 개발직	생산직 - 기술직			전 체
						기술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전체 (내국인+외국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내국인	남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여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외국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상시 근로자 : 임시, 일용, 정규직, 상용직, 도급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고용주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고용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로 함.

문11. 귀사 상용직 종사자의 거주지별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역별 비중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외국인 포함)

구분	충북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충북 제외 타지역 거주자 (수도권 제외)	합계
거주지 비중	%	%	%	100%

문12. 귀사의 고용인원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 표에 기재해 주십시오.(외국인 포함)

고용현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고용인원	상용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임시, 일용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문13. 귀사의 2017년 6월 1일 기준 월 평균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 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사무관리직	영업직	연구 개발직	생산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월평균 임금 수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문14. 귀 사업장에는 최저임금(6,470원) 적용 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

문15. 귀 사업장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6. 귀 사업장 근로자들은 전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임시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② 정규직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다
③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는 되어 있지만, 임시 시간제 근로자는 되어 있지 않다

문17. 귀 사업장은 향후 1년간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결원시에만 충원할 경우라도 결원을 예상하여 채용 계획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있다 (▶문17-1로) ② 없다 (▶문18로)

문17-1. (문17의 ① 현재 채용계획 사업장) 귀 사업장의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 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고용계획	사무관리직	영업직	연구 개발직	생산직 - 기술직			전체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현재 부족 인원 (2017.6.1기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향후 1년 동안 채용 예상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경력직 채용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채용희망 인력이 있는 경우							
최소학력 수준							
채용 희망 연령대							
연봉수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현재 부족인원은 조사기준(2017.6.1)일 현재 인원(인력)이 부족하여 고용계획이 있거나, 당장 고용할 계획은 없으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근로자 수

<최소학력 수준 보기>

1. 고졸 2. 전문대졸 3. 4년제 대졸 4. 석사 5. 박사 6. 학력 무관

<연령 수준 보기>

1. 20~24세 2. 25~29세 3. 30~34세 4. 35~39세 5. 40~44세
6. 45~49세 7. 50세 이상 8. 연령 무관

문18. 귀사의 인력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확보되고 있습니까?

① 회사공고를 통해
②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③ 주변 지인을 통해
④ 학교나 학원 요청을 통해
⑤ 워크넷 또는 충북일자리센터를 통해
⑥ 국공립직업소개소를 통해
⑦ 사설직업소개소를 통해
⑧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⑨ 기타 ----------

문19. 귀사는 향후 1~2년 이내에 인력 감축의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인력 감축 계획이 있음 (▶문19-1로)
③ 구조조정 계획 없음

문19-1. (문19 ① 인력 감축 계획이 있는 사업장) 인력 감축을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기침체 ② 매출감소 ③ 사업규모 축소 ④ 기타 ( )

문20. 귀사 직원들에게 필요한 직업훈련교육은 어떤 분야입니까?

① 경영/회계/사무 교육 ② 품질 관리 관련 ③ 기술관련 교육
④ 안전 교육 ⑤ 서비스 교육 ⑥ 정보통신 교육
⑦ 외국어 교육 ⑧ 기타 ----------

문21. 귀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싶습니까?

① 현장 사내교육(OJT) ② 외부전문가 초빙 ③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④ 거래처 등에 파견 ⑤ 온라인/우편 등 원격교육 ⑥ 기업지원 유관기관에 위탁
⑦ 교육훈련 필요성 없음 ⑧ 도내 관련학과 활용 및 신설

문22. 귀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때, 충청북도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인재 추천/인력 공급 ②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 기초정보 제공
③ 채용 박람회 등 개최 ④ 구인/구직 정보 제공 활성화
⑤ 직업훈련교육 시행 ⑥ 도내 대학 활용
⑦ 기타 ----------

Ⅵ 업황전망 및 기타

문23. 귀사의 정상적인 업황 수준을 100%로 본다면 현재의 업황은 정상적인 업황 대비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문24. 귀사가 속한 업종의 올해 업황은 전년 대비 어떤 편이십니까?

① 매우 나빠짐 ② 나빠짐 ③ 변화 없음 ④ 좋아짐 ⑤ 매우 좋아짐

문25. 귀사가 속한 업종이 향후 1년 뒤에는 금년에 비해 업황이 어떠할 것 같으십니까?

① 매우 나빠질 것 같음 ② 나빠질 것 같음 ③ 변화 없음
④ 좋아질 것 같음 ⑤ 매우 좋아질 것 같음

문26.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동의한다
1점	2점	3점	4점	5점

문27. 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충청북도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해당 범주를 골라주시고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① 규제 강화/완화 관련 ② 지원정책 관련 ③ 인력 및 일자리지원·수급 관련 ④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2017년 충북 청년일자리조사(참여자)

안녕하십니까? 귀 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도민들을 대상으로 **『충북 청년실업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충북 도민의 생활, 일자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충청북도가 도민서비스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일반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8세 이상 가구원(199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가구원 모두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 자료는 부천시 정책 수립을 위해 귀한 자료로 활용하겠사오니 바쁘시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관 기관	충북도청	조사 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 소장 박승규

Ⅰ 경제활동상태 및 향후 고용상태

문1.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일(경제활동)을 하였습니까?

① 일을 하고 있음 (▶문1-1로)　　② 일을 하고 있지 않음 (▶문4로)

※ 경제활동 : 직장을 다니거나, 부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수입이 있는 경우,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도 포함이 됨

문1-1. 일을 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떠한 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고용주 ⑤ 단독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문1-2. 일을 하고 있다면, 현 직장에 대한 아래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아래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 해주십시오)

1) 업종	① 농업·임업 ② 어업 ③ 광업 ④ 제조업 ⑤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⑥ 건설업 ⑦ 도·소매업 ⑧ 숙박·음식점업 ⑨ 운수·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⑩ 금융·보험업 ⑪ 부동산 및 임대업 ⑫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⑬ 교육서비스업 ⑭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⑮ 예술·스포츠·여가 및 개인서비스업 ⑯ 기타( )
2) 직종	①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기타( )
<직종 예> ①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 의회의원, 중앙/지방 고위공무원, 기업고위임원, 교육 관리자, 전문 서비스업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의사/약사/간호사, 교육전문가, 학자 및 관련 전문가, 보험계리사/통계전문가,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전문가, 건축/토목 기술공 등 ③ 사무종사자 :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보험 및 금융 사무원(심사원), 비서,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고객상담(전화교환원) 등 ④ 서비스종사자 : 경찰관/소방관/교도관, 경호원, 간병인, 이·미용사, 혼례/장례 종사자, 항공/선박/열차 승무원, 주방장/조리사, 음식/숙박 종사자 등 ⑤ 판매종사자 : 영업직, 보험 설계사/중개인, 매장/상점 판매직, 항공권/승차권/복권/마권 판매원, 사무/생활용품 판매원, 판촉원, 홍보 도우미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재배 종사자, 조경원, 축산/사육관련 종사자, 벌목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정육원, 제과원, 재단사/재봉사/수선원, 전기/전자 수리원, 자동차/선박/철도/엘리베이터 정비원/수리원 등 ⑧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 식품가공/전기/전자제품관련 기계조작원, 택시/(화물)버스/크레인 운전원, 가구조립원, 케이블/배관 조작원 등 ⑨ 단순노무종사자 : 우편배달/택배/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육아 도우미,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등	
3) 근무형태(문1-1의 ④고용주, ⑤단독자영업자, ⑥무급가족종사자 제외)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계약직/촉탁직 ④ 시간제 ⑤ 인턴사원 ⑥ 공공근로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주당 평균 근로시간	총 _____시간
5) 월평균 급여(소득) 수준	월평균 _____만원 (연봉총액(연간총소득) ÷ 12개월)
6) 직장 소재지	_____
7) 향후 1년 이내 이직 및 전직 의향	① 이직 및 전직 의향 있음 ② 이직 및 전직 의향 없음 (▶문2로)
7-1) 이직 및 전직을 하려는 이유	① 중장기적인 직업전망의 부재 ②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에 대한 불안 ③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불만 ④ 근로환경 열악 ⑤ 개인 사유(나이, 건강, 교육 등) ⑥ 사업장의 타 지역 이전 ⑦ 출퇴근이 불편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 귀하께서는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문3. 귀하께서는 현재 직장의 취업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① 회사공고를 통해 ② 신문, 라디오, TV 등 매체를 통해
③ 인터넷을 통해 ④ 주변 지인을 통해(가족포함)
⑤ 학교나 학원 추천을 통해 ⑥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통해
⑦ 국공립직업소개소(고용안정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센터 등)를 통해
⑧ 사설직업소개소를 통해 ⑨ 창업
⑩ 기타 _____

■ 구직여부

문4. (지난 1주일동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귀하의 현재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 일시휴직 ② 구직활동 중 ③ 창업 준비 중 ④ 교육훈련 이수 중 (자격증 취득 준비 등)	(▶문4-1로)	⑤ 육아 ⑥ 가사 ⑦ 재학(학생) ⑧ 연로 및 심신장애 ⑨ 더 이상 취업을 원치 않음 ⑩ 기타 ( )	(▶문4-4로)

문4-1. 귀하께서는 요즘 일이나 직장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① 예 (▶문4-2로) ② 아니오 (▶문4-4로)

문4-2. 귀하께서 직장이나 일자리를 알아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문4-3. 귀하께서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 및 근로조건은 무엇입니까? (아래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 해주십시오)

1) 희망업종	① 농업·임업	② 어업	③ 광업
	④ 제조업	⑤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⑥ 건설업
	⑦ 도·소매업	⑧ 숙박·음식점업	⑨ 운수·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⑩ 금융·보험업	⑪ 부동산 및 임대업	⑫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⑬ 교육서비스업	⑭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⑮ 예술·스포츠·여가 및 개인서비스업		⑯ 기타( )

2) 희망직종	①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기타(_____)
3) 희망근무형태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계약직/촉탁직 ④ 시간제 ⑤ 인턴사원 ⑥ 공공근로 ⑦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4) 주당 평균 희망 근로시간	총 _____ 시간
5) 월 평균 희망 급여 수준	월 평균 _____ 만원(연봉총액 ÷ 12개월)
6) 희망 직장 소재지	① 서울 ② 충북내 (구체적으로 _____) ③ 기타지역 (구체적으로 _____)
7) 희망 회사의 규모	① 대기업/금융기관 ② 중소기업 ③ 공무원/공공기관 ④ 어디든 상관없다

문4-4. 귀하께서는 이전에 직장 경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4-5. 귀하께서는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으십니까?

① 받고 있다 ② 받고 있지 않다

■ 일자리 전망(모든 응답자 응답)

문5. 귀하께서는 현재(2017년 6월 1일 기준) 일자리를 구하기가 지난 1년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려워짐 ② 어려워짐 ③ 비슷함 ④ 쉬워짐 ⑤ 매우 쉬워짐

문6. 귀하께서는 향후 1년 뒤에 지금보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① 매우 어려워질 것임 ② 어려워질 것임 ③ 비슷함
④ 쉬워질 것임 ⑤ 매우 쉬워질 것임

문7. 귀하께서는 충청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청년일자리 창출 ② 사회적 일자리 확대 ③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④ 취업매개체 활성화 지원 ⑤ 지역기업 필요인력 양성 직업훈련 강화
⑥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 취업 간접 지원 ⑦ 창업교육 지원
⑧ 기타_____

■ 일과 소비

문8. 아래 각 항목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 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집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차는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충청북도 생활 관련

문9. 귀하께서는 만약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충북이 고향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0. 귀하께서는 계속해서 충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1. 충북에 대한 다음의 의견 중에서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매우 동의함"중 하나에 ○표해 주십시오.

의 견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충북은 도민들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충북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충북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충북의 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충북은 주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충북은 타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충북은 도민으로서 충북에 애착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변 사람들에게 충북을 자랑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충북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III 인구통계 질문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학·휴학·수료는 졸업에 포함)

① 안받았음(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4년제 이상)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제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학생 ⑪ 주부
⑫ 무직 ⑬ 기타

D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DQ4.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